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2019. 11

(최종보고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빈 페이지-

< 연 구 진 >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책임연구원	:	장 동 호	남서울대학교 부교수
공동연구원	:	김 장 민	텍사스주립학교 조교수
연구보조원	:	구 문 정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연구보조원	:	성 열 서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연 · 구 · 요 · 약

1. 연구 배경과 목적

○ 근래 들어 '빈곤가구와 재무건전성'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국내외 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음

-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도 흑자가구가 상당비율 존재함(김준희, 2018)
- 빈곤층의 재무건전성에 관심을 갖는 일명 '재무역량강화와 자산형성'(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 연구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재무건전성이 소득이 보여줄 수 없는 가계 재무복지(financial well-being)의 질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 있고, 소득향상 전략보다 실현가능성과 효용성이 높고, 재무건전성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확인·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특히 최근 우리나라 자활현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약한 재무건전성(financial soundness)과 재무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자립·자활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무상담과 금융사례관리 등의 도입이 추진된 바 있지만, 이러한 인식과 변화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체계적 연구결과는 없음

- 최근 일부지역(경기도, 전라남도) 자활기관에서 재무상담과 금융사례관리를 도입·운영하고, 한국자활연수원이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하는 이유는 재무건전성 부족을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과 자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자활사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임
- 하지만 아직 이러한 인식과 변화의 필요성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전국단위의 통계자료나 분석결과는 없는 상황임

○ 이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자활기관 중심의 재무역량 강화 지원체계를 제안하는 것임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증조사를 병행함

○ 문헌조사

- 재무건전성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측정방법, 더불어 재무역량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실천 사례 등을 탐구함

○ 실증조사

-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재무건전성 조사를 위해 2019년 6월에서 9월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함
- 확률표집 방법인 계통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우리나라 전국 4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1,067명이 조사에 참여함
-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자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상태, 재무건전성, 자기인식 및 정서였음

3. 이론적 검토

○ 재무건전성(financial soundness)

- “가계가 재정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 이전 수준의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자, 위험에 대비한 가계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정운영·황덕순, 2002)
- 가계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가계수지 균형, 재무적 위기 대응능력, 가계의 성장가능성”(Khashadourian, 2017)

○ 재무복지(financial well-being)

-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경제적 책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고, 동시에 미래의 경제적 변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선택(choice)이 가능한 상태
- 재무복지의 4가지 요소

  □ 자신의 재무에 대한 통제력: 기간 내 공과금 납부, 관리 불가능한 채무 미보유, 가계수지 균형이 가능한 능력

  □ 재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미래의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나 사

고에 대비한 재무적 완충(예: 예금, 건강보험, 높은 신용, 부모 등 사적 자원) 보유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선택: 소득활동이 아닌 휴가, 외식, 학위취득 등과 같은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재무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 등과 같은 재무적 목표의 보유와 이행

[재무복지(Financial Well-being)의 4가지 요소]

구분	현재	미래
안전	일상적 지출에 대한 통제력	재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
선택의 자유	즐거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출처: CFPB(2015: 7)

○ 재무건전성 측정

- 단기적 측면에서 가계의 현금흐름,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와 부채와 자산 보유 규모 판단을 종합
-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재무비율(financial ratio)
- 백분율로 표시 - 대규모 조사에 활용 가능
- 지표별 가이드라인(guideline) 제공 - 재무건전성 진단뿐만 아니라 목표설정과 점검을 위해서도 활용 가능(예: 총부채부담지표 0.4 이하)

○ 재무건전성의 가구 유형

- Khashadourian(2017)은 효과적인 재무사례관리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재무건전성을 이러한 가계균형모형에 대입해 분석할 것을 제안
- 가계의 단기과제에서부터 장기과제로의 순서에 따라 가계 재무건전성을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총 6개의 재무비율 사용을 제안하였다. 가계수지비율, 월저축률, 유동성비율, 고정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공적이전소득비율

○ 재무역량(financial capability)

- 재무건전성과 재무복지 확보를 위한 핵심 조건
- 재무역량강화는 양질의 금융서비스, 자산형성기회, 재무교육 등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목표하는 금융사회복지의 실천적 목표

○ 재무역량의 개념정의

- 협의의 관점: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
- 광의의 관점: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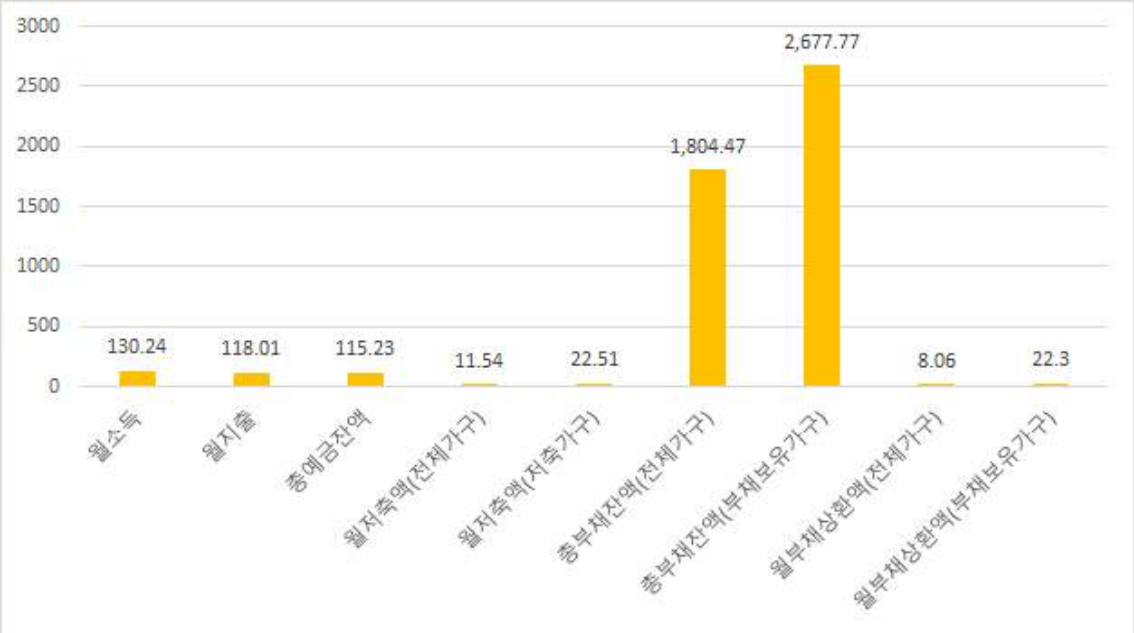
4. 주요 분석 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는 여성비율이 58.6%로 높았고, 평균연령도 52.72세로 높은 편이었음
- 학력수준은 낮았으며, 특히 혼인상태가 이혼인 경우가 38.7%로 매우 높았음
- 월세거주 비율(34.2%)도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재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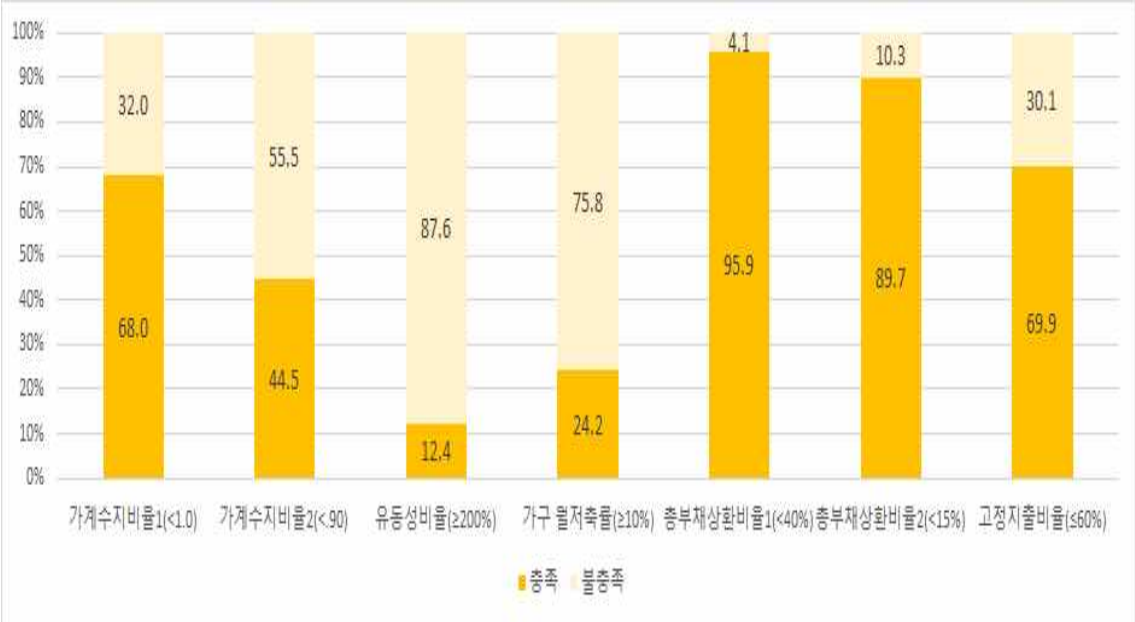
- 가구 월소득은 평균 130만원, 월지출은 118만원이었음
- 총예금잔액이 115만원으로 한달치 월소득에 못미쳤으며, 월저축액은 12만원 수준이었음
- 총부채잔액은 1,804만원으로 월소득 평균의 약 14배였고, 부채보유가구의 총부채잔액은 2,678만원에 달했음
- 전체가구의 월부채상환액은 8만원, 부채보유가구의 월부채상환액은 22만원이었음
- 본인이 과거나 현재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경우는 42.9%, 본인외 가구원이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은 26.5%였으며, 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은 재무나 채무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구단위로 이뤄져야 함을 시사
- 한 달 동안 생활비가 10만원 이하인 날짜 수는 평균 8.77일이었음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 재무상태 현황]

○ 재무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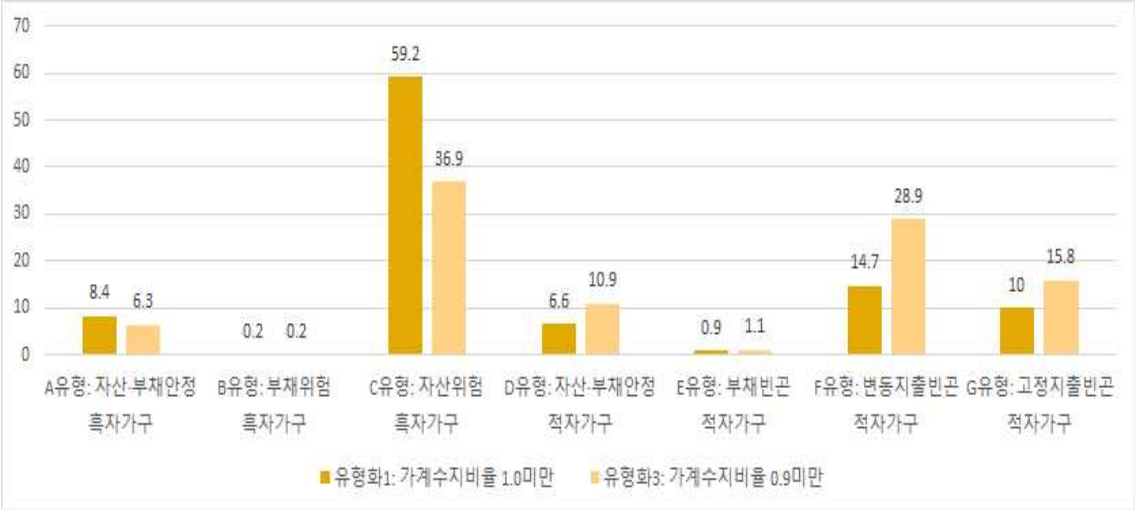
- 가계수지비율(월지출/월소득) 최저 가이드라인 1.0미만을 충족한 '흑자가구'의 비율은 68.0%였으며, 가이드라인을 좀 더 높여 0.9미만(소득대비 10%이상 흑자)으로 설정할 경우 충족률은 44.5%로 하락함
- 유동성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은 12.4%로 전체 재무비율 중에서 가장 낮음
- 가구 월저축률 10% 이상 가이드라인 충족률은 24.2%로 역시 낮았음
-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 40%(주택담보대출 포함) 충족률은 95.9%, 15%(주택담보대출 제외) 충족률은 89.7%로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는 부채보유 응답자의 상당수가 부채상환 여력이 없어 부채상환에 실패한 결과일 가능성이 큼
- 고정지출의 비율 60%이하 가이드라인 충족률은 69.9%였음



[자활사업 참여자가구 재무비율 최저 가이드라인 충족률]

○ 재무건전성 가구유형

- Khashadourian(2017)가 제안한 5가지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재무건전성 유형을 7가지(A~G유형)로 분류한 결과, 흑자가구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에 해당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음(59.2%)
- 다음으로는 소비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가계가 적자인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의 비중이 높았으며(14.7%), 그 다음은 부채상환이나 월세 부담 등이 고정지출이 많은 가계적자가구인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10.0%), 자산과 부채 모두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흑자가구인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8.4%)의 순이었음
- '부채위험 흑자가구'(B유형)와 '부채빈곤 적자가구'(E유형)에 해당하는 가구는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가구 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자활사업 참여자 재무건전성 유형 및 비율]

5. 정책적 제언

○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은 현금흐름, 자산, 부채의 측면에서 가구 또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빈약한 자산과 높은 부채부담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요인이자 자활 및 자립의 분명한 걸림돌로 판단됨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재무건전성, 재무관리역량은 참여자들의 자기인식과 정서에 정적으로 연관된 반면, 부채는 그 반대였음

○ 자활기관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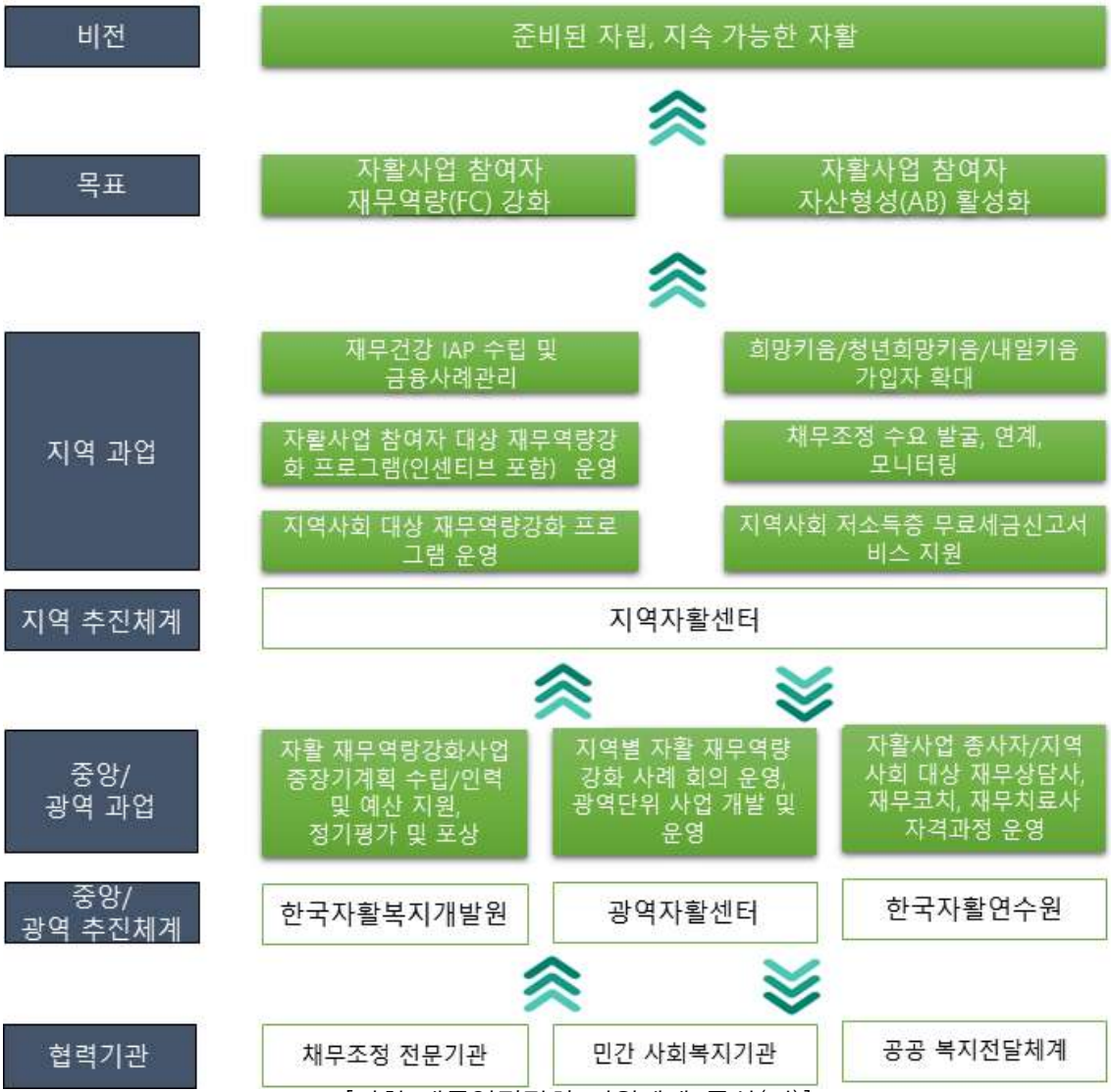
- 자활센터는 전국 249개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관 프로그램 운영(예: 전라남도 금융사례관리, 경기도 재무상담)과 전문인력 양성의 경험(예: 금융복지상담사 양성)이 있음
- 자활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도 재무역량강화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원임

○ 본 연구는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의 비전을 '준비된 자립, 지속가능한 자활'로 제안함

- 재무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제고된 재무역량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최소한의 유동자산이 자립(탈수급, 취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두려움을 줄이고, 자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가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은 재무건강 IAP 수립 및 금융사례관리,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역사회 대상 재무역량강화사업(예방적 접근),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활성화, 채무조정 대상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무료세금신고서비스 지원 등임

○ 재무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역할로는 자활재무코칭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자활연수원에 교육과정 개발과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상(안)]

목 차

요약

제1장 연구 목적과 방법 ····· 1

제1절 연구 배경 ····· 3

1. 빈곤가구와 재무건전성 ····· 3

2. 빈곤과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 ····· 6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 10

1. 연구 목적과 기대효과 ····· 10

2. 연구 내용 ····· 11

제3절 연구 추진체계 ····· 14

제2장 이론적 검토 ····· 14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 16

1. 자활사업의 개요 ····· 16

2.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특성 ····· 20

제2절 가계 재무건전성의 개념과 이론 ····· 24

1. 가계 재무건전성의 개념 ····· 24

2. 가계 재무건전성의 측정 ····· 26

3. 가계 재무건전성의 가구 유형 ····· 28

4. 가계 재무건전성의 영향 ····· 34

5. 가계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5

제3절 재무역량강화의 개념과 이론 ····· 37

1. 재무역량의 개념 ····· 37
2. 재무역량 구성요소와 변화수단 ····· 40
3. 재무역량강화 관련 이론 ····· 54
4. 재무역량강화 활동 관련 국내외 사례 ····· 61
제4절 소결 ····· 68

제3장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 재무건전성 분석 ····· 72

제1절 분석의 개요 ····· 74
1. 분석 자료 ····· 74
2. 분석 모형 및 방법 ····· 75
3. 분석 도구 ····· 76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 86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86
2. 재무상태 ····· 89
3. 자기인식 및 정서 ····· 94
4. 재무건전성 ····· 98
제3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상태,
자기인식 및 정서, 재무건전성 차이 ····· 103
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상태 차이 ····· 103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 차이 ····· 123
3.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건전성 차이 ····· 132
제4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와
재무건전성 차이 ····· 155
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 차이 ····· 155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건전성 차이 ····· 165
제5절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재무건전성 유형과 특성 ····· 190

1.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재무건전성 유형과 현황 ····· 190
2.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재무건전성 유형별 재무 및 자기인식 및 정서 ····· 200
제6절 소결 ····· 205

제4장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방안 ····· 209
제1절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 ····· 211
1. 자활 재무역량강화의 필요성 ····· 211
2.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가능성 ····· 212
제2절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 218
1.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 218
2. 자활 재무건전성 유형별 지원전략 ····· 220
3. 자활 재무역량강화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 225
4. 자활 재무역량강화 사업인력 양성 ····· 236
제3절 소결 ····· 238

제5장 결론 및 제언 ····· 240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42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안 ····· 247

참고문헌 ····· 248

부록 ····· 258

표 목 차

〈표 Ⅱ-2-1〉 재무복지의 4가지 요소 ····· 25
〈표 Ⅱ-2-2〉 재무지표에 대한 개념정의와 가이드라인 ····· 30
〈표 Ⅱ-2-3〉 소득계층별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3
〈표 Ⅱ-2-4〉 저소득층의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36
〈표 Ⅱ-3-1〉 OECD 재무이해력 측정도구 설문문항 ····· 41
〈표 Ⅱ-3-2〉 재무이해력 학습 행동의 환기 방안 ····· 51
〈표 Ⅱ-3-3〉 금융학습 의욕 향상 방안 ····· 52
〈표 Ⅱ-3-4〉 금융학습의 재무행동 개선 및 지속 방안 ····· 53
〈표 Ⅱ-3-5〉 저축·투자·자산형성의 결정 모형의 개인적 요인 ····· 59
〈표 Ⅱ-3-6〉 저축·투자·자산형성의 결정 모형의 제도적 요인 ····· 60
〈표 Ⅲ-1-1〉 인구사회학적 특성 ····· 76
〈표 Ⅲ-1-2〉 가구특성: 경제적 변수 ····· 78
〈표 Ⅲ-1-3〉 자기효능감 척도 ····· 79
〈표 Ⅲ-1-4〉 직무만족도 척도 ····· 80
〈표 Ⅲ-1-5〉 미래지향성 ····· 81
〈표 Ⅲ-1-6〉 CES-우울척도 ····· 82
〈표 Ⅲ-1-7〉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 ····· 83
〈표 Ⅲ-1-8〉 재무스트레스 ····· 84
〈표 Ⅲ-1-9〉 재무역량 척도 ····· 85
〈표 Ⅲ-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7
〈표 Ⅲ-2-2〉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 91
〈표 Ⅲ-2-3〉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의 생활비 압박 기간 ····· 94
〈표 Ⅲ-2-4〉 자기효능감 ····· 95
〈표 Ⅲ-2-5〉 직무만족도 ····· 96
〈표 Ⅲ-2-6〉 미래지향 ····· 96
〈표 Ⅲ-2-7〉 우울감 ····· 97
〈표 Ⅲ-2-8〉 자활참여자의 재무비율 및 가이드라인 충족률 ····· 100
〈표 Ⅲ-2-9〉 재무스트레스 ····· 101
〈표 Ⅲ-2-10〉 재무관리역량 ····· 102
〈표 Ⅲ-3-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소득 ····· 104
〈표 Ⅲ-3-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지출 ····· 106

〈표 Ⅲ-3-3〉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총저축잔액 ····· 108
〈표 Ⅲ-3-4〉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저축액 ····· 109
〈표 Ⅲ-3-5〉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총부채 잔액 ····· 112
〈표 Ⅲ-3-6〉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부채상환액 ····· 114
〈표 Ⅲ-3-7〉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부채상환액 ····· 115
〈표 Ⅲ-3-8〉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 118
〈표 Ⅲ-3-9〉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비 압박 기간 ····· 120
〈표 Ⅲ-3-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재무상태의 관계 요약 ····· 122
〈표 Ⅲ-3-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124
〈표 Ⅲ-3-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 126
〈표 Ⅲ-3-13〉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미래지향의 차이 ····· 128
〈표 Ⅲ-3-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 130
〈표 Ⅲ-3-15〉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 요약 ····· 131
〈표 Ⅲ-3-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수지비율(1.0 미만) ····· 134
〈표 Ⅲ-3-17〉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수지비율(.9 미만) ····· 135
〈표 Ⅲ-3-18〉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유동성비율 ····· 137
〈표 Ⅲ-3-19〉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월저축률 충족률 ····· 139
〈표 Ⅲ-3-20〉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40% 미만) ····· 142
〈표 Ⅲ-3-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15% 미만) ····· 144
〈표 Ⅲ-3-2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고정지출비율 ····· 146
〈표 Ⅲ-3-23〉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 148
〈표 Ⅲ-3-24〉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 ····· 151
〈표 Ⅲ-3-15〉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 요약 ····· 153
〈표 Ⅲ-4-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 ····· 155
〈표 Ⅲ-4-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 157
〈표 Ⅲ-4-3〉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미래지향 ····· 159
〈표 Ⅲ-4-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우울감 ····· 162
〈표 Ⅲ-4-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와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 요약 ····· 164
〈표 Ⅲ-4-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가계수지비율(1.0 미만)의 충족률 ····· 166
〈표 Ⅲ-4-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가계수지비율(.90 미만) ····· 168
〈표 Ⅲ-4-8〉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유동성비율(200% 이상) ····· 170
〈표 Ⅲ-4-9〉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월저축률(10% 이상)의 차이 ····· 173
〈표 Ⅲ-4-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40% 미만) ····· 175

〈표 Ⅲ-4-11〉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15% 미만)의 차이 ····· 178
〈표 Ⅲ-4-12〉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고정지출비율(60% 이하) ····· 180
〈표 Ⅲ-4-13〉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스트레스의 차이 ····· 183
〈표 Ⅲ-4-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 ····· 186
〈표 Ⅲ-4-1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관계 요약 ····· 188
〈표 Ⅲ-5-1〉 가계 재무건전성의 가구 유형과 현황 ····· 192
〈표 Ⅲ-5-2〉 자활사업 참여가구 재무건전성 유형화 I 에 따른 재무상태의 차이 ····· 195
〈표 Ⅲ-5-3〉 자활사업 참여가구 재무건전성 유형화Ⅲ에 따른 재무상태의 차이 ····· 198
〈표 Ⅲ-5-4〉 자활사업 참여가구 재무건전성 유형화 I 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의 차이 ····· 201
〈표 Ⅲ-5-5〉 자활사업 참여가구 재무건전성 유형화Ⅲ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의 차이 ····· 203
〈표 Ⅳ-2-1〉 자활 재무건전성 유형별 지원전략 ····· 220
〈표 Ⅳ-2-2〉 자활 재무역량강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종류 ····· 225
〈표 Ⅳ-2-3〉 재무코칭의 단계 ····· 237

그 림 목 차

[그림 Ⅰ-2-1] 연구 내용 ····· 12
[그림 Ⅰ-3-1] 연구수행 체계도 ····· 13
[그림 Ⅱ-1-1] 자활사업 참여자격과 우선순위 ····· 17
[그림 Ⅱ-1-2] 주요 자활사업 종류 ····· 20
[그림 Ⅱ-2-1] 가계균형모형 ····· 29
[그림 Ⅱ-2-2] 가계균형모형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 및 유형별 재무과제 ····· 32
[그림 Ⅱ-3-1]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의 재무역량 모형 ····· 38
[그림 Ⅱ-3-2] 영국 마스(MAS)의 재무역량 모형 ····· 38
[그림 Ⅱ-3-3] 해외 금융기업들의 넛지를 활용한 App 사례 ····· 57
[그림 Ⅱ-3-4] 저축·투자·자산형성의 결정 모형 ····· 59
[그림 Ⅱ-3-5] 1908년 자선조직협회 연차보고서 표지 ····· 63
[그림 Ⅲ-3-5]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Toynbee Hall)의 경관 ····· 64
[그림 Ⅲ-3-6] 뉴욕담보대출협회 ····· 65
[그림 Ⅲ-3-4] 2016년 부안군장애인복지관 가계금융역량강화사업 자료집 ····· 67
[그림Ⅲ-1-1] 단계별 분석 모형 ····· 75
[그림 Ⅲ-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 ····· 100
[그림 Ⅲ-5-1] 가계 재무건전성의 가구 유형화 ····· 193
[그림 Ⅳ-1-1]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에 대한 SWOT 분석 ····· 212
[그림 Ⅳ-2-1]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상 ····· 219

제 1 장

연구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제3절 연구 방법과 추진 과정

-빈 페이지-

제1절 연구 배경

1. 빈곤가구와 재무건전성

2018년 5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주관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를 통해 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매일경제, 2018).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기초생활수급 30가구의 두 달 치 가계부에 대한 분석결과가 소개되었다. 발표 자료(김준희, 2018: 16)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총 30가구 가운데 17가구(56.67%)가 적자가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연구자와 토론자들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계 적자일 정도로 기초수급비의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연구(김준희, 2018)는 일반적인 빈곤연구들이 사용하지 않는 가계 '흑자'(positive cash flow)와 '적자'(negative cash flow)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럼으로써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했다. "왜 똑같은 빈곤층인데 누구는 적자이고 누구는 흑자인가?"(장동호, 2012; 2019; 이종희·양세정, 2014; Birkenmaier et al., 2013; Boshara & Emmons, 2015; Sherraden et al., 2017; Sherraden et al., 2018).

사실 현재 국내외 사회복지 연구와 실천 현장에서는 '빈곤가구와 재무건전성'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장동호, 2019; Birkenmaier et al., 2013; Sherraden et al., 2018). 어쩌면 빈곤의 원인을 빈민 개인에게서 찾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일명 '재무건전성 접근'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흑자, 적자, 그리고 재무건전성이라는 개념들이 갖는 질적 구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흑자, 적자, 또는 재무건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동일 소득임에도 다를 수 있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자유, 즉 재무복지(financial well-being)(CFPB, 2015)의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제윤경·정현두·박종호·김미선, 2010; 김미현·박성진, 2018; 중앙일보,

1) 통계청(2016: 25) 가계동향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소득 하위1분위(하위 20%)의 적자가구비율은 42.5%(2016년 2분기)이며, 흑자가구는 57.5%이다.

2019; Taylor, Jenkins, & Sacker, 2011). 둘째, 재무건전성의 현실적 유용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빈곤가구의 소득을 중산층만큼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를 적용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생활급여를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늘어난 시장소득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오히려 가구의 입장에서는 재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고 효용이 큰 접근일 수 있다(Birkenmaier et al., 2013; Boshara & Emmons, 2015; Sherraden et al., 2017; Sherraden et al., 2018). 셋째, 재무건전성에 대한 구조적 영향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의 증가이다. 오늘날 가계의 흑자, 적자 또는 재무건전성은 개인의 재무이해력이나 근검절약 정신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복지국가, 금융제도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김순영, 2011; 장동호, 2014; Comelli, 2014). 따라서 빈곤층 재무건전성의 취약성을 높이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가구의 가계적자와 흑자, 또는 재무건전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구마다 다른 주관적 소비 욕구를 꼽을 것이다(이선정, 2017; Furnham and Argyle, 1998; Roberts and Jones, 2001). 즉, 소득은 같더라도 개인 또는 가구별로 소비와 돈에 대한 욕구 또는 태도가 다르다면 지출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소비욕구나 소비지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개인이나 가구에서 가계적자의 발생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관적 빈곤(subjective poverty)은 이러한 가정과 관련한 학문적 개념 중 하나이다. 주관적 빈곤은 일반 국민이나 빈곤층이 "생존 또는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여기는 소득에 실제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되는데(김윤태·서재욱, 2013: 62), 이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일수록 가계적자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준희(2018)의 연구를 이러한 가정을 완벽히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는 가계부 조사와 더불어 각 가구가 '희망하는 적정 수입'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보면 가구의 주관적 필요소득이 객관적 실제소득에 비해 크게 높아도 가계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기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현재 월소득보다 매월 4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한 가구는 놀랍게도 전체 30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흑자를 낸 가구였다. 또한 현 소득보다 매월 60만원과

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2가구도 모두 흑자가구였다. 즉, 소비와 돈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해서 개인들이 반드시 한도를 벗어나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가계적자 발생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손꼽힐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가구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그에 따른 특별 지출이다[2](이종희·양세정, 2014; 장동호, 2018). 예를 들어,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대학 등록금 지출이 큰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원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라면 가계적자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김준희(2018)의 연구는 이 같은 가설을 지지하는 사례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30가구 가운데 의료지출이 가장 많은 3가구(생계급여와 장애연금·장애수당 대비 보건의료비가 20%를 넘음) 중 1가구는 흑자가구였다. 또 30가구 중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13개 가구 중에서도 5가구는 흑자였다(김준희, 2018; 26).

결론적으로 표본수의 한계[3]로 인해 김준희(2018) 등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generalization)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모든 빈곤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재무건전성의 차이에 관한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빈곤층의 재무건전성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례연구를 뛰어넘는 전국단위의 양적연구가 필요하며, 재무건전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 객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등장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2. 빈곤과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

현대 복지국가(welfare states)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모든 국민을 '빈곤(poverty)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빈곤은 주로 '가난'과 같은 개

2) 이종희·양세정(2014)은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한계계층의 경우 주거·식비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편임을 밝혀냈다. 기타 가구주 성별이 남성이거나 연령이 낮은 경우 가계적자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 양육비 부담 등이 가계적자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김준희(2018)는 2018년 기준 전국 1,165,175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겨우 30가구만을 분석했다.

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소득(income)을 통해 측정되어 왔다. 즉,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인 상태”(김윤태·서재욱, 2013: 16)를 빈곤으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빈곤은 ‘소득의 빈곤’(income poverty)을 상징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복지국가의 핵심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현금이전에 의한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이었다. 고용창출을 통한 임금소득 확대와 소득보장을 통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장이 빈곤문제를 전부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Sherraden, 1991; Lusardi and Mitchell, 2014; Sherraden et al., 2018). Sherrden et al.(2018)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공적소득이전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유입 증가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임금수준은 예전보다 더 경쟁적이고 근로불안정성은 더 높아졌다. 둘째, 이미 수많은 빈곤층이 복지가 아닌 대출(loan)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김순영, 2011; Epstein, 2006; Comelli, 2014). 과거, 사람들은 현금으로 생활을 했고, 필요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 수입에 맞춰 생활하거나 결핍을 참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방도가 없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빈곤층의 상당수도 신용소비, 즉 대출을 받아 소비를 할 수 있다(김순영, 2011). 실제로 어떤 빈곤층은 복지보다도 대출을 선호하기도 한다. 빠르고 편리하며 낙인(stigma)이 없기 때문이다(Bird, Hagstrom, & Wild, 1997).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현재 우리사회에는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는 빈곤하지만 소비의 측면에서는 한시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일명 ‘부채빈곤자’(debt poor)가 상당수에 달한다(장동호, 2012; Pressman & Scott, 2009). ‘빈곤에 의한 부채’(debt by poverty)와 ‘부채에 의한 빈곤’(poverty by debt)이 뒤엉켜 우리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Comelli, 2014).

최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금융대출의 영향력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빈곤의 영향요인으로서 가계 부채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산과 재무관리역량 등에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일명 ‘재무역량과 자산형성’(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 FCAB) 연구들이다(Birkenmaier et al., 2013; Boshara & Emmons, 2015; Sherraden et al., 2018).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신용소비와 금융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가계의 소득수준이 같더라도, 부채부담 정도와 적정자산 보유 유무, 재무역량의 정도에 따라 가구가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재무복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빈곤 연구가 주로 가계의 경제활동 가운데 소득의 이슈에만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Sherraden, 1991).

그러나 지금의 재무역량과 자산형성 연구들이 빈곤층의 재무건전성과 재무복지과 관련하여 좀 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장동호, 2019).

첫째, 빈곤층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국내 재무역량과 자산형성 연구들은 빈곤층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소득 못지않게 부채, 소비 또는 자산 등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증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계 적자 또는 신용 하락이나 채무불이행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지출, 최소한의 자산, 최대한의 부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빠져있다. 소득이 충분히 않은 빈곤층의 특성상 소비, 대출, 자산의 변화는 유한하며 쉽게 만들어지기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 없이 소비와 대출은 줄이고, 자산은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은 빈곤층의 스트레스만 늘릴 뿐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실용적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빈곤층의 가계재무건전성 진단에 적합한 진단도구를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장동호, 2019). 예컨대, 재무건전성을 '가계수지 균형 여부'로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예금과 같은 유동자산 확보수준, 부채상환부담의 적절성 정도 등을 동시에 고려해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실제로 재무상담사들은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진단할 때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와 같은 종합적인 재무진단 틀을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계재무건전성 종합 진단틀이 만들어진다면, 비재무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개선활동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자료생성이 필요하다.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근로빈곤층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연구 부족은 대표성 있는 현황자료의 부재에 기인한다. 전국단위에서 근로빈곤층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통계자료가 거의 없다. 예컨대,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의 경우, 월별 가계수입과 지출현황은 알려주지만, 부채나 저축 등 금융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통계청 자료로는 드물게 금융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수지의 월별 변동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부채나 자산을 고려한 월단위의 재무건전성 분석이 불가능하다. 자활사업 참여자라는 대표적인 근로빈곤층에 국한해서라도 월단위로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국단위의 통계자료의 수집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넷째, 근로빈곤층 또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조사는 각 가구의 재무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선행연구들(Beverly, Sherraden, Cramer, Williams Shanks, Nam, & Zhan, 2013; Furnham and Argyle, 1998)에 따르면, 가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 소비 그리고 투자 등의 의사는 비경제적 원인, 특히 심리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통계청의 어떤 자료도 조사 참여자의 부채와 자산을 포함한 재무정보만 제공할 뿐 조사 대상의 심리사회적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로 인해 빈곤층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 등이 어떤 영향을 받거나 미치는지, 빈곤층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개입이나 지원들에 심리사회적 역동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1. 연구 목적과 기대 효과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자활중심의 재무건전성 개선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활현장 중심의 금융복지 지원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우리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인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의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재무건전성 분석틀과 지원체계는 그동안의 재무건전성 연구들이 구체화시키지 못했던 정책 및 실천 수단과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특별히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활사업을 총괄지원하고 수행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등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산빈곤(asset poverty)과 부채빈곤(debt poverty)의 문제를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정부 또는 광역자활센터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내일키움통장과 경기광역자활센터, 부산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전남광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한 재무·채무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작 그 어디에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재무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재무역량강화와 관련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광역·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민·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재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재무 문제에 대한 전문성보다도 재무 문제를 가진 대상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나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경제교육이나 재무상담 등은 예산에 비해 참여도는 높지 않는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장동호, 2012). 한편 자활조직은 우리나라 어떤 공적 전달체계 보다도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재무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우수한 물리적·정서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일된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근로빈곤층의 재무역량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빈곤층 재무건전성 개선과 관련하여 자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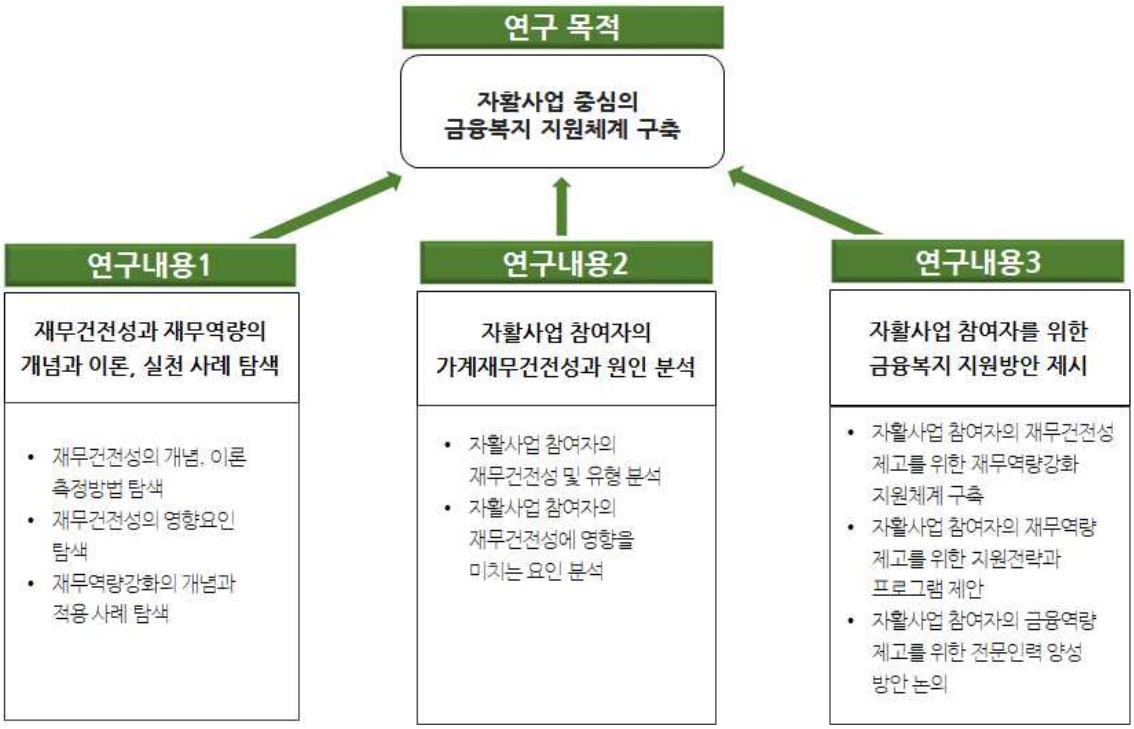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중심의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Ⅰ-2-1]과 같다.

첫째, 재무건전성과 재무역량의 개념 및 이론, 실천 사례 탐색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재무건전성 현황과 원인 분석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 구상



[그림 Ⅰ-2-1]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Ⅰ-3-1]과 같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분석과 지원체계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제Ⅰ장). 또한 재무건전성과 재무역량의 개념과 이론을 탐구하였는데, 전자는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분석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 후자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제Ⅱ장).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기인식 및 정서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 도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 1,0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제Ⅲ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활 재무역량

강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자활기관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에 대해 논의한 후 성공 전략을 제시하였다(제Ⅳ장). 본 연구의 최종적으로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구축안을 제시하고, 지원전략, 프로그램,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제Ⅴ장).



[그림 Ⅰ-3-1] 연구수행 체계도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제2절 가계 재무건전성의 개념과 이론

제3절 재무역량강화의 개념과 이론

제4절 소결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빈 페이지-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1. 자활사업의 개요

1) 자활사업의 목적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자활사업안내'를 보면, "자활사업의 목적은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며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보건복지부, 2019: 2)이다. 다시 말해,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활'이며, 이를 위해 자활사업은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을 주요한 기제로 활용하는 것이다(백학영·구인회·김경회·조성은·안서연, 2011: 18).

하지만, 자활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가 다소 협소하다는 비판도 있다. 저소득층의 자활이 단순히 취·창업 기회와 직무 역량 강화로만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연구들(고경환·선우덕·지원·완섭. 2009; 김진구, 2007; 김정원 외, 2013; 엄태영·동기·미경, 2008; 최종혁 외, 2010; 신동면·도한,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 및 자기인식 및 정서는 매우 취약하다.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고연령, 이혼, 사별, 심리사회 불안, 신용불량, 질병, 장애, 알코올, 돌봄, 부양, 우울 문제 등 혼자서 풀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김진구, 2007; 엄태영·동기·미경, 2008; 엄태영, 2010; 박경아, 2013; 중앙자활센터, 2015; 송인환 외, 2015). 대표적인 예는 부채(debt)와 심리사회적 문제들(psycho-social problems)이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상록, 2003; 신은주, 2004; 홍경준, 2004; 송인한 외, 2013)이 부채(debt)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된 취·창업 장애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2017년 『제4회 자활사례관리 컨퍼런스』에서 금융사례관리를 실천사례를 통해 장흥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경일 것이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나 자활동기가 낮을수록 근로의욕이 낮고 일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임을 주장하고 있다(국미애 외, 2001; 허미경, 2007; 이상록, 2003; 황미영·한상진, 2004; 엄태영·김동기·허미경, 2008: 8에서 재인용). 최근 일부 광역자활센터 등을 중심으로 정서적 역량강화, 동기부여,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제고를 위한 정서적 자활(Transforming Impossible Into Possible: TIP) 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된 이유일 수 있다. 요컨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업 기회와 직무훈련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어렵게 하는 재무 및 심리사회 관련 장애요인을 함께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자활연구와 실천현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2) 자활사업의 대상 및 참여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활사업의 의무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외에 자활급여특례자와 일반수급자, 급여특례 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의 우선순위는 ①조건부수급자, ②자활급여특례자, ③일반수급자, ④급여특례가구원, ⑤차상위자, ⑥시설수급자 순이다(김창표·김정원, 2018: 42).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 자활사업 안내(Ⅰ)』. p. 11.

[그림 Ⅱ-1-1] 자활사업 참여자격과 우선순위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는 15만5천명으로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1천명(65%), 차상위자는 5만4천명(35%)이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의무참여대상인 조건부수급자는 5만1천명이다. 이는 전체 근로능력수급자(21만명)의 약 24%에 해당하며,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의 4.5%에 해당한다. 근로능력자 중에서도 조건부과 및 조건불이행자, 조건제시 유예자의 비중은 거의 76%를 차지하고 있다(김창표·김정원, 2018: 42).

3) 자활사업 종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연령, 건강, 직업이력 및 학력, 구직욕구,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한 자활역량 평가를 거치며, 그 결과에 따라 자활역량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중취업지원 대상자로 분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의뢰한다. 자활역량 평가점수 45점에서 69점까지는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고, 임시·일용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강화 대상자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배치한다. 45점 미만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하거나 간병·양육 등 가구 여건 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의 경우 근로의욕 증진대상자로 분류하여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자활근로사업 유형 가운데 근로유지형과 인턴형은 주로 자체가 운영하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은 지역자활센터가 주로 운영한다.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주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2018: 40)

[그림 Ⅱ-1-2] 주요 자활사업 종류

2.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특성

제Ⅰ장에서 주장하였듯이, 일반 빈곤 또는 저소득가구가 아닌 자활사업 참여가구만을 구분하여 인구사회학 특성 및 재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단위의 통계자료는 없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2012년에 중앙자활센터(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차원에서 실시된 바 있는 「2012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김정원·전세나·김정자·조성은·백학영·김경휘, 2013)가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 51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단 1,301명, 자활기업 128명을 조사하였다.[4)]

따라서 여기에서는 김정원 외(2013)의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재무건전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의 개인적 결정요인이자 결과일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징, 재무상태, 자기인식 및 정서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4) 김정원 외(2013) 연구는 51개 센터 선정 단계에서는 계통적 표집방법(확률표집방법), 그리고 최종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 단계에서는 할당표집방법(비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선행연구(김정원 외,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는 여성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수준은 낮고, 유 배우자율이 낮다. 또한 월세 비율이 높고, 건강상 문제가 많으며,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가족 부양 및 수발과 관련한 제약이 크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는 여성이 75.4%로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12년 당시 자활근로사업단의 참여자 연령은 평균 48.7세였으며, 40대와 50대의 참여자가 각각 30%대~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42.5%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44.5%는 고등학교 학력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전체의 55.6%가 사별이나 이혼, 별거 상태로 결혼을 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는 미혼이었다.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경우는 전체의 32.5%였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3분의 1은 경제적·심리사회적으로 외롭고 쉽게 고립될 수 있는 가구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택소유형태로는 보증부 월세가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47.9%, 자활기업 참여자의 경우 44.1%로 가장 많은 등 월세 거주 비율이 높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신체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우려할만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6개월 이상 투병 중이나 투약 중인 비율은 29.4%였다.

2) 재무상태

(1) 가구 소득

선행연구(김정원 외, 2013)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원이었다. 이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50~100만원 이하'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150만원 이하'가 30.1%, '150~200만원 이하'가 12.7%, '50만원 이하'가 9.9%였다.

(2) 가구 지출

2012년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0만원 정도였다(김정원 외, 2013: 109). 김정원 외(2013: 125)즉,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는 소득의 79.9% 정도를 생활비로 바로 지출하고 있어 가구의 자립을 위한 자산 축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3) 가구 저축과 자산

선행연구(김정원 외, 2013: 112)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에 민간개인연금, 민간의료보험, 은행예금, 희망키움통장 등의 저축이 있는 경우는 31.9%였다. 저축의 세부내용별을 살펴보면, 15.5%가 민간의료보험이 있었으며, 12.1%는 은행예금, 6.8%는 희망키움통장, 4.0%는 민간개인연금을 가지고 있었다. 금융자산이외에 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평균 부동산 시가는 4,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수급형태별로 부동산 시가 총액을 보면, 차상위계층이 4,873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수급자가 4,056만원, 자활특례자가 3,450만원이었다. 금융자산이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평균 금융자산인 706만원이었으며,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어떤 형태로든 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 중 27.1%였다(김정원 외, 2013: 117).

(4) 가구 부채

선행연구(김정원 외, 2013: 118)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 중 54.1%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부채액은 3,642만원이었다. 부채에 대한 월상환금이 있는 가구의 월상환금을 살펴보면, 평균 월상환금은 24만원이었다. 즉, 소득의 약 5분의 1 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총액(부동산자산+전세보증금+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의 순자산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순자산 평균은 -850만원으로 자산에 비해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원 외, 2013: 120).

3) 심리사회적 특성

김정원 외(2013)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우울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우울의 빈도를 11개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비교적 자주인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 이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김정원 외, 2013: 139).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은 다소 높은 편이었다. 전체 10개 세부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에 대해서 49.2%, ‘좋은 성품’에 대해서 46.8%, ‘실패한 사람이다’에 대해서 28%, ‘다른 사람과 같이 일 할 수 있다’에 대해서 62.6%, ‘자랑할 것이 없다’에 대해서 32.9%,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54.8%, ‘자신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42.4%, ‘자신에 대한 존경’에 대해서 52.1%,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다’에 대해서 14.6%,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에 대해서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원 외, 2013: 141).

제2절 가계 재무건전성의 개념과 이론

1. 가계 재무건전성의 개념

가계 재무건전성(household financial soundness)이란 가계 재무상태(financial status)의 건강함을 나타내거나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정운영·황덕순(2002)은 가계 재무건전성을 "가계가 재정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 이전의 수준으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그리고 위험에 대비한 가계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보았다. Khashadourian(2017)은 가계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가계수지 균형, 재무적 위기 대응능력, 가계의 성장가능성을 꼽았다는 점에서 정운영·황덕순(2002)과 개념적으로 크게 일치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계 재무건전성이 한 시점에서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수동적(passive) 지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계 재무건전성은 일종의 능동적(active) 지표로서 미래의 다른 시점에서 재무역량의 변화를 예상케 해주는 기능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효용은 무엇일까? 재무복지(financial well-being)일 수 있다(Sherraden, Huang, Frey, Birkenmaier, Callahan, Clancy, & Sherraden, 2015). 여기서 재무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경제적 책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고, 동시에 미래의 경제적 변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선택(choice)이 가능한 상태"의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5]는 재무복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확보한 상태이다.

5) http://www.consumerfinance.gov/

첫째, 자신의 재무에 대한 통제력: 기간 내 공과금 납부, 관리 불가능한 채무 미보유, 가계수지 균형이 가능한 능력

둘째, 재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미래의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나 사고에 대비한 재무적 완충(예: 예금, 건강보험, 높은 신용, 부모 등 사적 자원) 보유

셋째,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선택: 소득활동이 아닌 휴가, 외식, 학위취득 등과 같은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넷째, 재무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 등과 같은 재무적 목표의 보유와 이행

〈표 Ⅱ-2-1〉 재무복지의 4가지 요소

구분	현재	미래
안전	일상적 지출에 대한 통제력	재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
선택의 자유	즐거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재무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

출처: CFPB(2015. 7).

한편 재무건전성과 관련 있는 용어로는 재무만족도(financial satisfaction), 재무건강(financial health) 등이 있다. 우선 재무만족도에 대하여 김효정(2000)은 “재무 관련 목표나 기대의 달성정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안창희(2008)는 재무만족도를 “가계구성원이 느끼는 가계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재무만족도와 재무건전성의 가장 큰 차이는 재무상태에 대한 ‘주관의 개입 여부’로 보인다. 재무건전성이 소득과 지출 등의 규모나 양자의 비율과 같은 객관적 지표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반면, 재무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포함한다.

재무건강도 재무건전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Klontz, Kahler, & Klontz(2008: 1)는 재무건강은 “외적으로는 개인의 재무관리능력이며, 내적으로는 돈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감정”이라고 다소 추

상적으로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반면 강성호·최장훈·최현자·김민정·한지형(2018: 15)은 국내외 여러 유관 연구들을 검토한 후 재무건강을 “가계가 일상적인 지출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재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재무성장이 가능한 상태”라고 재무건강에 대해 보다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재무건강이 소득, 지출 규모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재무만족도 등과 관련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재무상태란 돈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 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Klontz, Kahler, & Klontz(2008).

2. 가계 재무건전성의 측정

일반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 측면에서 가계의 현금흐름,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의 부채와 자산보유 규모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이뤄진다(양세정 외, 2013). 가계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적 재무지표의 활용이다. 즉,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규모 등과 같은 재무지표를 활용하는 것이다(박명숙, 2003; Davis & Helmick, 1985; Carrol, 1986). 합리적 방법 같지만, 재무건전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리 익숙지 않은 접근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 증진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등의 기능과 효과 입증에 초점을 두는 일명 ‘재무역량 및 자산형성’(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 FCAB)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Birkenmaier et al., 2013; Boshara and Emmons, 2015; Sherraden, 1991; Sherraden et al., 2017). FCAB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연구와 실천이 가계의 소득과 지출 확인에 적합한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만을 재무건전성 진단에 활용해왔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더 정확한 재무건전성 진단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도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이용해 가계의 자산과 부채 규모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지금까지 재무건전성 연구를 주도해온 소비자학이나 가정경제학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미 대차대조표 분석을 뛰어 넘어 재무비율(financial ratios)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무비율[6]이란 몇 가지 재무변수(예: 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조합하여 주로 그 비율을 표현한

것으로서 절대 액수에 기초한 개별 재무변수에 비해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백은영, 2017: 35). Greninger 외(1996: 58)에 따르면, 본래 재무비율은 1950년대 이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은행 등 채권자가 특정 기업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떠안게 되는 지급불능과 파산 위험을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재무비율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측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한 이는 1985년 Griffith(1985)이다. 그는 총 16개의 재무비율[7]과 가이드라인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당시 미국 가계의 재무상황을 진단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Griffith(1985)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실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 것은 Prather(1990)였다. 1983년 미국 소비자재무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를 분석한 그의 연구결과는 유동자산/월지출, 유동자산/총부채, 유동자산/주택담보대출이외대출, (자본+유형자산-주거)/순자산이 가계 재무건전성을 진단하기에 적합함을 확인시켜주었다.

가계 재무건전성 분석에서 재무비율의 활용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다. 우선 모든 값이 비율이나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대규모 자료 분석에서 효율성이 뛰어나다. 대차대조표 분석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재무비율을 이용하면 예컨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재무건전성도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다(통계청, 2019). 더불어, 각 재무비율이 가계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공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 때문에 재무비율은 가계 재무건전성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ling)이나 코칭(financial coaching)에서 목표설정과 점검을 위한 도구로 널리 쓰인다(양정선, 1997; Lytton et al., 1991; DeVaney, 1993).

재무비율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비율별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의 충족여부이다. 각 재무비율은 수많은 소비자학 (또는 가정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통해 설정된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benchmark)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충족 시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판단한다(Greninger et al., 1996; Griffith, 1985; Prather, 1990). 예컨대, 가계수지비율(총생활비/가처분소득)이 0.9(주소현 외, 2016) 또는 1미만

6) 대표적인 예는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DTI)이다. 가계 대출원리금상환부담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원리금상환액을 연간 가구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7) Griffith(1985)가 제시한 16개의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월지출=2.0~6.0, (유동자산+기타 금융자산)/월지출=6.0, 유동자산/총부채=>0.1, (유동자산+기타 금융자산)/총자산=>0.2, 유동자산/주택담보대출이외부채=>0.1, 유동자산/(단기부채+12개월간 대출원리금상환액=가이드라인 없음, (유동자산+기타 금융자산)/(단기부채+12개월간 대출원리금상환액=가이드라인 없음, 총부채/순자산=>.5, 주택담보대출이외부채/순자산=>1.0, (자본+유형·개인자산)/순자산=<1.0, (자본+유형자산-주거)/순자산=>0.4, (자본+유형자산)/고정달러자산=1.0, 유동자산/총순자산=0.2, (유동자산+기타 금융자산)/총순자산=>2.0, 순유형자산/총순자산=가이드라인 없음, 소득자산/총순자산=가이드라인 없음.

(최윤지·최현자, 1998; Lytton et al., 1991), 총부채부담지표(총부채/총자산)가 0.4이하(백은영, 2017; Khashadourian, 2017)면 재무건전성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식이다. 물론, 각 재무비율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선호하는 가이드라인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주소현 외, 2016: 6-7). 나라마다 경제상황과 금융환경에 차이가 있고, 소득계층(이종희·양세정, 2014) 또는 연령(유우정 외, 2005) 등에 따라 중요한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Khashadouria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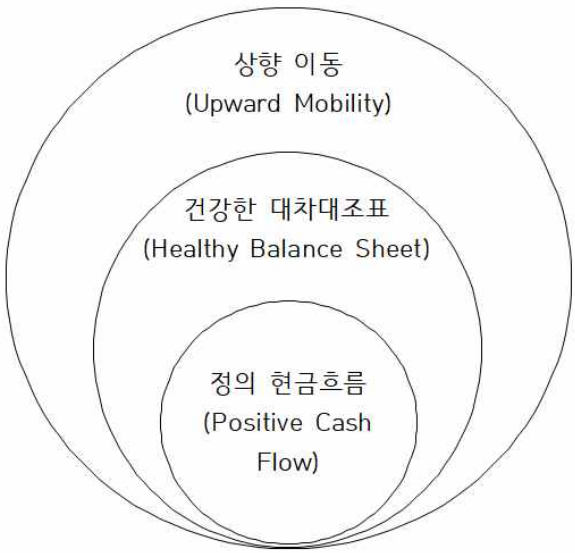
3. 가계 재무건건성의 가구 유형

일반적으로 재무건전성 분석에서 재무비율은 복수로 쓰인다. 그리고 복수의 재무비율이 동일 가구의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해 늘 동일한 진단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정반대의 진단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가계수지비율은 좋은데, 총부채부담비율은 나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결국 개별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비율의 다양한 조합을 기준으로 가구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용한 모형이 바로 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가계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가계균형모형(equilibrium model of household: EMH)이다. Khashadourian(2017)의 가계균형모형은 저소득층의 재무사례관리(financial case management)를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었으며, Khashadourian(2017)에 의해 최초로 고안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장동호(2019)에 의해 재무건전성 연구에 적용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Khashadourian(2017)은 저소득 가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 현금흐름(positive cash flow)라고 보았다. 정의 현금흐름이란 지출이 소득보다 적은 것, 즉 가계흑자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초단기 또는 한 시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정적으로 평가할 때 적합한 기준이다. 정의 현금흐름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있어 중요하다.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현금흐름이 약간만 끊기더라도 다른 계층에 비해 받는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계균형모형은 각 가구별로 재무복지(financial wellbeing)의 향상을 위해 추구해야할 가계의 목표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한다. 우선, 재무복지를 위한 가구의 단기과제

는 정의 현금흐름(positive cash flow)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가계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흑자가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기과제는 건강한 대차대조표(healthy balance sheet)를 갖는 것이다. 정의 현금흐름에서 만들어진 여유자금을 저축 또는 투자하여 자산을 형성하거나 채무상환을 늘려 부채총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과제는 가구의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이다. 정의 현금흐름과 건강한 대차대조표를 활용하여 가계가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게 됨을 뜻한다.



출처: Khashadourian(2017: 9)

[그림 Ⅱ-2-1] 가계균형모형

Khashadourian(2017)은 효과적인 재무사례관리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재무건전성을 이러한 가계균형모형에 대입해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표 Ⅱ-2-2〉 참조). 가계의 단기과제에서부터 장기과제로의 순서에 따라 가계 재무건전성을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총 6개의 재무비율 사용을 제안하였다. 가계수지비율[8], 월저축률, 유동성비율, 고정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공적이전소득비율[9]이 그것이다.

8) Khashadourian(2017)은 '가계수지' 대신 '재량소득'(discretionary inc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계산식은 [월가구소득-월가구지출]로 재량소득이 0(가이드라인)보다 크면 재량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다른 재무지표와 달리 비율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측정 내용은 동일하고 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가계수지비율로 이를 대체하였다.

〈표 Ⅱ-2-2〉 재무지표에 대한 개념정의와 가이드라인

지표	정의 및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계수지비율(expenditure-to-income ratio)	월지출/월수입	가계수지비율＜1
월저축률(monthly savings rate)	월저축/월수입×100	월저축률≥10% (Greninger et al., 1996)
유동성비율(average liquidity rate)	유동자산(현금, 현금성 자산) /월지출×100	유동성비율≥200%(Griffith, 1985), 300%(Greninger et al., 1996)
고정지출비율(percentage fixed expenditure)	총 고정지출(세금납부 제외)/월수입×100	고정지출비율≤60%[10]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credit insolvency rate)	대출원리금상환액/처분 가능소득×100	총부채상환비율＜40% (주택담보대출 미포함＜15%)
공적이전소득비율(income support ratio)	공적이전소득/월소득×100	특정 가이드라인 없음

출처: Khashadourian(2017: 8)을 요약· 수정 정리

[그림 Ⅱ-2-2]는 본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Khashadourian(2017)의 가계 재무건전성 분석틀이다. 가계 재무건전성 분석의 순서, 재무비율의 가이드라인, 가계 재무건전성의 유형, 각 유형별 재무목표를 정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재무비율은 가계수지비율이다. 가계수지비율이 가이드라인인 1미만이면, 단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본다([그림 Ⅱ-2-2]의 A유형~C유형). 다음은 유동성비율이다. 가계의 이 비율이 최저 가이드라인인 200%가 넘는지를 확인한다. 유동성비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해당 가구 월 소비지출의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비율이 200%를 넘긴다면 현 상태에서 가계의 현금흐름이 좋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여유자금, 즉 재무회복탄력성(financial resiliency)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유동성비율까지 충족되었다면, 다음 순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의 확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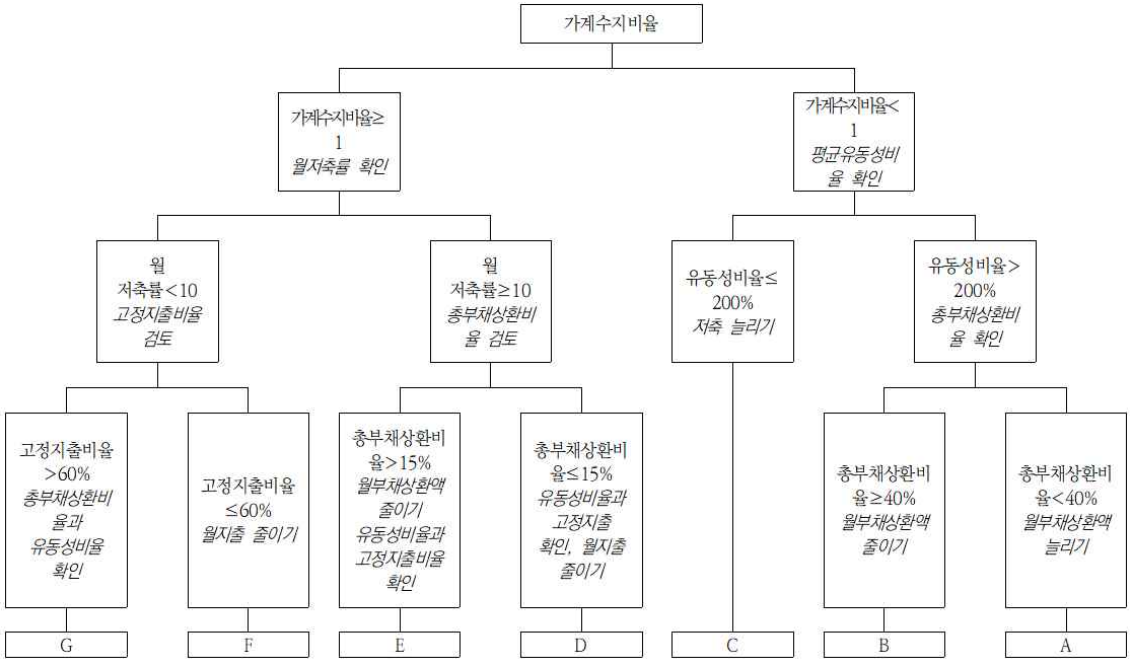
9) 소비자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재무건전성 연구들은 공적이전소득비율을 재무비율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hashadourian(2017)이 저소득층 가계 재무건전성 진단에 공적이전소득비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저소득층의 특성상 공적이전소득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다른 재무비율과 달리 공적이전소득비율에 대한 평가는 가계의 재무상태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향이동의 관점에서 공적이전소득비율은 낮은 것이 좋지만, 외부자원의 지원 없이는 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라면 공적이전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Khashadourian(2017)이 공적이전소득비율을 재무건전성 유형화의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Khashadourian(2017: 14-15)은 적자가계이면서 저축률도 높지 않은 일부 가계유형([그림 Ⅱ-2-2]의 G유형, F유형)에 대한 개입에서 실천가들이 가계 공적이전소득비율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복지급여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10)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총부채상환비율의 가이드라인은 처분가능소득의 15%이다.

포함해 가계의 총부채상환비율이 40%를 넘으면(B유형) 적정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월부채상환액을 줄이는 것을 제안한다. 지나친 월부채상환은 가계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고 재무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부채상환비율이 40%이하이면(A유형), 월부채상환액을 늘리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계수지비율이 1미만인 흑자가구이지만, 유동성비율이 200% 이하인 가계(C유형)이다. 이 경우에 시급한 재무목표는 저축 증액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이다. 가계에 적정 유동성(예·적금 등의 유동자산)이 없다면, 실업 등에 의한 경제적 충격 시 바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부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무건전성 분석에서 특정 가구의 가계수지비율이 1이상, 즉 적자 또는 준 적자가구로 판명되면, 그 다음은 월저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D유형~G유형). 월저축률이 0이상이라면, 유동성 확보의 최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총부채상환비율이 40%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D유형), 유동성비율과 고정지출비율을 확인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채상환액을 늘리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의 가계수지비율이 1이상, 즉 적자가구여도 월저축률이 0이상이고 총부채상환비율도 40%를 넘는다면(E유형),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을 낮출 것을 권장하게 된다. 빠른 대출상환도 좋지만, 이것이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뛰어넘고 고정지출로 작동한다면 가계의 현금흐름이 단기적으로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 자산처분이나 또 다른 대출을 초래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가계 재무건전성의 마지막 유형은 가계수지비율이 1이상인 상황에서 월저축률이 낮은 가구이다(F유형, G유형). 이 경우,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고정지출비율이다. 지나친 고정지출이 가계수지비율과 월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으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확인된 고정지출비율이 60%이하라면(F유형), 월 소비지출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합리적인 해법일 수 있다. 반대로, 60%를 초과했다면(G유형), 총부채상환액과 유동성비율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총부채상환액이 너무 많고 동시에 유동성비율이 낮을 경우, 현실적으로 남은 주요 해결책은 변동지출(식비, 여행, 문화생활비, 의복비 등) 줄이기, 공공부조 프로그램 또는 채무조정의 신청이다.



출처: Khashadourian(2017: 8)을 수정 편집

[그림 Ⅱ-2-2] 가계균형모형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 및 유형별 재무과제

장동호(2019)는 위의 가계균형모형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재무건전성의 가구 유형별 차이를 계층별로 탐색해 보았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겹치는 저소득층에 대한 분석결과를 따로 살펴보면, 비노인, 남성, 월세거주, 이혼, 공적이전소득 비수급이 재무건전성 차이의 유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표 Ⅱ-2-3〉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층에서 재무건전성이 가장 높은 A유형에 비해 부채상환부담이 큰 B유형의 경우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젊고 남자이며 교육수준이 높다. 그러나 다인가구이고 공적이전소득비율이 낮아 대출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조건이 유사하면서 유동성비율이 낮은 C유형은 A유형에 비해 이혼과 월세 부담이 크나 공적이전소득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차이가 있었다. 즉, 월세부담이 높은데 외부로부터 공적이전소득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자산형성이 어려운 것이다. 끝으로 재무건전성 유형이 가장 나쁜 F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B유형과 많이 유사하다. 월세부담은 두 유형을 설명해주는 변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우선적 개입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한다.

〈표 Ⅱ-2-3〉 소득계층별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구분		전체	저소득층 (소득1분위)	중산층 (소득2~4분위)	고소득층 (소득5분위)
		n=19,694,283	n=3,938,670	n=11,815,764	n=3,939,849
변수	변수값	(%)	(%)	(%)	(%)
가구주 성별	남성	77.9	48.0	82.5	93.8
	여성	22.1	52.0	17.5	6.2
가구주 연령	30세미만	2.2	2.6	2.7	0.5
	30~39세	13.6	5.6	17.0	11.4
	40~49세	23.6	8.9	25.1	33.8
	50~59세	25.2	13.9	24.6	38.1
	60세이상	35.4	69.0	30.6	16.1
	평균(표준편차)	54.56세(14.18)	65.68세(15.70)	52.14세(13.14)	50.72세(9.19)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15.4	46.0	9.6	2.3
	중학교 졸업	9.8	15.3	10.0	3.5
	고등학교 졸업	34.7	26.6	40.2	26.6
	대학졸업이상	40.1	12.1	40.2	67.5
가구주 혼인상태	미혼	8.6	11.5	9.8	2.0
	배우자 있음	70.0	39.9	74.5	94.6
	사별	11.6	38.0	6.2	1.3
	이혼	9.8	18.6	9.5	2.1
가구원 수	1명	19.3	57.8	12.4	1.5
	2명	26.2	31.7	29.6	10.4
	3명	21.2	6.3	24.5	26.2
	4명	25.4	3.4	25.6	47.0
	5명이상	7.9	0.7	7.9	14.9
	평균(표준편차)	2.78명(1.28)	1.58명(.82)	2.89명(1.20)	3.66명(.97)
가구주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3.0	10.5	46.0	66.6
	임시·일용직근로자	12.1	18.7	12.9	3.1
	자영업자	22.4	12.0	25.3	23.9
	무직·가사·학생	22.5	58.8	15.8	6.5
주거점유 형태	자가	61.3	45.3	61.2	77.4
	전세	17.7	16.2	18.5	16.6
	월세	15.2	24.9	15.7	4.1
	기타	5.9	13.6	4.6	1.9

출처: 장동호(2019: 93)

4. 가계 재무건전성의 영향

가계 재무건전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거시경제의 차원에서 가계 재무건전성의 악화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감소와 가계 소비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사태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채무불이행자를 대량 생산하게 되고 일명 '부채 빈곤자'(debt poor)를 늘려 국가 사회보장에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계재무건전성의 악화는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과 가구에 다양한 일련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가계수지가 악화될 경우 저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부채의존도는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산 부족과 과잉 부채는 가계수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결국 연체와 파산 발생률을 높인다. 연체와 파산은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양산한다. 채권추심 등에 의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우며, 근로동기가 낮아지고 실업 발생의 위험은 증가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약물 중독과 도박 그리고 범죄의 위험을 높이며, 그 과정에서 가족갈등과 해체, 가정 폭력, 아동방임, 자살(김순영, 2011; 김미현·박성진, 2018; 김학주, 2005; 맹성준·한창근, 2019; Sullivan et al., 2001; 이윤정·송인한, 2015)이 유발될 수 있다. 우울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미래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빈곤층과 청년들(장동호, 2017)의 경우,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적 활동을 스스로 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키울 수 있다.

약 10년 전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부채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등이 저소득층의 부채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재무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자발적으로 재무상담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이유일 것이다.

5. 가계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 재무비율이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재무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승렬(2011)은 가계 재무건전성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분석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질 근로소득, 연령, 교육연수, 가구원 수, 유배우자, 금융자산과 같은 가구특성은 가계소비의 증가를 이끌고, 비정규직·자영업 종사자와 같은 특성은 소비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은 교육연수, 유배우자, 실질근로소득, 금융자산이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연령, 비정규직·자영업자였다.

이종희·양세정(2014)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소득계층별 적자가계의 소비지출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빈곤층의 경우 높은 소득, 여성 가구주, 가구주 일용직·상근직 근로, 취업한 자녀 보유 등이 가계적자 발생확률을 줄인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시켜준다.

서울시 거주 만18세~34세 청년 372명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김세림·김미현(2016)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재무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이 불충분하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주거비와 같은 고정지출 비용이 높아 유동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현 외(2016)는 2014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가계수지지표(생활비/가계소득)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근로자가 아닐수록, 자가를 보유하였을수록, 경상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은영(2017)은 가구주가 50대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은퇴가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은퇴자이거나 가구원 수가 작은 경우, 종사상 지위가 무직·가사·학생인 경우,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에 가계수지지표가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가구원수가 작거나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이거나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 소득이 많은 경우에 비상자금 지표(예: 유동자산/총생활비)가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한편, 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을 분석한 장동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하위소득 20%) 가운데 가계수지가 좋지 않은 가구의 경우는 이혼 가구와 월세 거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 성별, 가구원수, 교육수준 등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채 빈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별히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사업실패나 과잉대출, 신용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가난해진 빈곤층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 있는 것이다.

〈표 Ⅱ-2-4〉 저소득층의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구분	변수		전체	자산·부채 안정 흑자가구 (A유형)	부채위험 흑자가구 (B유형)	자산위험 흑자가구 (C유형)	변동지출 빈곤 적자가구 (F유형)	고정지출 빈곤 적자가구 (G유형)	x^2
저소득층	연령	65이상	53.6	58.9	28.3	59.2	55.4	34.3	177,819.8
		기타	46.4	41.1	71.7	40.8	44.6	65.7	***
	성별	여성	52.0	53.9	43.9	54.8	40.8	45.9	25,546.3
		기타	48.0	46.1	56.1	45.2	59.2	54.1	***
	가구원수	1인	57.8	59.8	39.5	69.5	60.2	46.5	91,302.4
		기타	42.2	40.2	60.5	30.5	39.8	53.5	***
	혼인상태	이혼	18.6	17.6	24.5	18.8	20.3	20.2	8,507.6
		기타	81.4	82.4	75.5	81.2	79.7	79.8	***
	교육수준	고졸이하	87.9	89.5	78.0	93.5	89.3	79.3	79,046.4
		기타	12.1	10.5	22.0	6.5	10.7	20.7	***
	종사상지위	무직·가사 등	58.8	59.5	35.3	76.7	61.9	50.3	133,414.0
		기타	41.2	40.5	64.7	23.3	38.1	49.7	***
	주거점유	월세	24.9	24.5	19.7	27.4	25.1	26.8	6,369.7
		기타	75.1	75.5	80.3	72.6	74.9	73.2	***
	공적이전소득	수급	80.2	82.9	70.1	87.2	76.1	66.6	103684.7
		미수급	19.8	17.1	29.9	12.8	23.9	33.4	***

*** p<.001
주: 음영은 집단의 평균값 이상

출처: 장동호(2019: 98)

제3절 재무역량강화의 개념과 이론

1. 재무역량의 개념

재무역량은 재무건전성과 재무복지 확보를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이다. 또한 재무역량강화는 양질의 금융서비스, 자산형성기회, 재무교육 등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목표하는 금융사회복지(financial social work)의 실천적 목표이기도 하다(Sherraden, Frey and Birkenmaier, 2015). 사회과학 분야의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재무역량(financial capability)에 대한 개념정의 역시 매우 다양하다. 유사 개념도 많다.[11] 다만 관점에 따라 크게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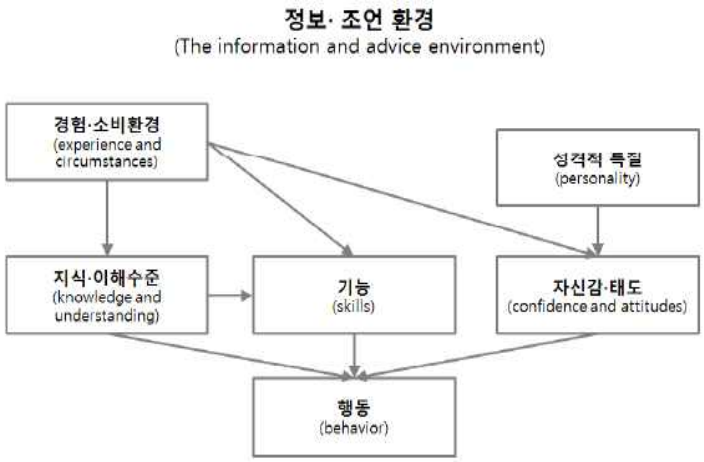
우선 협의의 관점에서 재무역량은 앞서 언급한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금융에 대한 개인의 이해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만, 초기와 달리 최근 금융이해도는 금융에 대한 개인의 지식(knowledge)만이 아니라, 기술(skills)과 태도(attitude) 등을 포괄하는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금융에 대한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로 재무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광의의 관점에서의 재무역량은 앞서 언급한 개인이 보유한 재무역량뿐만 아니라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accessibility) 정도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라고 부른다.[12]

협의의 관점에서 재무역량은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의 재무역량 모형에 의해서 잘 설명된다. 이들은 개인의 재무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이해'(financi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금융기술(financial skills), '금융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financial confidence and attitudes)와 같은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주장한다. 구

11) 재무역량과 유사한 용어로는 가정학·소비자학·경제학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 소비자역량(consumer empowerment), 재무관리역량(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e), 가정경제관리(home economics management)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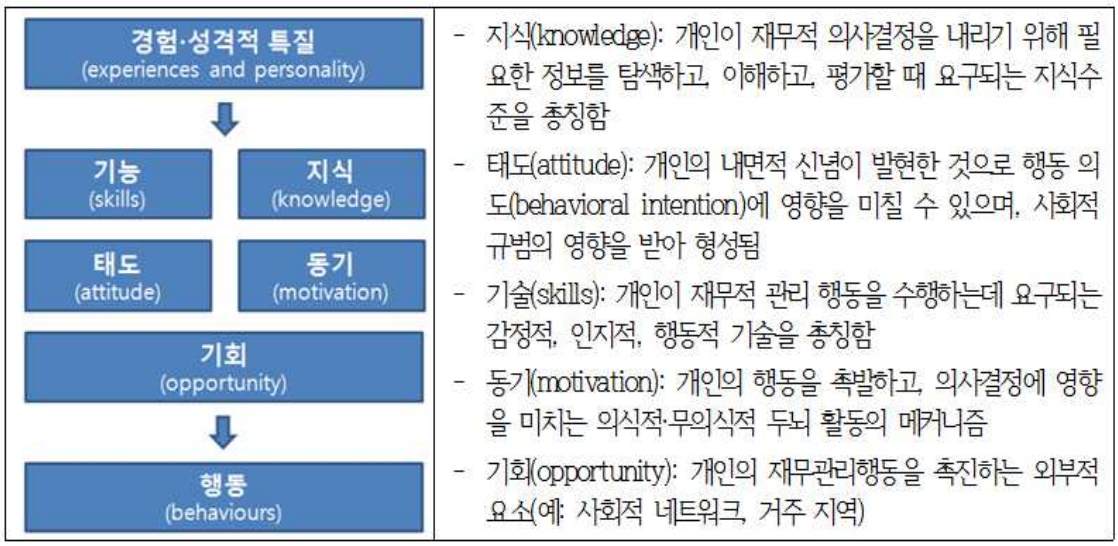
12) 재무이해력과 금융포용의 촉진수단은 다르다. 전자는 전통적으로 금융에 대한 개인의 지식 또는 내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무교육이 주로 활용되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중요하다.

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의 금융 경험·소비환경은 금융지식과 이해, 금융기술, 금융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인의 성격적 특질에 따라 금융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는 달라진다. 끝으로 금융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이해는 금융기술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금융기술과 자신감 및 태도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재무행동에 영향을 준다. 참고로 여기에서 금융은 재무관리, 지출계획, 금융상품의 이용, 금융정보와 자문 활용 등의 세부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그림 Ⅱ-3-1]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의 재무역량 모형

출처: FSA (2005: 2)



[그림 Ⅱ-3-2] 영국 마스(MAS)의 재무역량 모형

출처: The Money Advice Service. 2013. UK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call for evidence. p.7.

영국의 소비자금융기구인 '마스'(Money Advice Service: MAS)도 영국의 FSA와 유사한 관점에서 재무역량을 정의한다. 마스는 재무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을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기술(skills) 외 동기(motivation)와 기회(opportunity)를 추가하여 총 5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2013). 재무행동에 있어 동기(motivation)와 기회(opportunity)가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점이 FSA와 차별점이다.

한편, 광의의 관점에서 재무역량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미국 미주리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이자 재무역량강화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마가렛 쉐라든(Margaret Sherraden)이 있다. 쉐라든(Sherraden, 2013)은 재무역량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재무에 대한 개인의 이해도나 관리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결과적 재무행동은 그 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person's ability to act)뿐만 아니라 기회(person's opportunity to act)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Sherraden et al(2015)의 재무역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량'(capability)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쉐라든의 재무역량의 개념은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저작들에서 도출됐다. 센에 따르면 역량이란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functioning)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freedom)[13]이다. 즉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달성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 그것이 바로 역량이며, 이러한 역량은 결국 기능(functioning)과 기회(opportunity)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편 누스바움(Nussbaum, 2000)에 따르면, 역량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람들의 내적 역량(예: 능력, 지식, 기술)만이 아니라 외적 조건과 활용 가능한 각종 기회(예: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제도에 대한 접근성)들이 고려된 개념이다. 즉, 누스바움이 말하는 '역량'은 한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인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의 집합을 의미한다.

13) 센의 자유(freedom)는 일종의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의 개념이다. 타인으로부터 구속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즉 무제약(liberty)과 다른 개념이다. 센의 자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만큼 인간의 자유 또한 사회적 현실의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프레시안. 2011. "자유란 무엇인가?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3〉," 04월 25일자).

2. 재무역량의 구성요소와 변화수단

1)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

이태준·김부열·손혜림(2017)은 재무이해력을 “개인이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실제 금융의사결정에 잘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능력과 기능적 역할로 정의”한다. 한편 OECD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는 역량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여 재무이해력을 “건전한 금융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복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지,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행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OECD/INFE, 2016).

재무이해력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금융상품의 다변화와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금융상품의 효용성이나 편익 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금융상품의 전문성 등으로 금융정보 자체를 탐색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와 소비자인 개인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가계의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나마 개인의 금융이해도가 높아 재무 관련 상황에 대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이해력에 대한 관심은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무이해력 향상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재무이해력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 OECD의 산하기구인 INFE는 각국의 경제, 금융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 표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재무이해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OECD 재무이해력 측정도구의 설문문항(OECD/INFE, 2011)은 [표 Ⅱ-3-4]와 같다. 참고로, OECD는 재무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금융지식, 재무행동(기술), 금융태도, 금융포용에 관한 사항을 묻고 더불어 금융포용에 관한 질문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재무이해력에 대한 측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객관적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평가이다. 전자는 금융에 대한 객관적 지식, 즉 금융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정확성(accuracy)을 문제 풀이 등의 방식으로 측정하며, 후자는 금융에 대한 주관적 지식, 즉 자신이 알고 있다고 있다는 인식, 즉 자기 확신(self-confidence)을 자기평가 방식으로 스스로 측정한다. 양자 모두 장

단점이 있다. 우선 전자는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수리력이나 문제풀이 능력이 결과에 과다 반영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후자는 수리력 차이가 재무이해력 점수에 개입할 여지는 적지만, 개인의 자기 확신 자체가 실제와 큰 차이가 존재할 위험이 있다.

〈표 Ⅱ-3-1〉 OECD 재무이해력 측정도구 설문문항

구분		설문문항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22문항)	금융지식(financial knowledge)(8문항)	금융 관련 나눗셈, 화폐의 시간적 가치, 대출이자 개념, 원리금 계산, 복리개념, 위험과 수익간의 관계, 인플레이션의 의미, 분산투자의 효과
	재무행동(financial behavior)(11문항)	구매적 지불능력 점검, 각종 대금의 적기 납부, 평상시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가계예산 수립, 최근 1년간 저축 경험, 금융상품 선택을 위한 적극적 정보수집, 생계를 위한 차입 등
	금융태도(financial attitudes)(3문항)	저축과 소비에 대한 선호, 현재에 대한 선호(미래에 대한 대비), 돈에 대한 태도(돈은 쓰기 위한 것)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4문항)		금융상품에 대한 인지 및 보유 여부, 최근 2년간 금융상품 선택 유무, 친지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의존 여부
인구사회학적 정보(socio-demographic information)(14문항)		거주지, 성별, 자녀수, 연령, 소득, 교육 수준, 고용형태 등

출처: OECD/INFE.(2011)

재무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금융사회화(financial socialization)이다. 금융사회화란 사회화의 과정에서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빌리는 개인의 재무적 행동능력과 태도, 가치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배움의 원천은 부모, 주변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 대중매체, 학교 등이다. 금융사회화가 잘 이뤄진 사람일수록 합리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재무관리 역량이 높다. 두 번째로는 재무교육(financial education)이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 그리고 금융기관 및 회사의 전문적 재무교육도 재무이해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한 금융 관련 정보와 자문 수집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합교육 방식의 재무교육보다는 전문가 1:1 컨설팅 방식이 더 유용할 수 있다.

(1) 재무사회화

사회화의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한 재무에 대한 가치, 태도, 기준, 규범, 지식 등은 재무에 대한 특정한 이해와 접근을 형성하게 된다. 에드리언 펀햄(Adrian Furnham)은 어렸을 때 경제라는 세계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평생을 간다고 보았다(Furnham, 1999). 특히 아이들은 여렸을 때 부모가 어떤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무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관찰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성인이 되어서 경제생활을 한다(Kim & Chatterjee, 2013). 사회초년생이 되어서도 부모의 재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기도 하다. 재무사회화는 기본적으로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어렸을 때 부모가 주식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와 저축을 많이 하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각각의 부모의 투자방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하여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유한 가정일수록 주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성공적 활용 경험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은 가정일수록 반대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재무와 경제문제에 대한 가정 내 논의를 삼가는 경향이 강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재무교육 프로그램이 강조되는 이유다.

(2) 재무교육

재무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렸을 때부터의 조기 재무교육(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고, 재무교육이 가계부채 문제 예방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무교육의 목표는 재무 관련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재무교육과 비슷한 의미를 담은 용어들이 많다. 경제교육, 소비자 교육, 금융·자산 관리 교육, 신용 교육·투자 교육이 그것이다. 전자에서 후자로 올수록 의미가 협소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천규승·정혜선·이의선·허경회(2016)에 따르면, 우선 재무교육(financial education)은 금융 이해력, 즉

돈에 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가계의 재무 관리를 위한 교육으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등의 주제를 다룬다. 주로 수입, 지출, 저축, 대출 관리에 중점을 둔다. 두 번째로 개인 재무관리 교육(personal finance education)은 재무교육과 비슷하지만 개인의 가계 재무관리에서 저축, 자산운용, 연금, 세금, 대출, 보험, 복지, 상속 등 여러 주제를 다룬다. 금융 이외의 공공복지 자원 활용까지 다룬다는 점이 재무교육과 다르다. 세 번째로 투자교육(investment education)이 있다. 투자 교육은 금융 상품이나 지식이나 투자 이론 등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이다. 네 번째는 소비자 교육(consumer education)이다. 소비자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무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믿지만, 최근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로욜라 법대 교수인 로렌 E 윌리스(Lauren E. Willis)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재무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들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재무교육과 개인의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는 미국 내 최근 재무교육에 관한 연구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연구자들이나 학술지 편집자들이 종전의 평가 연구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료의 신뢰성 문제나 연구 설계의 실수, 측정의 오류, 그리고 재무이해력이나 교육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기인한 해석 오류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에 이루어진 두 개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Willis, 2011).

첫째는 재무교육의 효과에 관한 미국의 과거 연구들에 대한 통합비교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라 개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통제하는 경우 재무교육에서 주장되는 긍정적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

두 번째는 재무교육이 부의 축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미국의 '건강과 은퇴 서베이'(Health and Retirement Survey) 자료를 재분석한 연구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 건강, 결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경우 재무교육이 부의 축적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 미국에서 본 논문에 대한 많은 이들의 첫 반응은 충격이었고 심지어 분노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 학계와 심지어 소비자 옹호자들 중에도 재무교육이 소비자들의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개선하는데 견실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점진적으로 마지못해나마 받아들이고 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미국에서 재무교육을 증진시킬 임무를 맡은 기관인

NEFE(National Endowment of Financial Education)도 “비용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재무교육의 전통적인 방법은 아직 그 가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재무교육에 참가하는 많은 이들이 행동을 바꾸려는 의사를 보여주지만, 스스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발적 재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래부터 금융에 대해 관심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높고 따라서 강력한 참여 동기로 인해 재무교육의 효과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의무적 재무교육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무교육의 성과를 입증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금융문제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금융관련 의사결정의 오류가 적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무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금융과 관련된 계산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금융과 관련된 강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과 교수법 등이 재무교육의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과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재무교육의 세부 목적, 세부 주제, 참여자 특성, 활동 내용, 교육 시점, 교육 횟수 등이 모두 재무교육의 효과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3) 금융자문과 안내

금융사회화와 재무교육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람들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장단점을 구분하기 어려워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실직, 이혼, 육체적·신체적 질병, 주택차압, 채무불이행, 빈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합리적 의사결정을 개인 혼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융자문과 안내(financial advice and guidance)는 재무교육과 같은 집합교육 방식의 접근보다 효용이 뛰어나다. 금융자문과 안내는 주로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내용이 단순히 재무 및 금융만이 아닐 수 있다.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것, 신용개선과 채무조정, 압류해제 신청, 개인파산, 저축 및 보험 선택, 주거구입, 세금 감면, 투자 및 은퇴 설계 등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상담 및 조언 그리고 해결책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자문과 안내 역시 다양한 목적과 방법 그리고 기간과 강도를 가질 수 있다. 목적은 재무 및 금융에 관한 단기와 장기 목표로 구분될 수 있고, 상담과 코칭은 반드시 대면(in person)만이

아닌 전화, 온라인, 개인 또는 집단 기반일 수 있다. 금융지도의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설계(planing)의 방식일수도 있지만, 조언(advice), 상담(counseling), 코칭(coaching) 또는 멘토링(mentoring)일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설계와 조언(financial planning and advice)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요구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대학이나 비영리기관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금융설계 및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ling)은 기본적으로 금융과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치료적 접근을 취한다. 재무코칭(financial coaching)은 금융 상담과 비슷하지만 고객주도과정(client-directed process)를 거쳐 고객 스스로 재무적 목표를 찾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가 아닌 발전적 과업들도 재무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다르다(Collins & Murrell, 2010). 재무멘토링(financial mentoring)은 멘티(mentee)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멘토(mentor)를 제공하여 금융 이해력 제고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많지 않은 연구들이지만, 금융자문과 안내는 긍정적 효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빈곤층이나 저소득층과 같이 양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빈곤이나 신체적·심리적·언어적 장애 등을 가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재무상담과 코칭 등의 중요성은 의심할 바 없다. 하지만, 금융자문과 안내 역시 양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 의미를 가진다. 금융포용(inclusive finance)의 존재 여부에 따라 금융자문과 안내의 최종적 효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2) 금융포용

오늘날 우리사회는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는 고도록 복잡한 사회이다. 특히 재무이해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신용과 보험 그리고 투자상품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재무이해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과 개선의 필요성을 희석시키거나 오히려 금융상품의 피해

자에 대한 비난일 수 있다.

(1) 소외 가구

오늘날 많은 가구들이 매우 기본적으로 동시에 혜택이 좋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최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1년 6월 조사에서 은행에 어떤 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인 'Unbanked Households'가 전체 가구의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2가구당 1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 1000만 가구가 은행 계좌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4가구 중 1가구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집단, 미혼모가정, 청년, 저학력, 저소득, 저자산 집단의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신용도가 낮거나, 과거 채부불이행 경험이 있는 경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나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 원인일 수 있다.

괜찮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다른 대체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존도 그리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예컨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71%의 사람들은 구매 시 수수료 부담이 있는 머니오더(money order)를 이용하여 월세 등을 지불하며, 47%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사설 업체를 이용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다.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체 서비스에는 사설 수표현금교환점, 전당포, 고리소액단기대출, 소액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대부업체 등이다(FDIC, 2009). 이러한 대체 금융서비스들은 때로는 편리하고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사기성이 높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유로 제도권 금융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금융 또는 대부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 건수는 773건,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 건수의 24%, 피해액의 18%를 차지한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대출에 필요하다며 수수료 등을 뜯어냈다. 전체 피해자 중 40·50대가 62%에 달한다.

최근엔 기업형 전당포(아이티 전당포)에 의한 피해도 증가 추세다. 프랜차이즈 전당포라고 하는 기업형 전당포는 담보품목에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해준다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귀중품을 맡겼다가 돈을 빌린 뒤 나중에 물건을 찾아가려고 해도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종 고리대금업으로 지목된다.

(2) 금융포용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

행동경제학, 경제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무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접근성, 적합성, 경제성, 호감, 편의, 유연성, 신뢰성 등이 그 것이다.

①적합성(appropriate)

적합성은 금융서비스가 금융소외자의 다양한 욕구를 얼마만큼 맞춤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이용자의 연령, 성, 교육수준, 문화적 배경, 재무상태 등에 적합한 형태와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인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라면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관계적 제약의 보편적 상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를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라면 이 역시 이들의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설계될 때 개인적·사회적 효용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②접근성(accessible)

접근성은 금융기관 및 회사에 개인이 접근, 진입, 이용,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의미한다. 일단 저소득 자체가 제도권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약요인이 된다. 또한 심리적 불안 유발요인이나 언어 및 시간적 제약도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실제로 미국사회에서 영어를 못하거나 은행시스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주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잔고가 많지 않은 사람,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미국 은행들은 자유입출금통장(checking account)을 잘 열어주지 않는다. 급여통장과 같은 몇몇 은행상품 역시 소

득이 불규칙한 경우 이용하기 어렵다.

금융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몇몇 소규모 은행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하였다. 저소득층이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들을 제거하고 이용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체 이용자 중 일부를 흡수한다.

③경제성(affordable)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가격이나 비용이 적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외계층은 소액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신용도가 낮을 경우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은행의 대출 거부로 인해 대부업체와 같이 고리대금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와 연체금리가 매우 높아 경제적인 손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④경제적 매력(financially attractive)

금융서비스는 경제적인 매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높은 이자, 낮은 수수료, 메칭 지원, 보너스, 상금 또는 그밖에 다른 혜택이 주어질 경우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일반적으로 고액의 예금자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액예금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다행히 최근에는 매칭지원, 성과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혁신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이 확산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저축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⑤편의성(easy to use)

대부분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이해하기 상당히 복잡하다. 특히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없고, 계산능력이 약하거나, 재무이해력이 낮은 이들에게 어떤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결국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사람의 언어·신체·지적 수준 등과 무관하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들을 인간의 심리사회적 한계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경제적인 측면의 의사결정이나 변화를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개인의 자율신청이 아닌 의무적용을 통해 강제적으로 운영

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과 퇴직연금 등은 신청자에 한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강제적용을 하고 비희망자를 제외하는 것이 더 많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에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저축은 매달 은행계좌 이체를 하기 보다는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저축의 편의성을 높인 혁신적인 저축지원 상품의 한 예가 Bank of America의 "Keep the Change"(잔돈은 가져요)이다. 이 상품은 현금카드로 결제를 할 때마다 1달러 미만의 센터를 자동으로 적금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연간 250달러 내에서 처음 3달간 카드 이용자의 저축액에 1:1 매칭을 해주고, 이후 5%의 이자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이 금융상품을 1년 6개월 동안 약 4백3천만 명이 이용하였고, 그 결과 4억 달러를 저축하였다. 일상생활의 소비를 통해 저축에 대한 부담감은 줄이고 즐거움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금융상품 이용을 촉진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다. IBK기업은행 'IBK평생설계저금통'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금이나 펀드 계좌로 이체해 준다. 적립 방법은 카드 결제마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이체되는 정액적립 방식과 1만원 미만의 잔돈을 넣는 잔돈적립 방식 두 가지다. 정액적립 방식은 예를 들어 3000원을 적립하기로 설정하고 하루 세 번 카드를 결제하면 하루 9000원이 카드 결제 계좌에서 지정한 적금이나 펀드 계좌로 입금된다. 잔돈적립 방식은 예를 들어 카드로 1만 6000원을 결제하면 2만원에서 1만 6000원을 뺀 4000원이 결제 통장에서 적금이나 펀드 계좌에 적립된다.

IBK기업은행의 'Small Big 카드'도 신용카드 결제 때마다 1만원이나 1000원 미만 잔돈이 결제계좌에서 선택 상품으로 이체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1000원 미만 잔돈을 연금저축펀드에 이체되도록 설정한다면, 8500원 결제 시 1000원 단위에서 남는 500원이 결제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된다. 1만원 미만 잔돈 방식을 선택하면 8500원을 결제하고 남는 1500원이 이체된다.

미국에는 그밖에도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는 흥분감과 긴장감을 이용한 금융상품들이 있다. 예컨대, 2008년 개발된 "Save to Win"은 저소득층의 저축습관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복권 연계형 저축 계좌(PLSA)는 저축의 장기 혜택을 복권 게임의 단기적 만족과 결합시킨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Save to Win 계좌를 열어야 한다. 이후 저축을 하면 매달 25달러 당 10개의 상금을 탈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상금은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이다. 미국 최초의 대규모 PLSA인 저축으로 상금타기 세이브투윈(Save to Win)을 통해

6만 여 명의 미국인이 2009년과 2015년 사이 1억 3,800만 달러를 저축했다. Save to Win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인 Commonwealth는 저축 기반의 복권을 납세 기간과 연결시키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 SaveYourRefund를 만들었다. SaveYourRefund는 50달러를 예치하거나 신청 시점에 환급금 이상의 금액을 저축 계좌로 예치할 때 참가자를 100달러의 경품 추첨에 참여시킨다. 저축 목표를 나타낸 사진을 찍어 제출한 참가자는 25,000달러의 대상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⑥유연성(flexible)

유연성도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의 특성이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적이며, 지출 역시 일부는 예측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출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수입이나 예측이 어려운 지출 때문에 약탈적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계획보다 작은 금액을 저축 또는 상환할 수 있도록 계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예금이나 보험 한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금리 대출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안정성과 신뢰성(secure and reliable)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안전하고 신뢰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2007년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일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과 보호장치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규제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위험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알면서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가 많은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좋은 대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은행이나 개인의 대출총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저신용·저소득 친화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다.

3) 재무이해력과 금융포용의 연결로서 재무역량

재무이해력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금융과 재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개인은 최적의 재무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금융포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양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회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무역량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기술과 금융포용과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금융과 관련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활동과 행동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나 기회이다. 따라서 재무이해력과 금융포용은 재무역량과 관련하여 독립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양자를 모두 가진 개인이 경제적 측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재무이해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그 반대인 경우, 개인은 최고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행동경제학을 통해 금융학습과 재무행동과 관련한 개인들의 행동편향(behavioral biases)을 역이용하는 등의 대처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여기서 행동편향은 크게 금융학습 행동 개선 회피, 금융학습의욕 저하, 금융학습내용에 대한 미실천을 의미한다. OECD의 행동경제학의 재무교육 활용방안을 JFSA(2013, 2016)에서 분야별로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행동 개선 회피

금융학습이 가장 필요한 개인이 행동편향의 영향으로 오히려 재무교육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행동 편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무교육 자체의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표 Ⅱ-3-2〉 재무이해력 학습 행동의 환기 방안

구분	내용	
회피·연기 경향 억제	교육 부담감 축소	절차적 부담 축소, 학습형태 다양화 및 선택권 부여
	근시안적 사고	회피·연기 경향이 강한 소비자는 눈앞의 이익에 반응한다는 점을 역이용, 학습 시 직관적인 인센티브 제공
	프레이밍 효과	시각적 자료 제시(예: 연금 수급액 규모에 따른 거주 가능한 주택 사진 비교)
	벼락치기 학습	결혼·퇴직·납세 등의 이벤트 전후 중요한 금융결정을 내리기 위해 학습 의욕이 높아질 때 접근
	과도한 자신감	금융자문 제공, 또는 금융이해도 퀴즈를 통해 과신 경향을 데이터로

		제시
	정보 과부화	학습 희망자가 접하는 선택의 수를 제한 자료의 심사를 통해 신뢰성 확보
학습행동 환기	집단동조 행동	동료(peer) 효과 활용(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교육을 위해 도시의 영향력 있는 리더들에 호소하여, 100개 이상의 지역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거주자의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연계 교육 추진)

출처: 정인(2017), p.4를 일부 수정 제시.

②금융학습의욕 저하

학습의욕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 과부하 해소 및 개인화를 통해 자기연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표 Ⅱ-3-3〉 금융학습 의욕 향상 방안

구분	내용	
학습의욕 저하 억제	정보 과부화	교육 대상자의 요구와 금융능력 등을 감안, 우선순위 높은 테마 중심으로 학습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경우를 줄이고 내용을 분할 홈페이지도 한 화면에 정보를 가득 보여주는 것을 피하고, 문항선택의 계층화 등 웹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학습자의 자기선택을 최대한 활용 기초 부문은 모두가 참여하고 응용부문은 선택에 맡김
	휴리스틱[14](heuristics)에 대처	복리 효과 과소평가와 같이 직관적 평가와 실제 계산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편향을 자각하는 기회를 마련
		수치나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친숙한 척도로 변환
학습의욕 향상	개인 맞춤화·자기연관성 확보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습주제 선택, 난이도 설정, 표현 방법, 체험담, 정보제공, 매체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
		대상자에 맞는 난이도 설정 미니 테스트를 통해 참가자의 특성 파악
	대상별 특성 조사	소득 수준이나 금융자산 보유 현황, 직업, 연령이나 가족 구성, 거주지역 등은 위험감수 태도와 관련성 높음
		젊은층은 자발적 금융학습 경험이 부족한 반면, 학자금대출이나 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음.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시뮬레이션이나 웹 도구 등 활용
		근로세대는 저축과 모기지 등 금융거래가 잦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교육을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
		노년층은 금융거래 경험은 풍부하나 리스크 회피 성향이 높고, 연산능력 저하, 인터넷 이용률 낮다는 특성을 배려

출처: 정인(2017), p.5를 일부 수정 제시.

14) 휴리스틱이란 불충분한 시간이나 정보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림짐작의 방법이다(https://ko.wikipedia.org/wiki/%ED%9C%B4%EB%A6%AC%EC%8A%A4%ED%8B%B1_%EC%9D%B4%EB%A1%A0)

③금융학습내용에 대한 미실천

이해와 실천은 다른 문제로서 금융학습을 했어도 행동을 미루거나 습관으로 정착하기 전에 원래 행동패턴으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재무행동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OECD는 생각(학습)과 행동(실천)의 갭(gap)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표 Ⅱ-3-4〉 금융학습의 재무행동 개선 및 지속 방안

구분	내용	
행동개선 연기의 억제	학습과 실행 간격 축소	교육 후 바로 계좌 개설 및 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 (참가자와의 합의 하에 실시, 강제성 배제)
	단기/중간 목표 설정	재무행동은 목표 달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각종 비교 필요성 등 복잡한 판단으로 행동편향이 심각해지기 쉬움을 고려
		재무행동의 목표와 프로세스 명확화 실행가능성 관점에서 행동과정 재정리 상대적으로 작은 중간목표를 설정 심리적 부담 완화 및 중간 미션 클리어를 통한 성취감 획득
	목표행동 설정 및 행동계획 작성 지원	행동 계획 청사진, 체크리스트, 진도 체크 모바일 툴 제공
		노후 저축 문제 등 목표행동에 연기와 좌절에 빠지는 패턴을 분석, 대응책과 행동방안 제공
		행동편향의 영향 자각을 위한 진단 기회 제공(일상 행동 패턴에 따른 행동 특성 평가, 금융상품 매매 시뮬레이션, 프레이밍 효과와 손실회피경향 등)
행동개선 환기	자기 관련성 향상, 동료(peer)효과 활용	타겟층 지역이나 조직의 영향력 있는 리더나 멤버에게 행동 개선 실행을 부탁, 그룹의 동조효과를 이끌어 냄
		대상 그룹이 멀티이거나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는 소수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행동개선을 실천
		친구나 지역 조직 동료 등 소규모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여 서로의 행동개선 상황을 체크
행동개선 지속	약속 활동 지원	행동 계획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행동계획 시점에 미리 약속을 해 둠
		단기적 이익을 우선하여 저축과 투자 행동 중간에 좌절하는 것을 막고 미리 자신이 취할 행동에 대한 제약을 설정
		약속의 평가는 금액 등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선택 IT기기를 활용, 메일이나 메시지 등으로 행동계획 상기, 진행상황 시각화, 자동 평가 실시 등 개인 맞춤화
	목표활동 습관화	미리 행동을 실행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을 반복
		생애설계의 재검토 등 실행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연중행사로 지정,

		매년 정해진 시기에 실천 (예: 미국은 4월 재무교육 강화기간에 캠페인과 세미나를 집중 실시)
		습관화를 통해 심리적 부담의 경감과 재무행동 연기를 억제 다른 유혹에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관성효과로 일탈행동을 억제

출처: 정인(2017), p.6을 일부 수정 제시.

3. 재무역량강화 관련 이론

1) 세 가지 이론

Schreiner et al.(2005)과 Beverly et al.(2008)은 저축과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개인들의 재무행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각각이 인간에 관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재무행위의 변화를 위해 제시하는 전략도 다소 차이가 있다.

(1) 신고전경제학 이론

신고전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등의 주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다. 개인들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선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활동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저축이 사회적으로 장려되더라도 개인이 저축에 소극적인 까닭은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개인의 입장에서 저축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거나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달리 말해, 저축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저축을 선호하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합리성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이다. 개인발달계좌는 공공부조수급자 등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면 이에 대해 일정한 매칭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취

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수급자들은 저축에 따른 수급권 박탈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하여 자산형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런데, IDA는 저축에 대한 과감한 매칭금을 지원함으로써 개인발달계좌에 가입하여 자산형성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는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면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고전경제학은 재무관리, 신용교육 등을 주제로 하는 재무교육도 강조한다. 금융지식과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 우수한 또는 최선의 경제적 선택과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심리사회학 이론

심리사회학(psychological sociology)는 사람들이 항상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도 혼자 모든 것을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존재라고 본다. 고전경제학이 인간의 두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심리사회학은 인간의 마음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심리사회학은 개인의 성격, 습관, 동기, 영감,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동료 및 가족의 영향, 문화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돈의 양뿐만 아니라 질과 의미를 중심에 두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성격의 중요성은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 재무 및 신용 관리 태도 등에서 쉽게 드러난다.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투자,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계획적인 성향일수록 재무관리와 신용관리가 철저하지만,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면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계획을 세우는 것 또는 가계부 쓰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도 모두가 실행에 옮기는 않는 이유이다.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무관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달성할 수 없는 과업일 수 있다.

사회적 관계 또는 환경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수히 많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생활비를 절약해 저축하는 모습을 보고 성장한 아동은 성인이 돼서 부모와 같은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Kim & Chatterjee, 2013; Sundarasen et al., 2016). 지역사회의 소비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지역사회보다 더 접촉빈도가 높은 미디어나 광고 등도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제윤경 외, 2010; 김순영, 2011).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의 남용과 대부업체 대출이다.

따라서 심리사회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개입은 두 가지 상이한 접근방법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개별적 심리 및 정서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 즉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료 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입장에 기초한 접근 유형으로는 돈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돈의 의미를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해나가는 재무치료(financial therapy)를 예로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 나서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금전관리 방법 훈련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재무멘토링(financial mentoring)을 들 수 있다. 재무치료와 재무멘토링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소개한다.

(3) 행동경제학 이론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신고전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약간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경제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들의 공통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예컨대, 자기통제력(self-control)의 부재, 인지력(cognition)의 제한, 타성(inertia), 심적 계좌(mental accounting)의 활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개인의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실에서 자기통제력의 결핍은 종종 과소비나 저축부족을 야기한다. 제한된 인지력과 관성도 재무행동과 관련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분명하다. 아무리 전문적이고 방대한 금융지식을 전해주는 재무교육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이유이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공통적인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또는 시스템이다.[15] 이와 관련해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 대학교 리처드 H. 탈러(Richard H. Thaler) 교수는 “비합리성이 경쟁 과정에서 학습되고 교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즉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15) 가끔 행동경제학을 알려주는 교육들이 재무와 인간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노력해서 극복할 것을 당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틀린 이야기이다. 행동경제학이 말해주듯이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쉽게 극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극복할 수 없는 제약과 같은 것이라면, 비합리성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좀 더 나은 선택으로 유도해보면 어떨까?"라고 질문한다.

대표적인 예가 '넛지'(nudge)의 활용이다. '넛지'란 원래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한다. 해외 금융기업들에서는 최근 행동경제학의 주장을 수용하여 재무행동을 개선하는 다양한 '넛지 앱'을 개발 보급 중에 있다.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도 넛지를 활용한 예가 있다. 미국의 401K는 DC형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도입 초기 저소득층과 젊은층의 제도 미가입자 수가 많고, 급여 대비 연금 기여비율이 낮으며, 연령과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운용방법 변경 지시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존 Opt-in(제도가입 의사를 밝히고 가입) 방식에서 Opt-out(자동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제도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탈퇴의사 밝힘)으로 변경하여 가입률을 크게 상승시킨 사례이다.



[그림 Ⅱ-3-3] 해외 금융기업들의 넛지를 활용한 App 사례

출처: 정인(20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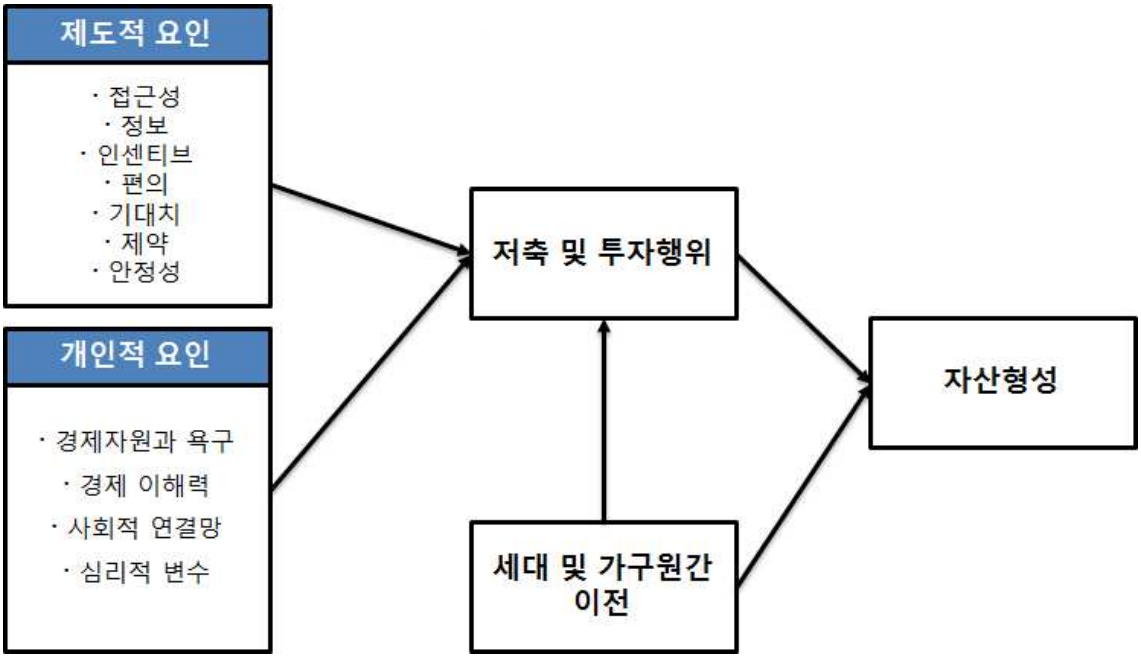
2) 통합모형 이론

앞서 살펴본 인간의 재무행위를 설명하는 3가지 이론 가운데 어느 하나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신고전경제학이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이론은 인간의

지식이 충분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해 있다. 다음으로 심리사회학은 인간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경제적으로 잘못된 결정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위험이 있다. 또한 개인의 복잡한 내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끝으로 행동경제학 이론의 경우, 고전경제학과 심리사회학의 일부 요소들을 공유하면서, 두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미 국가의 연금제도나 민간금융회사들의 상품에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실천적 측면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지적이 있다. 이는 개인의 금융지식이나 심리사회적 통제력 강화 없이, 전문가 중심으로 전개되는 행동경제학적 접근이 모든 경우에 항상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무행동 개선을 위한 주된 전략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식에 기초하여, Beverly et al.(2008)은 이 3가지 이론의 통합을 시도한다. 본래 이들이 제시한 통합모형의 명칭은 '저축·투자·자산형성의 결정'(Determinants of Savings and Investment Action and Asset Accumulation)모형이지만, 개인의 모든 재무행동에 관한 설명이라고 보아도 무관할 정도로 설명력이 있다([그림 18] 참조). 간단히 설명하면, 비벌리 외는 개인의 저축 및 투자행위에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그리고 세대 및 가구원간의 이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우선 제도적 요인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정보, 인센티브, 편의, 기대치, 제약, 안정성을 의미한다. 금융정보와 인센티브는 신고전경제학이 강조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관련 있으며, 금융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 등은 행동경제학에서 주목하는 경제인으로서의 인간의 한계 극복과 관련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 요인은 경제자원과 욕구, 사회적 연결망, 재무이해력, 심리적 변수가 있다. 심리사회학이 강조하는 요인들이다.

비벌리 외가 제시한 통합모형이 의미가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개인의 자산형성, 즉 재무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양 측면에서 재무역량강화를 시도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제적 자원이나 금융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준다는 사실이다.



[그림 Ⅱ-3-4] 저축 · 투자 · 자산형성의 결정 모형

출처: Beverly, Sherraden, Zhan, Shanks, Nam , & Cramer(2008: 12)를 재구성.

〈표 Ⅱ-3-5〉 저축 · 투자 · 자산형성의 결정 모형의 개인적 요인

요인	내용
경제적 자원과 욕구(Economic Resources and Needs)	개인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 당연히 저축하기가 쉽다. 따라서 소득을 늘리고 소비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청년층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다. 대부분 소득이 부족하고 학비와 생활비 등을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청년수당이나 장학금과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이다.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	사회적 연결망도 개인의 저축/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축과 대출에 대한 가족, 친인척, 친구나 직장동료들의 태도 및 통제력 등은 개인의 저축과 대출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무 이해도(Financial Literacy)	돈에 관한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각종 금융용어, 재무설계 방법, 저축전략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으며, 저축과 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재무와 관련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요인	내용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Variables)	개인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미래지향성, 저축 동기, 저축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먼저 미래지향성이란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성이 강한 사람은 대출을 통한 현재의 즐거움보다는 저축을 통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통제다. 자기 통제력이 높은 개인일수록 저축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저축 동기이다. 특히 대표적인 저축 동기는 노후준비, 위기상황 대비, 재산남기기, 자기계발 등의 필요성이다. 끝으로 자신의 저축 능력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다. 예컨대, 자신이 저축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더 많이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Beverly, Sherraden, Zhan, Shanks, Nam , & Cramer(2008: 13-18)를 재구성.

〈표 Ⅱ-3-6〉 저축 · 투자 · 자산형성의 결정 모형의 제도적 요인

요인	내용
접근성(Access)	금융에 관한 개인의 이용자격과 실행가능성 그리고 지리적 의미의 물리적 접근성이 개인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바로 우리나라의 미소금융이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서, 이용자격의 측면에서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정보 (Information)	특정 금융상품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또는 금융뿐만 아니라 세금공제서비스와 같은 공적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도 개인의 저축/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재무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보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않은 이들의 경우 저축/대출과 관련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센티브(Incentives)	금융 및 정부제도 등이 제공하는 비금전적 보상, 보조금, 수익도 개인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발달계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희망플러스 통장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업은 개인들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저축금에 1대1 매칭 보조금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다. 즉 보조금을 저축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주로 저소득층인 프로그램 참여자의 저축 동기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
편의(Facilitation)	저축이나 대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의미하며 이 역시 개인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급여공제와 자동이체적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편의는 일단 한번 정해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간이 가면서 저축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급여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충동소비를 억제할 수도 있다.

요인	내용
기대치(Expectation)	바람직한 저축에 대한 명시적·비명시적 제안인 기대치도 개인의 저축/대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만일 정부가 소득공제적금에 대하여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해주는 경우 사람들은 바람직한 저축의 목표치를 그 금액 정도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면 저축금액의 수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제약(Restrictions)	자산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에 대한 금지 또는 규제를 의미하는 제약도 개인의 저축/대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개인발달계좌가 이러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꿈나래통장은 저축을 통해 형성된 자금을 자녀교육자금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5년 또는 7년 동안은 적금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지할 경우 보조금(매칭금)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저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까다로운 대출조건 역시 부채증가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안정성(Security)	안전성은 저축이나 대출의 손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안정성은 사실 금융위기나 글로벌 정치경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보다 하위차원인 국가차원 또는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의 예금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한편 대출에 의한 안전성은 예컨대 1금융과 대부업체 대출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출처: Beverly, Sherraden, Zhan, Shanks, Nam , & Cramer(2008: 19-23)를 재구성.

4. 재무역량강화 활동 관련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있어 재무역량강화와 자산형성지원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이미 약 100년 전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과 재무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친 바 있다(Stuart, 2013: 44-61). 대표적인 조직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와 인보관(Settlement Houses)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 조직은 주지하듯 오늘날 민간 사회복지전문직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뿌리로 알려져 있는 조직들이다. 두 조직은 공히 오늘날 민간사회복지발달의 효시로 인정받고 있지만, 각각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해

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사회복지발달사 교재들을 보면, 자산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인보관 운동은 사회 환경에서 찾았고, 전자는 우애방문원 그리고 후자는 지식층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설명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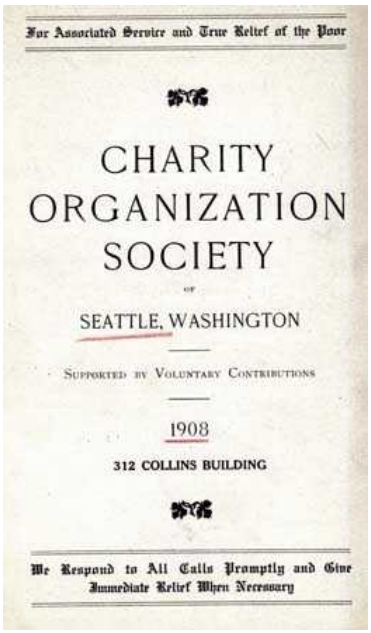
주지하듯,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1880년과 1910년 사이 대부분의 미국 도시들에 등장하였다. 자선조직협회는 빈민구제에 있어 다수 민간기관들의 중복구제와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기관과의 연락, 조정, 협력 등의 조직화를 통해 '구제등록'을 실시하여 구제의 가치가 빈민(deserving poor)과 그렇지 않은 구제의 가치가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을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그리고 구제의 가치가 있는 빈민에게는 친절과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하고, 태만, 음주, 낭비를 일삼는 빈민에게는 원조를 하지 않는 등,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 돌렸다. 이들은 특히 우애방문원을 활용하여 빈민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인보관 운동은 1880년대 영국의 토인비 홀(Toynee Hall)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으로서,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빈민가 사람들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지식인 계층이 직접 빈민가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물질적 원조가 아닌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 교육적 집단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믿었고, 사회 환경과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한 집합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자선조직협회의 원조와 인보관 운동의 환경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녔을까? 최근 미국에서 출판된 몇몇 단행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가 모두 빈민과 저소득가구의 금융역량(가정경제역량)의 개발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당시 빈민과 저소득층을 배제했던 미국의 금융환경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예외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은행들은 계좌유지비(maintenance fee)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를 받는데, 외국에서는 매달 계좌의 사용료[16]를 받아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계좌유지비가 아까운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은행계좌를 사

용하지 않고, 집에 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은행들로 계좌유지비를 잘 낼 수 없는 개인들에게는 은행계좌를 쉽게 열어주지 않았다. 즉, 제도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자산형성이 빈민과 저소득층의 경우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사회복지실천가에게 있어 시급한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이 개인의 금전관리 능력제고 그리고 대안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가였던 우애방문원들(friendly visitors)은 빈민과 저소득 가족, 특히 가장들의 저축과 가계예산 수립을 독려하도록 훈련 받았다. 그리고 저축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다. 사실 오늘날 엄청난 기업이 되어있는 저축은행들(Savings Banks)은 18세기 유럽[17]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도권 저축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미국에서 저축은행은 19세기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설립자 중 상당수는 진보개혁가들이었다. 이후 저축은행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19세기 말 미국 전체 자산의 3분의 1이 저축은행에 의해 관리되었다. 당시 볼티모어 자선조직협회의 사무국장이었던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는 우애방문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근검(thrift)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근검은 자선조직협회에게 매우 중요한 캐치워드였다. 그녀에 따르면 근검은 단순히 경제적 미덕만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와 헌신의 지표였다.[18] 1880년대와 1890년대 미국의 자선조직협회는 고리대금업체로부터 빈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저


For Associated Service and True Relief of the Poor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OF

SEATTLE, WASHINGTON

SUPPORTED BY VOLUNTARY CONTRIBUTIONS

1908

312 COLLINS BUILDING

We Respond to All Calls Promptly and Give Immediate Relief When Necessary

[그림 Ⅱ-3-5] 1908년 자선조직협회 연차보고서 표지

출처: http://historylink.org/File/10115

16) 계좌유지비는 은행과 계좌종류 그리고 통장잔액(balance)에 따라 각기 다르다. 아주 일부 계좌유지비를 요구하는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 월 5달러부터 15달러정도를 요구한다 (https://www.valuepenguin.com/banking/checking-account-fees). 계좌유지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당액의 최소 잔액(minimum balance)이 매달 유지되는 경우이다.

17)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자국이 저축은행의 시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1765년에 Brumath 마을에서 저축은행이 세계 최초로 설립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맞서 영국은 그보다 빠른 1697년 저축은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된 바가 있음을 주장한다. 1778년 독일 함부르크에도 저축은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며, 1787년에는 스위스 베른에서도 저축은행이 설립되었다.

18) 자선조직협회는 저축이 개인의 근검정신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자, 미래에 대한 준비, 독립성, 작은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데 효과적인 교육 도구(educational tools)라고 보았다.

축은행, 소액대출프로그램, 전당포 등을 설립하였다.

또 우애방문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축계획(savings plan)을 제공하였다. 매주 빈곤 또는 저소득 가구를 방문하여 예금을 수금하고 예금증서를 나눠주었으며, 단순히 저축만이 아니라 가계 예산 수립도 지원했다. 저축계획의 인기는 꽤 높은 편이었다. 예치된 돈은 긴급한 상황에 이르렀거나 무엇인가를 구매할 수 있는 목돈이 되었을 때 언제든 인출할 수 있었다.

한편 저축계획은 우애방문원들이 빈곤가구와 저소득가구를 방문할 수 있는 구실이 되어 주었다(Scribner, 1887). 곧 다른 자선조직들도 저축계획 사업에 참여하였다. 뉴욕자선조직협회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푼돈을 저축할 수 있게 하는 학교저축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 동안에 진보 개혁운동가들과 상호부조 조직들은 계속해서 빈민을 위한 저축은행과 경제적 자원을 만들었다.

인보관도 자선조직협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인보관 운동가들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옹호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소액 대출에 대해 연구하고 저축 계획과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일부 인보관들은 또한 식품이나 연료 등을 공동구매하여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협동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그림 Ⅲ-3-5]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Toynbee Hall)의 경관

출처: http://stories-of-london.org/settlement-houses-1/

또한 실업자와 신용(credit)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시 빈민들은 연이자 36%~100%를 부과하는 대부업체 대출과, 할부구매, 전당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가들은 저금리·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대출협회와 조직을 만들었다. 1894년 뉴욕자산조직협회는 독립기관으로 비영리기관인 뉴욕담보대출협회(Provident Loan Society of New York)를 창립하였다. 뉴욕담보대출협회는 불법대부업체 등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이나 시계 등을 담보로 이용한 단기 저금리 소액대출을 통해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뉴욕담보대출협회의 성공은 전미소액대출연합(National Federation of Remedial Loan Association)과 같은 전국규모의 소액대출협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그림 Ⅲ-3-6] 뉴욕담보대출협회

출처: https://vimeo.com/112025459

한편, 미국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비영리기관들이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Assets for Independence Act(1998)의 제정에 기여하기도 했다(Sherraden, 2011). 또한 영국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저축계좌를 지원하는 Child Trust Fund의 설립에 영향력을 미쳤다(Sherraden, 2011).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대학 등의 역할도 상당하다. 세이트루이스(St. Louis)에 있는 워싱턴대학교 사회개발센터(Center for Social Development)가 주도하는 '재무역량과 자산형성 이니셔티브'(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 initiative)는 사회복지전문직을 위한 재무역량강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 또 메릴랜드 대학의 재무역량과 자산형성 이니셔티브는 재무역량강화와 자산형성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과 실천가들 그리고 강사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Jacobson et al., 2011). 뉴욕시에 있는 여러 대학들도 재무역량강화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은 경력개발, 고용, 경제적 자조와 더불어 재무이해력을 포함하도록 커리큘럼을 확장하고 있다(Columbia University, 2014). 자활 금융역량강화사업에 유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다.

2) 국내사례

제한된 경험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의 재무역량강화와 관련한 성공 사례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과 부채상담을 지원한 것은 2007년 11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의해 시작된 희망통장 시범사업(2009년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과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들 수 있다. 지금은 두 가지 사업 모두 정부에 의해 전국적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두 사업 모두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계속해서 더 다양한 계층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들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경우에도 2013년 이후 가계금융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금융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 최초로 수행된 이 사업은 가정경제 교육, 재무 및 채무상담, 재무멘토링과 코칭, 금융사례관리 및 금융사례관리 컨퍼런스, 단기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채로운 사업으로 구성되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최근에는 전남광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평가를 보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혜택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이용자의 반응도 좋지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반응이 더 뜨겁다. 그동안 회피했던 클라이언트의 재무와 채무 관련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그림 Ⅲ-3-4] 2016년 부안군장애인복지관 가계금융역량강화사업 자료집

제4절 소결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자활과 자립이라는 자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습득과 근로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재무역량과 심리정서와 관련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으로 심리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저학력, 무배우자, 높은 월세거주 비율, 만성질환과 더불어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측면에서 월평균 소득 114만원도 부족하지만, 평균 90만원의 지출로 인해 유동자산이 매우 빈약하고 부채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흑자가구가 많지만 보유자산이 빈약한 관계로 약간의 경제적 충격으로도 가구의 삶이 크게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

재무건전성의 측정은 단순하게는 가계수지, 자산,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부터 이들 간의 관계비율인 재무비율(예: 가계수지비율, 유동성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월저축률, 고정지출비율, 공적이전소득비율)을 계산하여 그 각각에 따라 재무건전성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복수의 재무비율을 활용하여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까지 존재한다.

취약계층 재무사례관리를 연구한 Khashadourian(2017)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가계수지비율이다. 자산보유나 부채부담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가계가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적정자산과 부채부담을 알려주는 유동성비율과 총부채상환율이다. 지나치게 자산이 부족

하거나 또는 부채부담이 과할 경우, 현상 유지를 넘어선 가계의 성장은 어렵다. 약간의 소득중단으로 쉽게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살펴볼 부분은 고정지출비율이다. 유동성 부족, 높은 부채상환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금이 필요한데, 이 현금을 만들어낼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서이다. 만일 가구의 고정지출비율이 낮다면, 다시 말해 변동지출 비중이 크다면, 소비지출인 변동지출(예: 식대, 여가)을 줄여 저축이나 채무상환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대로 저축도 없고 부채만 많은 상태에서 고정지출비율이 높고 가계적자라면 재무·채무조정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무역량강화는 오랜 시간 전부터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고 저임금과 금융자본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무역량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재무에 대한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하는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며 다른 하나는 주류 또는 양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의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다.

재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재무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지출, 자산형성, 신용관리, 부채 관리 등에 대한 개인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행연구, 특히 행동경제학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재무행동 변화에 있어 교육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Willis, 2011). 대상에 따라 코칭, 멘토링, 상담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섣부르게 하나의 방법론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찾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금융포용의 활용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로서는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접근들이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 그리고 자산형성지원 등으로 내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요소중심의 접근이 더 유효하다. 같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적합성, 접근성, 경제성, 경제적 매력, 편의성, 유연성,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의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재무역량강화에서 최선의 접근방법은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접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재무에 대한 개인의 이해력을 극대화하되, 그렇게 신장된 개인의 재무이해력이 본인 또는 가구의 재무건전성과 재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양질의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은 꼭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방적 차원에 재무건전성 개선에는 지역자활 센터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에 접근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무역량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신고전경제학 이론과 심리사회학 이론, 그리고 행동경제학 이론이다. 각 이론은 모두 개인의 경제행위를 설명하지만 그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다름을 주장한다. 개인의 합리성, 심리사회적 특성, 제한된 합리성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금융역량강화는 대부분 신고전경제학에 따른 합리주의적 인간을 전제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이론 또는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재무역량강화 사업의 트렌드는 재무와 관련한 개인의 지식향상보다는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넛지(nudge)기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빈 페이지-

제 3 장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 재무건건성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제3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상태, 자기인식 및 정서, 재무건전성 차이

제4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와 재무건전성 차이

제5절 소결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빈 페이지-

제1절 분석의 개요

1.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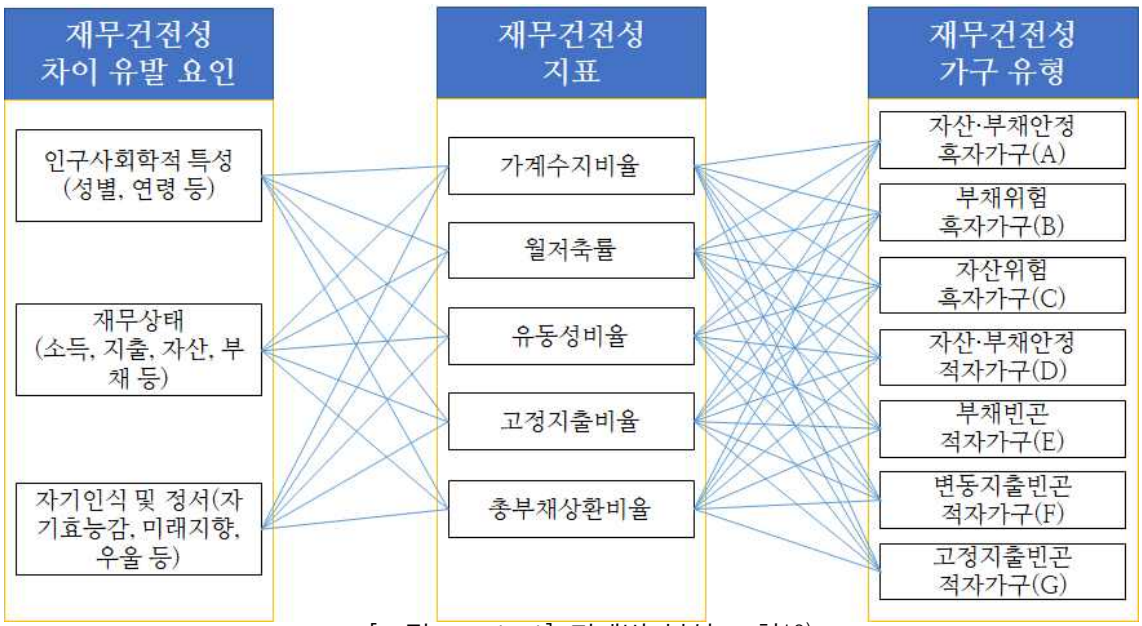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단순 무직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 방식의 일종인 계통적 표본추출(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전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자료 수집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전국 지역자활센터 명부를 이용하여 2019년 6월 당시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던 지역자활센터 총 249개 가운데 48개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였다. 이후 해당 센터에 공문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 40개 센터가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역시 계통적 표본추출방식으로 40개 지역자활센터별로 참여 인원(게이트웨이 참여자 제외)의 40%(1,344명)에 수만큼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후 수행된 설문조사에는 최종 1,047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가 시행된 기간은 2019년 6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3개월이었다. 설문지는 조사원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평소 지역자활 참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자나 팀장 등을 면접원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면접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득히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조사원을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목적과 주의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실행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문항과 설문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6월 본 조사 실시 전에 2개 지역자활센터를 임으로 선정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자활사업 참여자 총 2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해력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한 배려와 재무상태 관련 질문들에 대한 해석 오류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관련 설문내용을 보완하고 사전교육시 관련 내용에 대한 면접원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였다.

2. 분석 모형 및 방법

아래 [그림 Ⅲ-1-1]은 본 연구의 실증 분석모형이다. 분석모형이 설명하고 있듯이,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진단을 위해 재무비율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가구의 재무건전성 관련 특징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가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개별 참여자와 참여자 가구의 재무건전성에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징, 재무상태, 자기인식 및 정서차원으로 세분화하고 재무건전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차원별로 중요도가 큰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림 Ⅲ-1-1] 단계별 분석 모형[19]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험적 분석을 양적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지표와 재무건전성 차이 유발요인 그리고 재무건전성 가구 유형을 기술하기 위해 기술통계,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재무건전성 지표와 차이 유발요인 그리고 재무건전성 가구

19) 본 분석모형에서는 공적이전소득비율이 빠져있다. Khashadoruan(2017)도 공적이전소득비율의 경우 맥락에 따라 가이드라인 방향이 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단지 가구 재무상태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할 뿐 재무건전성 유형구분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유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ANOVA) 등을 이용하였다.

3. 분석 도구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주거점유 형태, 가구원수, 자녀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사업 참여중단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였다.

〈표 Ⅲ-1-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조작적 정의
성별	남자=1, 여자=2
나이	만 나이
학력	중졸이하=1, 고졸=2, 대졸=3, 대학원졸=4
결혼상태	미혼=1, 기혼=2, 이혼=3, 사별=4
주거점유 형태	자가=1, 전세=2, 월세=3, 공공임대=4, 기타=5
가구원수	본인 포함 동거인 수
자녀수	총 자녀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일반수급자=1, 조건부수급자=2, 차상위가구=3, 해당 없음=4
자활사업 참여 기간	총 개월 수
자활사업 참여중단 경험	중단 없었음=1, 중단 있었음=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1, 나쁜 편이다=2, 좋은 편이다=3, 아주 좋다=4

2) 재무상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을 조사하는 본 연구에서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확보는 매우 중

요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들은 본능적으로 설문조사 등에서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공개를 꺼려하는 성향이 있다. 즉, 아무리 재무상태 측정과 관련하여 세밀한 측정도구를 만들더라도 실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와 다른 응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통계청은 가계금융에 관한 정보를 설문조사방식이 아닌 금융회사 등의 객관적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공공부조 수급자로서 설문조사는 자신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막연하지만 강한 거부감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지나치게 상세한 재무상태 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원이나 면접원들의 수행부담도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재무상태 측정 문항을 최소화하였다. 채무불이행 경험이나 생활비 압박 기간 등 연구자가 특별히 탐색하고자 하는 변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Khashadourian(2017)이 제안한 재무건전성 측정에 관한 변수만으로 설문문항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자의 재무상태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및 신용으로 영역을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소득은 본인과 가구로 분석단위를 구분하고 세전 명목소득과 세후 실제소득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지출은 가구원별로 구분하기 어려워 가구 총지출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재무 압박정도를 고정지출비율과 생활비 압박 기간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가구의 자산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동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예금 잔액과 더불어 앞 달 저축(정부지원저축 포함),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거주 주거와 자동차 시세 액으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부채 및 신용과 관련해서는 가구 부채 총액, 가구 월부채상환액, 가구 월 주택담보대출상환액, 본인과 가구원의 채무불이행 경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Ⅲ-1-2〉 가구특성: 경제적 변수

변수		조작적 정의
소득	본인 월소득(지난 달): 세전	지난 달 본인 세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총액(만원)
	본인 월소득(지난 달): 세후	지난 달 본인 세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총액(만원)
	가구 월소득(지난 달): 세전	지난 달 가구 세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총액(만원)

	가구 월소득(지난 달): 세후	지난 달 가구 세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총액(만원)
	가구 월 공적 소득(지난 달)	지난 달 가구 월 공적(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 소득의 총액(만원)
지출	가구 총 지출(지난 달)	지난 달 가구 총 소비지출의 총액(만원)
	가구 고정 지출(지난 달)	지난 달 저축, 주택대출금, 관리비, 가스비, 보험료, 등록금, 회비, 통신비, 핸드폰 비 등)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총액(만원)
	가구 주거비(지난 달)	지난 달 월세, 주택담보대출·대출상환, 관리비의 총액(만원)
	자녀 교육비(지난 달)	지난 달 자녀 학원비, 교재비 등 금액의 총액(만원)
	가구 민간보험료(지난 달)	지난 달 가구 민간보험료 납부 금액의 총액(만원)
	가구 신용카드지출(지난 달)	지난 가구 신용카드 지출의 총액(만원)
	생활비 압박 기간(지난 달)	지난 달 생활비 잔액이 10만원 이하였던 날짜의 합계(일)
자산	가구 총예금 잔액	민간 은행 예금과 정부지원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의 총액(만원)
	가구 민간은행 저축액(지난 달)	지난 달 민간은행(조합 포함) 저축의 총액(만원)
	가구 정부지원 저축액(지난 달)	지난 달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등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저축 금액의 총액(만원)
	주택 시세 및 보증금	토지 포함 주택 시세 및 보증금의 총액의 총액(만원)
	자동차 시세	현재 보유 자동차 판매 예상 금액의 총액(만원)
부 채 및 신 용	가구 부채 총액	신용카드 미상환금액을 포함한 가구 부채의 총액(만원)
	가구 월 부채 상환액(지난 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지난 달 가구 월 부채 상환액의 총액(만원)
	가구 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지난 달)	가구 지난 달 부채 상환액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총액(만원)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1, 현재 채무불이행=2, 해당 없음=3
	본인 외 가구원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1, 현재 채무불이행=2, 해당 없음=3

3) 자기인식 및 정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기인식 및 정서를 다양한 요소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미래지향, 우울감이 그것이다.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한 17개 문항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7점에서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65(n=1,046)로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1-3〉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문항	변수값
나는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어떤 일을 첫 번에 잘 못 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 전에 포기한다.*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	
나는 어떤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 볼 시도조차 안 한다.*	
유쾌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반드시 한다.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포기한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잘 대처할 수 없다.*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실패는 나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든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자신감이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한다.*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 역방향 질문으로 본 분석에서는 역점수화하여 사용.

(2) 직무만족도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Macdonald와 Maclntyre(1997)가 개발한 일반 직무만족도 척도(Generic job satisfactio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래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와의 관계' 1개 문항을 '자활사업단 팀장'과 '사례관리자'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척도의 총 문항 개수는 11개이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7(n=1,046)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1-4〉 직무만족도 척도

문항	변수값
나는 직장(사업단)에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나는 직장 동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나는 내 직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일이 안정적이라고 느낀다.	
직장 관리자(직원)들이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급여에 만족한다.	
지금 하는 일에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사업단 팀장과 잘 지내는 편이다.	
나는 센터 사례관리자(게이트웨이·통장·자활 사례자 포함)와 잘 지내는 편이다.	
나는 나의 일을 좋아한다.	

(3) 미래지향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및 자활 성공 요인으로 참여자들의 미래지향(future orientation)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미래지향 척도는 Cauffman과 Woolard(1999)가 개발한 미래예상목록(future outlook inventory)의 일부이다. 미래예상목록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개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측정한 것으로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현재 지향을 측정하

는 7개 문항을 제외하고 미래에 관한 지향을 측정하기 위한 8개의 문항만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래지향 척도(n=1,046)의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다(Cronbach's α=.77).

〈표 Ⅲ-1-5〉 미래지향성

문항	변수값
때론 힘들고 재미없어도 더 잘살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미래의 내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다.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잘 정리(계획, 기록)해 둔다.	
의사결정을 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 돈을 저축하고 있다.	
나는 10년 뒤 내 모습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예측할 수 있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4) 우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및 자활 저해 요인으로 우울성향을 살펴보았다. 사용한 우울척도는 The Center for Epidemi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에서 개발하고 조맹제·김계희(1993)가 번역한 CES-D 척도이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지난 일주일간 각 문항별로 그와 같은 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한다. 지난 1주일간 해당 사건이 1일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 “극히 드물었다.”로 답변하였으며, 1~2일의 경우 “가끔 있었다.”, 3~4일은 “종종 그랬다.”, 5일 이상은 “대부분 그랬다.”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0(n=1,045)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표 Ⅲ-1-6〉 CES-우울척도

문항	변수값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극히 드물었다=1, 가끔 있었다=2, 종종 그랬다=3,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대부분 그랬다=4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 했다).	
두려움을 느꼈다.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큰불만 없이 생활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역방향 질문으로 본 분석에서는 역점수화 하여 사용.

4)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은 재무비율, 재무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 재무비율

재무비율은 Khashadourian(2017)이 제안한 일련의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을 직접 활용하거나 보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재무비율, 즉 변수는 가계수지비율, 월저축율, 유동성비율, 고정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이었다. 각 재무비율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Khashadourian(2017)이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가계수지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특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높은 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재무비율별로 대표적인 복수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가계수지비율의 경우 Khashadourian(2017)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1.0 미만' 이외에 좀 더 보수적인 수준인 '0.9 미만'도 추가하여 이용하였다(최현자 외 3인, 2003; 양세정 외 3인, 2013). 가계수지비율을 통해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가계의 현상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가계의 최소한의 성장가능성 여부도 진단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보유 여부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하나의 복수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진단결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두 재무비율에 대해서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Ⅲ-1-7〉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

지표	정의 및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계수지비율(expenditure-to-income ratio)	월수입/월지출	가계수지비율<1.0, 가계수지비율<0.9
월저축률(monthly savings rate)	월저축/월수입×100	월저축률≥10%
유동성비율(average liquidity rate)	유동자산(현금, 현금성 자산)/월지출×100	유동성비율≥200%
고정지출비율(percentage fixed expenditure)	총 고정지출(세금납부 제외)/월수입×100	고정지출비율≤60%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credit insolvency rate)	대출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100	총부채상환비율<15%(주택담보대출 미포함), 총부채상환비율<40%(주택담보대출 포함)
공적이전소득비율(income support ratio)	공적이전소득/월소득×100	특정 가이드라인 없음

출처: Khashadourian(2017: 8)을 요약· 수정 정리

(2) 재무스트레스

재무건전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서 재무비율의 이용과 더불어 본 연구는 참여자의 재무스트레스를 주관적 지표로 이용하였다. 재무스트레스는 Aldana와 Liljenquist (1998)가 제시한 재무압박 조사(financial strain survey) 측정도구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서, 척도는 각각 '관계'(relationship)와 '신체'(physical)와 관련된 4개 문항을 포함한다.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재무스트레스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3(n=1,047)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표 Ⅲ-1-8〉 재무스트레스

변수		변수값
재무관련 관계적 스트레스	가족구성원 간에 돈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경향이 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다.	
	돈 문제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재무관련 신체적 스트레스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대출금 상환이나 공과금 걱정 때문에 목이나 등 또는 어깨가 아프다.	
	돈 문제 때문에 혈압이 오르거나 소득이 아플 때가 있다.	

출처: Aldana, S. G., & Liljenquist, W. (1998)

(3) 재무역량

재무역량의 측정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금융안정센터(Center for Financial Capability)에서 개발한 재무역량척도(Financial Capability Scale: FCS)를 이용하였다. 재무역량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문항은 최소 0점, 최대 1점, 그리고 2개 문항은 최소 0점, 최대 2점이 배점되어 있다. 재무역량 점수는 6개 문항 값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개발 응답자의 재무역량 총점은 최소 0점 그리고 최대 8점이 될 수 있다. 합산 점수가 0~3점이면 낮은 재무역량, 4~5점이면 보통의 재무역량, 6~8점이면 높은 재무역량으로 불린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계수(Cronbach's α)가 .59(n=1,047)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요구하는 신뢰도계

수는 수용기준인 .60에 조금 못 미쳤다. 신뢰도가 예상보다 조금 낮은 이유는 총 6개 질문에 2개의 역방향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Ⅲ-1-9〉 재무역량 척도(financial capability scale: FCS)

문항	변수값
현재 가계소비를 위한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인 금액과 날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재무관련 목표(예: 저축, 재무관리 등) 달성에 자신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0, 다소 그렇다=1, 정말 그렇다=2
갑자기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비상금(여윳돈)이 있어 최소한 1달은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0, 다소 그렇다=1, 정말 그렇다=2
매달 저축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지난 달 가계적자가 발생했다.*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지난 12개월 돈이 없어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제대 납부하지 못한 적이 1번 이상 있다.* **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 역방향 질문으로 본 분석에서는 역점수화하여 사용.

** Collins et al.(2013)에서는 12개월이 아닌 2개월 내에 공과금이나 대출금의 미납상황을 측정함. 본 연구는 변수의 변별력을 늘리기 위해 연체 측정기간의 기준을 당초 2개월이 아닌 12개월로 늘려 측정.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 응답한 자활사업 참여자를 개인 또는 가구단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상태, 자기인식 및 정서, 재무관리역량의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자활사업 참여자 1,047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2-1〉 참조). 우선, 응답자들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433명(41.4%), 여성이 614명(58.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2%point 더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52.72세였으며, 연령분포를 보면 50대(38.3%)와 60대(30.8%)의 비중이 높았고, 30대(7.3%)와 20대 이하(4.9%)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학력수준은 고졸이 47.3%, 중졸이 39.0%로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혼인상태를 보면, 이혼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8.7%가 이혼상태였는데, 이는 한국복지패널(김태완 외, 2017: 78)의 통계치인 저소득층 이혼율 9.7%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혼과 더불어 미혼(23.7%)과 사별(11.7%)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4가구 중 1가구(25.9%)에 그쳤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여성, 고령화, 저학력 등의 특성을 지적한 선행연구들(김정원외, 2013; 박경아, 2013)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들이다.

한편, 응답자들의 주거점유 형태를 보면, 월세(34.2%)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정원 외(2013)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주거점유 형태는 공공임대(29.0%)로서, 자활사업 참여자끼리도 주거비 부담 격차가 상당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2.01명이었으며, 특히 4인 가구 이상의 비율이 11.9%로 매우 낮은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율이 절반(47.0%)에 육박했다. 자활사업 참여자 2가구 중 1가구는 단독가구임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1.33명

이었다.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33.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명(30.9%)이었다.

응답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유형을 보면, 조건부수급자인 경우가 2가구 중 1가구(52.1%)에 해당했다. 다음은 차상위가구(31.3%), 일반수급자(10.9%), 자활급여 특례자와 특례수급 가구원의 가구원 등(5.5%)의 순이었다. 자활사업 참여 기간은 평균 29.38, 약 2년 5개월이었다. 참여기간의 분포를 보면, 1년 미만이 33.8%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이 7.8%였다. 참여기간이 길수록 응답자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자활사업 참여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는 24.8%였다.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4점 만점에 2.53점으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성별	남성	433	41.4
	여성	614	58.6
	전체	1,047	100.0
연령	20대 이하(a)	51	4.9
	30대(b)	76	7.3
	40(c)	197	18.8
	50대(d)	401	38.3
	60대 이상(e)	322	30.8
	전체	1,047	100.0
	평균(표준편차)	52.72세(10.830)	
학력	중졸 이하	408	39.0
	고졸	495	47.3
	대졸 이상	143	13.7
	전체	1,046	100.0
혼인상태	미혼	248	23.7
	기혼	271	25.9
	이혼	405	38.7
	사별	123	11.7
	전체	1,047	100.0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주거점유 형태	자가	147	14.1
	전세	105	10.0
	월세	358	34.2
	공공임대	303	29.0
	기타	133	12.7
	전체	1,047	100.0
가구원수 (본인 포함)	1명	492	47.0
	2명	269	25.7
	3명	161	15.4
	4명	65	6.2
	5명 이상	60	5.7
	전체	1,047	100.0
	평균(표준편차)	2.01명(1.271)	
자녀수	0명	355	33.9
	1명	212	20.2
	2명	324	30.9
	3명	110	10.5
	4명	32	3.1
	5명 이상	14	1.4
	전체	1,047	100.0
	평균(표준편차)	1.33명(1.23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14	10.9
	조건부수급자	547	52.2
	차상위가구	328	31.3
	해당 없음	58	5.5
	전체	1,047	100.0
자활사업 참여 유형	사회서비스형	737	70.4
	시장진입형	310	29.6
	전체	1,047	100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자활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	354	33.8
	1~2년 미만	196	18.7
	2~3년 미만	168	16.0
	3~4년 미만	137	13.1
	4~5년 미만	71	6.8
	5~6년 미만	39	3.7
	6년 이상	82	7.8
	전체	1,047	100.0
	평균(표준편차)	29.38개월(29.813)	
자활사업 참여 중단 경험	중단 없었음	787	75.2
	중단 있었음	260	24.8
	전체	1,047	100
주관적 건강상태 (4점 척도)	매우 나쁘다	42	4
	나쁜 편이다	453	43.3
	좋은 편이다	506	48.3
	아주 좋다	46	4.4
	전체	1,047	100
	평균(표준편차)	2.53점(.646)	

2. 재무상태

1)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응답자 가구의 재무상태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4가지 재무영역, 즉 소득, 지출, 자산(저축 포함), 부채(부채 상환 포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Ⅲ-2-2〉 참조). 조사가 시행된 시점은 2019년 6월에서 9월 사이였으며, 자산과 부채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상태는 설문조사 실시 한 달 전을 기준으로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응답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소득을 보면, 가구의 월소득은 평균 130.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

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16.2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소득이 100~13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6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30~160만원 미만이었다. 다음으로 가구 월지출은 월평균 118.01만원이었다. 이는 가구 월소득보다 12.23만원 작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월지출은 100~125만원 미만인 가구가 41.0%로 가장 많았다. 50~100만원 미만은 24.9%였다.

한편 설문 응답자의 가구 총예금 잔액은 평균 115.23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구 월지출 평균 118.0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갑자기 소득이 중단될 경우 한 달의 소비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상당수임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은 이처럼 가계 유동성이 취약한 경우 소액긴급대출 등 악성대출 이용 및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급증함을 지적하고 있어 우려되는 결과이다(노대명·박창균·박상금·한솔희·김솔휘, 2017; 장동호, 2018). 응답자들의 빈약한 총예금 잔액이 시사하듯, 응답자가구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은 11.54만원으로 작은 편이었으며, 앞 달에 전혀 저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48.7%였다.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과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1:1 저축 매칭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가입비율이 36.3%정도로 미가입자가 많았다.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빈약한 예금은 이들의 부채의존도를 높인 것으로 짐작된다. 응답자 1,042명의 평균 부채 잔액은 1,084.47만원으로 이들 가구의 월소득인 130.24만원의 8.3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응답자 가구 가운데 부채가 전혀 없는 59.5%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만을 분석한다면, 부채 잔액이 가구당 2,677.77만원으로 전체 평균 부채 잔액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참고로 이는 평균 가구 월소득의 약 20.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응답자 가구의 평균 월부채상환액은 8.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59.5%의 가구를 제외한 평균 금액은 22.3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 보유한 응답자 421명 가운데 196명은 전달에 부채 상환을 1만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 가구의 절반정도가 재무적으로 극심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부채상환 연체로 인한 응답자들의 채무불이행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본인이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은 과거 25.6% 그리고 현재 17.3%로 모두 합쳐 총 42.9%였다. 앞서 높은 비율

의 부채미상환의 원인 또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가구원의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은 과거 15.3%와 현재 11.2%로 모두 합쳐 총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본 연구는 교차분석을 통해 본인의 채무불이행 경험과 본인외 가구원의 채무불이행 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본인이 채무불이행을 전혀 경험하였는데 가구원이 경험할 확률은 8.2%, 본인 외 가구원이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였는데 본인이 전혀 경험하지 않을 확률은 28.8%였다(p=.000). 가구단위에서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재무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표 Ⅲ-2-2〉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지난 달 가구 월소득(세후)	100만원 미만	30	2.9
	100~130만원 미만	673	64.4
	130~160만원 미만	227	21.7
	160~200만원 미만	47	4.5
	200만원 이상	68	6.5
	전체	1,045	100
	평균 (표준편차)	130.24만원 (37.718)	
지난 달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37	1.26
	50~100만원 미만	260	24.9
	100~125만원 미만	428	41.0
	125~150만원 미만	113	10.8
	150만원 이상	207	19.8
	전체	1,045	100
	평균 (표준편차)	118.01만원 (54.409)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427	40.8
	1~50만원 미만	341	32.6
	50~100만원 미만	54	5.2
	100~300만원 미만	107	10.2
	300~500만원 미만	46	4.4
	500~1,000만원 미만	37	3.5
	1,000 이상	34	3.3
	전체	1,046	100.0
	평균 (표준편차)	115.23만원 (347.331)	
가구 월저축액	없음	510	48.7
	1□10만원 미만	67	6.4
	10□20만원 미만	244	23.3
	20□30만원 미만	91	8.7
	30□40만원 미만	39	3.7
	40□50만원 미만	28	2.7
	50만원 이상	68	6.5
	평균 (표준편차): 전체 가구	11.54만원 (22.426)	
	평균 (표준편차): 월 저축 가구	22.51만원 (27.096)	
정부지원 저축 참여 여부(예: 희망키움통장 등	미참여	667	63.7
	참여	380	36.3
	전체	1,047	100.0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	620	59.5
	1~499만원 미만	122	11.7
	500~1,000만원 미만	56	5.4
	1,000~3,000만원 미만	132	12.7
	3,000~5,000만원 미만	57	5.5
	5,000~8,000만원 미만	25	2.4
	8,000만원 이상	30	2.9
	전체	1,042	100.0
	평균 (표준편차): 전체 가구	1,084.47만원 (3577.846)	
	평균 (표준편차): 부채보유 가구	2,677.77만원 (5232.222)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가구 월부채상환액	부채 미보유	620	59.5
	0만원	196	18.8
	1~10만원 미만	37	3.6
	10~20만원 미만	50	4.8
	20~50만원 미만	86	8.3
	50~100만원 미만	31	3.0
	100만원 이상	21	2.0
	전체	1,041	100.0
	평균 (표준편차): 전체 가구	8.06만원 (25.649)	
	평균 (표준편차): 월부채 보유 가구	22.30만원 (39.477)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268	25.6
	현재 채무불이행	181	17.3
	해당 없음	596	57.0
	전체	1,045	100.0
본인 외 가구원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160	15.3
	현재 채무불이행	117	11.2
	해당 없음	768	73.5
	전체	1,045	100.0
본인 외 가구원 채무불이행 경험 (2인가구 이상)	과거 채무불이행	105	19.0
	현재 채무불이행	80	14.5
	해당 없음	368	66.5
	전체	553	100.0

2) 생활비 압박 기간

응답자의 재무상태와 관련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규모 파악과 별개로, 응답자 가구의 재무압박 기간을 측정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각 응답자 가구의 생활비 잔액이 10만원 이하였던 기간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표 Ⅲ-2-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달 생활비 잔액이 10만원 이하였던 날짜 수는 전 달을 기준으로 평균 8.77일이었다. 월초부터 월말까지 최소 10만원의 이상의 생활비 잔액을 유지한 가구는 전체 응답자 가구 가운데 37.4%에 그쳤다. 생활비 잔액 10만원 이하의 날

짜 수가 16일 이상이었던 응답자 가구도 21.1%나 있었다. 응답자 가구의 상당수가 다음 급여일 이전에 생활비가 부족해 가족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불안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김미현·박성진, 2018).

〈표 Ⅲ-2-3〉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의 생활비 압박(잔액 10만원 이하) 기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392	37.4
	1~5일	114	10.9
	6~10일	239	22.8
	11~15일	81	7.7
	16~20일	111	10.6
	21~25일	26	2.5
	26일 이상	84	8.0
	전체	1,047	100
	평균(표준편차)	8.77일(9.430)	

3. 자기인식 및 정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관리 또는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 및 정서는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미래지향, 우울감을 측정하였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감

자활사업 참여자 응답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총 17개 문항으로 살펴보았다(〈표 Ⅲ-2-4〉 참조). 5점 만점(리커트 척도)에 평균 3.51점으로, 명목적으로 자기효능감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나는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1,046	3.48	.982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1,046	2.29	1.130
어떤 일을 첫 번에 잘 못 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046	3.50	1.020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	1,046	3.43	1.008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 전에 포기한다.*	1,046	2.12	1.013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	1,046	2.52	1.112
나는 어떤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 볼 시도조차 안 한다.*	1,046	2.43	1.120
유쾌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반드시 한다.	1,046	3.40	1.075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1,046	3.51	1.052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포기한다.*	1,046	2.50	1.107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잘 대처할 수 없다.*	1,046	2.57	1.062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1,046	2.46	1.119
실패는 나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든다.	1,046	3.41	1.061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1,046	2.93	1.068
자신감이 있다.	1,046	3.36	1.067
나는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한다.*	1,046	2.13	.982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1,046	2.41	1.024
전체	1,046	3.51	.607

2) 직무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응답자들의 직무만족도를 11개 문항(리커트 척도)으로 살펴보았다. 〈표 Ⅲ-2-5〉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직무만족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나는 직장(사업단)에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는다.	1,046	3.58	.912
나는 직장 동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1,046	3.62	.896
나는 내 직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1,046	3.77	.983
나는 내 일이 안정적이라고 느낀다.	1,046	3.42	1.151
직장 관리자(직원)들이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	1,046	3.71	.962
이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1,046	3.68	1.122
급여에 만족한다.	1,046	2.88	1.248
지금 하는 일에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1,046	3.24	1.200
나는 사업단 팀장과 잘 지내는 편이다.	1,046	3.84	.931
나는 센터 사례관리자(게이트웨이·통장·자활사례자 포함)와 잘 지내는 편이다.	1,046	3.75	.948
나는 나의 일을 좋아한다.	1,046	3.84	.974
전체	1,046	3.56	.680

3) 미래지향

응답자들의 미래지향성을 살펴보았다(〈표 Ⅲ-2-6〉 참조). 5점 만점에 평균 3.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론 힘들고 재미없어도 더 잘살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한다.”가 3.93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 돈을 저축하고 있다.”와 “나는 10년 뒤 내 모습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예측할 수 있다.”가 각각 2.84점과 2.8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Ⅲ-2-6〉 미래지향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때론 힘들고 재미없어도 더 잘살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한다.	1,046	3.93	.828
미래의 내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다.	1,046	3.81	.900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잘 정리(계획, 기록)해 둔다.	1,046	3.24	.990
의사결정을 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1,046	3.47	.91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1,046	3.22	1.057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 돈을 저축하고 있다.	1,046	2.84	1.228
나는 10년 뒤 내 모습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예측할 수 있다.	1,046	2.83	1.081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1,046	3.17	1.028
전체	1,046	3.31	.623

4) 우울감

응답자들의 우울감을 CES-D척도(20문항)로 측정하였다(〈표 Ⅲ-2-7〉 참조). 응답자들의 우울감은 5점 만점에 평균 1.92점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우울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1,045	1.93	.829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1,045	1.87	.856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1,045	1.93	.95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045	1.79	.882
비교적 잘 지냈다.*	1,045	2.98	1.044
상당히 우울했다.	1,045	1.82	.932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045	1.92	.925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1,045	1.99	.986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45	2.07	1,037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1,045	2.67	1.040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 했다).	1,045	2.27	1.079
두려움을 느꼈다.	1,045	1.86	.978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1,045	1.99	.97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045	1.95	.99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큰불만 없이 생활했다.*	1,045	2.66	1.119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045	1.59	.819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045	1.64	.884
마음이 슬펐다.	1,045	1.77	.9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045	1.53	.799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045	1.76	.926
전체	1,045	1.92	.603

4. 재무건전성

1) 재무비율

Khashadourian(2017)의 추천한 여러 재무비율과 각 가이드라인 충족률을 통해 응답자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가계의 현금흐름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가계수지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92였다. 이는 가계수지비율의 관대한 가이드라인인 1.0보다는 낮고, 보수적인 .9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각각의 가이드라인 충족률은 68.0%와 44.5%미만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적자가구 또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한 가구가 상당수 존재함을 가리키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갑작스런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의 상황으로부터 가구의 현금흐름을 지켜줄 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유동성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유동성비율의 가이드라인은 2개월 치 가구지출에 해당하는 유동자산(현금, 현금성 자산)의 보유 여부인데,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유동성비율은 104.55%였다. 이는 이들이 보유한 유동자산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의 약 1개월 치 가구지출만을 감당할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동성비율의 가이드라인 충족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구의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절대 다수가 3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물론 응답자 가구의 월저축률도 유동성비율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었다. 재무전문가들은 월저축액이 월소득의 10%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나(Greninger et al., 1996; Khashadourian, 2017), 자

활사업 참여 응답자들은 평균 9.10%를 보였다.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에서 24.2%에 그쳤다. 응답자 4가구 중 1가구만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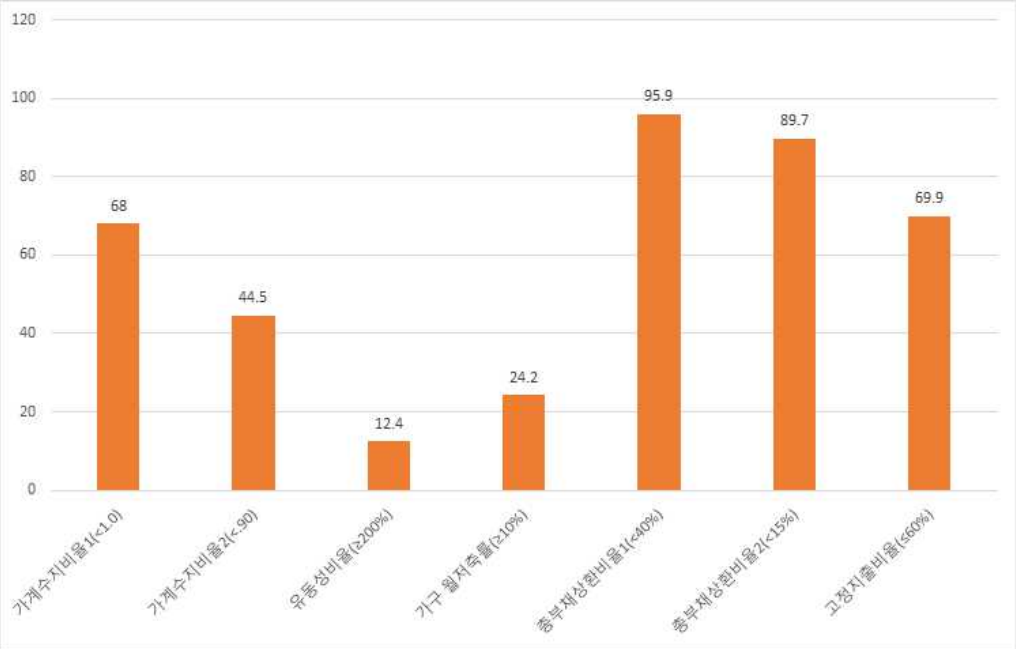
다음으로 응답자 가구의 총부채상환부담을 살펴보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인 40%와 그렇지 않은 15%(신용대출만 포함)를 적용하였다. 〈표 Ⅲ-2-8〉의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40%미만을 사용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충족률이 95.9%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연구 결과(장동호, 2019)와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부채상환부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가이드라인 충족률은 89.7%로 다소 낮아졌지만, 이 역시 매우 높은 가이드라인 충족률이다.

총부채상환부담비율과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총부채상환부담이 개인의 부채상환능력, 즉 소득 또는 자산 수준과 비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소득이나 자산이 빈약해 소득 감소나 중단 시 대출의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대출상환능력이 보증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절대적 규모나 비중은 작을 수 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총부채상환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실제로 부채부담이 낮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연체 중에 놓여있는 가구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표 Ⅲ-2-2〉는 부채 보유 응답자 가구의 약 50%만 부채를 상환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끝으로 응답자 가구의 고정지출비율이 가구 총소득의 60%를 초과하는 비율은 3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60% 이상이 매월 월세나 보험료 등의 고정 지출에 사용되고 있어 부채상환 등의 여력이 크지 않고 동시에 갑작스러운 추가 지출 발생 시 대출을 받아야 할 위험이 높은 자활사업 참여자 약 1/3임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결국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재무구조 조정 등을 포함하여 이 고정지출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원 또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표 Ⅲ-2-8〉 자활참여자의 재무비율 및 가이드라인 충족률

재무비율(가이드라인)	N	평균	표준편차	가이드라인 충족률(%)
가계수지비율1(<1.0)	1,045	.92	.390	68.0
가계수지비율2(<.90)	1,045	.92	.390	44.5
유동성비율(≥200%)	1,032	104.55	343.191	12.4
가구 월저축률(≥10%)	1,046	9.10	16.813	24.2
총부채상환비율1(<40%)	1,042	8.21	80.059	95.9
총부채상환비율2(<15%)	1,042	4.27	33.962	89.7
고정지출비율(≤60%)	1,046	46.73	30.390	69.9



[그림 Ⅲ-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

2) 재무스트레스

재무스트레스는 재무비율이라는 객관적 재무건전성 지표와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 응답자의 주관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일 수 있다. 〈표 Ⅲ-2-9〉는 재무스트레스를 대인관계

와 신체증상 각각 4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총 8개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한 값들의 평균은 2.57점으로 명목적인 수준에서 '보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문항 간에 약간의 점수 차가 확인되는데, "가족구성원 간에 돈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다."(2.55점) 등의 대인관계 재무스트레스보다는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2.75점)와 같이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재무스트레스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2-9〉 재무스트레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재무관계 스트레스	가족구성원 간에 돈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다.	1,047	2.55	1.335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경향이 있다.	1,047	2.08	1.202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다.	1,047	2.56	1.386
	돈 문제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1,047	2.53	1.375
재무신체 스트레스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잘못 잔다.	1,047	2.75	1.366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1,047	2.85	1.369
	대출금 상환이나 공과금 걱정 때문에 목이나 등 또는 어깨가 아프다.	1,047	2.85	1.391
	돈 문제 때문에 혈압이 오르거나 속이 아플 때가 있다.	1,047	2.65	1.375
전체		1,047	2.57	1.090

3) 재무관리역량

〈표 Ⅲ-2-10〉는 재무관리역량을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재무관리역량에 따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가계소비를 위한 구체적인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51.2%였으며, 지출계획이 없는 경우는 48.8%였다.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하는 응답자는 41.9%였다. 지난 달 가계적자를 경험한 응답자는 45.4%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간 돈이 없어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적이 1번 이상 있는 응답자는 39.2%였으며, 재무관련 목표달성에 대해 다소 자신감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4.1%,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갑작스런 소득 중단에서 불구하고 비상금이 있어 최소한 1달은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55.8%로 상당수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관리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Ⅲ-2-10〉 재무관리역량

구분	N	그렇지 않다	그렇다	
현재 가계소비를 위한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인 금액과 날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	1,047 (100.0)	511 (48.8)	536 (51.2)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다.	1,047 (100.0)	608 (58.1)	439 (41.9)	
지난 달 가계적자가 발생했다.*	1,047 (100.0)	572 (54.6)	475 (45.4)	
지난 12개월간, 돈이 없어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적이 1번 이상 있다.*	1,047 (100.0)	637 (60.8)	410 (39.2)	
구분	**N**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재무관련 목표(예: 저축, 재무관리 등) 달성에 자신이 있다.	1,047 (100.0)	487 (46.5)	462 (44.1)	98 (9.4)
갑자기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비상금(여윳돈)이 있어 최소 1달은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다.	1,047 (100.0)	584 (55.8)	352 (33.6)	111 (10.6)

주: *역방향 지문

제3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상태, 자기인식 및 정서, 재무건전성 차이

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상태 차이

1) 가구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차이

(1) 가구소득의 차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소득을 세후 월 가구소득의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표 Ⅲ-3-1〉 참조). 그 결과, 가구의 월소득과 관련 있는 변수는 응답자의 연령,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수, 기초생활수급유형, 자활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60세 이상(124.65만원)에 비해 40대인 경우(134.65만원)에 평균 1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7). 혼인상태를 보면, 응답자가 기혼(148.56만원)인 경우가 미혼(124.88만원)과 이혼(121.50만원) 그리고 사별(129.35만원)보다 월소득이 더 많았다(p=.000). 가구원수는 1명보다(119.62만원)는 2명(128.24만원), 2명보다는 3명 이상(150.45만원)일수록 월소득이 더 많았으며(p=.000), 자녀수도 0명(124.74명) 또는 1명(125.83명)보다는 3명 이상(143.56만원)일 경우 월소득이 더 많았다(p=.000). 기초생활수급유형별로 보면, 차상위가구(136.98만원)가 조건부수급자(126.61만원)에 비해 월소득 수준이 더 높았으며(p=.001), 사회서비스(125.41만원) 유형의 자활근로사업보다는 시장진입형(141.68만원) 자활근로사업에 소속된 경우 월소득이 더 많았다(p=.000). 성별, 학력, 주거점유형태,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중단 여부, 주관적 건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월소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표 Ⅲ-3-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소득(세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1	128.18	37.180	2.188	.139	
	여성(b)	614	131.68	38.054			
연령	20대 이하(a)	50	137.16	47.300	3.547	.007	d<c
	30대(b)	75	137.25	46.839			
	40(c)	197	134.65	41.359			
	50대(d)	401	130.38	38.229			
	60대 이상(e)	322	124.65	38.229			
학력	중졸 이하(a)	408	127.17	33.534	2.609	.074	
	고졸(b)	494	131.58	39.977			
	대졸 이상(c)	142	134.58	40.505			
혼인 상태	미혼(a)	246	124.88	32.628	33.025	.000	b>a,c,d
	기혼(b)	271	148.56	53.836			
	이혼(c)	405	121.50	17.923			
	사별(d)	123	129.35	38.731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135.15	41.156	1.175	.320	
	전세(b)	105	131.16	38.689			
	월세(c)	357	130.62	39.856			
	공공임대(d)	303	127.10	34.742			
	기타(e)	132	130.43	33.260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2	119.62	16.142	68.652	.000	a<b,c b<c
	2명(b)	268	128.24	35.918			
	3명 이상(c)	285	150.45	54.382			
자녀 수	0명(a)	354	124.74	32.047	10.702	.000	a,b<d
	1명(b)	212	125.83	30.431			
	2명(c)	324	132.69	38.424			
	3명 이상(d)	156	143.56	51.243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3	127.51	34.285	5.472	.001	b<c
	조건부수급자(b)	547	126.61	32.295			
	차상위가구(c)	327	136.98	45.254			
	해당 없음(d)	58	131.79	40.480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5	125.41	36.053	42.145	.000	a<b
	시장진입형(b)	310	141.68	39.14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3	130.09	38.539	1.249	.279	
	1년 이상~2년 미만(b)	196	126.01	32.508			
	2년 이상~3년 미만(c)	168	129.62	34.833			
	3년 이상~4년 미만(d)	136	133.02	42.534			
	4년 이상~5년 미만(e)	71	137.06	43.780			
	5년 이상~6년 미만(f)	39	137.95	38.928			
	6년 이상(g)	82	128.05	36.359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5	129.59	36.909	.937	.333	
	중단 있었음(b)	260	132.20	40.070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124.05	24.240	1.292	.276	
	나쁜 편이다(b)	451	128.36	34.308			
	좋은 편이다(c)	506	132.36	41.173			
	아주 좋다(d)	46	130.98	39.408			

(2) 가구지출의 차이

다음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지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Ⅲ-3-2〉 참조). 우선 응답자가 여성(122.05만원)일수록(p=.004), 또한 연령이 40대(126.17만원)일수록, 학력이 고졸(123.26만원) 또는 대졸 이상(123.70만원)일수록, 기혼자(143.87만원)일수록 응답자 가구의 월지출 규모가 더 컸다(p=.000). 또한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원이 1명(101.12만원)인 경우보다 2명(117.71만원), 3명 이상(147.29만원)으로 늘어날수록 가구지출의 규모도 늘었다. 자녀수가 0명(104.03만원), 1명(115.93만원), 2명(123.64만원)인 경우에 비해 3명 이상(140.90만원)인 경우에 가구지출규모가 컸으며(p=.000), 사회서비스형(115.52만원) 자활근로사업보다는 시장진입형(123.95만원)인 자활근로사업에 소속된 응답자의 월지출규모가 더 컸다(p=.022). 한편, 주거점유형태, 기초생활수급유형,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중단 경험 여부, 주관적 건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구지출규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표 Ⅲ-3-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지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112.27	56.212	8.250	.004	a<b
	여성(b)	613	122.05	52.773			
연령	20대 이하(a)	51	104.25	60.382	5.063	.000	e<c
	30대(b)	75	128.48	70.149			
	40(c)	197	126.17	54.232			
	50대(d)	400	120.85	58.117			
	60대 이상(e)	322	109.23	41.804			
학력	중졸 이하(a)	408	109.82	47.759	7.798	.000	a<b,c
	고졸(b)	494	123.26	57.929			
	대졸 이상(c)	142	123.70	57.046			
혼인 상태	미혼(a)	247	101.49	47.866	32.760	.000	a,c,d<b
	기혼(b)	271	143.87	69.830			
	이혼(c)	404	111.48	40.325			
	사별(d)	123	115.67	48.618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120.14	62.552	.415	.798	
	전세(b)	104	118.85	62.740			
	월세(c)	357	119.13	56.259			
	공공임대(d)	303	117.71	50.553			
	기타(e)	133	112.73	49.941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1	101.12	39.938	74.189	.000	a<b,c b<c
	2명(b)	268	117.71	50.660			
	3명 이상(c)	286	147.29	65.922			
자녀 수	0명(a)	354	104.03	52.503	19.216	.000	a<c,d b<d c<d
	1명(b)	212	115.93	43.916			
	2명(c)	323	123.64	50.607			
	3명 이상(d)	156	140.90	68.330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122.57	60.538	.937	.422	
	조건부수급자(b)	545	115.95	50.261			
	차상위가구(c)	328	120.68	60.134			
	해당 없음(d)	58	113.26	44.203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7	115.52	52.376	5.224	.022	a<b
	시장진입형(b)	308	123.95	58.65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4	118.39	51.747	.780	.585	
	1년 이상~2년 미만(b)	196	117.77	57.155			
	2년 이상~3년 미만(c)	167	117.09	56.878			
	3년 이상~4년 미만(d)	136	118.11	51.140			
	4년 이상~5년 미만(e)	71	120.68	62.934			
	5년 이상~6년 미만(f)	39	131.92	67.667			
	6년 이상(g)	82	109.73	43.472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5	116.85	54.644	1.438	.231	
	중단 있었음(b)	260	121.52	53.643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115.43	45.976	.350	.789	
	나쁜 편이다(b)	452	118.74	53.167			
	좋은 편이다(c)	505	118.25	55.447			
	아주 좋다(d)	46	110.54	62.613			

(3) 가구자산의 차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저축액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Ⅲ-3-3〉 참조). 응답자가 남성(86.22만원)보다는 여성(135.72만원)일수록 총저축잔액이 평균 49.5만원 더 많았다(p=.023). 또한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이 좀 더 많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소속 응답자(150.28만원)가 사회서비스형 소속 응답자(100.47만원)에 비해 총저축잔액이 월 약 50만원 정도 많았다(p=.034). 그밖에 본 연구가 살펴본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즉 연령, 학력, 혼인상태, 주거점유형태, 가구원수, 자녀수, 기초생활수급유형, 자활사업 참여기간 등은 응답자 가구의 총저축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Ⅲ-3-3〉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총저축잔액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86.22	261.405	5.176	.023	a<b
	여성(b)	613	135.72	395.907			
연령	20대 이하(a)	51	51.86	160.194	1.453	.215	
	30대(b)	75	141.12	403.405			
	40(c)	197	145.60	454.901			
	50대(d)	400	92.67	253.909			
	60대 이상(e)	321	128.72	128.72			
학력	중졸 이하(a)	407	96.37	298.448	1.001	.368	
	고졸(b)	495	128.34	338.121			
	대졸 이상(c)	143	124.35	483.335			
혼인 상태	미혼(a)	248	87.25	209.341	2.552	.054	
	기혼(b)	271	130.48	429.330			
	이혼(c)	405	101.32	316.105			
	사별(d)	122	184.41	447.101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102.87	211.052	.673	.611	
	전세(b)	105	124.76	444.096			
	월세(c)	357	95.17	389.806			
	공공임대(d)	303	133.14	324.251			
	기타(e)	133	135.17	312.278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1	98.94	312.402	1.166	.312	
	2명(b)	269	137.91	436.566			
	3명 이상(c)	286	121.87	307.147			
자녀 수	0명(a)	355	101.81	282.013	2.368	.069	
	1명(b)	212	92.76	263.726			
	2명(c)	323	157.42	467.993			
	3명 이상(d)	156	88.96	276.632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101.23	283.243	1.931	.123	
	조건부수급자(b)	546	96.04	279.288			
	차상위가구(c)	328	153.13	464.303			
	해당 없음(d)	58	109.09	240.636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6	100.47	289.324	4.500	.034	a<b
	시장진입형(b)	310	150.28	455.108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4	101.36	377.437	1.376	.221	
	1년 이상~2년 미만(b)	196	97.83	261.561			
	2년 이상~3년 미만(c)	168	85.73	215.182			
	3년 이상~4년 미만(d)	137	129.73	323.364			
	4년 이상~5년 미만(e)	71	188.34	511.216			
	5년 이상~6년 미만(f)	38	160.66	396.952			
	6년 이상(g)	82	168.59	435.578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6	114.72	366.775	.007	.934	
	중단 있었음(b)	260	116.78	281.101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1	86.49	256.228	.942	.420	
	나쁜 편이다(b)	453	97.33	327.514			
	좋은 편이다(c)	506	131.11	366.854			
	아주 좋다(d)	46	142.50	384.502			

한편, 응답자 가구의 월저축액과 관련이 있는 드러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기초생활수급유형과 자활사업 참여유형 두 가지였다(〈표 Ⅲ-3-4〉 참조). 응답자인 자활사업 참여자가 일반수급자(7.24만원)가 아닌 차상위가구(14.72만원)일 경우(p=.008) 월저축액이 훨씬 적었으며, 자활사업 참여 유형이 사회서비스형(10.01만원)이 아닌 시장진입형(15.19만원)일수록 월저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성별을 포함한 나머지변수에 의한 월저축액의 가구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p>.05).

〈표 Ⅲ-3-4〉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저축액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10.64	25.443	1.202	.273	
	여성(b)	614	12.18	20.024			
연령	20대 이하(a)	51	6.80	10.916	1.899	.108	
	30대(b)	76	13.22	17.936			
	40(c)	197	14.52	32.283			
	50대(d)	401	10.25	17.262			
	60대 이상(e)	322	11.67	22.92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학력	중졸 이하(a)	408	11.15	25.423	.779	.459	
	고졸(b)	495	11.26	18.177			
	대졸 이상(c)	143	13.73	26.385			
혼인 상태	미혼(a)	248	10.04	16.996	1.002	.391	
	기혼(b)	271	13.38	30.933			
	이혼(c)	405	11.39	19.778			
	사별(d)	123	11.04	17.368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12.94	23.980	.320	.865	
	전세(b)	105	11.62	19.165			
	월세(c)	358	11.58	27.700			
	공공임대(d)	303	11.51	17.895			
	기타(e)	133	9.90	15.715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2	10.27	19.116	1.975	.139	
	2명(b)	269	13.63	26.275			
	3명 이상(c)	286	11.77	23.666			
자녀 수	0명(a)	355	11.15	21.259	1.269	.284	
	1명(b)	212	9.70	23.737			
	2명(c)	324	13.39	25.225			
	3명 이상(d)	156	11.11	16.013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7.24	11.547	3.992	.008	a<c
	조건부수급자(b)	547	10.73	19.286			
	차상위가구(c)	328	14.72	29.756			
	해당 없음(d)	58	9.76	14.740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7	10.01	20.755	11.781	.001	a<b
	시장진입형(b)	310	15.19	25.640			
자활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a)	354	10.04	27.886	.822	.553	
	1년 이상~2년 미만(b)	196	10.92	22.788			
	2년 이상~3년 미만(c)	168	13.75	17.618			
	3년 이상~4년 미만(d)	137	13.34	19.071			
	4년 이상~5년 미만(e)	71	13.35	18.477			
	5년 이상~6년 미만(f)	39	11.69	15.190			
	6년 이상(g)	82	10.38	13.06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a)	787	12.03	23.117	1.459	.227	
	중단 있었음(b)	260	10.09	20.161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8.57	19.486	.867	.458	
	나쁜 편이다(b)	453	10.62	21.607			
	좋은 편이다(c)	506	12.50	23.619			
	아주 좋다(d)	46	12.93	19.107			

(4) 가구부채와 신용의 차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계부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계부채는 총부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월부채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월부채상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차례대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부채 잔액이다. 〈표 Ⅲ-5-3〉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 가구의 총부채 잔액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변수는 성별,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수,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사업 중단경험 여부, 주관적 건강이었다($p<.05$).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참여자가 남성(1,506.04만원)인 경우 여성(788.27만원)보다 총부채규모가 더 컸다($p=.001$). 학력이 대졸 이상(2,371.41만원)이 중졸 이하(709.06만원)나 고졸(1,026.45만원)보다 총부채가 더 많았으며($p<.000$),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1,026.45만원)이 미혼(594.64만원)보다 많았다($p=.015$). 또한 앞서 살펴본 소득이나 지출 관련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가구원수와 자녀수가 증가하면 총부채 잔액도 최대 두 배 안팎으로 증가하였다($p=.022$, $p=.002$). 한편,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응답자 가구의 총부채 잔액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총부채 잔액은 급격히 줄어들었다($p=.005$). 끝으로 자활사업 중단경험(1,220.99만원)이 없었던 경우($p=.033$),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1,470.97만원)에도 응답자 가구의 총부채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18$).

〈표 Ⅲ-3-5〉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총부채 잔액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0	1,506.04	4,829.653	10.255	.001	b<a
	여성(b)	612	788.27	2,284.599			
연령	20대 이하(a)	49	204.84	815.112	1.141	.335	
	30대(b)	74	1,166.22	3,748.292			
	40(c)	196	1,392.96	5,097.434			
	50대(d)	401	1,026.40	2,738.571			
	60대 이상(e)	322	1,984.09	3,592.629			
학력	중졸 이하(a)	408	709.06	2,772.203	11.723	.000	a,b<c
	고졸(b)	491	1,026.45	2,550.498			
	대졸 이상(c)	142	2,371.41	6,901.024			
혼인 상태	미혼(a)	244	594.64	2,311.379	3.513	.015	a<b
	기혼(b)	270	1,596.19	5,161,411			
	이혼(c)	405	1,097.24	2,454.094			
	사별(d)	123	890.85	4,336.609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897.74	2,093.401	.597	.665	
	전세(b)	105	1,260.00	4,705.801			
	월세(c)	355	1,202.06	4,094.906			
	공공임대(d)	303	1,134.64	3,556.935			
	기타(e)	132	741.45	2,132.208			
가구 원수	1명(a)	492	799.27	2,642.681	3.850	.022	a<c
	2명(b)	267	1,132.67	3,420.649			
	3명 이상(c)	283	1,534.83	4,869.333			
자녀 수	0명(a)	351	670.84	2,408.408	4.870	.002	a<d
	1명(b)	212	962.59	2,336.691			
	2명(c)	324	1,195.28	4,042.812			
	3명 이상(d)	155	1,956.23	5,512.321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3	1,234.64	3,933.417	1.127	.337	
	조건부수급자(b)	544	1,144.42	3,828.837			
	차상위가구(c)	327	1,077.87	3,299.413			
	해당 없음(d)	58	266.93	842.416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2	1,085.74	3,452.757	.000	.986	
	시장진입형(b)	310	1,081.49	3,863.018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1	1,698.70	4,871.497	3.143	.005	d<a
	1년 이상~2년 미만(b)	195	1,089.37	4,080.155			
	2년 이상~3년 미만(c)	168	767.05	1,720.765			
	3년 이상~4년 미만(d)	136	578.76	1,732.367			
	4년 이상~5년 미만(e)	71	799.30	2,596.460			
	5년 이상~6년 미만(f)	39	702.31	1,702.731			
	6년 이상(g)	82	361.40	929.300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2	1,220.99	4,005.991	4.578	.033	b<a
	중단 있었음(b)	260	673.88	1,683.393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1,111.52	2,843.923	3.381	.018	b<c
	나쁜 편이다(b)	451	1,470.97	4,374.331			
	좋은 편이다(c)	503	795.13	2,894.764			
	아주 좋다(d)	46	434.35	1,033.077			

다음으로 응답자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구의 월부채상환액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Ⅲ-3-6〉 참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수였다($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은 응답자가 대졸 이상(13.07만원)인 경우 중졸 이하(5.10만원)보다 월부채상환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 혼인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상태가 이혼(9.90만원)인 경우 미혼(4.02만원)인 경우보다 월부채상환금이 컸다($p=.023$). 가구원수와 자녀수도 월부채상환액(주택담보대출 포함)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구원수가 1명(5.95만원)인 경우보다 3명 이상(11.47만원)인 경우($p=.015$) 그리고 자녀수가 0명(5.07만원)인 경우보다 3명 이상(11.20만원)인 경우 월부채상환금액이 각각 2배정도 많았다($p=.022$). 가구원수와 자녀수가 월부채상환액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유는 앞서 〈표 Ⅲ-3-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원수와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채총액도 많기 때문이다. 즉, 가구원과 자녀가 대출수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표 III-3-6〉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부채상환액(주택담보대출 포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0	6.64	19.043	2.236	.135	
	여성(b)	612	9.05	29.391			
연령	20대 이하(a)	49	2.55	9.136	1.432	.221	
	30대(b)	74	9.91	35.851			
	40(c)	196	10.57	27.963			
	50대(d)	401	8.38	25.838			
	60대 이상(e)	322	6.54	22.583			
학력	중졸 이하(a)	408	5.10	20.873	5.871	.003	a<c
	고졸(b)	491	9.08	26.006			
	대졸 이상(c)	142	13.07	34.557			
혼인상태	미혼(a)	244	4.02	16.700	3.176	.023	a<c
	기혼(b)	270	9.58	31.282			
	이혼(c)	405	9.90	25.209			
	사별(d)	123	6.62	27.290			
주거점유형태	자가(a)	147	7.37	25.224	1.303	.267	
	전세(b)	105	7.05	21.570			
	월세(c)	355	6.84	22.385			
	공공임대(d)	303	10.86	30.287			
	기타(e)	132	6.45	25.579			
가구원수	1명(a)	492	5.95	19.309	4.198	.015	a<c
	2명(b)	267	8.31	29.056			
	3명 이상(c)	283	11.47	31.040			
자녀수	0명(a)	351	5.07	17.846	3.236	.022	a<c
	1명(b)	212	8.15	25.706			
	2명(c)	324	11.20	33.975			
	3명 이상(d)	155	8.11	18.851			
기초생활수급유형	일반수급자(a)	113	7.27	18.634	1.188	.313	
	조건부수급자(b)	544	7.26	23.994			
	차상위가구(c)	327	10.16	31.223			
	해당 없음(d)	58	5.17	15.202			
자활유형	사회서비스형(a)	732	7.95	25.531	.046	.831	
	시장진입형(b)	310	8.32	25.964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1	8.73	24.627	1.704	.117	
	1년 이상~2년 미만(b)	195	10.98	30.899			
	2년 이상~3년 미만(c)	168	7.99	25.950			
	3년 이상~4년 미만(d)	136	4.99	14.849			
	4년 이상~5년 미만(e)	71	10.76	40.401			
	5년 이상~6년 미만(f)	39	6.00	20.093			
	6년 이상(g)	82	2.10	10.423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2	8.24	27.653	.165	.685	
	중단 있었음(b)	260	7.50	18.382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5.26	14.498	.377	.769	
	나쁜 편이다(b)	451	8.59	26.738			
	좋은 편이다(c)	503	8.04	25.811			
	아주 좋다(d)	46	5.54	20.710			

다음으로 응답자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구의 월부채상환액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Ⅲ-3-7> 참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학력 단 하나였다. 앞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채상환비율에 관한 분석 결과와는 달리,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학력에 따른 부채상환비율의 차이는 응답자가 대졸 이상(10.72만원)일 때 중졸 이하(4.14)만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8). 자활사업 참여자 중 대졸 집단이 가진 어떤 특성이 부채와 관련하여 특별한 수요를 만들어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표 Ⅲ-3-7>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 월부채상환액(주택담보대출 제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0	5.83	17.980	1.115	.291	
	여성(b)	612	7.43	27.63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연령	20대 이하(a)	49	2.41	8.660	1.083	.364	
	30대(b)	74	9.01	35.606			
	40(c)	196	8.49	24.740			
	50대(d)	401	7.13	24.517			
	60대 이상(e)	322	5.42	21.446			
학력	중졸 이하(a)	408	4.14	20.093	4.834	.008	a<c
	고졸(b)	491	7.83	24.810			
	대졸 이상(c)	142	10.72	30.889			
혼인 상태	미혼(a)	244	3.7	16.393	2.055	.105	
	기혼(b)	270	8.12	30.132			
	이혼(c)	405	8.04	23.775			
	사별(d)	123	5.73	26.151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3.84	18.678	1.640	.162	
	전세(b)	105	5.82	21.264			
	월세(c)	355	6.19	21.784			
	공공임대(d)	303	9.50	28.894			
	기타(e)	132	6.07	25.417			
가구 원수	1명(a)	492	5.17	18.515	2.585	.076	
	2명(b)	267	7.12	28.273			
	3명 이상(c)	283	9.23	28.067			
자녀 수	0명(a)	351	4.43	17.147	2.576	.053	
	1명(b)	212	7.13	25.378			
	2명(c)	324	9.50	31.941			
	3명 이상(d)	155	5.87	14.699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3	5.50	15.613	.646	.585	
	조건부수급자(b)	544	6.47	23.406			
	차상위가구(c)	327	8.12	28.726			
	해당 없음(d)	58	4.48	13.992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2	6.55	23.703	.195	.659	
	시장진입형(b)	310	7.28	25.13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1	7.50	23.600	1.367	.225	
	1년 이상~2년 미만(b)	195	9.05	28.293			
	2년 이상~3년 미만(c)	168	6.28	23.510			
	3년 이상~4년 미만(d)	136	4.43	13.940			
	4년 이상~5년 미만(e)	71	9.61	39.898			
	5년 이상~6년 미만(f)	39	4.08	18.044			
	6년 이상(g)	82	1.93	10.399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2	6.93	26.125	.142	.706	
	중단 있었음(b)	260	6.28	16.785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2.74	10.718	.515	.672	
	나쁜 편이다(b)	451	7.33	25.488			
	좋은 편이다(c)	503	6.72	23.987			
	아주 좋다(d)	46	5.48	20.7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 결과(〈표 Ⅲ-3-8〉 참조),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주거점유형태, 기초생활수급 유형, 자활사업 참여기간, 주관적 건강과 같은 특성에 따라 채무불이행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47.6%)이 여성(39.7%)에 비해 과거나 현재에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p=.000). 40대 응답자(52.6%)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 응답자(18.0%)의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은 가장 낮았다(p=.000). 한편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은 학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졸 이하의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33.3%인데 반해, 대졸이상에서는 54.3%가 채무불이행을 경험했다(p=.000). 대졸 이상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는 원래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사업투자나 경제적 사고 등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경험하고 그로인해 수급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이혼 경험자(49.4%)의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다(p=.032). 이혼으로 인해 급증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사례도 일부 있겠지만,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고 결국 이혼을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김미현·박성진, 2018).

한편 주거점유형태와 관련해서는 월세 거주자(48.3%)가 가운데 채무불이행 경험자가 가장 높

았다. 채무조정 등을 거치면서 전세 보증금이나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고, 현금자산이 부족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응답자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차상위가구(35.5%)와 비수급자가구(29.3%)보다는 일반수급자(43.4%)나 조건부수급자가구(49.5%)에서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은 높았다(p=.000).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은 특히 자활사업에 참여한지 1년 미만의 집단(51.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그리고 참여기간이 늘어날수록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은 낮아졌다. 끝으로 주관적 건강과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쁠 경우(52.4%) 그 반대로 아주 좋은 경우(28.3%)보다 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훨씬 높았다(p=.001).

〈표 Ⅲ-3-8〉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구분		N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현재	해당 없음	X^2	유의확률
성별	남성	431(100.0)	103(23.9)	102(23.7)	226(52.4)	20.644	.000
	여성	614(100.0)	165(26.9)	79(12.9)	370(60.3)		
연령	20대 이하	50(100.0)	4(8.0)	5(10.0)	41(82.0)	31.753	.000
	30대	76(100.0)	19(25.0)	10(13.2)	47(61.8)		
	40대	196(100.0)	63(32.1)	40(20.4)	93(47.4)		
	50대	401(100.0)	105(26.2)	84(20.9)	212(52.9)		
	60대 이상	322(100.0)	77(23.9)	42(13.0)	203(63.0)		
학력	중졸 이하	408(100.0)	82(20.1)	54(13.2)	272(66.7)	29.413	.000
	고졸	494(100.0)	139(28.1)	94(19.0)	261(52.8)		
	대졸 이상	142(100.0)	47(33.1)	33(23.2)	62(43.7)		
혼인상태	미혼	246(100.0)	55(22.4)	39(15.9)	152(61.8)	13.775	.032
	기혼	271(100.0)	65(24.0)	48(17.7)	158(58.3)		
	이혼	405(100.0)	121(29.9)	79(19.5)	205(50.6)		
	사별	123(100.0)	27(22.0)	15(12.2)	81(65.9)		
주거점유형태	자가	147(100.0)	24(16.3)	11(7.5)	112(76.2)	55.813	.000
	전세	105(100.0)	32(30.5)	8(7.6)	65(61.9)		
	월세	356(100.0)	79(22.2)	93(26.1)	184(51.7)		
	공공임대	303(100.0)	97(32.0)	48(15.8)	158(52.1)		
	기타	133(100.0)	36(27.1)	21(15.8)	76(57.1)		

구분		N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현재	해당 없음	X^2	유의확률
가구원수	1명	492(100.0)	119(24.2)	85(17.3)	288(58.5)	2.313	.678
	2명	267(100.0)	71(26.6)	42(15.7)	154(57.7)		
	3명 이상	286(100.0)	78(27.3)	54(18.9)	154(53.8)		
자녀수	0명	353(100.0)	84(23.8)	57(16.1)	212(60.1)	2.744	.840
	1명	212(100.0)	58(27.4)	35(16.5)	119(56.1)		
	2명	324(100.0)	85(26.2)	58(17.9)	181(55.9)		
	3명 이상	156(100.0)	41(26.3)	31(19.9)	84(53.8)		
기초생활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13(100.0)	28(24.8)	21(18.6)	64(56.6)	24.601	.000
	조건부수급자	546(100.0)	162(29.7)	108(19.8)	276(50.5)		
	차상위가구	328(100.0)	70(21.3)	43(13.1)	215(65.5)		
	해당 없음	58(100.0)	8(13.8)	9(15.5)	41(70.7)		
자활유형	사회서비스형	735(100.0)	180(24.5)	129(17.6)	426(58.0)	1.740	.419
	시장진입형	310(100.0)	88(28.4)	52(16.8)	170(54.8)		
자활사업참여기간	1년 미만	352(100.0)	100(28.4)	81(23.0)	171(48.6)	40.819	.000
	1년 이상~2년 미만	196(100.0)	43(21.9)	42(21.4)	111(56.6)		
	2년 이상~3년 미만	168(100.0)	45(26.8)	29(17.3)	94(56.0)		
	3년 이상~4년 미만	137(100.0)	32(23.4)	10(7.3)	95(69.3)		
	4년 이상~5년 미만	71(100.0)	17(23.9)	8(11.3)	46(64.8)		
	5년 이상~6년 미만	39(100.0)	8(20.5)	8(20.5)	23(59.0)		
	6년 이상	82(100.0)	23(28.0)	3(3.7)	56(68.3)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	785(100.0)	192(24.5)	142(18.1)	451(57.5)	2.907	.234
	중단 있었음	260(100.0)	76(29.2)	39(15.0)	145(55.8)		
주관적건강	매우 나쁘다	42(100.0)	13(31.0)	9(21.4)	20(47.6)	23.471	.001
	나쁜 편이다	452(100.0)	115(25.4)	103(22.8)	234(51.8)		
	좋은 편이다	505(100.0)	132(26.1)	64(12.7)	30(61.2)		
	아주 좋다	46(100.0)	8(17.4)	5(10.9)	33(71.7)		

2) 생활비 압박 기간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 재무적 압박감을 시간의 차원에서 포착하고자 한 달 생활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날짜 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표 Ⅲ-3-9〉 참조). 구체적으로 지난 달 생활비 잔액

이 10만원 이하인 날짜수와 관계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생활비 잔액을 낮은 수준으로 빨리 소진되게 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연령,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수, 기초생활수급유형, 자활사업 참여 유형, 주관적 건강으로 파악되었다(p<.05).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이 40대(10.49일)인 경우 60대 이상(7.58일)에 비해 생활비 잔액 10만원 이하의 기간이 더 길었다(p=.013). 또한 참여자가 이혼(9.67일)상태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p=.034). 가구원가 3명 이상(10.66일)인 경우(p=.000), 자녀수가 2명(9.90일)인 경우에도 생활비 잔액 10만원 이하 날짜가 길었다(p=.024). 조건부수급자(9.43일)가 차상위가구(7.66일) 보다 생활비 잔액 10만원 기간이 더 길었으며(p=.003), 참여자 소속이 사회서비스행(9.33일)인 경우가 시장진입형(7.46일)인 경우에 비해 생활비 잔액 10만원이 기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주간적 건강상태는 나쁜 편(9.73점)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좋은 편(8.03점)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들에 비해 생활비 잔액 10만원 기간이 더 길었다(p=.024).

〈표 Ⅲ-3-9〉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비 압박(잔액 10만원 이하) 기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8.55	9.314	.429	.513	
	여성(b)	614	8.93	9.514			
연령	20대 이하(a)	51	9.49	10.112	3.167	.013	e<c
	30대(b)	76	8.07	9.497			
	40(c)	197	10.49	9.554			
	50대(d)	401	8.94	9.163			
	60대 이상(e)	322	7.58	9.429			
학력	중졸 이하(a)	408	8.11	9.362	1.741	.176	
	고졸(b)	495	9.29	9.593			
	대졸 이상(c)	143	8.85	9.011			
혼인상태	미혼(a)	244	7.49	9.133	2.911	.034	a<c
	기혼(b)	271	8.86	9.307			
	이혼(c)	405	9.67	9.582			
	사별(d)	123	8.24	9.561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8.03	8.990	1.422	.225	
	전세(b)	105	8.19	8.849			
	월세(c)	358	8.56	9.374			
	공공임대(d)	303	9.80	9.949			
	기타(e)	132	8.14	9.081			
가구 원수	1명(a)	492	7.93	9.266	8.133	.000	a,b<c
	2명(b)	269	8.32	9.209			
	3명 이상(c)	286	10.66	9.678			
자녀 수	0명(a)	351	7.76	9.017	3.150	.024	a<c
	1명(b)	212	8.41	9.116			
	2명(c)	324	9.90	10.001			
	3명 이상(d)	156	9.24	9.349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9.75	10.130	3.537	.014	c<b
	조건부수급자(b)	547	9.43	9.651			
	차상위가구(c)	328	7.66	8.957			
	해당 없음(d)	58	6.97	7.700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7	9.33	9.748	8.605	.003	b<a
	시장진입형(b)	310	7.46	8.497			
자활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a)	354	9.80	9.623	1.777	.101	
	1년 이상~2년 미만(b)	196	8.62	9.632			
	2년 이상~3년 미만(c)	168	9.09	9.584			
	3년 이상~4년 미만(d)	137	7.79	9.181			
	4년 이상~5년 미만(e)	71	6.59	8.397			
	5년 이상~6년 미만(f)	39	8.13	8.250			
	6년 이상(g)	82	7.91	9.267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a)	787	8.47	9.168	3.256	.071	
	중단 있었음(b)	260	9.69	10.143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9.38	9.173	3.164	.024	c<b
	나쁜 편이다(b)	453	9.73	9.566			
	좋은 편이다(c)	506	8.02	9.274			
	아주 좋다(d)	46	7.11	9.329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무상태 관계 요약

앞서 살펴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무상태에 관한 ANOVA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표 Ⅲ-3-10〉과 같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셀은 두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또한 해당 변수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한다(최고값과 나머지가 값이 거의 같을 경우 동그라미가 둘 이상일 수 있음).

〈표 Ⅲ-3-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재무상태의 관계 요약

구분		재무상태							
		월소득	월지출	총저축 잔액	월저축 액	총부채 잔액	월부채 상환액	채무불 이행	생활비 압박기간
성별	남성					○		●	
	여성		○	○					
연령	20대 이하								
	30대								
	40	○	○					●	
	50대								
	60대 이상								●
학력	중졸 이하								
	고졸		○						
	대졸 이상		○			○	○	●	
혼인 상태	미혼								
	기혼	○	○			○	○		
	이혼							●	●
	사별								
주거점유 형태	자가								
	전세								
	월세							●	
	공공임대							●	
	기타								
가구원수 (본인 포함)	1명								
	2명	○	○						
	3명 이상	○	○			○	○		●
자녀수	0명								
	1명								
	2명						○		●
	3명 이상	○				○			
기초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		●
	차상위가구	○			○				
	해당 없음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								●
	시장진입형	○	○	○	○				

구분		재무상태							
		월소득	월지출	총저축 잔액	월저축 액	총부채 잔액	월부채 상환액	채무불 이행	생활비 압박기간
자활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					○		●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년 이상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					○			
	중단 있었음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좋은 편이다					○			
	아주 좋다								

주: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 차이

1) 자기효능감의 차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Ⅲ-3-11〉 참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혼인상태, 자녀수, 주관적 건강이었다. 우선 연령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대 이하(3.15점) 또는 30대 자활사업 참여자보다 40대(3.59점)와 60대 이상(3.61점)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혼인상태를 보면, 이혼(3.59점)과 사별(3.62점)이 미혼(3.15점)보다 더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p=.000). 자녀가 없는 경우(3.41점)에 비해 자녀가 1명(3.56점) 또는 2명(3.57점) 있는 경우에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으며(p=.001),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표 Ⅲ-3-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3.51	.624	.001	.953	
	여성(b)	613	3.52	.595			
연령	20대 이하(a)	51	3.15	.602	10.276	.000	a<c,d,e b<c,e
	30대(b)	76	3.28	.560			
	40(c)	196	3.59	.629			
	50대(d)	401	3.50	.600			
	60대 이상(e)	322	3.61	.578			
학력	중졸 이하(a)	408	3.51	.590	.162	.851	
	고졸(b)	494	3.51	.635			
	대졸 이상(c)	143	3.54	.557			
혼인 상태	미혼(a)	248	3.36	.608	9.371	.000	a<c,d
	기혼(b)	271	3.47	.593			
	이혼(c)	404	3.59	.609			
	사별(d)	123	3.62	.563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3.46	.612	.758	.553	
	전세(b)	105	3.55	.530			
	월세(c)	358	3.55	.636			
	공공임대(d)	302	3.50	.593			
	기타(e)	133	3.50	.612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2	3.53	.598	.877	.416	
	2명(b)	269	3.47	.649			
	3명 이상(c)	285	3.53	.579			
자녀 수	0명(a)	355	3.41	.616	5.364	.001	a<b,c
	1명(b)	212	3.56	.625			
	2명(c)	324	3.57	.613			
	3명 이상(d)	155	3.57	.513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3.47	.573	1.652	.176	
	조건부수급자(b)	546	3.49	.626			
	차상위가구(c)	328	3.56	.576			
	해당 없음(d)	58	3.61	.648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6	3.50	.613	2.512	.113	
	시장진입형(b)	310	3.56	.591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3	3.55	.599	1.400	.211	
	1년 이상~2년 미만(b)	196	3.55	.641			
	2년 이상~3년 미만(c)	168	3.51	.619			
	3년 이상~4년 미만(d)	137	3.39	.535			
	4년 이상~5년 미만(e)	71	3.54	.571			
	5년 이상~6년 미만(f)	39	3.41	.578			
	6년 이상(g)	82	3.54	.674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6	3.51	.620	.051	.821	
	중단 있었음(b)	260	3.52	.565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3.40	.686	5.519	.001	b<c
	나쁜 편이다(b)	452	3.44	.597			
	좋은 편이다(c)	506	3.57	.596			
	아주 좋다(d)	46	3.68	.657			

2) 직무만족도의 차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Ⅲ-3-12〉 참조).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앞서 살펴본 자기효능감보다 직무만족도와 더 다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주거점유형태, 자녀수, 기초생활수급유형, 주관적 건강의 차이가 직무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남성 참여자(3.47점)보다 여성 참여자(3.62점)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았다(p=.001). 그리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72점)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도가 20대(3.37점), 40대(3.46점), 50대(3.50점)의 직무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기혼(3.64점)과 사별(3.79점) 참여자의 직무만족도가 미혼(3.42점)과 이혼(3.52점)에 비해 높았으며(p=.000), 주거점유형태 측면에서는 자가(3.73점) 거주자가 공공임대(3.51)점)나 기타 거주자(3.48점)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p=.000). 자녀가 3명 이상(3.72점)인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도가 자녀가 없거나(3.48점) 1명(3.51점)인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p=.001),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았다(p=.000).

〈표 Ⅲ-3-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3.47	.669	12.073	.001	a<b
	여성(b)	613	3.62	.681			
연령	20대 이하(a)	51	3.37	.666	7.127	.000	a,c,d<e
	30대(b)	76	3.55	.704			
	40(c)	196	3.46	.608			
	50대(d)	401	3.50	.681			
	60대 이상(e)	322	3.72	.690			
학력	중졸 이하(a)	408	3.66	.728	8.383	.000	b,c<a
	고졸(b)	494	3.49	.645			
	대졸 이상(c)	143	3.49	.615			
혼인 상태	미혼(a)	248	3.42	.669	10.234	.000	a<b,d c<d
	기혼(b)	271	3.64	.678			
	이혼(c)	404	3.52	.665			
	사별(d)	123	3.79	.680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3.73	.664	3.572	.007	d,e<a
	전세(b)	105	3.48	.652			
	월세(c)	358	3.57	.668			
	공공임대(d)	302	3.51	.703			
	기타(e)	133	3.48	.650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2	3.55	.715	2.533	.080	
	2명(b)	269	3.63	.650			
	3명 이상(c)	285	3.51	.639			
자녀 수	0명(a)	355	3.48	.695	5.699	.001	a,b<d
	1명(b)	212	3.51	.659			
	2명(c)	324	3.61	.671			
	3명 이상(d)	155	3.72	.658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3.54	.731	6.472	.000	b<d
	조건부수급자(b)	546	3.48	.672			
	차상위가구(c)	328	3.68	.660			
	해당 없음(d)	58	3.63	.660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6	3.55	.674	.693	.405	
	시장진입형(b)	310	3.58	.693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3	3.54	.680	2.022	.060	
	1년 이상~2년 미만(b)	196	3.59	.690			
	2년 이상~3년 미만(c)	168	3.56	.753			
	3년 이상~4년 미만(d)	137	3.42	.618			
	4년 이상~5년 미만(e)	71	3.57	.678			
	5년 이상~6년 미만(f)	39	3.59	.570			
	6년 이상(g)	82	3.74	.638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6	3.55	.671	.637	.425	
	중단 있었음(b)	260	3.59	.705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3.63	.629	7.402	.000	b<c,d
	나쁜 편이다(b)	452	3.46	.656			
	좋은 편이다(c)	506	3.62	.682			
	아주 좋다(d)	46	3.82	.777			

3) 미래지향의 차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미래지향의 관계도 앞서 살펴본 직무만족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Ⅲ-3-13〉 참조). 자활사업 참여자의 미래지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수, 자활유형, 주관적 건강이었다.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가 여성(3.36점)일 경우 남성(3.25점)보다 미래지향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004). 연령으로는 참여자가 50대(3.39점) 인 경우 20대 이하(3.06점)나 30대(3.12점)보다 미래지향 점수가 좀 더 높았다(p=.000).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미래지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 미혼(3.16점)이나 기혼(3.31점)보다는 이혼(3.38점)이나 사별(3.40점)의 미래지향이 더 강했다(p=.000). 자녀가 2명 있는 경우(3.39점) 자녀가 없는 경우(3.23점)에 비해 미래지향이 더 강했으며(p=.011), 소득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시장진입형 자활사업(3.41점) 참여자가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 참여자(3.27점)에 비해 미래지향 점수가 더 높았다(p=.001). 끝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성향도 그에 비례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003).

〈표 Ⅲ-3-13〉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미래지향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3.25	.619	8.312	.004	a<b
	여성(b)	613	3.36	.622			
연령	20대 이하(a)	51	3.06	.599	5.337	.000	a,b<d
	30대(b)	76	3.12	.525			
	40(c)	196	3.30	.594			
	50대(d)	401	3.39	.626			
	60대 이상(e)	322	3.31	.645			
학력	중졸 이하(a)	408	3.23	.618	8.345	.000	a,b<c
	고졸(b)	494	3.33	.638			
	대졸 이상(c)	143	3.48	.550			
혼인 상태	미혼(a)	248	3.16	.571	7.293	.000	a<c,d b<d
	기혼(b)	271	3.31	.637			
	이혼(c)	404	3.38	.618			
	사별(d)	123	3.40	.664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3.37	.606	.605	.659	
	전세(b)	105	3.29	.645			
	월세(c)	358	3.29	.613			
	공공임대(d)	302	3.28	.639			
	기타(e)	133	3.31	.622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2	3.31	.649	.498	.608	
	2명(b)	269	3.34	.602			
	3명 이상(c)	285	3.29	.598			
자녀 수	0명(a)	355	3.23	.623	3.733	.011	a<c
	1명(b)	212	3.31	.593			
	2명(c)	324	3.39	.623			
	3명 이상(d)	155	3.35	.648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3.24	.617	.950	.416	
	조건부수급자(b)	546	3.32	.620			
	차상위가구(c)	328	3.33	.630			
	해당 없음(d)	58	3.25	.083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6	3.27	.626	11.120	.001	a<b
	시장진입형(b)	310	3.41	.606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3	3.34	.609	1.620	.138	
	1년 이상~2년 미만(b)	196	3.33	.620			
	2년 이상~3년 미만(c)	168	3.30	.641			
	3년 이상~4년 미만(d)	137	3.24	.578			
	4년 이상~5년 미만(e)	71	3.33	.755			
	5년 이상~6년 미만(f)	39	3.08	.551			
	6년 이상(g)	82	3.39	.622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6	3.33	.595	1.632	.202	
	중단 있었음(b)	260	3.27	.701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3.19	.736	4.738	.003	b<c
	나쁜 편이다(b)	452	3.24	.580			
	좋은 편이다(c)	506	3.37	.633			
	아주 좋다(d)	46	3.46	.743			

4) 우울감의 차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Ⅲ-3-14〉 참조). 우울감 점수는 총 20문항이며 최소 0점 그리고 최대 60점이다. 그 결과,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유형 그리고 주관적 건강만 우울감의 차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을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39). 또한 차상위가구 참여자(16.61점)의 우울수준이 일반수급자(20.90점)나 조건부수급자(19.10점)보다 낮았다(p=.002). 끝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이 매우 나쁘거나(25.33점) 나쁜 편(21.24점)인 경우에도 좋은 편(15.49점)이거나 매우 좋은 경우(15.76점)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p=.000).

〈표 Ⅲ-3-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18.23	11.387	.106	.745	
	여성(b)	612	18.48	12.509			
연령	20대 이하(a)	51	20.67	13.236	2.528	.039	e<d
	30대(b)	76	20.17	12.363			
	40(c)	195	18.12	12.803			
	50대(d)	401	19.08	12.136			
	60대 이상(e)	322	16.86	11.056			
학력	중졸 이하(a)	407	18.40	12.135	1.550	.213	
	고졸(b)	494	18.82	12.073			
	대졸 이상(c)	143	16.80	11.720			
혼인 상태	미혼(a)	248	18.46	11.276	2.255	.080	
	기혼(b)	271	17.94	11.997			
	이혼(c)	404	19.28	12.770			
	사별(d)	122	16.16	11.011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17.46	12.051	1.720	.143	
	전세(b)	105	18.80	11.814			
	월세(c)	358	18.17	12.763			
	공공임대(d)	301	19.65	11.955			
	기타(e)	133	16.74	10.250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2	18.60	12.115	.421	.657	
	2명(b)	268	17.79	12.044			
	3명 이상(c)	285	18.53	11.974			
자녀 수	0명(a)	355	18.17	11.845	.141	.935	
	1명(b)	212	18.80	12.061			
	2명(c)	323	18.42	12.532			
	3명 이상(d)	155	18.15	11.578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20.90	12.563	5.138	.002	c<a,b
	조건부수급자(b)	545	19.10	12.379			
	차상위가구(c)	328	16.61	11.081			
	해당 없음(d)	58	16.64	11.901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5	18.79	11.878	2.910	.088	
	시장진입형(b)	310	17.40	12.418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a)	353	19.32	12.700	.839	.540	
	1년 이상~2년 미만(b)	196	18.16	12.401			
	2년 이상~3년 미만(c)	167	17.68	11.555			
	3년 이상~4년 미만(d)	137	18.76	11.659			
	4년 이상~5년 미만(e)	71	17.51	11.445			
	5년 이상~6년 미만(f)	39	16.28	10.237			
	6년 이상(g)	82	17.37	11.296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a)	786	18.67	12.357	1.857	.173	
	중단 있었음(b)	259	17.49	11.047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25.33	12.758	25.183	.000	c,d<a c,d<b
	나쁜 편이다(b)	451	21.24	12.108			
	좋은 편이다(c)	506	15.49	11.059			
	아주 좋다(d)	46	15.76	12.444			

5)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미래지향, 우울감의 관계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 〈표 Ⅲ-3-15〉와 같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셀은 두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또한 해당 변수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한다(최고값과 나머지가 값이 거의 같을 경우 동그라미가 둘 이상일 수 있음).

〈표 Ⅲ-3-15〉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 요약

구분		자기인식 및 정서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미래지향	우울감
성별	남성				
	여성		○	○	
연령	20대 이하				
	30대				
	40	○			
	50대	○		○	●
	60대 이상	○	○		

구분		자기인식 및 정서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미래지향	우울감
학력	중졸 이하		○		
	고졸				
	대졸 이상		○	○	
혼인 상태	미혼				
	기혼		○		
	이혼	○		○	
	사별	○	○	○	
주거점유 형태	자가		○		
	전세				
	월세				
	공공임대				
	기타				
가구원수 (본인 포함)	1명				
	2명				
	3명 이상				
자녀수	0명				
	1명	○			
	2명	○			
	3명 이상		○	○	
기초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가구				
	해당 없음		○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	
자활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년 이상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				
	중단 있었음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좋은 편이다	○	○	○	
	아주 좋다		○		

주: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3.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건전성 차이

1) 재무비율의 차이

(1) 가계수지비율(1.0 미만)의 차이

응답자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수지비율을 살펴보았다(〈표 Ⅲ-3-16〉 참조). 가이드라인은 1.0 미만으로서, 충족은 가계 흑자, 불충족은 가계적자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은 우선 응답자가 남성(71.8%)인 경우에 여성(65.4%)인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30).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을 보면 20대 이하(80.4%)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60대 이상(71.1%)으로 연령대가 낮거나 높은 집단에서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p=.070). 학력은 학력수준에 따라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20). 응답자가 중졸이하(72.5%)일 경우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이 가장 높았고, 고졸(64.0%) 그리고 대졸이상(69.0%)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가계수지비율 충족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76.1%), 이혼(71.5%), 사별(69.9%)에 비해 기혼(54.6%)의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점유 형태에 따른 가계수지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661). 다음으로 가구원수와 가계수지비율의 관계를 보면,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원수가 1명(단독가구)일 경우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은 77.8%였으나, 3명 이상일 경우 54.2%로 크게 낮아졌다(p=.000). 이러한 경향은 자녀수와 가계수지비율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자녀가 0명(무자녀)인 경우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은 76.3%로 높았으나, 1명일 경우 66.0%, 2명인 경우 66.3%, 3명 이상인 경우 55.8%로 크게 낮아졌다(p=.000). 참여자의 기초생활수급 유형에 따른 가계수지비율의 충족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54), 자활사업 참여유형이 시장진입형(74.0%)인 경우 사회서비스형(65.5%)인 경우에 비해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이 높았다(p=.007). 자활사업 참여기간(p=.661)과 자활사업 참여 중단 경험 여부(p=.225), 그리고 주관적 건강수준(p=.930)에 따른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자활사업 참여자가 남성, 저학력, 무배우자, 단독가구(소가구), 무자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소속일수록 가계수지비율 가이드라인 1.0 미만(가계흑자)을 충족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p<.05$).

〈표 Ⅲ-3-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수지비율(1.0 미만)

구분		N	가계수지비율<1.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성별	남성	432(100.0)	122(28.2)	310(71.8)	4.689	.030
	여성	613(100.0)	212(34.6)	401(65.4)		
연령	20대 이하(a)	51(100.0)	10(19.6)	41(80.4)	8.671	.070
	30대(b)	75(100.0)	26(34.7)	49(65.3)		
	40(c)	197(100.0)	75(38.1)	122(61.9)		
	50대(d)	400(100.0)	130(32.5)	270(67.5)		
	60대 이상(e)	322(100.0)	93(28.9)	229(71.1)		
학력	중졸 이하	408(1000)	112(27.5)	296(72.5)	7.640	.022
	고졸	494(100.0)	178(36.0)	316(64.0)		
	대졸 이상	142(100.0)	44(31.0)	98(69.0)		
혼인 상태	미혼	247(100.0)	59(23.9)	188(76.1)	32.340	.000
	기혼	271(100.0)	123(45.4)	148(54.6)		
	이혼	404(100.0)	115(28.5)	289(71.5)		
	사별	123(100.0)	37(30.1)	86(69.9)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47(100.0)	39(26.5)	108(73.5)	2.408	.661
	전세	104(100.0)	34(32.7)	70(67.3)		
	월세	357(100.0)	119(33.3)	238(66.7)		
	공공임대	303(100.0)	99(32.7)	204(67.3)		
	기타	133(100.0)	42(31.6)	91(68.4)		
가구 원수	1명	491(100.0)	109(22.2)	382(77.8)	47.912	.000
	2명	268(100.0)	94(35.1)	174(64.9)		
	3명 이상	286(100.0)	131(45.8)	155(54.2)		
자녀 수	0명	354(100.0)	84(23.7)	270(76.3)	22.695	.000
	1명	212(100.0)	72(34.0)	140(66.0)		
	2명	323(100.0)	109(33.7)	214(66.3)		
	3명 이상	156(100.0)	69(44.2)	87(55.8)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가계수지비율<1.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기초생활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14(100.0)	43(37.7)	71(62.3)	7.630	.054
	조건부수급자	545(100.0)	187(34.3)	358(65.7)		
	차상위가구	328(100.0)	89(27.1)	239(72.9)		
	해당 없음	58(100.0)	15(25.9)	43(74.1)		
자활유형	사회서비스형	737(100.0)	254(34.5)	483(65.5)	7.200	.007
	시장진입형	308(100.0)	80(26.0)	228(74.0)		
자활사업참여기간	1년 미만	354(100.0)	113(31.9)	241(68.1)	4.493	.610
	1년 이상~2년 미만	196(100.0)	66(33.7)	130(66.3)		
	2년 이상~3년 미만	167(100.0)	57(34.1)	110(65.9)		
	3년 이상~4년 미만	136(100.0)	41(30.1)	95(69.9)		
	4년 이상~5년 미만	71(100.0)	16(22.6)	55(77.5)		
	5년 이상~6년 미만	39(100.0)	15(38.5)	24(61.5)		
	6년 이상	82(100.0)	26(31.7)	56(68.3)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	785(100.0)	243(31.0)	542(69.0)	1.469	.225
	중단 있었음	260(100.0)	91(35.0)	169(65.0)		
주관적건강	매우 나쁘다	42(100.0)	14(33.3)	28(66.7)	.447	.930
	나쁜 편이다	452(100.0)	147(32.5)	305(67.5)		
	좋은 편이다	505(100.0)	157(31.1)	157(31.1)		
	아주 좋다	46(100.0)	16(34.8)	16(34.8)		

(2) 가계수지비율(0.9 미만)의 차이

다음으로 가계수지비율의 충족률을 좀 더 보수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09)을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 〈표 Ⅲ-3-1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결과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표 Ⅲ-3-16〉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가이드라인 1.0 미만 적용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이 높았으며(p=.018), 무배우자일수록(p=.000), 단독가구일수록(p=.000), 자녀가 없거나 적을수록(p=.001),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이 높았다. 다만 연령이 높거나 낮을수록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이 높은 것(p=.004)으로 확인된 점과 성별(p=.326), 자활사업 참여유형(p=.077)에 따른 가계수지비율 충족률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앞선 분석과 다른 결과이다.

〈표 Ⅲ-3-17〉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수지비율(.9 미만)

구분		N	가계수지비율<0.9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성별	남성	432(100.0)	232(53.7)	200(46.3)	.965	.326
	여성	613(100.0)	348(56.8)	265(43.2)		
연령	20대 이하(a)	51(100.0)	20(39.2)	31(60.8)	15.245	.004
	30대(b)	75(100.0)	44(58.7)	31(41.3)		
	40(c)	197(100.0)	123(62.4)	74(37.6)		
	50대(d)	400(100.0)	233(58.3)	37.6(41.8)		
	60대 이상(e)	322(100.0)	160(49.7)	167(50.3)		
학력	중졸 이하	408(100.0)	208(51.0)	200(49.0)	7.995	.018
	고졸	494(100.0)	281(56.9)	213(43.1)		
	대졸 이상	142(100.0)	91(64.1)	51(35.9)		
혼인 상태	미혼	247(100.0)	109(44.1)	138(55.9)	20.783	.000
	기혼	271(100.0)	171(63.1)	100(36.9)		
	이혼	404(100.0)	235(58.2)	169(41.8)		
	사별	123(100.0)	65(52.8)	58(47.2)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47(100.0)	68(46.3)	79(53.7)	9.246	.055
	전세	104(100.0)	54(51.9)	50(48.1)		
	월세	357(100.0)	211(59.1)	146(40.9)		
	공공임대	303(100.0)	177(58.4)	126(41.6)		
	기타	133(100.0)	69(51.9)	64(48.1)		
가구 원수	1명	491(100.0)	231(47.0)	260(53.0)	33.248	.000
	2명	268(100.0)	154(57.5)	114(42.5)		
	3명 이상	286(100.0)	195(68.2)	91(31.8)		
자녀 수	0명	354(100.0)	166(46.9)	188(53.1)	17.246	.001
	1명	212(100.0)	127(59.9)	85(40.1)		
	2명	323(100.0)	188(58.2)	135(41.8)		
	3명 이상	156(100.0)	99(63.5)	57(36.5)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14(100.0)	68(59.6)	46(40.4)	6.967	.073
	조건부수급자	545(100.0)	311(57.1)	234(42.9)		
	차상위가구	328(100.0)	164(50.0)	164(50.0)		
	해당 없음	58(100.0)	37(63.8)	21(36.2)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가계수지비율<0.9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	737(100.0)	422(57.3)	315(42.7)	3.125	.077
	시장진입형	308(100.0)	158(51.3)	150(48.7)		
자활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	354(100.0)	207(58.5)	147(41.5)	8.189	.225
	1년 이상~2년 미만	196(100.0)	113(57.7)	83(42.3)		
	2년 이상~3년 미만	167(100.0)	93(55.7)	74(44.3)		
	3년 이상~4년 미만	136(100.0)	69(50.7)	67(49.3)		
	4년 이상~5년 미만	71(100.0)	32(45.1)	39(54.9)		
	5년 이상~6년 미만	39(100.0)	25(45.1)	14(35.9)		
	6년 이상	82(100.0)	41(50.0)	41(50.0)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	785(100.0)	435(55.4)	350(44.6)	.010	.920
	중단 있었음	260(100.0)	145(55.8)	115(44.2)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	42(100.0)	28(66.7)	14(33.3)	5.373	.146
	나쁜 편이다	452(100.0)	257(56.9)	195(43.1)		
	좋은 편이다	505(100.0)	275(54.5)	230(45.5)		
	아주 좋다	46(100.0)	20(43.5)	26(56.5)		

(3) 유동성비율(200% 이상)의 차이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계 유동성간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표 Ⅲ-3-18)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유동성비율 가이드라인 200% 충족률이 모든 집단에서 전체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가 남성(9.9%)보다 여성인 경우(14.1%), 주거점유형태가 월세(7.2%)나 전세(10.6%)보다는 자가(14.4%), 공공임대(16.3%), 기타(16.3%)인 경우 충족률이 높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가계수지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에 대한 분석결과와 다소 다른 내용으로서, 각각의 재무비율 충족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재무비율의 개선을 위한 접근도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표 Ⅲ-3-18〉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유동성비율(200% 이상)

구분		N	유동성비율≥20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성별	남성	424(100.0)	382(90.1)	42(9.9)	4.132	.042
	여성	608(100.0)	522(85.9)	86(14.1)		
연령	20대 이하(a)	47(100.0)	44(93.6)	3(6.4)	1.870	.760
	30대(b)	74(100.0)	64(86.5)	10(13.5)		
	40(c)	195(100.0)	169(86.7)	26(13.3)		
	50대(d)	395(100.0)	347(87.8)	48(12.2)		
	60대 이상(e)	321(100.0)	280(87.2)	41(12.8)		
학력	중졸 이하	403(100.0)	356(88.3)	47(11.7)	1.819	.403
	고졸	487(100.0)	420(86.2)	67(13.8)		
	중졸 이하 이상	141(100.0)	127(90.1)	14(9.9)		
혼인 상태	미혼	240(100.0)	209(87.1)	31(12.9)	4.564	.207
	기혼	267(100.0)	238(89.1)	29(10.9)		
	이혼	403(100.0)	357(88.6)	46(11.4)		
	사별	122(100.0)	100(82.0)	22(18.0)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46(100.0)	125(85.6)	21(14.4)	16.126	.003
	전세	104(100.0)	93(89.4)	11(10.6)		
	월세	349(100.0)	324(92.8)	25(7.2)		
	공공임대	300(100.0)	251(83.7)	49(16.3)		
	기타	132(100.0)	110(83.3)	22(16.7)		
가구 원수	1명	486(100.0)	430(88.5)	56(11.5)	2.380	.304
	2명	265(100.0)	225(84.9)	40(15.1)		
	3명 이상	281(100.0)	249(88.6)	32(11.4)		
자녀 수	0명	346(100.0)	306(88.4)	40(11.6)	5.110	.164
	1명	211(100.0)	187(88.6)	24(11.4)		
	2명	320(100.0)	270(84.4)	50(15.6)		
	3명 이상	155(100.0)	141(91.0)	14(9.0)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10(100.0)	97(88.2)	13(11.8)	4.935	.177
	조건부수급자	539(100.0)	482(89.4)	57(10.6)		
	차상위가구	325(100.0)	274(84.3)	51(15.7)		
	해당 없음	58(100.0)	51(87.9)	7(12.1)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유동성비율≥20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	726(100.0)	639(88.0)	87(12.0)	.397	.529
	시장진입형	306(100.0)	265(86.6)	41(13.4)		
자활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	348(100.0)	308(88.5)	40(11.5)	5.840	.441
	1년 이상~2년 미만	195(100.0)	173(88.7)	22(11.3)		
	2년 이상~3년 미만	163(100.0)	147(90.2)	16(9.8)		
	3년 이상~4년 미만	135(100.0)	118(87.4)	17(12.6)		
	4년 이상~5년 미만	71(100.0)	59(83.1)	12(16.9)		
	5년 이상~6년 미만	38(100.0)	32(84.2)	6(15.8)		
	6년 이상	82(100.0)	67(81.7)	15(18.3)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	774(100.0)	685(88.5)	89(11.5)	2.331	.127
	중단 있었음	258(100.0)	219(84.9)	39(15.1)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	40(100.0)	36(90.0)	4(10.0)	.715	.870
	나쁜 편이다	445(100.0)	393(88.3)	52(11.7)		
	좋은 편이다	502(100.0)	436(86.9)	66(13.1)		
	아주 좋다	45(100.0)	39(86.7)	6(13.3)		

(4) 월저축률(10% 이상)의 차이

월가구지출의 10%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Ⅲ-3-19〉 참조).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성별, 연령,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한 참여자가 남성(20.6%)보다는 여성(26.7%)인 경우 월저축률 충족률(≥10%)이 높았고(p=.014), 연령이 20대 이하(13.7%)인 경우 저축률이 가장 낮았고 30대인 경우(34.7%) 가장 높았다(p=.050). 또한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1년 미만(18.9%)인 경우에도 저축률이 낮았다(p=.008).

〈표 Ⅲ-3-19〉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월저축률(10% 이상) 충족률

구분		N	월저축률≥1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성별	남성	432(100.0)	343(79.4)	89(20.6)	5.160	.014
	여성	614(100.0)	450(73.3)	164(26.7)		

구분		N	월저축률≥1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연령	20대 이하(a)	51(100.0)	44(86.3)	7(13.7)	9.491	.050
	30대(b)	75(100.0)	49(65.3)	26(34.7)		
	40(c)	197(100.0)	146(74.1)	51(25.9)		
	50대(d)	401(100.0)	314(78.3)	87(21.7)		
	60대 이상(e)	322(100.0)	240(74.5)	82(25.5)		
학력	중졸 이하	408(100.0)	318(77.9)	90(22.1)	1.786	.409
	고졸	494(100.0)	369(74.7)	125(25.3)		
	대졸 이상	143(100.0)	105(73.4)	38(26.6)		
혼인 상태	미혼	247(100.0)	190(76.9)	57(23.1)	.437	.933
	기혼	271(100.0)	207(76.4)	64(23.6)		
	이혼	405(100.0)	303(74.8)	102(25.2)		
	사별	123(100.0)	93(75.6)	30(24.4)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47(100.0)	111(75.5)	36(24.5)	2.747	.601
	전세	105(100.0)	79(75.2)	26(24.8)		
	월세	358(100.0)	275(76.8)	83(23.2)		
	공공임대	303(100.0)	222(73.3)	81(26.7)		
	기타	132(100.0)	106(80.3)	26(19.7)		
가구 원수	1명	492(100.0)	374(76.0)	118(24.0)	2.834	.242
	2명	269(100.0)	195(72.5)	74(27.5)		
	3명 이상	285(100.0)	224(78.6)	61(21.4)		
자녀 수	0명	354(100.0)	266(75.1)	88(24.9)	1.746	.627
	1명	212(100.0)	168(79.2)	44(20.8)		
	2명	324(100.0)	243(75.0)	81(25.0)		
	3명 이상	156(100.0)	116(74.4)	40(25.6)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14(100.0)	92(80.7)	22(19.3)	4.797	.187
	조건부수급자	547(100.0)	422(77.1)	125(22.9)		
	차상위가구	327(100.0)	235(71.9)	92(28.1)		
	해당 없음	58(100.0)	44(75.9)	253(24.2)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	736(100.0)	569(77.3)	167(22.7)	3.036	.081
	시장진입형	310(100.0)	224(72.3)	86(27.7)		

구분		N	월저축률≥1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	354(100.0)	287(81.1)	67(18.9)	17.488	.008
	1년 이상~2년 미만	196(100.0)	147(75.0)	49(25.0)		
	2년 이상~3년 미만	168(100.0)	109(64.9)	59(35.1)		
	3년 이상~4년 미만	136(100.0)	102(75.0)	34(25.0)		
	4년 이상~5년 미만	71(100.0)	52(73.2)	19(26.8)		
	5년 이상~6년 미만	39(100.0)	31(79.5)	8(20.5)		
	6년 이상	82(100.0)	65(79.3)	17(20.7)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	786(100.0)	591(75.2)	195(24.8)	.667	.414
	중단 있었음	260(100.0)	202(77.7)	58(22.3)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	42(100.0)	33(78.6)	9(21.4)	1.901	.593
	나쁜 편이다	452(100.0)	351(77.7)	101(22.3)		
	좋은 편이다	506(100.0)	375(74.1)	131(25.9)		
	아주 좋다	46(100.0)	34(73.9)	12(26.1)		

(5) 총부채상환비율(40% 미만)의 차이

〈표 Ⅲ-3-20〉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총부채상환비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비율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변수들 중에서 총부채상환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혼인상태와 주거점유형태 2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총부채상환비율 충족률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변별력이 약해진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상환비율 40%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흔치 않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가이드라인 40%는 너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혼인상태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총부채상환비율의 관계를 보면, 응답자가 이혼(93.1%)한 경우 미혼(97.1)이나 기혼(97.4) 등의 집단보다 총부채상환비율 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3). 결혼생활을 통해 늘어난 부채가 이혼을 통해 심화되거나 이혼을 통해 상환부담이 커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점유형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거주 응답자의 총부채상환비율 충족률(92.7%)이 특별히 낮았다(p=.040).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이는 공공민간임대 등의 높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표 Ⅲ-3-20〉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40% 미만)

구분		N	총부채상환비율<4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성별	남성	430(100.0)	17(4.0)	413(96.0)	.236	.627
	여성	612(100.0)	28(4.6)	584(95.4)		
연령	20대 이하(a)	49(100.0)	2(4.1)	47(95.9)	.855	.931
	30대(b)	74(100.0)	2(2.7)	72(97.3)		
	40(c)	196(100.0)	10(5.1)	186(94.9)		
	50대(d)	401(100.0)	18(4.5)	383(95.5)		
	60대 이상(e)	322(100.0)	13(4.0)	309(96.0)		
학력	중졸 이하	408(100.0)	13(3.2)	395(96.8)	2.824	.244
	고졸	491(100.0)	23(4.7)	468(95.3)		
	대졸 이상	142(100.0)	9(6.3)	133(93.7)		
혼인 상태	미혼	244(100.0)	7(2.9)	237(97.1)	10.839	.013
	기혼	270(100.0)	7(2.6)	263(97.4)		
	이혼	405(100.0)	28(6.9)	377(93.1)		
	사별	123(100.0)	3(2.4)	120(97.6)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47(100.0)	3(2.0)	144(98.0)	10.052	.040
	전세	105(100.0)	5(4.8)	100(95.2)		
	월세	335(100.0)	11(3.1)	344(96.9)		
	공공임대	303(100.0)	22(7.3)	281(92.7)		
	기타	132(100.0)	4(3.0)	128(97.0)		
가구 원수	1명	492(100.0)	23(4.7)	469(95.3)	.368	.832
	2명	267(100.0)	10(3.7)	257(96.3)		
	3명 이상	283(100.0)	12(4.2)	271(95.8)		
자녀 수	0명	351(100.0)	11(3.1)	340(96.9)	3.228	.358
	1명	212(100.0)	11(5.2)	201(94.8)		
	2명	324(100.0)	18(5.6)	306(94.4)		
	3명 이상	155(100.0)	5(3.2)	150(96.8)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13(100.0)	7(6.2)	106(93.8)	3.941	.268
	조건부수급자	544(100.0)	22(4.0)	522(96.0)		
	차상위가구	327(100.0)	16(4.9)	311(95.1)		
	해당 없음	58(100.0)	0(0.0)	58(100.0)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총부채상환비율<4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	732(100.0)	31(4.2)	701(95.8)	.042	.477
	시장진입형	310(100.0)	14(4.5)	296(95.5)		
자활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	351(100.0)	17(4.8)	334(95.2)	5.165	.523
	1년 이상~2년 미만	195(100.0)	11(5.6)	184(94.4)		
	2년 이상~3년 미만	168(100.0)	9(5.4)	159(94.6)		
	3년 이상~4년 미만	136(100.0)	3(2.2)	133(97.8)		
	4년 이상~5년 미만	71(100.0)	3(4.2)	68(95.8)		
	5년 이상~6년 미만	39(100.0)	1(2.6)	38(97.4)		
	6년 이상	82(100.0)	1(1.2)	81(98.8)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	782(100.0)	35(4.5)	747(95.5)	.728	.409
	중단 있었음	260(100.0)	10(3.8)	250(96.2)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	42(100.0)	1(2.4)	41(97.6)	1.022	.796
	나쁜 편이다	451(100.0)	21(4.7)	430(95.3)		
	좋은 편이다	503(100.0)	22(4.4)	481(95.6)		
	아주 좋다	46(100.0)	1(2.2)	45(97.8)		

(6) 총부채상환비율(15% 미만)의 차이

〈표 Ⅲ-3-21〉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부채상환비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부채상환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변수는 앞서 살펴본 〈표 Ⅲ-3-18〉의 결과와 다소 달랐다. 혼인상태 대신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주거점유형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먼저 응답자의 학력이 중졸이하(95.1%)일수록 총부채상환비율이 가이드라인(주택담보대출 제외)인 15% 미만을 충족하는 경향이 높았다(p=.000). 주거점유형태가 공공임대인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다(p=.032).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혼인상태와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가이드라인 충족률(88.6%)로 가장 낮았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가이드라인 충족률은 높아졌다.

〈표 Ⅲ-3-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15% 미만)

구분		N	총부채상환비율〈15%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성별	남성	421(100.0)	39(9.3)	382(90.7)	.398	.301
	여성	602(100.0)	49(8.1)	553(91.9)		
연령	20대 이하(a)	49(100.0)	2(4.1)	47(95.9)	4.050	.399
	30대(b)	72(100.0)	6(8.3)	66(91.7)		
	40(c)	192(100.0)	22(11.5)	170(88.5)		
	50대(d)	393(100.0)	35(89)	358(91.1)		
	60대 이상(e)	317(100.0)	23(7.3)	294(92.7)		
학력	중졸 이하	405(100.0)	20(4.9)	385(95.1)	11.928	.003
	고졸	480(100.0)	51(10.6)	429(89.4)		
	대졸 이상	137(100.0)	17(12.4)	120(87.6)		
혼인 상태	미혼	243(100.0)	14(5.8)	229(94.2)	7.242	.065
	기혼	265(100.0)	21(7.9)	244(92.1)		
	이혼	394(100.0)	45(11.4)	349(88.6)		
	사별	121(100.0)	8(6.6)	113(93.4)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45(100.0)	5(3.4)	140(96.6)	10.523	.032
	전세	103(100.0)	7(6.8)	96(93.2)		
	월세	351(100.0)	31(8.8)	320(91.2)		
	공공임대	296(100.0)	36(12.2)	260(87.8)		
	기타	128(100.0)	9(7.0)	119(93.0)		
가구 원수	1명	489(100.0)	41(8.4)	448(91.6)	1.560	.458
	2명	261(100.0)	19(7.3)	242(92.7)		
	3명 이상	273(100.0)	28(10.3)	245(89.7)		
자녀 수	0명	349(100.0)	23(6.6)	326(93.4)	2.837	.417
	1명	208(100.0)	19(9.1)	189(90.9)		
	2명	317(100.0)	31(9.8)	286(90.2)		
	3명 이상	149(100.0)	15(10.1)	134(9.9)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11(100.0)	9(8.1)	102(91.9)	.047	.997
	조건부수급자	535(100.0)	46(8.6)	489(91.4)		
	차상위가구	319(100.0)	28(8.8)	291(91.2)		
	해당 없음	58(100.0)	5(8.6)	53(91.4)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총부채상환비율<15%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	716(100.0)	62(8.7)	654(91.3)	.010	.514
	시장진입형	307(100.0)	26(8.5)	281(91.5)		
자활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	344(100.0)	35(10.2)	309(89.8)	12.219	.057
	1년 이상~2년 미만	191(100.0)	24(12.6)	167(78.4)		
	2년 이상~3년 미만	165(100.0)	12(7.3)	153(92.7)		
	3년 이상~4년 미만	133(100.0)	9(6.8)	124(93.2)		
	4년 이상~5년 미만	70(100.0)	5(7.1)	65(92.9)		
	5년 이상~6년 미만	39(100.0)	2(5.1)	37(94.9)		
	6년 이상	81(100.0)	1(1.2)	80(98.8)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	767(100.0)	61(8.0)	706(92.0)	1.642	.125
	중단 있었음	256(100.0)	27(10.5)	229(89.5)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	42(100.0)	2(4.8)	40(95.2)	2.581	.461
	나쁜 편이다	441(100.0)	43(9.8)	398(90.2)		
	좋은 편이다	495(100.0)	41(8.3)	454(91.7)		
	아주 좋다	45(100.0)	2(4.4)	43(95.6)		

(7) 고정지출비율(60% 이하)의 차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정지출비율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정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건전하다고 본다. 〈표 Ⅲ-3-22〉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76.5%)가 고정지출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p=.001),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가 기혼(64.1%) 또는 이혼(69.4%)일수록 고정지출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031). 가구원수는 자녀수도 많을수록 고정지출비율이 높아지고(p=.001), 자녀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p=.002).

〈표 Ⅲ-3-2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고정지출비율(60% 이하)

구분		N	고정지출비율≤6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성별	남성	433(100.0)	130(30.0)	303(70.0)	.000	.998
	여성	613(100.0)	184(30.0)	429(70.0)		
연령	20대 이하(a)	51(100.0)	13(25.5)	38(74.5)	5.610	.230
	30대(b)	75(100.0)	22(29.3)	53(70.7)		
	40(c)	197(100.0)	69(35.0)	128(65.0)		
	50대(d)	401(100.0)	126(31.4)	275(68.6)		
	60대 이상(e)	322(100.0)	84(26.1)	238(73.9)		
학력	중졸 이하	408(100.0)	96(23.5)	312(76.5)	13.286	.001
	고졸	494(100.0)	170(34.4)	324(65.6)		
	대졸 이상	143(100.0)	47(32.9)	96(67.1)		
혼인 상태	미혼	248(100.0)	62(25.0)	186(75.0)	8.885	.031
	기혼	270(100.0)	97(35.9)	173(64.1)		
	이혼	405(100.0)	124(30.6)	281(69.4)		
	사별	123(100.0)	31(25.2)	92(74.8)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47(100.0)	44(29.9)	103(70.1)	4.028	.402
	전세	105(100.0)	38(36.2)	67(63.8)		
	월세	357(100.0)	100(28.0)	257(72.0)		
	공공임대	303(100.0)	97(32.0)	206(68.0)		
	기타	133(100.0)	35(26.3)	98(73.7)		
가구 원수	1명	492(100.0)	124(25.2)	368(74.8)	13.874	.001
	2명	269(100.0)	82(30.5)	187(69.5)		
	3명 이상	285(100.0)	108(37.9)	177(62.1)		
자녀 수	0명	355(100.0)	80(22.5)	275(77.5)	15.113	.002
	1명	212(100.0)	67(31.6)	145(68.4)		
	2명	324(100.0)	112(34.6)	212(65.4)		
	3명 이상	155(100.0)	55(35.5)	100(64.5)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14(100.0)	31(27.2)	83(72.8)	1.141	.767
	조건부수급자	546(100.0)	169(31.0)	377(69.0)		
	차상위가구	328(100.0)	99(30.2)	229(69.8)		
	해당 없음	58(100.0)	15(25.9)	43(74.1)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고정지출비율≤6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	736(100.0)	221(30.0)	515(70.0)	.000	.993
	시장진입형	310(100.0)	93(30.0)	217(30.0)		
자활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	353(100.0)	112(31.7)	241(68.3)	1.686	.946
	1년 이상~2년 미만	196(100.0)	61(31.1)	135(68.9)		
	2년 이상~3년 미만	168(100.0)	50(29.8)	118(70.2)		
	3년 이상~4년 미만	137(100.0)	38(27.7)	99(72.3)		
	4년 이상~5년 미만	71(100.0)	19(26.8)	52(73.2)		
	5년 이상~6년 미만	39(100.0)	10(25.6)	29(74.4)		
	6년 이상	82(100.0)	24(29.3)	58(70.7)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	786(100.0)	243(30.9)	543(69.1)	1.211	.271
	중단 있었음	260(100.0)	71(27.3)	189(72.7)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	42(100.0)	10(23.8)	32(76.2)	2.558	.465
	나쁜 편이다	453(100.0)	137(30.2)	316(69.8)		
	좋은 편이다	505(100.0)	157(31.1)	348(68.9)		
	아주 좋다	46(100.0)	10(21.7)	36(78.3)		

2) 재무스트레스의 차이

총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재무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Ⅲ-3-23〉 참조). 그 결과 재무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특성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수, 기초생활수급유형, 주관적 건강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령이 60대 이상(2.37점)인 경우가 40대(2.69점)나 50대(2.69점)에 비해 재무스트레스가 적었다(p=.000). 60대 이후에는 자녀양육 등과 관련한 재무부담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력은 중졸 이하(2.42점)의 재무스트레스가 가장 적었고, 그 다음은 고졸(2.66점), 그리고 대졸 이상(2.70점)의 순이었다(p=.002).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연령이 어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사별(2.25점)한 참여자의 재무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는데, 이 역시 고연령집단일수록 배우자와 사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재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이혼(2.72점)한 경우였으며, 그다

음은 기혼(2.64점), 그리고 미혼(2.41점)의 순이었다(p=.000). 가구원수와 자녀수도 앞의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많을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3명 이상(2.73점)인 경우가 가장 재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1명(2.44점)은 가장 낮았다(p=.001). 자녀수도 3명 이상(2.74점)인 경우 재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1명(2.63점) 그리고 0명(2.38점)이었다(p=.001). 상당수준의 재무스트레스가 가족관계에서 발생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기초생활 수급유형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일반수급자 가구(2.73점)와 조건부수급자 가구(2.66점)에서 높은 수준의 재무스트레스가 발견되었다(p=.000). 끝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재무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과 의료비 부담 등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재무스트레스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3-23〉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2.57	1.113	.000	.984	
	여성(b)	614	2.57	1.075			
연령	20대 이하(a)	51	2.37	.945	5.125	.000	e<c,d
	30대(b)	76	2.59	1.057			
	40(c)	197	2.69	1.110			
	50대(d)	401	2.69	1.104			
	60대 이상(e)	322	2.37	1.062			
학력	중졸 이하(a)	408	2.42	1.097	6.454	.002	a<b<c
	고졸(b)	495	2.66	1.081			
	대졸 이상(c)	143	2.70	1.060			
혼인상태	미혼(a)	248	2.41	1.014	8.655	.000	a,b,d<c
	기혼(b)	271	2.64	1.114			
	이혼(c)	405	2.72	1.102			
	사별(d)	123	2.25	1.050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검증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2.44	1.013	1.430	.222	
	전세(b)	105	2.49	1.099			
	월세(c)	358	2.57	1.134			
	공공임대(d)	303	2.67	1.070			
	기타(e)	133	2.53	1.090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2	2.44	1.091	6.786	.001	a<c
	2명(b)	269	2.63	1.086			
	3명 이상(c)	286	2.73	1.071			
자녀 수	0명(a)	355	2.38	1.058	5.944	.001	a<c,d
	1명(b)	212	2.63	1.100			
	2명(c)	324	2.66	1.066			
	3명 이상(d)	156	2.74	1.149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2.73	1.174	6.385	.000	d<a c,d<b
	조건부수급자(b)	547	2.66	1.057			
	차상위가구(c)	328	2.42	1.107			
	해당 없음(d)	58	2.22	.978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7	2.60	1.109	1.567	.211	
	시장진입형(b)	310	2.50	1.043			
자활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a)	354	2.69	1.146	1.938	.072	
	1년 이상~2년 미만(b)	196	2.61	1.057			
	2년 이상~3년 미만(c)	168	2.50	1.038			
	3년 이상~4년 미만(d)	137	2.39	1.094			
	4년 이상~5년 미만(e)	71	2.39	.990			
	5년 이상~6년 미만(f)	39	2.46	1.043			
	6년 이상(g)	82	2.62	1.089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a)	787	2.56	1.094	.360	.549	
	중단 있었음(b)	260	2.60	1.080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2.94	1.059	15.317	.000	c,d<a,b
	나쁜 편이다(b)	452	2.78	1.078			
	좋은 편이다(c)	506	2.40	1.068			
	아주 좋다(d)	46	2.04	.997			

3) 재무관리역량의 차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Ⅲ-3-24〉 참조). 총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재무관리역량의 점수는 최저 0점, 최고 8점이다. 분석 결과, 재무관리역량과 관련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령, 학력, 가구원수, 기초생활수급유형, 자활사업 유형, 자활사업 참여기간, 주관적 건강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60대 이상(3.65점)이 40대(2.96점)와 50대(3.06점)에 비해 재무관리역량이 좋았다(p=.000). 소비계획, 저축활동, 지출관리, 재무적 자신감, 예비비 보유 등과 관련하여 자녀양육 등과 관련하여 지출 및 대출 수요가 크고 복잡한 중장년층의 재무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20대 이하(3.73점)의 재무관리역량도 높았다. 연령상 가구의 재무문제에 대한 주 책임자가 아니고 따라서 재무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력의 측면에서 보면, 중졸 이하(3.43점)보다 고졸(3.07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앞서 설펴본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대졸 이상(3.45점)의 재무관리역량이 높은 것도 실제 이들의 재무관리역량이 높기보다는 미혼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아직 단순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재무관리역량이 높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키 어렵거나 예측하지 못한 재무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계획소비나 지출관리가 이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p=.000). 가구원수가 1명(3.39점)인 경우보다 2명(3.45점), 특히 3명 이상(2.86점)인 경우 재무관리역량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유형을 보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정부지원을 받는 조건부수급자 집단(3.14점)의 재무관리역량이 차상위가구(3.54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0). 자활사업 참여유형도 마찬가지였다. 소득수준이 좀 더 낮은 사회서비스형(3.13점) 참여자의 재무관리역량이 시장진입형(3.58점) 참여자에 비해 낮았다(p=.000).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재무관리역량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3).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관리역량이 제일

높은 시점은 자활사업 참여 4~5년 미만(3.99점)으로 1년 미만(2.99점)에 비해 1점 더 높았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가 기본적으로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시점에 가까울수록 참여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무관리 준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활사업 재진입자의 경우 재무관리역량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재무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활이라는 전략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거나(2.43점), 나쁜 편인(3.05점) 경우 좋은 편(3.46점)이거나 아주 좋은 상태(3.96점)보다 재무관리역량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p=.000). 질병에 의한 예상치 못한 지출 부담 또는 재무관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건강상태 등이 체계적인 재무관리의 장애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Ⅲ-3-24〉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성별	남성(a)	433	3.16	1.944	2.063	.151	
	여성(b)	614	3.33	1.887			
연령	20대 이하(a)	51	3.73	1.930	6.670	.000	c<e d<e
	30대(b)	76	3.17	1.935			
	40(c)	197	2.96	1.829			
	50대(d)	401	3.06	1.959			
	60대 이상(e)	322	3.65	1.825			
학력	중졸 이하(a)	408	3.43	1.822	4.639	.010	b<a
	고졸(b)	495	3.07	1.968			
	대졸 이상(c)	143	3.45	1.916			
혼인상태	미혼(a)	248	3.39	1.935	.728	.535	
	기혼(b)	271	3.21	1.838			
	이혼(c)	405	3.19	1.915			
	사별(d)	123	3.37	2.017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주거 점유 형태	자가(a)	147	3.46	1.899	1.954	.099	
	전세(b)	105	3.30	1.892			
	월세(c)	358	3.07	1.982			
	공공임대(d)	303	3.24	1.821			
	기타(e)	133	3.53	1.885			
가구 원수 (본인 포함)	1명(a)	492	3.39	1.900	8.945	.000	c<a,b
	2명(b)	269	3.45	1.952			
	3명 이상(c)	286	2.86	1.840			
자녀 수	0명(a)	355	3.41	1.865	1.135	.334	
	1명(b)	212	3.15	1.923			
	2명(c)	324	3.23	1.984			
	3명 이상(d)	156	3.16	1.844			
기초 생활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a)	114	3.03	1.902	3.802	.010	b<c
	조건부수급자(b)	547	3.14	1.928			
	차상위가구(c)	328	3.54	1.889			
	해당 없음(d)	58	3.34	1.753			
자활 유형	사회서비스형(a)	737	3.13	1.890	12.571	.000	a<b
	시장진입형(b)	310	3.58	1.929			
자활 사업 참여 기간	1년 미만(a)	354	2.99	1.846	3.296	.003	a<e
	1년 이상~2년 미만(b)	196	3.28	1.965			
	2년 이상~3년 미만(c)	168	3.36	1.855			
	3년 이상~4년 미만(d)	137	3.44	1.858			
	4년 이상~5년 미만(e)	71	3.99	2.181			
	5년 이상~6년 미만(f)	39	3.15	2.146			
	6년 이상(g)	82	3.37	1.732			
자활 중단	중단 없었음(a)	787	3.28	1.895	.371	.542	
	중단 있었음(b)	260	3.20	1.963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a)	42	2.43	1.810	8.411	.000	a<c,d b<c,d
	나쁜 편이다(b)	452	3.05	1.923			
	좋은 편이다(c)	506	3.46	1.879			
	아주 좋다(d)	46	3.96	1.788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무건전성의 관계 요약

이상으로 살펴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양한 재부비율, 재무스트레스, 재무역량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Ⅲ-3-25〉와 같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셀은 두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또한 해당 변수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한다(최고 값과 나머지가 값이 거의 같을 경우 동그라미가 둘 이상일 수 있음).

〈표 Ⅲ-3-15〉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 요약

구분		재무건전성						
		가계수지비율(1미만)	유동성비율	월저축률	총부채상환율(40%)	고정지출비율	재무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
성별	남성	○						
	여성			○				
연령	20대 이하		○					
	30대				○			
	40						●	
	50대						●	
	60대 이상							○
학력	중졸 이하	○	○			○		○
	고졸						●	
	대졸 이상						●	
혼인상태	미혼	○	○			○		
	기혼						●	
	이혼						●	
	사별					○		
주거점유 형태	자가							
	전세							
	월세							
	공공임대			○				
	기타			○				
가구원수	1명	○	○			○		○
	2명							○
	3명 이상						●	
자녀수	0명	○	○			○		
	1명							
	2명						●	
	3명 이상						●	
기초생활수급유형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가구							○
	해당 없음							
자활유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						○

구분		재무건전성						
		가계수지비율(1미만)	유동성비율	월저축률	총부채상환율(40%)	고정지출비율	재무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
자활사업 참여기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			
	3~4년 미만							
	4~5년 미만							○
	5~6년 미만							
	6년 이상							
자활중단	중단 없었음							
	중단 있었음							
주관적 건강	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좋은 편이다							○
	아주 좋다							○

주: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제4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와 재무건전성의 차이

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 차이

1) 자기효능감의 차이

응답자의 재무상태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Ⅲ-4-1〉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 월소득, 월지출, 총자산, 월저축, 총부채, 월부채상환, 재무압박기간과 같은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Ⅲ-4-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a)	30	3.55	.585	.251	.909	
	100~130만원 미만(b)	672	3.52	.617			
	130~160만원 미만(c)	227	3.52	.603			
	160~200만원 미만(d)	47	3.45	.600			
	200만원 이상(e)	68	3.48	.526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a)	37	3.40	.660	.788	.533	
	50~100만원 미만(b)	260	3.53	.621			
	100~125만원 미만(c)	427	3.54	.601			
	125~150만원 미만(d)	113	3.47	.594			
	150만원 이상(e)	207	3.49	.591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a)	426	3.49	.616	1.700	.118	
	1~50만원 미만(b)	341	3.54	.583			
	50~100만원 미만(c)	54	3.55	.663			
	100~300만원 미만(d)	107	3.50	.606			
	300~500만원 미만(e)	46	3.74	.624			
	500~1,000만원 미만(f)	37	3.41	.495			
	1,000만원 이상(g)	34	3.42	.641			
가구 월저축액	없음(a)	509	3.50	.621	.897	.496	
	1~10만원 미만(b)	67	3.47	.638			
	10~20만원 미만(c)	244	3.52	.592			
	20~30만원 미만(d)	91	3.64	.532			
	30~40만원 미만(e)	39	3.52	.654			
	40~50만원 미만(f)	28	3.60	.581			
	50만원 이상(g)	68	3.48	.599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a)	620	3.50	.611	1.144	.335	
	1~499만원 미만(b)	121	3.51	.616			
	500~1,000만원 미만(c)	56	3.58	.587			
	1,000~3,000만원 미만(d)	132	3.51	.546			
	3,000~5,000만원 미만(e)	57	3.67	.632			
	5,000~8,000만원 미만(f)	25	3.44	.546			
	8,000만원 이상(g)	30	3.64	.677			
가구 월부채상환액	부채 미보유(a)	620	3.50	.611	1.029	.405	
	0만원(b)	213	3.51	.607			
	1~10만원 미만(c)	30	3.67	.526			
	10~20만원 미만(d)	47	3.49	.626			
	20~50만원 미만(e)	79	3.63	.568			
	50~100만원 미만(f)	31	3.49	.611			
	100만원 이상(g)	20	3.61	.562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생활비 압박기간	없음(a)	392	3.53	.602	.607	.725	
	1~5일(b)	114	3.51	.570			
	6~10일(c)	238	3.52	.609			
	11~15일(d)	81	3.50	.641			
	16~20일(e)	111	3.52	.615			
	21~25일(f)	26	3.30	.445			
	26일 이상(g)	84	3.50	.671			

2) 직무만족도의 차이

응답자의 재무상태별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Ⅲ-4-2〉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 월소득, 월지출, 총부채, 월부채상환 규모별 직무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가구의 총자산, 월저축액별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구의 총저축잔액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가구 총예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3.62점)이 예금액이 전혀 없는 집단(3.47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p=.019). 또한 월 10~20만원 미만(3.67점)을 저축하는 가구의 참여자는 전혀 저축을 하지 않는 가구(3.48점)의 참여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p=.003).

〈표 Ⅲ-4-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a)	30	3.35	.751	1.453	.215	
	100~130만원 미만(b)	672	3.56	.680			
	130~160만원 미만(c)	227	3.59	.673			
	160~200만원 미만(d)	47	3.46	.793			
	200만원 이상(e)	68	3.65	.561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a)	37	3.60	.540	2.004	.092	
	50~100만원 미만(b)	260	3.65	.731			
	100~125만원 미만(c)	427	3.54	.686			
	125~150만원 미만(d)	113	3.47	.637			
	150만원 이상(e)	207	3.53	.632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a)	426	3.47	.702	2.538	.019	a<b
	1~50만원 미만(b)	341	3.62	.665			
	50~100만원 미만(c)	54	3.52	.678			
	100~300만원 미만(d)	107	3.61	.628			
	300~500만원 미만(e)	46	3.58	.662			
	500~1,000만원 미만(f)	37	3.79	.686			
	1,000만원 이상(g)	34	3.56	.635			
가구 월저축액	없음(a)	509	3.48	.695	3.267	.003	a<c
	1~10만원 미만(b)	67	3.56	.661			
	10~20만원 미만(c)	244	3.67	.692			
	20~30만원 미만(d)	91	3.54	.531			
	30~40만원 미만(e)	39	3.60	.684			
	40~50만원 미만(f)	28	3.89	.558			
	50만원 이상(g)	68	3.57	.691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a)	620	3.59	.686	1.257	.275	
	1~499만원 미만(b)	121	3.52	.656			
	500~1,000만원 미만(c)	56	3.38	.703			
	1,000~3,000만원 미만(d)	132	3.58	.680			
	3,000~5,000만원 미만(e)	57	3.52	.552			
	5,000~8,000만원 미만(f)	25	3.39	.586			
	8,000만원 이상(g)	30	3.60	.864			
가구 월부채상환액	부채 미보유(a)	620	3.59	.686	1.380	.220	
	0만원(b)	213	3.52	.696			
	1~10만원 미만(c)	30	3.48	.663			
	10~20만원 미만(d)	47	3.45	.609			
	20~50만원 미만(e)	79	3.43	.693			
	50~100만원 미만(f)	31	3.70	.512			
	100만원 이상(g)	20	3.71	.661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생활비 압박기간	없음(a)	392	3.60	.702	1.036	.400	
	1~5일(b)	114	3.51	.666			
	6~10일(c)	238	3.59	.629			
	11~15일(d)	81	3.53	.715			
	16~20일(e)	111	3.48	.706			
	21~25일(f)	26	3.51	.651			
	26일 이상(g)	84	3.56	.666			

3) 미래지향의 차이

앞서 살펴본 직무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미래지향도 가구의 월소득이나 지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총저축잔액과 월저축액별로 미래지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3〉 참조). 먼저 총저축잔액을 보면, 가구 총예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3.37점)은 총예금액이 전혀 없는 집단(3.21점)에 비해 미래지향성이 강했다(p=.001). 다음으로 가구 월저축액은 월저축액이 없는 집단(3.22점)에 비해 10~20만원 미만(3.41점)이거나 20~30만원 미만(3.47점)에 비해 미래지향성 약했다(p=.000). 매월저축액이 1~10만원 미만인 집단(3.12점) 40~50만원 미만인 집단(3.63점)에 비해 미래지향성이 약했다(p=.000).

〈표 Ⅲ-4-3〉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미래지향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a)	30	3.42	.660	1.075	.368	
	100~130만원 미만(b)	672	3.31	.636			
	130~160만원 미만(c)	227	3.51	.572			
	160~200만원 미만(d)	47	3.19	.687			
	200만원 이상(e)	68	3.25	.600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a)	37	3.30	.605	.690	.599	
	50~100만원 미만(b)	260	3.37	.623			
	100~125만원 미만(c)	427	3.29	.633			
	125~150만원 미만(d)	113	3.29	.578			
	150만원 이상(e)	207	3.30	.622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a)	426	3.21	.601	3.934	.001	a<b
	1~50만원 미만(b)	341	3.37	.629			
	50~100만원 미만(c)	54	3.36	.618			
	100~300만원 미만(d)	107	3.35	.623			
	300~500만원 미만(e)	46	3.49	.608			
	500~1,000만원 미만(f)	37	3.50	.711			
	1,000만원 이상(g)	34	3.40	.600			
가구 월저축액	없음(a)	509	3.22	.601	7.377	.000	a<c,d b<f
	1~10만원 미만(b)	67	3.12	.739			
	10~20만원 미만(c)	244	3.41	.609			
	20~30만원 미만(d)	91	3.47	.582			
	30~40만원 미만(e)	39	3.50	.555			
	40~50만원 미만(f)	28	3.63	.530			
	50만원 이상(g)	68	3.42	.665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a)	620	3.30	.620	.725	.629	
	1~499만원 미만(b)	121	3.34	.619			
	500~1,000만원 미만(c)	56	3.36	.484			
	1,000~3,000만원 미만(d)	132	3.29	.685			
	3,000~5,000만원 미만(e)	57	3.33	.635			
	5,000~8,000만원 미만(f)	25	3.23	.675			
	8,000만원 이상(g)	30	3.51	.505			
가구 월부채상환액	부채 미보유(a)	620	3.30	.620	.530	.786	
	0만원(b)	213	3.24	.644			
	1~10만원 미만(c)	30	3.27	.716			
	10~20만원 미만(d)	47	3.32	.594			
	20~50만원 미만(e)	79	3.20	.610			
	50~100만원 미만(f)	31	3.25	.502			
	100만원 이상(g)	20	3.51	.56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a)	267	18.24	11.863	10.091	.000	a,c<b
	현재 채무불이행(b)	181	21.91	12.235			
	해당 없음(c)	595	17.35	11.906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a)	392	3.36	.630	1.996	.064	
	1~5일(b)	114	3.33	.563			
	6~10일(c)	238	3.32	.591			
	11~15일(d)	81	3.12	.554			
	16~20일(e)	111	3.31	.646			
	21~25일(f)	26	3.21	.508			
	26일 이상(g)	84	3.31	.623			

4) 우울감의 차이

응답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우울감은 큰 차이를 보였다(〈표 Ⅲ-4-4〉 참조). 구체적으로 가구 월소득, 가구 월지출, 가구총저축, 가구 월저축액, 가구 총부채, 생활비 잔액 10만원 이하인 날짜수별로 우울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가구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23.40점)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14.75점)보다 우울감이 컸다(p=.006). 다음으로 가구지출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컸다(p=.049). 월소득이 125~150만원 미만인 집단(20.47점)의 우울감이 월소득이 전혀 없는 집단(18.78점)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다(p=.049). 가구 총예금액과 월저축액이 적을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가구 총예금액이 전혀 없는 집단(20.20점)은 100~130만원 미만인 집단(15.84점)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p=.000). 또한 월저축액이 전혀 없는 집단(20.05점)은 월40~50만원 미만(12.89점)을 저축하는 집단이나 50만원 이상을 저축하는 집단(15.32점)에 비해 우울감이 크게 낮았다(p=.000). 부채는 우울감과 부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다. 가구총부채 잔액이 5,000~8,000만원 미만인 집단(25.20점)의 우울감은 가구총부채가 전혀 없는 집단(17.20점)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다(p=.042). 끝으로 지난달 생활비 잔액이 6~10일인 집단(18.11점)이나 11~15일인 집단(21.53점)은 생활비 잔액이 10만원 이하로 내려간 날

이 전혀 없는 집단(16.10점)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다(p=.000).

〈표 Ⅲ-4-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우울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a)	30	23.40	14.097	3.610	.006	e<a
	100~130만원 미만(b)	671	18.39	11.750			
	130~160만원 미만(c)	227	18.08	12.401			
	160~200만원 미만(d)	47	21.32	13.330			
	200만원 이상(e)	68	14.75	11.067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a)	37	18.78	10.636	2.391	.049	a<d
	50~100만원 미만(b)	260	16.93	11.203			
	100~125만원 미만(c)	426	18.03	11.736			
	125~150만원 미만(d)	113	20.47	13.114			
	150만원 이상(e)	207	19.55	13.010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a)	426	20.20	12.291	4.402	.000	d<a
	1~50만원 미만(b)	340	17.71	12.064			
	50~100만원 미만(c)	54	17.69	11.729			
	100~300만원 미만(d)	107	15.84	10.983			
	300~500만원 미만(e)	46	14.46	9.840			
	500~1,000만원 미만(f)	37	20.81	13.184			
	1,000만원 이상(g)	34	14.32	10.230			
가구 월저축액	없음(a)	509	20.05	12.397	4.327	.000	f,g<a
	1~10만원 미만(b)	66	18.64	12.752			
	10~20만원 미만(c)	244	17.29	11.957			
	20~30만원 미만(d)	91	16.85	12.128			
	30~40만원 미만(e)	39	15.67	8.480			
	40~50만원 미만(f)	28	12.89	9.235			
	50만원 이상(g)	68	15.32	9.679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a)	619	17.72	11.839	2.183	.042	a<f
	1~499만원 미만(b)	121	20.02	12.275			
	500~1,000만원 미만(c)	56	18.52	12.047			
	1,000~3,000만원 미만(d)	132	18.29	12.161			
	3,000~5,000만원 미만(e)	57	17.67	12.094			
	5,000~8,000만원 미만(f)	25	25.20	12.021			
	8,000만원 이상(g)	30	20.23	13.743			
가구 월부채상환액	부채 미보유(a)	619	17.72	11.839	1.572	.152	
	0만원(b)	213	19.34	12.040			
	1~10만원 미만(c)	30	16.47	13.313			
	10~20만원 미만(d)	47	19.79	12.279			
	20~50만원 미만(e)	79	18.22	12.258			
	50~100만원 미만(f)	31	22.45	14.224			
	100만원 이상(g)	20	21.40	11.348			
생활비 압박기간	없음(a)	392	16.10	11.426	5.771	.000	a<c,d
	1~5일(b)	114	19.11	12.736			
	6~10일(c)	238	18.11	10.870			
	11~15일(d)	81	21.53	13.716			
	16~20일(e)	111	22.25	13.221			
	21~25일(f)	25	20.12	11.414			
	26~30일(g)	84	20.06	12.000			

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 관계 요약

이상으로 살펴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와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Ⅲ-4-5〉와 같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셀은 관련 변수값 중에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한다.

〈표 Ⅲ-4-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와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 요약

구분		자기인식 및 정서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미래지향	우울감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
	100~130만원 미만				
	130~160만원 미만				
	16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25만원 미만				
	125~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
	1~50만원 미만		○	○	
	50~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가구 월저축 액	없음				●
	1~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		
	20~30만원 미만			○	
	30~40만원 미만			○	
	40~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				
	1~499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8,000만원 미만				●
	8,000만원 이상				●
가구 월부채 상환액	부채 미보유				
	0만원				
	1~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본인채 무불이 행	과거 채무불이행				
	현재 채무불이행				
	해당 없음				●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1~5일				
	6~10일				●
	11~15일				●
	16~20일				
	21~25일				
	26~30일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건전성 차이

1) 가계비율의 차이

(1) 가계수지비율(1.0 미만)의 차이

응답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가계수지비율의 충족률 차이를 비교해보았다(〈표 Ⅲ-4-6〉 참조). 그 결과, 가구 월소득, 가구 월지출, 가구 총부채 잔액, 가구 월부채상환액(〈40%), 가구 월부채상환액(〈15%), 생활비잔액 10만원 이하일수에 따른 가계수지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가계수지비율(1.0 미만)은 가구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36.7%)과 160만원 이상 집단(59.6%) 등에서 낮고, 100만원~160만원 미만 집단(74.7%, 59.6%)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꼭 가구소득의 절대규모가 크다고 가계수지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가구 월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가계수지비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지출이 50만원 미만인 집단의 가계수지비율(1.0 미만) 충족률은 100.0%인데 반해, 150만원 이상 집단은 17.9%에 불과했다.

한편 가계수지비율은 부채가 없는 집단에서 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 619명의 가계수지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은 76.3%로 매우 높았으며, 월부채상환액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부채 미보유 집단의 가이드라인 충족률은 76.3%로 부채 보유집단에 비해 크게 높았다(p=.000). 또한 응답자가 과거(58.1%)나 현재(62.4%)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74.1%)보다 가계수지비율 가이드라인 1.0 미만을 충족시키기 어려웠으며(p=.000), 끝으로 생활비잔액이 10만원 이하인 날짜수가 26일 이상(47.0%)과 같이 길수록 가계수지비율 1.0 미만 충족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표 Ⅲ-4-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가계수지비율(1.0 미만)의 충족률

구분		N	가계수지비율<1.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100.0)	19(63.3)	11(36.7)	30.510	.000
	100~130만원 미만	673(100.0)	205(30.5)	468(69.5)		
	130~160만원 미만	225(100.0)	57(25.3)	168(74.7)		
	160~200만원 미만	47(100.0)	19(40.4)	28(59.6)		
	200만원 이상	68(100.0)	34(50.0)	34(50.0)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37(100.0)	0(0.0)	37(100.0)	391.639	.000
	50~100만원 미만	260(100.0)	7(2.7)	253(97.3)		
	100~125만원 미만	428(100.0)	100(23.4)	328(76.6)		
	125~150만원 미만	113(100.0)	57(50.4)	56(49.6)		
	150만원 이상	207(100.0)	170(82.1)	37(17.9)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427(100.0)	125(29.3)	302(70.7)	10.717	.098
	1~50만원 미만	340(100.0)	104(30.6)	236(69.4)		
	50~100만원 미만	53(100.0)	18(34.0)	35(66.0)		
	100~300만원 미만	107(100.0)	42(39.3)	65(60.7)		
	300~500만원 미만	46(100.0)	18(39.1)	28(60.9)		
	500~1,000만원 미만	37(100.0)	18(48.6)	19(51.4)		
	1,000만원 이상	34(100.0)	9(26.5)	25(73.5)		
가구 월저축액	없음	510(100.0)	162(31.8)	348(68.2)	4.162	.655
	1~10만원 미만	67(100.0)	28(41.8)	39(58.2)		
	10~20만원 미만	243(100.0)	75(30.9)	168(69.1)		
	20~30만원 미만	91(100.0)	25(27.5)	66(72.5)		
	30~40만원 미만	39(100.0)	12(30.8)	27(69.2)		
	40~50만원 미만	28(100.0)	9(32.1)	19(67.9)		
	50만원 이상	67(100.0)	23(34.3)	44(65.7)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	619(100.0)	147(23.7)	472(76.3)	56.973	.000
	1~499만원 미만	121(100.0)	53(43.8)	68(56.2)		
	500~1,000만원 미만	56(100.0)	16(28.6)	40(71.4)		
	1,000~3,000만원 미만	132(100.0)	67(50.8)	65(49.2)		
	3,000~5,000만원 미만	57(100.0)	27(47.4)	30(52.6)		
	5,000~8,000만원 미만	25(100.0)	11(44.0)	14(56.0)		
	8,000만원 이상	30(100.0)	11(36.7)	19(63.3)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가계수지비율<1.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포함)	부채 미보유	617(100.0)	146(23.7)	471(76.3)	49.997	.000
	0만원	197(100.0)	87(44.2)	110(55.8)		
	1~10만원 미만	37(100.0)	16(43.2)	21(56.8)		
	10~20만원 미만	50(100.0)	21(42.0)	29(58.0)		
	20~50만원 미만	86(100.0)	36(41.9)	50(58.1)		
	50~100만원 미만	31(100.0)	14(45.2)	17(54.8)		
	100만원 이상	21(100.0)	12(57.1)	9(42.9)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미포함)	부채 미보유	619(100.0)	147(23.7)	472(76.3)	50.511	.000
	0만원	237(100.0)	102(43.0)	135(57.0)		
	1~10만원 미만	27(100.0)	10(37.0)	17(63.0)		
	10~20만원 미만	42(100.0)	20(47.6)	22(52.4)		
	20~50만원 미만	73(100.0)	30(41.1)	43(58.9)		
	50~100만원 미만	24(100.0)	13(54.2)	11(45.8)		
	100만원 이상	18(100.0)	10(55.6)	8(44.4)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267(100)	112(4.19)	155(58.1)	24.945	.000
	현재 채무불이행	181(100)	68(37.6)	113(62.4)		
	해당 없음	595(100)	154(25.9)	441(74.1)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392(100.0)	74(18.9)	318(81.1)	67.463	.000
	1~5일	114(100.0)	36(31.6)	78(68.4)		
	6~10일	238(100.0)	81(34.0)	157(66.0)		
	11~15일	81(100.0)	40(49.4)	41(50.6)		
	16~20일	111(100.0)	47(42.3)	64(57.7)		
	21~25일	26(100.0)	12(46.2)	14(53.8)		
	26일 이상	83(100.0)	44(53.0)	39(47.0)		

(2) 가계수지비율(.90 미만)의 차이

가계수지비율 가이드라인을 .90 미만으로 낮춘 상태에서 재무상태별 충족률을 살펴보았다. 〈표 Ⅲ-4-7〉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가이드라인 1.0 미만의 결과(〈표 Ⅲ-4-6〉 참조)와 대동소이하다. 같은 점은 가구 월지출이 적을수록, 가구부채와 부채상환액이 없거나 적을수록, 과거나 현재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지 않았을수록, 그리고 생활비 압박기간이 짧을수록 가계수지비율 .90미만의 충족률은 높아진다는 것이다(p=.000). 차이는 가계소득의 차이에 따

른 가계수지비율 충족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p>.05).

〈표 Ⅲ-4-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가계수지비율(.90 미만)

구분		N	가계수지비율<.9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100.0)	23(76.7)	7(23.3)	7.674	.104
	100~130만원 미만	673(100.0)	377(56.0)	296(44.0)		
	130~160만원 미만	225(100.0)	115(51.1)	110(48.9)		
	160~200만원 미만	47(100.0)	25(53.2)	22(46.8)		
	200만원 이상	68(100.0)	40(58.8)	28(41.2)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37(100.0)	0(0.0)	37(100.0)	476.789	.000
	50~100만원 미만	260(100.0)	14(5.4)	246(94.6)		
	100~125만원 미만	428(100.0)	280(65.4)	148(34.6)		
	125~150만원 미만	113(100.0)	104(92.0)	9(8.0)		
	150만원 이상	207(100.0)	182(87.9)	25(12.1)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427(100.0)	240(56.2)	187(43.8)	3.898	.691
	1~50만원 미만	340(100.0)	186(54.7)	154(45.3)		
	50~100만원 미만	53(100.0)	28(52.8)	25(47.2)		
	100~300만원 미만	107(100.0)	63(58.9)	44(41.1)		
	300~500만원 미만	46(100.0)	26(56.5)	20(43.5)		
	500~1,000만원 미만	37(100.0)	22(59.5)	15(40.5)		
	1,000만원 이상	34(100.0)	14(41.2)	20(58.8)		
가구 월저축 액	없음	510(100.0)	288(56.5)	222(43.5)	0.291	.158
	1~10만원 미만	67(100.0)	41(61.2)	26(38.8)		
	10~20만원 미만	243(100.0)	144(59.3)	99(40.7)		
	20~30만원 미만	91(100.0)	43(47.3)	48(52.7)		
	30~40만원 미만	39(100.0)	19(48.7)	20(51.3)		
	40~50만원 미만	28(100.0)	11(39.3)	17(60.7)		
	50만원 이상	67(100.0)	34(50.7)	33(49.3)		

구분		N	가계수지비율<.9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	619(100.0)	293(47.3)	326(52.7)	52.725	.000
	1~499만원 미만	121(100.0)	83(68.6)	38(31.4)		
	500~1,000만원 미만	56(100.0)	28(50.0)	28(50.0)		
	1,000~3,000만원 미만	132(100.0)	90(68.2)	42(31.8)		
	3,000~5,000만원 미만	57(100.0)	41(71.9)	16(28.1)		
	5,000~8,000만원 미만	25(100.0)	21(84.0)	4(16.0)		
	8,000만원 이상	30(100.0)	22(73.3)	8(26.7)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포함)	부채 미보유	617(100.0)	292(47.3)	325(52.7)	43.873	.000
	0만원	197(100.0)	138(70.1)	59(29.9)		
	1~10만원 미만	37(100.0)	27(73.0)	10(27.0)		
	10~20만원 미만	50(100.0)	32(64.0)	18(36.0)		
	20~50만원 미만	86(100.0)	53(61.6)	33(38.4)		
	50~100만원 미만	31(100.0)	21(67.7)	10(32.3)		
	100만원 이상	21(100.0)	14(66.7)	7(33.3)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미포함)	부채 미보유	619(100.0)	293(47.3)	326(52.7)	46.569	.000
	0만원	237(100.0)	164(69.2)	73(30.8)		
	1~10만원 미만	27(100.0)	22(81.5)	5(18.5)		
	10~20만원 미만	42(100.0)	25(59.5)	17(40.5)		
	20~50만원 미만	73(100.0)	46(63.0)	27(37.0)		
	50~100만원 미만	24(100.0)	17(70.8)	7(29.2)		
	100만원 이상	18(100.0)	11(61.1)	7(38.9)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267(100.0)	177(66.3)	90(33.7)	28.553	.000
	현재 채무불이행	181(100.0)	117(64.6)	64(35.4)		
	해당 없음	595(100.0)	292(49.1)	303(50.9)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392(100.0)	152(38.8)	240(61.2)	83.309	.000
	1~5일	114(100.0)	73(64.0)	41(36.0)		
	6~10일	238(100.0)	148(62.2)	90(37.8)		
	11~15일	81(100.0)	64(79.0)	17(21.0)		
	16~20일	111(100.0)	73(65.8)	38(34.2)		
	21~25일	26(100.0)	15(57.7)	11(42.3)		
	26일 이상	83(100.0)	55(66.3)	28(33.7)		

(3) 유동성비율(200% 이상)의 차이

유동성비율은 가계가 단기적 소득 중단이나 감소의 상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비율이다. 본 연구에서 가이드라인은 가구 월소득의 200% 이상인데, 〈표 Ⅲ-4-8〉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참여자의 유동성비율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가구 월소득, 가구 총예금액, 가구 월저축액, 가구 총부채 잔액, 가구 총부채상환액(주택담보대출 포함), 생활비잔액 10만원 이하 일수였다(p〈.05).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50만원 이하(18.5%)일수록 유동성비율 충족률이 높았다(p=.026). 그리고 가구 총예금액과 월저축액이 많을수록(p=.000), 가구 총부채 잔액과 월부채상환액(주택담보대출 포함)이 없거나 적을수록(p=.024, p=.046) 유동성비율 충족률은 높았다. 더불어 과거나 현재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p=.007), 생활비 압박기간이 짧을 경우에 유동성 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 Ⅲ-4-8〉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유동성비율(200% 이상)

구분		N	유동성비율≥〈20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100.0)	29(96.7)	1(3.3)	6.426	.170
	100~130만원 미만	665(100.0)	590(88.7)	75(11.3)		
	130~160만원 미만	224(100.0)	189(84.4)	35(15.6)		
	160~200만원 미만	45(100.0)	37(82.2)	8(17.8)		
	200만원 이상	68(100.0)	59(86.2)	9(13.2)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27(100.0)	22(81.5)	5(18.5)	11.050	.026
	50~100만원 미만	260(100.0)	222(85.4)	38(14.6)		
	100~125만원 미만	427(100.0)	391(91.6)	36(8.4)		
	125~150만원 미만	113(100.0)	95(84.1)	18(15.9)		
	150만원 이상	204(100.0)	173(84.8)	31(15.2)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유동성비율≥<20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418(100.0)	418(100.0)	0(0.0)	807.111	.000
	1~50만원 미만	338(100.0)	338(100.0)	0(0.0)		
	50~100만원 미만	52(100.0)	51(98.1)	1(1.9)		
	100~300만원 미만	107(100.0)	88(82.2)	19(17.8)		
	300~500만원 미만	46(100.0)	7(15.2)	39(84.8)		
	500~1,000만원 미만	37(100.0)	2(5.4)	35(94.6)		
	1,000만원 이상	34(100.0)	0(0.0)	34(100.0)		
가구 월저축액	없음	500(100.0)	468(93.6)	32(6.4)	78.878	.000
	1~10만원 미만	67(100.0)	63(94.0)	4(6.0)		
	10~20만원 미만	242(100.0)	210(86.8)	32(13.2)		
	20~30만원 미만	90(100.0)	71(78.9)	19(21.1)		
	30~40만원 미만	38(100.0)	28(73.7)	10(26.3)		
	40~50만원 미만	28(100.0)	20(71.4)	8(28.6)		
	50만원 이상	67(100.0)	44(65.7)	23(34.3)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	611(100.0)	523(85.6)	88(14.4)	14.597	.024
	1~499만원 미만	120(100.0)	102(85.0)	18(15.0)		
	500~1,000만원 미만	56(100.0)	51(91.1)	5(8.9)		
	1,000~3,000만원 미만	132(100.0)	119(90.2)	13(9.8)		
	3,000~5,000만원 미만	57(100.0)	56(98.2)	1(1.8)		
	5,000~8,000만원 미만	25(100.0)	22(98.2)	3(12.0)		
	8,000만원 이상	30(100.0)	30(100.0)	0(0.0)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포함)	부채 미보유	609(100.0)	521(85.6)	88(14.4)	12.805	.046
	0만원	196(100.0)	176(89.8)	20(10.2)		
	1~10만원 미만	37(100.0)	30(81.1)	7(18.9)		
	10~20만원 미만	50(100.0)	45(90.5)	5(10.0)		
	20~50만원 미만	86(100.0)	81(94.2)	5(5.8)		
	50~100만원 미만	31(100.0)	31(100.0)	0(0.0)		
	100만원 이상	21(100.0)	18(85.7)	3(14.3)		

구분		N	유동성비율≥<20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미포함)	부채 미보유	611(100.0)	523(85.6)	88(14.4)	8.922	.178
	0만원	236(100.0)	212(89.8)	24(10.2)		
	1~10만원 미만	27(100.0)	22(81.5)	5(18.5)		
	10~20만원 미만	42(100.0)	39(92.9)	3(7.1)		
	20~50만원 미만	73(100.0)	68(93.2)	5(6.8)		
	50~100만원 미만	24(100.0)	23(95.8)	1(4.2)		
	100만원 이상	18(100.0)	16(88.9)	2(11.1)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265(100.0)	239(90.2)	26(9.8)	10.034	.007
	현재 채무불이행	179(100.0)	166(92.7)	13(7.3)		
	해당 없음	588(100.0)	499(84.9)	89(15.1)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382(100.0)	315(82.5)	67(17.5)	18.346	.005
	1~5일	114(100.0)	102(89.5)	12(10.5)		
	6~10일	238(100.0)	211(88.7)	27(11.3)		
	11~15일	81(100.0)	74(91.4)	7(8.6)		
	16~20일	110(100.0)	102(92.7)	8(7.3)		
	21~25일	26(100.0)	26(100.0)	0(0.0)		
	26일 이상	81(100.0)	74(91.4)	7(8.6)		

(4) 월저축률(10% 이상)의 차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월저축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가구 월소득, 가구총예금액, 그리고 가구 월저축액과 관련 있었다($p<.05$). 이 세 가지 중에서 뒤의 두 가지는 저축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월평균 저축률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월저축률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가구 월지출이 유일하다. 〈표 Ⅲ-4-9〉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 월지출이 적을수록 전체적으로 월저축 충족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43$). 이러한 결과는 특히 가구소득이 월저축률 차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소비지출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재무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매우 의미 있음을 시사한다.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표 Ⅲ-4-9〉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월저축률(10% 이상)의 차이

구분		N	월저축률≥1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100.0)	19(63.3)	11(36.7)	3.826	.430
	100~130만원 미만	673(100.0)	511(75.9)	162(24.1)		
	130~160만원 미만	227(100.0)	170(74.9)	57(25.1)		
	160~200만원 미만	47(100.0)	37(78.7)	10(21.3)		
	200만원 이상	68(100.0)	55(80.9)	13(19.1)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36(100.0)	32(88.9)	4(11.1)	9.867	.043
	50~100만원 미만	260(100.0)	181(69.6)	79(30.4)		
	100~125만원 미만	428(100.0)	331(77.3)	97(22.7)		
	125~150만원 미만	113(100.0)	88(77.9)	25(22.1)		
	150만원 이상	207(100.0)	160(77.3)	47(22.7)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427(100.0)	421(98.6)	6(1.4)	225.916	.000
	1~50만원 미만	340(100.0)	223(65.6)	117(34.4)		
	50~100만원 미만	54(100.0)	25(46.3)	29(53.7)		
	100~300만원 미만	107(100.0)	67(62.6)	40(37.4)		
	300~500만원 미만	46(100.0)	22(47.8)	24(52.2)		
	500~1,000만원 미만	37(100.0)	17(45.9)	20(54.1)		
	1,000만원 이상	34(100.0)	17(50.0)	17(50.0)		
가구 월저축액	없음	510(100.0)	510(100.0)	0(0.0)	838.850	.000
	1~10만원 미만	67(100.0)	67(100.0)	0(0.0)		
	10~20만원 미만	244(100.0)	208(85.2)	36(14.8)		
	20~30만원 미만	91(100.0)	8(8.8)	83(91.2)		
	30~40만원 미만	38(100.0)	0(0.0)	38(100.0)		
	40~50만원 미만	28(100.0)	0(0.0)	28(100.0)		
	50만원 이상	68(100.0)	0(0.0)	68(100.0)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	620(100.0)	468(75.5)	152(24.5)	11.014	.088
	1~499만원 미만	122(100.0)	86(70.5)	36(29.5)		
	500~1,000만원 미만	56(100.0)	37(66.1)	19(33.9)		
	1,000~3,000만원 미만	132(100.0)	108(81.8)	24(18.2)		
	3,000~5,000만원 미만	57(100.0)	45(78.9)	12(21.1)		
	5,000~8,000만원 미만	25(100.0)	19(76.0)	6(24.0)		
	8,000만원 이상	30(100.0)	27(90.0)	3(10.0)		

구분		N	월저축률≥1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포함)	부채 미보유	618(100.0)	466(75.4)	152(24.6)	7.719	.259
	0만원	198(100.0)	148(74.7)	50(25.3)		
	1~10만원 미만	37(100.0)	29(78.4)	8(25.3)		
	10~20만원 미만	50(100.0)	41(82.0)	9(18.0)		
	20~50만원 미만	86(100.0)	67(77.9)	19(22.1)		
	50~100만원 미만	31(100.0)	27(87.1)	4(12.9)		
	100만원 이상	21(100.0)	12(57.1)	9(42.9)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미포함)	부채 미보유	620(100.0)	468(75.5)	152(24.5)	2.382	.881
	0만원	238100.0)	180(75.6)	58(24.4)		
	1~10만원 미만	27(100.0)	20(74.1)	7(25.9)		
	10~20만원 미만	42(100.0)	35(83.3)	7(16.7)		
	20~50만원 미만	73(100.0)	56(76.7)	17(23.3)		
	50~100만원 미만	24(100.0)	19(79.2)	5(20.8)		
	100만원 이상	18(100.0)	12(66.7)	6(33.3)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268(100.0)	205(76.5)	63(23.5)	4.281	.118
	현재 채무불이행	181(100.0)	147(81.2)	34(18.8)		
	해당 없음	595(100.0)	439(73.8)	156(26.2)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391(100.0)	282(72.1)	109(27.9)	6.050	.418
	1~5일	114(100.0)	89(78.1)	25(21.9)		
	6~10일	239(100.0)	182(76.2)	57(23.8)		
	11~15일	81(100.0)	66(81.5)	15(18.5)		
	16~20일	111(100.0)	86(77.5)	25(22.5)		
	21~25일	26(100.0)	20(76.9)	6(23.1)		
	26일 이상	84(100.0)	68(81.0)	16(19.0)		

(5) 총부채상환비율(40% 미만)의 차이

응답자들의 재무상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40% 미만)의 충족률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표 Ⅲ-4-10〉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 월소득, 가구 월저축액, 가구 총부채 잔액,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월부채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월부채상환액, 생활비 잔액 10만원 이하일수가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40% 미만)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 중 두 가지의 가구 월부채 상환액은 총부채상환비율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40% 미만)과 거의 같은 변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들과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40% 미만)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차례대로 살펴본다. 응답자들의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40%) 충족률이 더 높았다. 가구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은 총부채상환비율 관련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80.0%에 그쳤으나 소득이 그보다 높은 집단에서는 모두 90% 중후반대의 충족률을 보였다(p=.000). 가구 월저축액은 다소 비선형적인 관계이지만, 월저축액이 많을수록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가구 월저축액이 30~40만원 미만집단(92.1%)과 50만원 이상의 집단(88.2%)에서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비교적 낮았다(p=018). 가구 총부채 잔액과 총부채상환비율(40미만) 간에도 부적상관관계가 보였다. 정비례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총부채 잔액이 많을수록 부채상환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 더불어 응답자가 과거나 현재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의 충족률이 낮았으며(p=.001), 끝으로 생활비 압박 기간과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40% 미만) 충족률의 관계도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달 생환비잔액 10만원 이하 일수가 0일에 가까울수록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5).

〈표 Ⅲ-4-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40% 미만)

구분		N	총부채상환비율<4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100.0)	6(20.0)	24(80.0)	20.170	.000
	100~130만원 미만	671(100.0)	23(3.4)	648(96.6)		
	130~160만원 미만	227(100.0)	12(5.3)	215(94.7)		
	160~200만원 미만	46(100.0)	1(2.2)	45(97.8)		
	200만원 이상	68(100.0)	3(4.4)	65(95.6)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34(100.0)	0(0.0)	34(100.0)	5.464	.243
	50~100만원 미만	260(100.0)	11(4.2)	249(95.8)		
	100~125만원 미만	427(100.0)	17(4.0)	410(96.5)		
	125~150만원 미만	113(100.0)	3(2.7)	110(97.3)		
	150만원 이상	206(100.0)	14(6.8)	193(93.2)		

구분		N	총부채상환비율<4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424(100.0)	19(4.5)	405(95.5)	2.083	.912
	1~50만원 미만	339(100.0)	12(3.5)	327(96.5)		
	50~100만원 미만	54(100.0)	3(5.6)	51(94.4)		
	100~300만원 미만	107(100.0)	6(5.6)	101(94.4)		
	300~500만원 미만	46(100.0)	3(6.5)	43(93.5)		
	500~1,000만원 미만	37(100.0)	1(2.7)	36(97.3)		
	1,000만원 이상	34(100.0)	1(2.9)	33(97.1)		
가구 월저축액	없음	507(100.0)	22(4.3)	485(95.7)	15.243	.018
	1~10만원 미만	67(100.0)	4(6.0)	63(94.0)		
	10~20만원 미만	243(100.0)	5(2.1)	238(97.9)		
	20~30만원 미만	91(100.0)	3(3.3)	88(96.7)		
	30~40만원 미만	38(100.0)	3(7.9)	35(92.1)		
	40~50만원 미만	28(100.0)	0(0.0)	28(100.0)		
	50만원 이상	68(100.0)	8(11.8)	60(88.2)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	620(100.0)	0(0.0)	620(100.0)	88.941	.000
	1~499만원 미만	122(100.0)	10(8.2)	112(91.8)		
	500~1,000만원 미만	56(100.0)	5(8.9)	51(91.1)		
	1,000~3,000만원 미만	132(100.0)	18(13.6)	114(86.4)		
	3,000~5,000만원 미만	57(100.0)	3(5.3)	54(94.7)		
	5,000~8,000만원 미만	25(100.0)	6(24.0)	19(76.0)		
	8,000만원 이상	30(100.0)	3(10.0)	27(90.0)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포함)	부채 미보유	618(100.0)	0(0.0)	618(100.0)	732.519	.000
	0만원	198(100.0)	0(0.0)	198(100.0)		
	1~10만원 미만	37(100.0)	0(0.0)	37(100.0)		
	10~20만원 미만	50(100.0)	0(0.0)	50(100.0)		
	20~50만원 미만	86(100.0)	5(5.8)	81(94.2)		
	50~100만원 미만	31(100.0)	20(64.5)	11(35.5)		
	100만원 이상	21(100.0)	20(95.2)	1(4.8)		

구분		N	총부채상환비율<4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보 미포함)	부채 미보유	620(100.0)	0(0.0)	620(100.0)	685.461	.000
	0만원	238(100.0)	2(0.8)	236(99.2)		
	1~10만원 미만	27(100.0)	0(0.0)	27(100.0)		
	10~20만원 미만	42(100.0)	1(2.4)	41(97.6)		
	20~50만원 미만	73(100.0)	7(9.6)	66(90.4)		
	50~100만원 미만	24(100.0)	18(75.0)	6(25.0)		
	100만원 이상	18(100.0)	17(94.4)	1(5.6)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268(100.0)	99(36.9)	169(63.1)	11.912	.003
	현재 채무불이행	180(100.0)	58(32.2)	122(67.8)		
	해당 없음	595(100.0)	153(25.7)	44.3(74.3)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388(100.0)	6(1.5)	382(98.5)	15.716	.015
	1~5일	114(100.0)	7(6.1)	107(93.9)		
	6~10일	239(100.0)	11(4.6)	228(95.4)		
	11~15일	81(100.0)	4(4.9)	77(95.1)		
	16~20일	111(100.0)	7(6.3)	104(92.7)		
	21~25일	26(100.0)	2(7.7)	24(92.3)		
	26일 이상	83(100.0)	8(9.6)	75(90.4)		

(6) 총부채상환비율(15% 미만)의 차이

자활사업 참여 응답자들의 재무상태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 충족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본 〈표 Ⅲ-4-10〉과 거의 비슷했다. 가구 월소득, 가구총부채 잔액,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구 월부채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월부채상환액, 생활비 잔액 10만원 이하일수가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15% 미만) 충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구 월소득은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70.0%)일수록 총부채상환부담 가이드라인(〈15%) 충족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가구총부채 잔액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상환비율 가이드라인(〈15%) 충족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또한 응답자가 과거나 현재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15% 미만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 끝으로 전달 생활비 압박 기간이 짧을수록 총부채상환률 15% 충족률이 높았다(p=.007).

〈표 Ⅲ-4-11〉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15% 미만)의 차이

구분		N	총부채상환비율〈15%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100.0)	9(30.0)	21(70.0)	19.312	.001
	100~130만원 미만	658(100.0)	48(7.3)	610(92.7)		
	130~160만원 미만	224(100.0)	20(8.9)	204(91.1)		
	160~200만원 미만	45(100.0)	5(11.1)	40(88.9)		
	200만원 이상	66(100.0)	6(9.1)	60(90.9)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34(100.0)	2(5.9)	32(94.1)	4.764	.312
	50~100만원 미만	253(100.0)	21(8.3)	232(91.7)		
	100~125만원 미만	422(100.0)	31(7.3)	391(92.7)		
	125~150만원 미만	109(100.0)	9(8.3)	100(91.7)		
	150만원 이상	203(100.0)	25(12.3	178(87.7)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415(100.0)	39(9.4)	376(90.6)	4.721	.580
	1~50만원 미만	332(100.0)	24(7.2)	308(92.8)		
	50~100만원 미만	53(100.0)	7(13.2)	46(86.8)		
	100~300만원 미만	107(100.0)	10(9.3)	97(90.7)		
	300~500만원 미만	46(100.0)	5(10.9)	41(89.1)		
	500~1,000만원 미만	35(100.0)	1(2.9)	34(97.1)		
	1,000만원 이상	34(100.0)	2(5.9)	32(94.1)		
가구 월저축액	없음	495(100.0)	45(9.1)	450(90.9)	6.435	.376
	1~10만원 미만	67(100.0)	9(13.4)	58(86.6)		
	10~20만원 미만	241(100.0)	14(5.8)	227(94.2)		
	20~30만원 미만	89(100.0)	8(9.0)	81(91.0)		
	30~40만원 미만	38(100.0)	3(7.9)	35(92.1)		
	40~50만원 미만	27(100.0)	1(3.7)	26(96.3)		
	50만원 이상	66(100.0)	8(12.1)	58(87.9)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	620(100.0)	0(0.0)	620(100.0)	159.763	.000
	1~499만원 미만	119(100.0)	20(16.8)	99(83.2)		
	500~1,000만원 미만	52(100.0)	10(19.2)	42(80.8)		
	1,000~3,000만원 미만	124(100.0)	35(28.2)	89(71.8)		
	3,000~5,000만원 미만	56(100.0)	11(19.6)	45(80.4)		
	5,000~8,000만원 미만	23(100.0)	6(26.1)	17(73.9)		
	8,000만원 이상	29(100.0)	6(20.7)	23(79.3)		

구분		N	총부채상환비율<15%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 보 포함)	부채 미보유	618(100.0)	0(0.0)	618(100.0)	746.311	.000
	0만원	198(100.0)	0(0.0)	198(100.0)		
	1~10만원 미만	37(100.0)	0(0.0)	37(100.0)		
	10~20만원 미만	49(100.0)	0(0.0)	49(100.0)		
	20~50만원 미만	69(100.0)	44(63.8)	25(36.2)		
	50~100만원 미만	30(100.0)	24(80.0)	6(20.0)		
	100만원 이상	21(100.0)	20(95.2)	1(4.8)		
가구 월부채 상환액(주택담 보 미포함)	부채 미보유	620(100.0)	0(0.0)	620(100.0)	914.736	.000
	0만원	238(100.0)	0(0.0)	238(100.0)		
	1~10만원 미만	27(100.0)	0(0.0)	27(100.0)		
	10~20만원 미만	40(100.0)	0(0.0)	40(100.0)		
	20~50만원 미만	56(100.0)	47(83.9)	9(16.1)		
	50~100만원 미만	24(100.0)	23(95.8)	1(4.2)		
	100만원 이상	18(100.0)	18(100.0)	0(0.0)		
본인 채무불 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268(100.0)	17(6.3)	251(93.7)	13.403	.001
	현재 채무불이행	180(100.0)	14(7.8)	166(92.2)		
	해당 없음	594(100.0)	14(2.4)	580(97.6)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383(100.0)	18(4.7)	365(95.3)	17.674	.007
	1~5일	111(100.0)	10(9.0)	101(91.0)		
	6~10일	235(100.0)	22(9.4)	213(90.6)		
	11~15일	81(100.0)	8(9.9)	73(90.1)		
	16~20일	106(100.0)	15(14.2)	91(85.8)		
	21~25일	26(100.0)	2(7.7)	24(92.3)		
	26일 이상	81(100.0)	13(16.0)	68(84.0)		

(7) 고정지출비율(60% 이하)의 차이

월세나 부채상환 지출과 같은 고정지출 비중이 커지면, 저축이나 재량지출 등이 쉽지 않아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정지출비율(가계지출의 60%이하)의 현황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 월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과 고정지출비율 충족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구 월지출액이 높을수록 고정지출 충족비율(60% 이하)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p=.000). 또

한 가구총예금액이나(p=.016) 가구 월저축액이 없거나 적을수록 고정지출 충족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4). 이는 중산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도 금융자산이 많으면 부채도 많고, 상환금액도 증가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구 총부채 잔액이 많고, 월부채상환액도 많은 경우 고정지출을 가구 월 처분가능소득의 60%이하로 통제하기 어려웠다. 부채예방이나 상환이 고정지출 조정이나 관리와 같은 미시적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이유다(장동호, 2012). 끝으로 과거나 현재 채무불이행 경험자의 경우(p=.000)와 생활비 압박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경우(p=.017)에도 고정지출비율 60% 이하의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낮았다.

〈표 Ⅲ-4-12〉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고정지출비율(60% 이하)

구분		N	고정지출비율≤6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100.0)	14(46.7)	16(53.3)	4.604	.330
	100~130만원 미만	673(100.0)	203(30.2)	470(69.8)		
	130~160만원 미만	227(100.0)	63(27.8)	164(72.2)		
	160~200만원 미만	46(100.0)	13(28.3)	33(71.7)		
	200만원 이상	68(100.0)	21(30.9)	47(69.1)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37(100.0)	0(0.0)	37(100.0)	64.036	.000
	50~100만원 미만	260(100.0)	43(16.5)	217(83.5)		
	100~125만원 미만	428(100.0)	145(33.9)	283(66.1)		
	125~150만원 미만	113(100.0)	32(28.3)	81(71.7)		
	150만원 이상	206(100.0)	93(45.1)	113(54.9)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426(100.0)	111(26.1)	315(73.9)	15.679	.016
	1~50만원 미만	341(100.0)	97(28.4)	244(71.6)		
	50~100만원 미만	54(100.0)	24(44.4)	30(55.6)		
	100~300만원 미만	107(100.0)	40(37.4)	67(62.6)		
	300~500만원 미만	46(100.0)	18(39.1)	28(60.9)		
	500~1,000만원 미만	37(100.0)	10(27.0)	27(73.0)		
	1,000만원 이상	34(100.0)	14(41.2)	20(58.8)		

구분		N	고정지출비율≤6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가구 월저축액	없음	509(100.0)	136(26.7)	373(73.3)	19.365	.004
	1~10만원 미만	67(100.0)	14(20.9)	53(79.1)		
	10~20만원 미만	244(100.0)	77(31.6)	167(68.4)		
	20~30만원 미만	91(100.0)	28(30.8)	63(69.2)		
	30~40만원 미만	39(100.0)	16(41.0)	23(59.0)		
	40~50만원 미만	28(100.0)	10(35.7)	18(64.3)		
	50만원 이상	68(100.0)	33(48.5)	35(51.5)		
가구 총부채잔액	없음	620(100.0)	161(26.0)	459(74.0)	17.100	.009
	1~499만원 미만	122(100.0)	39(32.0)	83(68.0)		
	500~1,000만원 미만	56(100.0)	19(33.9)	37(66.1)		
	1,000~3,000만원 미만	132(100.0)	49(37.1)	83(62.9)		
	3,000~5,000만원 미만	57(100.0)	20(35.1)	37(64.9)		
	5,000~8,000만원 미만	25(100.0)	12(48.0)	13(52.0)		
	8,000만원 이상	30(100.0)	14(46.7)	16(53.3)		
가구 월부채상환액(주택담보 포함)	부채 미보유	618(100.0)	160(25.9)	458(74.1)	24.421	.000
	0만원	198(100.0)	73(36.9)	125(63.1)		
	1~10만원 미만	37(100.0)	7(18.9)	30(81.1)		
	10~20만원 미만	50(100.0)	16(32.0)	34(68.0)		
	20~50만원 미만	86(100.0)	40(46.5)	46(53.5)		
	50~100만원 미만	31(100.0)	9(29.0)	22(71.0)		
	100만원 이상	21(100.0)	9(42.9)	12(57.1)		
가구 월부채상환액(주택담보 미포함)	부채 미보유	620(100.0)	161(26.0)	459(74.0)	18.847	.004
	0만원	238(100.0)	87(36.6)	151(63.4)		
	1~10만원 미만	27(100.0)	5(18.5)	22(81.5)		
	10~20만원 미만	42(100.0)	14(33.3)	28(66.7)		
	20~50만원 미만	73(100.0)	31(42.5)	42(57.5)		
	50~100만원 미만	24(100.0)	8(33.3)	16(66.7)		
	100만원 이상	18(100.0)	8(44.4)	10(55.6)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268(100.0)	39(14.6)	229(85.4)	22.995	.000
	현재 채무불이행	180(100.0)	30(16.7)	150(83.3)		
	해당 없음	594(100.0)	38(6.4)	556(93.6)		

구분		N	고정지출비율≤60%			
			불충족	충족	X^2	유의확률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391(100.0)	90(23.0)	301(77.0)	15.463	.017
	1~5일	114(100.0)	40(35.1)	74(64.9)		
	6~10일	239(100.0)	77(32.2)	162(67.8)		
	11~15일	81(100.0)	30(37.0)	51(63.0)		
	16~20일	111(100.0)	38(34.2)	73(65.8)		
	21~25일	26(100.0)	9(34.6)	17(65.4)		
	26일 이상	84(100.0)	30(35.7)	54(64.3)		

2) 재무스트레스의 차이

가구소득, 지출, 자산, 부채 수준에 따른 재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Ⅲ-4-13〉 참조).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재무특성에 따라 재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소득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집단(3.03점)이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낮아졌다(p=.004). 반대로 월지출 수준은 높아질수록 재무스트레스도 증가하였다. 월지출이 가장 높은 월150만원 이상 집단(2.92점)의 재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지출수준이 낮은 50~100만원 미만 집단(2.21점)에서 가장 낮았다(p=.000). 가구총예금액은 없는 집단(2.72점)에서 재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1,000만원 이상(1.94점)인 경우에는 크게 낮아졌다(p=.000). 월저축액도 많을수록 재무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적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 반대로 가구총부채 잔액은 많을수록 재무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총부채 잔액이 없는 경우 재무스트레스 점수가 2.30점이었으나, 5,000~8,000만원 미만인 경우 3.73점으로 크게 높아졌다(p=.000). 물론 가구부채상환액도 재무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채 미보유 집단은 2.30점이었으나, 월부채상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23점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채가 있으나 상환하고 있지 못하는 집단(월부채상환액 0원)의 경우 재무스트레스가 2.87점으로 월부채상환액이 1~10만원 미만인 집단(2.65점)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부채상환에 실패하고 현재(3.10점)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집단은 과거에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집단(2.82점)보

다 재무스트레스가 높았고, 과거에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2.30점)에 비해 재무스트레스는 더 높았다(p=.000).

끝으로 생활비 압박기간과 재무스트레스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난단 생활비잔액이 10만원 이하였던 날이 하루도 없었던 집단의 재무스트레스는 2.14점에 불과했으나 26일 이상인 집단은 2.97점으로 크게 높았다(p=.000). 모든 집단중에서 재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구 총부채 잔액이 5,000~8.000만원 미만인 집단(3.73점)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가구 총예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집단(1.94점)이었다.

〈표 Ⅲ-4-13〉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스트레스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a)	30	3.03	1.202	3.904	.004	a>b
	100~130만원 미만(b)	673	2.49	1.096			
	130~160만원 미만(c)	227	2.63	1.054			
	160~200만원 미만(d)	47	2.90	.936			
	200만원 이상(e)	68	2.74	1.125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a)	37	2.45	1.105	14.410	.000	b<c,d,e c<e
	50~100만원 미만(b)	260	2.21	1.069			
	100~125만원 미만(c)	428	2.56	1.038			
	125~150만원 미만(d)	113	2.79	1.093			
	150만원 이상(e)	207	2.92	1.073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a)	427	2.72	1.127	4.101	.000	a>g
	1~50만원 미만(b)	341	2.56	1.072			
	50~100만원 미만(c)	54	2.45	1.150			
	100~300만원 미만(d)	107	2.41	.946			
	300~500만원 미만(e)	46	2.36	1.041			
	500~1,000만원 미만(f)	37	2.47	.960			
	1,000만원 이상(g)	34	1.94	1.022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저축액	없음(a)	510	2.68	1.116	4.943	.000	a>g
	1~10만원 미만(b)	67	2.51	1.168			
	10~20만원 미만(c)	244	2.57	1.050			
	20~30만원 미만(d)	91	2.60	1.050			
	30~40만원 미만(e)	39	2.05	.972			
	40~50만원 미만(f)	28	2.31	.921			
	50만원 이상(g)	68	2.10	.940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a)	620	2.30	1.035	20.258	.000	a<b,c,d,e,f,g d<f
	1~499만원 미만(b)	122	2.81	1.039			
	500~1,000만원 미만(c)	56	2.88	.912			
	1,000~3,000만원 미만(d)	132	2.90	1.025			
	3,000~5,000만원 미만(e)	57	2.91	.916			
	5,000~8,000만원 미만(f)	25	3.73	1.303			
	8,000만원 이상(g)	30	3.54	1.089			
가구 월부채 상환액	부채 미보유(a)	620	2.30	1.032	18.072	.000	a<b,d,e,f,g
	0만원(b)	214	2.87	1.078			
	1~10만원 미만(c)	30	2.65	1.099			
	10~20만원 미만(d)	47	2.99	1.051			
	20~50만원 미만(e)	79	3.18	.977			
	50~100만원 미만(f)	31	3.06	1.058			
	100만원 이상(g)	20	3.23	.967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a)	268	2.82	1.061	51.376	.000	c<a<b
	현재 채무불이행(b)	181	3.10	1.057			
	해당 없음(c)	596	2.30	1.028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a)	392	2.14	.986	19.692	.000	a<b,c,d,e,f,g
	1~5일(b)	114	2.63	.984			
	6~10일(c)	239	2.71	1.057			
	11~15일(d)	81	2.94	.973			
	16~20일(e)	111	3.01	1.134			
	21~25일(f)	26	2.96	1.073			
	26일 이상(g)	84	2.97	1.180			

3) 재무관리역량의 차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를 알아보았다(〈표 Ⅲ-4-14〉 참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변수들은 재무관리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참여자 가구 월소득이 130~160만(2.68점)인 집단이 100만원 미만(2.47점)이거나 160~200만원 미만(2.68점)인 집단보다 재무관리역량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과 재무관리역량의 관계가 선형(linear)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그 중간 집단에 비해 재무관리역량 점수가 낮았다. 재무관리역량을 설명할 때 소득변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가구의 월지출은 월소득과 달리 재무관리역량 점수와 분명한 선형관계를 보였다. 가구의 월지출이 증가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낮아졌다(p=.000). 구체적으로 가구 월지출이 50~100만원 미만(3.77점)인 경우, 100~125만원 미만(3.25점), 125~150만원 미만(2.96점), 150만원 이상(2.75점) 집단보다 재무관리역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소득수준이 비슷한 자활사업 참여자 사이에서 결국 재무관리역량의 차이는 소비 조절 또는 통제 수준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가구총예금액도 재무관리역량의 차이와 관련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가구총예금액이 많으면 재무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예금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특히 가구총예금액이 300~500만원 미만(4.54점) 집단이 전혀 없거나(2.72점) 1~50만원 미만(3.38점)인 집단에 비해 재무관리역량 점수가 높았다(p=.000). 이러한 경향은 월저축액과 재무관리역량 관계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났다. 가구 월저축액이 전혀 없는 집단(2.75점)에 비해 40~50만원 미만인 집단(5.04점) 등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월저축하는 집단의 재무관리역량 점수가 더 높았다(p=.000).

한편 가구총부채 잔액과 월부채상환액은 앞서 살펴본 가구총예금액과 월저축액과 정확히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가구의 총예금액이 전혀 없는 집단의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3.64점인데 반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1.97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월저축액도 부채 미보유로 월부채

상환액이 전혀 없는 경우(2.75점)에 비해 예컨대 100만원 이상인 집단(2.05점)에 비해 더 높았다(p=.000). 물론 과거(2.86점)나 현재(2.51점)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3.66점)에 비해 재무관리역량이 낮았다.

끝으로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생활비 압박 기간과 통계적으로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 생활비잔액이 10만원 이하로 내려간 날짜가 전혀 없는 집단(4.05점)에 비해 생활비잔액이 10만원 이하일 날짜수가 한달간 1~5일인 집단(3.30점) 그리고 26일 이상인 집단(2.60점) 등의 재무관리역량 점수가 크게 낮았다(p=.000).

〈표 Ⅲ-4-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a)	30	2.47	1.525	4.620	.001	c>a,d
	100~130만원 미만(b)	673	3.23	1.889			
	130~160만원 미만(c)	227	3.63	1.988			
	160~200만원 미만(d)	47	2.68	1.831			
	200만원 이상(e)	68	3.13	1.831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a)	37	3.59	1.878	9.526	.000	b>c,d,e c>e
	50~100만원 미만(b)	260	3.77	1.905			
	100~125만원 미만(c)	428	3.25	1.859			
	125~150만원 미만(d)	113	2.96	1.910			
	150만원 이상(e)	207	2.75	1.891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a)	427	2.72	1.755	14.559	.000	a<b,c,d,e,g b<e
	1~50만원 미만(b)	341	3.38	1.924			
	50~100만원 미만(c)	54	3.87	1.843			
	100~300만원 미만(d)	107	3.64	1.880			
	300~500만원 미만(e)	46	4.54	1.735			
	500~1,000만원 미만(f)	37	3.84	1.965			
	1,000만원 이상(g)	34	4.38	1.92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가구 월저축액	없음(a)	510	2.75	1.737	20.582	.000	a<b,c,d,e,f,g b<e,f c<e,f d<f
	1~10만원 미만(b)	67	3.31	1.994			
	10~20만원 미만(c)	244	3.45	1.864			
	20~30만원 미만(d)	91	3.59	1.926			
	30~40만원 미만(e)	39	4.77	1.630			
	40~50만원 미만(f)	28	5.04	1.875			
	50만원 이상(g)	68	4.32	1.912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a)	620	3.64	1.867	13.334	.000	a>b,d,e,g
	1~499만원 미만(b)	122	2.89	1.855			
	500~1,000만원 미만(c)	56	3.18	1.927			
	1,000~3,000만원 미만(d)	132	2.45	1.813			
	3,000~5,000만원 미만(e)	57	2.63	1.622			
	5,000~8,000만원 미만(f)	25	2.84	1.650			
	8,000만원 이상(g)	30	1.97	1.650			
가구 월부채 상환액	부채 미보유(a)	620	3.64	1.867	13.726	.000	a>b,e,f,g
	0만원(b)	214	2.79	1.904			
	1~10만원 미만(c)	30	3.07	1.818			
	10~20만원 미만(d)	47	3.17	1.723			
	20~50만원 미만(e)	79	2.43	1.692			
	50~100만원 미만(f)	31	1.94	1.526			
	100만원 이상(g)	20	2.05	1.395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a)	268	2.86	1.869	35.238	.000	a,b<c
	현재 채무불이행(b)	181	2.51	1.766			
	해당 없음(c)	596	3.66	1.863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a)	392	4.05	1.853	20.049	.000	a>b,c,d,e,g b>d,e
	1~5일(b)	114	3.30	1.734			
	6~10일(c)	239	2.96	1.805			
	11~15일(d)	81	2.32	1.515			
	16~20일(e)	111	2.36	1.838			
	21~25일(f)	26	3.00	1.497			
	26~30일(g)	84	2.60	1.864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와 재무건전성의 관계 요약

이상으로 살펴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와 재무건전성의 관계를 하나의 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표 Ⅲ-4-15〉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셀은 두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또한 해당 변수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한다(최고 값과 나머지가 값이 거의 같을 경우 동그라미가 둘 이상일 수 있음).

〈표 Ⅲ-4-1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관계 요약

구분		재무상태						
		가계수지비율(1미만)	유동성비율	월저축률	총부채상환비율(40%)	고정지출비율	재무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	
	100~130만원 미만				○	○		○
	130~160만원 미만	○			○	○		
	160~200만원 미만				○	○		
	200만원 이상				○	○		
가구 월지출	50만원 미만	○	○					
	50~100만원 미만	○		○				
	100~125만원 미만			○				○
	125~150만원 미만			○			●	○
	150만원 이상			○			●	
가구 총예금 잔액	없음						●	
	1~50만원 미만			○				
	50~100만원 미만			○				○
	100~300만원 미만			○				○
	300~500만원 미만		○	○				○
	500~1,000만원 미만		○	○				○
	1,000만원 이상		○	○			●	○
가구 월저축액	없음				○	○	●	○
	1~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	○
	20~30만원 미만			○			●	○
	30~40만원 미만			○			●	○
	40~50만원 미만			○	○			○
	50만원 이상		○	○				○
가구 총부채 잔액	없음	○				○		○
	1~499만원 미만						●	
	500~1,000만원 미만						●	
	1,000~3,000만원 미만						●	
	3,000~5,000만원 미만						●	
	5,000~8,000만원 미만						●	
	8,000만원 이상						●	

구분		재무상태						
		가계수지비율(1미만)	유동성비율	월저축률	총부채상환비율(40%)	고정지출비율	재무스트레스	재무관리역량
가구 월부채상환액	부채 미보유	○	○		○	○		○
	0만원				○	○		
	1~10만원 미만		○		○	○	●	
	10~20만원 미만				○	○	●	
	20~50만원 미만				○		●	
	50~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과거 채무불이행					○	●	
	현재 채무불이행					○	●	
	해당 없음	○	○		○	○		○
생활비 압박 기간	없음	○	○		○	○		○
	1~5일						●	
	6~10일						●	
	11~15일						●	
	16~20일						●	
	21~25일						●	
	26~30일						●	

제5절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재무건전성 유형과 특성

1.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재무건전성 유형과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가구를 유형화하였다. 재무건전성 유형화는 5개의 재무비율을 조합한 Khashadourian(2017)의 모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Ⅲ-5-1〉 및 [그림 Ⅲ-5-1]과 같다. 먼저 가구 유형화1의 가계수지비율은 1미만, 유동성비율은 200% 이상, 월저축률은 10% 이상, 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대출 포함)은 40% 미만, 고정지출비율은 60% 이하인 가구이다. 그 결과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위험 흑자가구'가 5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역시 유동성이 부족한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14.4%)와 유동성 문제와 부채부담이 모두 큰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10.3%), 자산과 부채 문제 모두 없는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8.4%)의 순이었다.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고도 부채상환 부담이 큰 흑자가구와 적자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유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부채상환규모도 크다는 사실과 대조되는 결과이다.[20]

한편,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채상환만을 고려한 총부채상환율 15%미만 기준을 적용하여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가구 유형화2). 그 결과, 전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가구 유형화1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유형 A~E까지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가장 큰 차이는 총부채상환비율 40% 미만을 적용한 가구 유형화1에서 10.3%를 차지했던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의 비중이 4.0%로 크게 줄고, 대신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의 비율(F

20)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을 분석한 장동호(2019)의 연구에 따르면, 가계가 흑자고 적정 유동성도 보유했지만 부채상환부담이 높은 '부채위험 흑자가구'가 저소득층(하위소득 20%)에서는 6.4%로 나타난 반면, 중산층(하위소득 20%이상~상위소득 20%미만), 고소득층(상위소득 20% 이상)에서는 13.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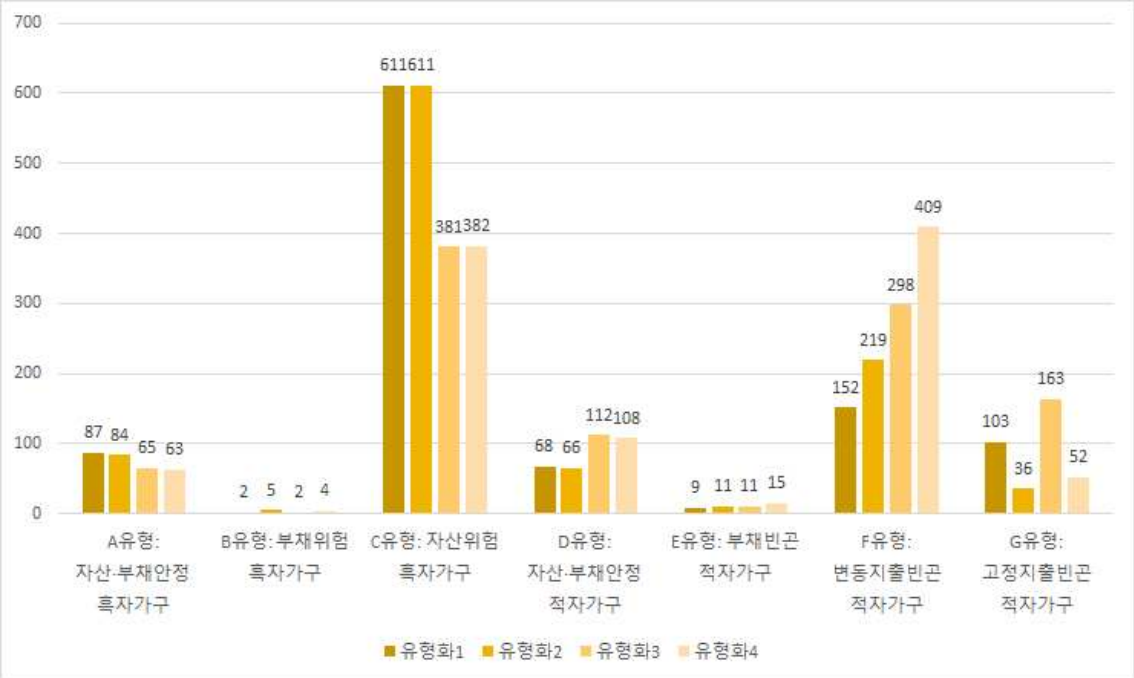
유형)이 14.4%에서 20.7%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유형화1에 비해 부채빈곤가구의 규모가 조금 더 줄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의 관점에서 좀 더 관대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가계재무비율을 1미만이 아닌 0.9 미만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가계 재무건전성 가구 유형화3). 이는 단순히 가계수지가 흑자인가만이 아닌, 유동성 확보 또는 부채상환 부담 개선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금흐름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설정이다. 〈표 Ⅲ-5-1〉과 [그림 Ⅲ-5-1]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유형화1의 가구 유형별 비중의 순서가 같지만, 흑자가구에 속하는 유형 A와 C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적자가구 중에서 F유형과 G유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화1의 결과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재무건전성 유형화 결과이다.

끝으로 유형화4는 총부채상환비율 0.9미만과 유형화2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채만 고려한 후 15%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Ⅲ-5-1〉와 [그림 Ⅲ-5-1]을 자세히 보면, G유형의 상당수가 F유형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살펴봤던 모든 유형화에서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이 C유형(자산위험 흑자가구)이었지만, F유형(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이 가장 높은 비중(38.4%)을 보였다. 물론 유형화4에서 C유형(자산위험 흑자가구)의 비율은 37.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화4의 결과는 유형화3에 비해 재무건전성의 측면에서 좀 더 관대한 결과이다.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보유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총부채상환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Ⅲ-5-1〉 가계 재무건전성의 가구 유형과 현황

구분			전체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	부채위험 흑자가구	자산위험 흑자가구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	부채빈곤 적자가구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
유형화1	가계수지비율<1.0, 총부채상환비율≤40%	N(가구)	1,032	87	2	611	68	9	152	103
		백분율(%)	100.0	8.4	0.2	59.2	6.6	0.9	14.7	10.0
유형화2	가계수지비율<1.0, 총부채상환비율≤15%	N(가구)	1,032	84	5	611	66	11	219	36
		백분율(%)	100.0	8.1	0.5	59.2	6.4	1.1	21.2	3.5
유형화3	가계수지비율<.09, 총부채상환비율≤40%	N(가구)	1,033	65	2	381	112	11	298	163
		백분율(%)	100.0	6.3	0.2	36.9	10.9	1.1	28.9	15.8
유형화4	가계수지비율<.09, 총부채상환비율≤15%	N(가구)	1,033	63	4	382	108	15	409	52
		백분율(%)	100.0	6.1	0.4	37.0	10.5	1.5	39.6	5.0



[그림 Ⅲ-5-1] 가계 재무건전성의 가구 유형화

2.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재무건전성 유형별 재무 및 심리사회 상태

1) 재무건전성 유형별 재무상태

여기에서는 분석과 해석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7가지 재무건전성 유형 중에서 유형별 빈도가 10명 내외인 '부채위험 흑자가구'(B유형)와 '부채빈곤 적자가구'(E유형)를 제외한 5가지 유형별로 가구의 재무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계수지비율 가이드라인을 1.0과 0.9로 분석모델을 달리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결과 변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자활사업 종사자 또는 참여자는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이 속해 있는 재무건전성 유형의 재무상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향후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속하고자 하는 유형의 평균치와 최소기준 그리고 최대기준을 알 수 있다. 재무건전성 진단과 목표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재무건전성 유형별 재무상태와 관련한 두 개의 분석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먼저 재무

건전성 유형화 I (가계수지비율 1.0 미만과 총부채비율 40% 이하) 방식을 적용하여 총 5가지 재무건전성 유형의 재무상태. 〈표 Ⅲ-5-2〉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듯이, 가구 월소득과 가구 월지출은 가계흑자와 적자가구를 명확히 경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의 총자산과 월저축액 그리고 총부채와 월부채상환액도 각각 재무건전성 유형 중 자산안정과 위험(빈곤), 부채안정과 위험(빈곤)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의 채무불이행 경험과 생활비 압박 기간은 재무건전성 유형을 A유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F유형에 가깝게 하는데 일관성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표 Ⅲ-5-2〉는 재무상태 지표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준다. 첫째, 자산에 대한 부채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상관없이 부채안정에 해당하는 가구유형에서 총예금액도 많았고 월저축액도 많았다. 즉, 부채문제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자산형성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자산이 안정되어 있는 가구라고 해서 반드시 부채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채규모가 자산규모에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가계의 소득수준 또는 흑자와 적자가 금융자산이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흑자가구에 해당하는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명)와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1명)는 각각 월평균 소득이 135.20만원과 128.92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가구 평균 총예금액은 각각 659.63만원과 22.01만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월저축액도 각각 29.02만원과 8.87만원으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Ⅲ-5-2〉 자활사업 참여가구 재무건전성 유형화 I 에 따른 재무상태의 차이: 가계수지비율 1.0 미만 & 총부채상환비율 40% 이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가구월소득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135.20	39.601	105	300	1.080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1	128.92	32.655	68	394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129.10	48.376	29	305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134.42	45.452	60	34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128.93	42.438	55	290		
가구월지출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98.84	43.168	20	280	102.179 ***	a,c<d,f,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1	99.43	32.341	10	35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165.15	74.410	80	43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158.70	58.453	60	4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157.87	56.561	70	365		
가구총예금잔액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659.63	560.163	80	2900	110.190 ***	c,f,g<a,d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1	22.01	45.409	0	36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311.16	721.819	10	500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84.72	198.311	0	10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93.67	297.342	0	2400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가구월저축액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29.02	44.084	0	300	63.110***	a,d<g<f<c<a<d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1	8.87	14.420	0	1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39.21	38.882	10	25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3.15	4.903	0	2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3.74	5.470	0	24		
가구총부채잔액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323.79	1013.235	0	6000	2.721*	a<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1	995.13	3526.489	0	450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1392.40	6122.333	0	5000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1189.81	2301.862	0	170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1951.17	4585.957	0	30000		
가구월부채상환액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1.49	5.945	0	40	4.773**	a<g d<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1	5.90	18.086	0	177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1.74	5.388	0	3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8.36	27.854	0	29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12.04	22.236	0	100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본인채무불이행경험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21	.407	.00	1.00	10.873 ***	a<c,f,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1	.40	.491	.00	1.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44	.500	.00	1.0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51	.502	.00	1.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64	.482	.00	1.00		
생활비압박기간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4.72	7.823	0	31	18.067 ***	a<f,g c<f,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1	7.55	8.791	0	31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9.18	8.855	0	29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11.84	9.927	0	31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13.30	9.876	0	31		

*p<.05 **p<.01 ***p<.001

〈표 Ⅲ-5-2〉의 연구결과는 가계수지비율 가이드라인을 0.9로 낮춘 〈표 Ⅲ-5-3〉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계수지비율 가이드라인을 0.9로 낮춤으로서 A유형과 C유형이 D유형, F유형, G유형이 늘었지만, 재무건전성 유형과 재무상태 지표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

〈표 Ⅲ-5-3〉 자활사업 참여가구 재무건전성 유형화Ⅲ에 따른 재무상태의 차이: 가계수지비율 .9 미만 & 총부채비율 40% 이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가구월소득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134.58	40.000	105	300	6.420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131.75	36.547	68	394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127.91	41.833	29	305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129.62	37.728	60	34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3	127.99	36.105	55	290		
가구월지출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89.06	40.940	20	250	82.332	a,c<d,f,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89.29	32.457	10	35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146.64	64.641	80	43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138.34	49.916	60	4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3	143.47	50.310	70	365		
가구총예금잔액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657.66	579.484	80	2900	74.816***	c,d,f,g<a,d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23.28	46.933	0	36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259.77	591.940	0	500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7	66.08	206.283	0	20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3	85.97	279.083	0	2400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가구월저축액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31.45	49.064	0	300	83.339***	c,f,g<a,d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9.85	15.685	0	1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35.79	32.374	10	25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2.97	4.617	0	2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3	4.20	5.315	0	24		
가구총부채잔액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264.77	936.845	0	6000	3.681**	c<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715.18	2,993.550	0	400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1,065.40	4,829.410	0	5000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1,440.87	3,856.134	0	450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3	1,672.91	4,016.866	0	30000		
가구월부채상환액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1.17	4.755	0	30	3.480**	a,d<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6.36	19.153	0	177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2.85	7.384	0	45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7.22	23.155	0	29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3	9.63	19.950	0	100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본인 채무 불이행 경험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17	.378	.00	1.00	10.929***	a<d,f,g c<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36	.482	.00	1.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45	.499	.00	1.00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48	.500	.00	1.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3	.58	.496	.00	1.00		
생활 비압박 기간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3.80	7.172	0	31	14.103***	a,c<d,f<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7.15	9.166	0	31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7.96	8.008	0	29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10.16	9.483	0	31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3	11.70	9.386	0	31		

*p<.05 **p<.01 ***p<.001

2) 재무건전성 유형별 자기인식 및 정서

(1) 재무건전성 유형화 I 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재무건전성 유형별로 응답자의 자기인식 및 정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가계수지비율 충족도를 1.0 미만과 0.9 미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투입된 자기인식 및 정서 관련 변수 중에서 직무만족도, 미래지향,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자기효능감의 재무건전성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계수지비율 1.0 미만 모델의 경우,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에 속하는 경우 그 반대인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p<.05$). 미래지향은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좋은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3.45), '자산위험 흑자가구'(3.31),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3.54)에서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3.12)에 비해 훨씬 높았다. 우울감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였다. 재무건전성이 좋은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14.94), '자산위험 흑자가구'(17.68),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15.51)보다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21.18)에서 훨씬 높았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가계수지비율의 가이드라인을 .90 미만으로 낮춘 분석결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른 점은 가구유형별 직무만족도 차아기 통계적 유의미함을 잃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 재무건전성 유형에 따른 미래지향이나 우울감은 전반적으로 유형화 I (가계수지비율 1.0미만 적용)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재무건전성 가구유형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심리사회적 상태가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보다는 바로 그 위의 유형인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에서 더 나쁘다는 사실이다. 〈Ⅲ-5-2〉와 〈표 Ⅲ-5-3〉의 결과를 보면,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후자가 전자에 비해 특별히 더 나쁜 것은 가구총예금액과 가구월저축액 밖에 없다. 저축과 자산의 부족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Ⅲ-5-4〉 자활사업 참여가구 재무건전성 유형화 I 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자기효능감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3.53	.666	1.88	5.00	.340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0	3.53	.596	2.06	5.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3.56	.522	2.47	4.76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3.47	.652	1.94	5.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3.52	.594	2.12	4.76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직무만족도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3.68	0.664	1.73	5.00	2.551*	a>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0	3.57	0.675	1.09	5.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3.55	0.623	2.45	4.82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3.59	0.664	1.00	5.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3.39	0.768	1.55	5.00		
미래지향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3.45	0.651	1.50	4.75	7.403**	a,c,d>f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0	3.31	0.598	1.00	5.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3.54	0.590	2.25	4.88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3.12	0.681	1.00	4.88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3	3.34	0.551	2.00	5.00		
우울감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87	14.94	10.312	0	44	8.092**	a,c,d<f, 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610	17.68	11.655	0	57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68	15.51	11.862	0	49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152	21.18	12.570	0	52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02	22.22	13.331	0	56		

*p<.05 **p<.01 ***p<.001

(2) 재무건전성 유형화II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

〈표 III-5-5〉 자활사업 참여가구 재무건전성 유형화III에 따른 자기인식 및 정서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자기효능감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3.48	0.671	1.88	5.00	.403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3.52	0.611	2.06	5.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3.58	0.523	2.47	4.82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3.50	0.632	1.94	5.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2	3.53	0.582	2.12	4.88		
직무만족도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3.69	0.670	1.73	5.00	2.261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3.61	0.710	1.09	5.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3.57	0.594	2.45	4.82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3.55	0.639	1.00	5.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2	3.45	0.735	1.55	5.00		
미래지향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3.45	0.682	1.50	4.75	8.293***	f<a,c,d,g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3.34	0.607	1.00	5.00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3.48	0.609	1.50	4.88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3.16	0.616	1.00	5.00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2	3.36	0.583	1.13	5.00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사후 검증
우울감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A유형)	65	15.82	10.291	0	44	4.063**	d<f
	자산위험 흑자가구(C유형)	381	17.52	11.356	0	57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D유형)	112	15.84	11.367	0	49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F유형)	298	19.88	12.794	0	52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G유형)	161	19.64	12.910	0	56		

*p<.05 **p<.01 ***p<.001

제6절 소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 1,047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가계재무건전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가계재무건전성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상태, 자기인식 및 정서 등을 조사하고 재무건전성과의 관계를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의 후반부에서는 재무건전성의 여러 지표들을 활용하여 자활사업 참여가구를 유형화하였으며, 그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상태,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선행연구들(박경아, 2013; 김정원 외, 2014)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과 50대 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학력은 낮고, 특히 이혼과 월세거주 그리고 단독가구 비율이 높았다. 재무상태를 보면, 가구 월소득이 평균 130.24만원, 월지출이 평균 118.01만원이었다. 월소득이 월지출보다 12.23만원 많았다. 가구 총예금액은 평균 115.23만원이었다. 월 저축액은 평균 11.54만원이었으며, 매월 저축을 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48.7%로 절반에 가까웠다.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통장과 같은 정부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도 63.7%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구 총부채 잔액은 전체 가구 평균 1,084.97만원, 부채보유 가구(40.5%) 평균 2,677.77만이었다. 부채보유 가구의 월부채 상환액은 22.30만원으로 저축가구의 저축액 22.51만원과 거의 같은 금액이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채무불이행 경험으로 표출되었다. 본인이 과거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경우는 25.6%, 현재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경우는 17.3%였으며, 본인외 가구원이 현재 또는 과거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은 26.5%(2인 가구 이상 33.5%)로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무역량강화가 가구단위로 수행되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응답자들의 생활비 압박 기간(1개월 동안 생활비 잔액 10만원 이하 일수)은 한달 평균 8.77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구에서 수급 일까지 10만원 이상의 생활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는 37.4%였다.

응답자들의 자기인식 및 정서를 보면, 자기효능감은 2.51점(5점 만점), 직무만족도는 3.56점(5

점 만점), 미래지향은 3.31점(5점 만점), 우울은 1.9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을 재무비율의 가이드라인 충족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은 가계수지비율1(1.0 미만) 충족률은 68.0%였다. 전체 응답자의 32.0%만 적자가구임을 의미한다. 가계수지비율2(.90), 즉 월소득의 90%미만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여윳돈을 남기는 가구는 44.5%였다. 유동성비율은 재무비율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표였다. 2개월 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여윳돈(저축 잔액)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12.4%에 그쳤다. 대부분의 자활사업 참여가자 유동성이 취약하여 일시적인 경제적 충격에도 재무상태가 쉽게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가구 처분가능소득에서 대출원리금상환액의 부담을 뜻하는 총부채상환율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부채부담이 적어서가 아닌, 상환능력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월소득에서 월세나 대출상환금 등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계의 재무구조가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경우는 69.9%였다. 추가 저축이나 투자 등이 어려운 재무구조를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가 70%임을 뜻한다. 응답자의 재무스트레스는 2.57점(5점 만점),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한 재무관리역량에 대해서는 문항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절반정도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을 해주었다.

가구 지출과 총부채 잔액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혼, 가구원 수, 자녀수였다. 기혼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과 부채부담은 늘어났다. 총부채 잔액이 남성, 대졸 이상, 기혼, 비단독가구, 유자녀가구 등에서 크게 높다는 점도 부채문제의 당사자가 전통적인 빈곤문제의 당사자와 다름을 시사한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총부채 잔액이 절반수준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본인 채무불이행의 경험도 상대적으로 고학력이 높았다.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가운데 채무불이행 경험자가 많은 것은 부채문제가 빈곤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원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수준도 높아지지만, 생활비 압박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다. 재무역량강화의 효과성이 다인가구에서 더 높음을 있다는 것이다.

재무비율의 가이드라인 충족률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계수지비율의 경우 기혼이며 가구원과 자녀수가 많아 생활비 규모가 크고 지출요인이 복잡할 수 있는 가구에서 충족률이 낮았다. 유동성비율은 응답자가 남성일 경우 월세 등 고정비가 많은 경우 낮았으며, 월저축률도 응답자가 남성이고 20대 이하에서 낮았다.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부채상환을 하고 있는 가

구는 이혼가구, 공공임대 거주가구였다. 고정지출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는 고졸 이상, 기혼, 그리고 상대적 많은 가구원과 자녀를 둔 가구였다. 한편 재무스트레스 점수도 고정지출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도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무관리역량은 60대 이상, 중졸이하 집단에서 높았다. 가구원,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재무관리역량은 줄어들었으며, 조건부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의 재무관리역량이 더 좋았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4□5년 미만일 경우,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재무관리역량 점수도 더 높았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상태와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재무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었다. 반면 재무상태, 특히 가구총예금액과 가구 월저축액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미래지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적된 자산이 직무만족과 미래지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한편, 재무상태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거의 모든 지표와 관련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요컨대, 직무만족도, 미래지향은 자산과 관련된 재무지표, 그리고 우울은 자산을 포함해 부채까지 거의 모든 재무지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재무비율 가운데 가계수지비율의 가이드라인 충족률을 위해서는 월지출, 총부채 잔액, 월부채상환액이 작은 것이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거나 생활비 압박이 심한 경우 가계수지비율의 충족은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지출과 부채는 유동성비율 충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압박기간에 따른 유동성의 차이는 있었지만, 월저축률의 차이는 없었다. 물론 월저축률 역시 가계지출이 적을수록 충족률이 높았지만, 총부채 잔액과 부채상환액이 많다고 해서 월저축을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드시 월저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구형편이 안 좋은 경우에만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총부채 잔액과 월부채상환액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과거 채무불이행도 총부채 잔액상환 부담에 차이를 준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경험자의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이후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고정비율의 충족률은 지출이 적고, 총예금액이나 월

저축액이 많을 경우, 총부채와 월부채상환이 적은 경우 높았다. 한편 재무스트레스는 소득이 낮고, 총예금액과 월저축액이 적고, 총부채 잔액과 월부채상환액이 많을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 경험과 생활비 압박기간도 재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스트레스와 정확히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끝으로 이 장에서는 Khashadourian(2017)이 제안한 5가지 재무비율(가계수지비율, 유동성비율, 월저축률, 총부채상환비율, 고정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자활사업 참여가구에 대한 재무건전성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Khashadourian(2017)도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40% 이하와 15% 이하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도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가계수지비율도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듯 1.0 미만이 아닌 좀 더 보수적인 .9 미만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4가지 다른 방식의 유형화가 가능하였다. 전체적으로 유형별 가구분포를 보면, 총 7가지 유형 가운데 C유형인 '자산위험 흑자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F유형인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였다. 앞선 분석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유동성, 즉 저축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와 직결된 내용이다. 가계수지비율을 1.0 미만이 아닌 .9 미만을 적용할 경우 흑자가구인 C유형은 크게 줄고 적자가구인 F유형이 크게 늘었으며, 총부채상환비율을 40% 이하가 아닌 15% 이하를 적용할 경우 F유형인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가 늘고 G유형인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는 크게 줄었다. 총 4가지의 유형화 방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유형화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총부채비율의 경우, 특별히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다른 상환부채와 구분하기 어렵다면, 총부채 40% 이하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흑자와 적자가구의 현황분석이 아닌 재무목표 또는 개입목표로서 가계수지비율에 의미를 둔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의 현금흐름(최소 소득의 10%)을 기준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9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제 4 장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1절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
제2절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제3절 소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빈 페이지-

제1절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1. 자활 재무역량강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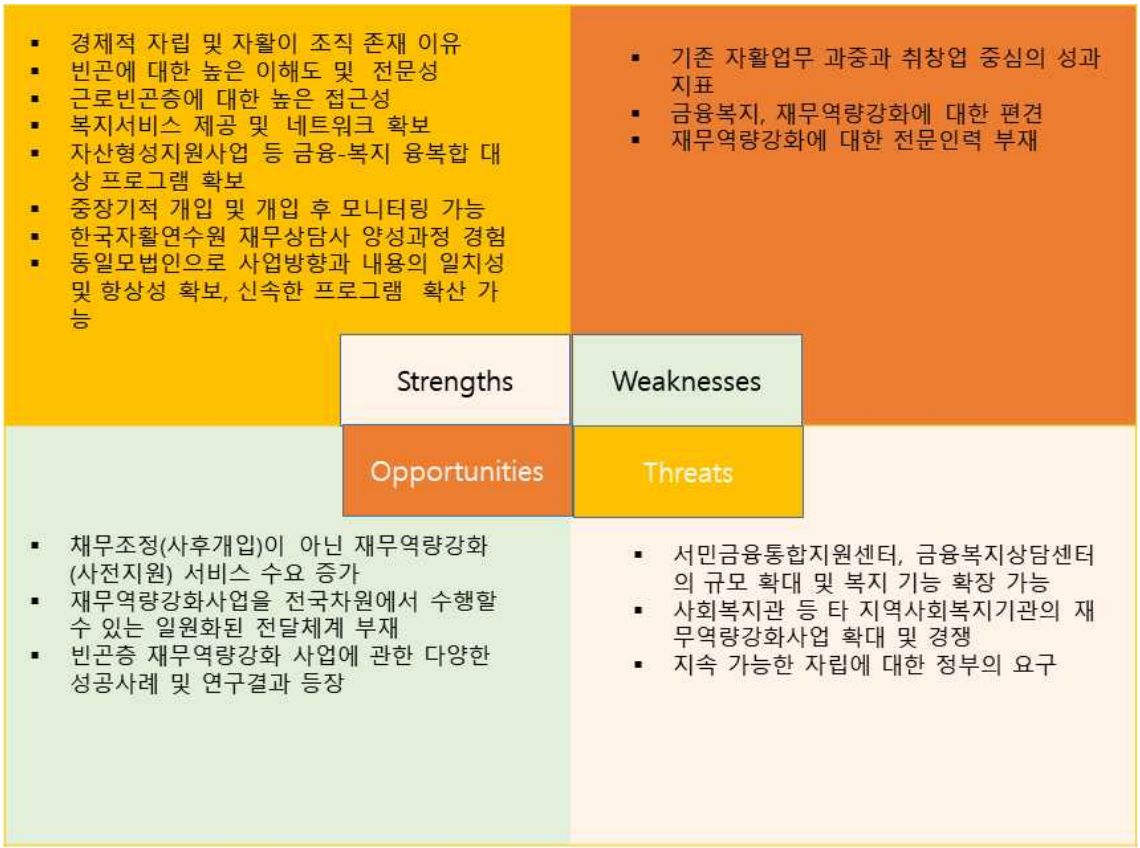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전달체계가 재무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능을 도입·확장해야 할 구조적인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무역량 위기와 관련 있다.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 1,046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제 3장)에서 보았듯이, 자활사업 참여자간 재무건전성의 차이가 크다. 소득수준은 큰 차이가 없지만, 가구구조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추가지출이 필요한 가구가 있고, 직무만족도나 미래지향 그리고 우울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들도 재무건전성과 상호작용하는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활사업 참여가구 중 가계수지 흑자 가구가 68.0%, 적자가구가 32.0%, 2개월 치 이상의 예금 잔액을 보유한 가구가 12.4%, 그렇지 않은 가구가 87.6%, 매월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 가구가 24.2%, 그렇지 않은 가구가 75.8%, 본인이 과거나 현재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가구가 42.9%, 그렇지 않은 가구가 57.1% 등으로 가구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재무적·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과 미래 자활·자활에 결정적인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립이후 더 나은 직장 또는 더 많은 수입이 생기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득계층이 바뀌지 않은 한 재무역량 강화 없이 약간의 소득증가만으로는 재무건전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소득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제 3장 참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과 재무역량강화에 지역자활센터 등의 역할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접근성(accessibility)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로빈곤층의 재무문제에 지역자활센터 만큼 높은 접근성을 가진 공적 전달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 재무건전성 개선과 관련한 사업들이 금융당국 또는 금융문제 전문 상담기관 등의 역할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미국에서는 지역사회복지 및 시민사회

단체 등의 역할비중이 매우 높다(Sherraden, Birkenmaier, & Collins, 2018). 접근성이 강조되는 것은 한두 번의 재무·채무상담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재무역량강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Câmara & Tuesta, 2014)

2.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가능성

넓게 보면 빈곤층의 재무건전성과 재무역량강화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다양한 조직에서 할 수 있다. 이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재무역량강화사업을 하더라도 기능이 중복될 경우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일명 기존 금융복지기관들과 기능중복을 최소화하고 자활센터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SWOT 분석을 통한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그림 Ⅳ-1-1]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에 대한 SWOT 분석

1)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강점

자활기관이 재무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목표와 이용자의 특성 또는 욕구 자체가 근로빈곤층의 재무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강점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자활기관만큼 경제적 자립이 조직사업의 핵심목표인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자활기관은 재무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조직의 핵심 사업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이용대상과 기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는 재무역량강화사업이 당연사업이 아닌 이용자 만족도에 따라 사업의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사업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그러기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용자의 복지욕구도 자활사업에서는 좀 더 재무역량강화에 집중될 수 있다.

둘째, 자활기관만큼 빈곤과 근로빈곤층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빈곤층의 재무역량강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무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다. 빈곤가구가 처해있는 특수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재무상담이나 코칭 그리고 교육은 효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무문제만이 아닌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적 진단이 전제되지 않은 재무상담은 실행되지 못하거나 거부감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장동호, 2013).

셋째, 자활기관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에 대해 가장 높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기초자치단체에 249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관을 찾아 이용하고 있다. 대상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갖지 못한 장점이다. 재무상담과 같은 재무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복지기관 이용자들도 많은 부정적 경험과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 자발성에만 기초할 경우 대상자 모집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근로빈곤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자활센터가 재무역량강화사업의 핵심기관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넷째,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원 네트워크 확보도 재무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자활기관이 수행할

때의 기대할 수 있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연체문제나 채무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해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더 줄어들 수 있으며, 이를 우려하여 문제해결을 오히려 미루기도 한다.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지출비율을 낮추는 과정도 개인의 결심과 더불어 외부자원(예: 긴급복지지원)의 연계가 동반되어야 시작할 수 있고 완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자활기관들은 참여자의 재무나 채무문제 해결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종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참여자에게 연결해줄 수 있고, 참여자와 지역사회자원을 직접 연결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재무역량강화가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다섯째, 자활기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Gateway 등 재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존 자활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재무역량강화사업을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존 프로그램에 이를 접목하는 것이다(CFED, 2015). 특히 자산형성이나 자립설계 서비스와 재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결합된다면 대단한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s)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아직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 많은 이들이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부족한 재무역량이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별 자립경로(IAP) 설정을 위한 진단과 계획에 재무역량이 포함된다면 실질적으로 Gateway의 성과도 높이고 재무역량강화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장기적 개입 및 개입 후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가 가능하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종사자로서 일회성 개입이 아닌 중장기적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재무역량강화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의 이용자와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는 사후모니터링 한계의 문제가 자활센터가 재무역량강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소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금융복지상담센터 이용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기관협약 등을 통해 공식 활성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곱째, 이미 같은 법인인 한국자활연수원에서 2017년부터 자활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재무상담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을 수료한 상당수의 자활사업 종사자들이 향후 재무역량강화 사업이 도입·확대될 경우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개발 운영되고 있는

재무역량강화 관련 교육 커리큘럼으로 인해 향후 재무코칭이나 교육 등의 커리큘럼이 개발 운영된다면 효율적으로 재무역량강화 교육 체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의 재무 문제에 대한 개입역량도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덟째, 전국 249개의 지역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의 모법인이 같다는 것도 강점이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의욕적으로 재무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개별 기관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기관장 또는 외부 사업비 지원기관의 판단에 의해 사업이 쉽게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떤 기관에서 우수 사례가 개발되더라도 법인의 차이 때문인지 다른 기관과의 공유가 쉽지 않고, 인력양성이나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자활기관은 경쟁, 소통, 예산효율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2)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약점

재무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활기관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대처한다면 자활기관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다.

첫째, 인력부족으로 인해 자활업무가 과중하다. 특히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이 잦은 점도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맞는 전문 프로그램 운영의 걸림돌이다. 성과지표도 문제이다.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취창업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어, 전문 프로그램의 수행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충원과 더불어 성과지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여주는 재무계획수립, 자산형성, 채무조정, 신용개선 등도 중요한 성과지표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복지, 재무역량강화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금융복지를 채무조정, 재무역량강화는 금융전문가나 재무상담사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경험을 통해 재무상담 등이 수고에 비해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음을 체험한 자활사업 종사자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무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 그리고 적극성을 낮추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활현장에서 전개된 재무역량강화사업은 외부 업무 지원과 보상 및 평가 체계, 인력보강 없이 또 하나의 추가사업의 한계를 가졌다. 재무역량강화사업의 환경이 바뀐다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재무역량강화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재무역량강화사업의 최종성과는 결국 전문인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재무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문 인력 배치 센터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협의하여 전국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재무역량강화사업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전문 인력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교과목 이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론수업으로 구성된 양성과정, 그리고 양성 후 의무 보수교육이 필수여야 할 것이다.

3)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기회

자활 재무역량강화의 도입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외부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우울, 폭력과 자살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서울과 일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초단위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이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높지 않다. 또한 이 기관들의 인력도 충분치 않아, 채무조정이나 대출사업 이외에 재무역량강화와 관련한 예방적 서비스를 확장 제공하는 역부족이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한국자활연수원 그리고 전국 14개 광역, 249개 지역자활센터가 뜻을 모아 추진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재무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용이한 상황이다.

둘째, 빈곤층 재무역량강화사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연구결과가 등장하고 있다. 5전년만 하더라도 듣기 힘들었던 금융사회복지와 재무역량강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관련 연구와 서적이 꾸

준히 국내외에서 등장하고 있다. 해외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추진한 성공적인 재무역량강화 사례들도 조금씩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관련 이론과 프로그램 그리고 평가도구 등도 등장했으며, 본 연구처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과 역량을 측정하고 관련 대책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예전과 달리 현재의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도입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변화들이다.

3)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위험

첫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사업 규모가 더 확장될 수 있으며, 특히 재무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과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현재 이 두 조직은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재무문제와 채무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두 기관이 채무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역할이 상당부분 겹치는 문제, 복지연계서비스 부족 문제 등의 해법으로 채무조정 이외의 사업으로 기능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빈곤층의 재무역량자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 이점에서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타이밍(timing)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재무역량강화사업의 초점을 채무조정에 두지 않아야 한다. 채무조정은 이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핵심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여기에 또 자활이 뛰어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물론 지역에 자원이 부족하고 지역이 필요로 한다면, 부산의 사례와 같이 광역단위에서 채무조정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다. 중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채무조정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려워 성공하기 쉽지 않다.

둘째, 사회복지관 등 타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재무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및 경쟁이 있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충남을 시작으로 대전 그리고 전북에서 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등이 주로 참여하여 일명 '가계금융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사업 공모 결과, 지역자활센터보다는 사회복지관이나 양육시설의 지원률이 높았고, 앞으로도 재무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활동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활기관 중심으로 재무역량강화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과 강력한 사업추진 역량이 필수다.

셋째, 지속가능한 자립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는 탈수급과 취창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탈수급과 취창업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자활사업 전체에 압박이 되고 있다. 자활조직은 늦지 않게 이 문제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복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무역량강화사업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자신 있게 탈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과 재무관리 역량 확보, 웬만한 재무충격으로는 재수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무건전성과 재무관리 역량 확보가 자활기관의 핵심 목표이자 사업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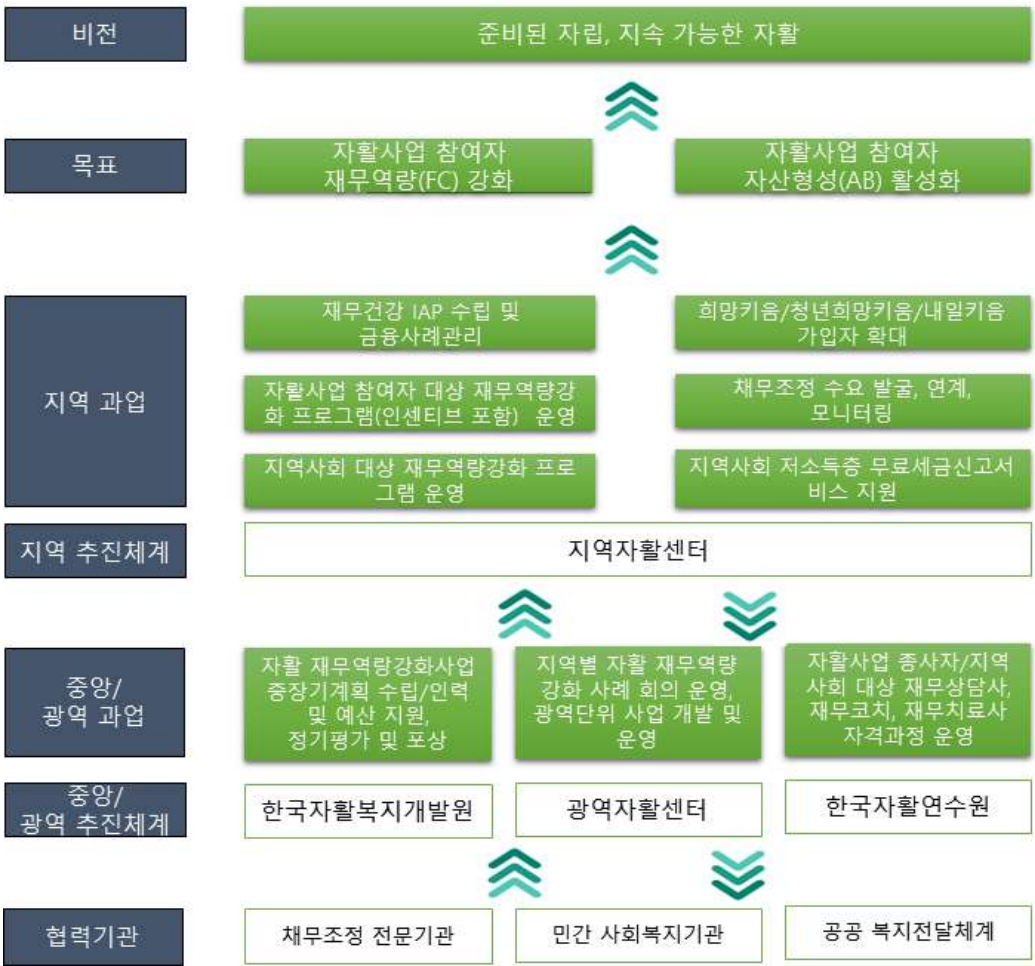
1.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의 비전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준비된 자립, 지속 가능한 자활'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자활사업 참여자 재무역량(Financial Capability) 강화와 자산형성(Asset Building) 활성화이다. 준비된 자립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자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중 하나는 정기적인 재무건전성 진단과 재무상담을 통한 재무건강 IAP 수립과 금융사례관리이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 전담,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재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이다. 재무상담과 코칭은 지역자활센터 재무역량강화사업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되 교육 및 컨설팅은 외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아직 미참여자가 많은 희망키움·청년희망키움·내일키움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더불어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활사업 참여자와 지역주민을 발굴하고 신용회복

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연계하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세금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자활센터의 과업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광역의 역할이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재무역량강화실적이 센터평가에 포함되도록 체계를 수정하며 정기적인 평가와 포상을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재무역량강화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활센터는 지역별 자활 재무역량강화 사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내 자원발굴을 통해 광역단위 자체 사업 개발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한국자활연수원은 자활사업 종사자와 지역사회 대상 재무상담사, 재무코치, 재무치료사 등의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자활센터 종사자와 지역협력기관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림 Ⅳ-2-1]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상

2. 자활 재무건전성 유형별 지원전략

자활 재무역량강화는 가구별로 상이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목표를 수립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Ⅳ-2-1〉은 앞서 재무건전성 유형 분류 모델을 개발하였던 Khashadourian(2017)이 재안한 재무건전성 유형별 지원전략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물론, 이 지원전략 체계는 향후 전문가 논의와 현장적용 그리고 결과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Ⅳ-2-1〉 자활 재무건전성 유형별 지원전략

구분	내용
A유형: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	**A. 가계수지비율＜1.0(or ＜.9), 유동성비율＞200%, 총부채상환비율≤ 15%**
	1. **가구특성:** 가계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축잔액이 유동성비율의 최소 기준인 200%를 충족하며 총부채상환비율도 적정상태임. 2. **지원전략:** 전문가와 상의하여 연금저축 등의 장기 투자, 자산과 부채의 비율 조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B유형: 부채위험 흑자가구	**B. 가계수지비율＜1.0(or ＜.9), 유동성비율＞200%, 총부채상환비율＞15%**
	1. **가구특성:** 가계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축잔액이 유동성비율 최소기준인 200%를 충족함. 부채상환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함. 2. **지원전략:**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아 추가대출은 경계해야 함. 보유 자산처분 등을 통한 기존 채무정리는 바람직함.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자산투자 등을 통해 자산소득을 늘린다면 장기적으로 부채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됨. 순자산이 많은 클라이언트의 경우, 재무투자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총부채상환비율이 15% 미만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C유형: 자산위험 흑자가구	**C. 가계수지비율＜1.0(or ＜.9), 유동성비율≤ 200%**
	1. **가구특성:** 가계흑자 상태이나 월 저축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임. 저축잔액이 유동성비율 최저 기준인 유동성비율 200% 이상이면 큰 문제는 없지만 아니라면 소득 또는 지출 변동이 큰 가구로 주의가 필요함. 2. **지원전략:** 가계수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수립에 초점을 둔 재무코칭 적용이 권장됨. 총부채상환비율이 너무 높지 않다면 자산형성지원통장 가입도 권장할 수 있음.

구분	내용
D유형: 자산·부채안정 적자가구	**D. 가계수지비율≥ 1.0(or ≥ .9), 월저축률≥ 10, 총부채상환율≤ 15%**
	1. **가구특성:** 가계적자 상태이고 총부채상환율이 낮음, 월저축금액이 매우 작고, 저축잔액**도 부족함.** 보고된 것보다 실제 저축금액이 더 적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함. 2. **지원전략:** 소비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정지출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고정지출비율이 60%를 넘지 않는다면, 긍정적임). 일단 가계흑자 전환을 시도하고, 이후에는 유동성비율에 따라서 저축잔액 증액(유동성비율<200%) 또는 부채상환금 증액(총부채상환비율<15%)을 시도할 수 있음. 유동성이 있다면 자산형성지원통장 가입에 적합한 대상임.
E유형: 부채빈곤 적자가구	**E- 1. 가계수지비율≥ 1.0(or ≥ .9), 총부채상환율>15%, 유동성비율<200%, 고정지출비율>60%, 월 저축률<3%**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총부채상환율이 높음. 저축을 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낮고 저축잔액이 부족함. 정지출비율이 높아 생활비 압박이 클 수 있음., 2. **지원전략:**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아 추가 대출은 권장되지 않음. 소비지출을 점검하여 고정지출비율이 높은 이유를 파악할 해야 함. 유동성비율이 2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자산형성지원통장은 좋은 선택일 수 있음.
	E- 2. 가계수지비율≥ 1.0(or ≥ .9), 총부채상환율>15%, 유동성비율<200%, 고정지출비율<60%, 월 저축률<3%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음. 저축은 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낮고 저축잔액이 부족함. 다행히 고정지출비율은 비교적 낮아, 재무건전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2. **지원전략:** 현시점에서 추가 대출은 대출상환 비율이 적정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음. 소비 검토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지출을 찾아봐야 함.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형성지원통장에 꼭 가입할 필요가 있음.
	E- 3. 가계수지비율≥ 1.0(or ≥ .9), 총부채상환율>15%, 유동성비율>200%, 고정지출비율>60%, 월 저축률<3%
	1. **가구특성:** 적가가구이며, 총부채상환율이 높음. 월저축액은 매우 작지만, 유동성 200%는 확보하고 있음. 고정지출비율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큼. 2. **지원전략:** 총부채생환비율이 높아 추가 대출은 권장되지 않음. 소비지출을 점검하여 고정지출이 높은 이유를 파악해야함. 유동성비율 최소 기준인 200%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담녀 고정지출을 줄여 여유현금으로 채무상환액을 늘리고 채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내용
	E- 4. 가계수지비율≥ 1.0(or ≥ .9), 총부채상환율＞15%, 유동성비율＞200%, 고정지출비율＜60%, 월 저축률＜3%
	1. **가구특성:** 적가가구이며, 총부채상환율이 높음. 월저축액은 매우 작지만, 유동성 200%는 확보하고 있음. 고정지출비율이 낮아 생활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2. **지원전략:** 유동성비율 최소 기준인 200%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액을 늘려 부채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적합함. 고정지출비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소비지출 절감을 통해서 부채상환액을 늘리는 전략도 권장할 수 있음.
F유형: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	**F- 1. 가계수지비율≥ 1.0(or ≥ .9), 고정지출비율≤ 60%, 총부채상환비율＞15%, 유동성비율＜200%**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고정지출비율이 낮고,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으며, 유동성 최소기준이 충족되지 않음. 2. **지원전략:** 총부채상환율이 높고, 유동성과 현금보유량이 부족해 추가대출은 권장되지 않음. 소비지출을 신속히 줄일 필요가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상태라면,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이나 공공부조 등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최선임.
	F- 2. 가계수지비율≥ 1.0(or ≥ .9), 고정지출비율≤ 60%, 총부채상환비율＜15%, 유동성비율＜200%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고정지출비율이 낮고, 총부채상환비율이 낮으며, 유동성 최소기준이 충족되지 않음. 2. **지원전략:** 고정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낮아 비교적 쉽게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음. 신속한 소비지출 삭감이 요구되며, 공공부조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함. 주거비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음.
	F- 3. 가계수지비율≥ 1.0(or ≥ .9), 고정지출비율≤ 60%, 총부채상환비율＞15%, 유동성비율＞200%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고정지출비율이 낮고,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으며, 유동성 최소기준이 충족됨. 2. **지원전략:** 고정지출비율이 낮아 월 지출조정을 통한 현금흐름 개선이 적합함. 가구의 유동성비율이 200% 이상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위기 시 과거에 해두었던 저축에 의존한 생활도 가능함.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아 추가대출은 권장되지 않으며, 가계흑자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지출의 신속 삭감이 요구됨. 클라이언트가 일부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구분	내용
	신청자격을 갖추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음. 주거비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임.
	F- 4. 가계수지비율≥ 1.0(or ≥ .9), 고정지출비율≤ 60%, 총부채상환비율＜15%, 유동성비율＞200%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고정지출비율이 낮고, 총부채상환비율도 낮으며, 유동성 최소기준이 충족됨. 경제적 위기 시 은행예금 잔액이나 추가 대출에 의해 가계지출을 감당하려 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고정지출, 총부채상환율이 낮아 월 지출을 비교적 쉽게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현금흐름 개선이 권장됨. 총부채상환율은 낮지만, 소비지출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의 추가대출은 권장되지 않음. 가계 흑자전환을 위해 소비지출 점검과 조정이 요구됨. 클라이언트가 일부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신청자격을 갖추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거비를 확인해보고 주거비 부담 절감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함.
G유형: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	**G- 1. 가계수지비율≥ 1.0(or ≥ .9), 고정지출비율＞60%, 총부채상환비율＞15%, 유동성비율＜200%**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고정지출비율이 높고, 총부채상환비율도 높으며, 유동성 최소기준도 충족되지 않음. 아마도 수입의 상당비율이 채무상환에 투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현금보유량이 부족해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2. **지원전략:** 가구소비 중 소비지출비중이 적어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가구임. 총부채상환비율도 높아 추가대출은 권장되기 어렵고, 현금보유량도 매우 부족하며, 신용카드대출을 경계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함.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이나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임. 또 주거비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G- 2. 가계수지비율≥ 1.0(or ≥ .9), 고정지출비율＞60%, 총부채상환비율＜15%, 유동성비율＜200%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고정지출비율이 높고, 총부채상환비율도 낮으며, 유동성 최소기준도 충족되지 않음. 총부채상환비율이 낮은 이유는 가구소득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수 있음. 2. **지원전략:** 고정지출비율이 높아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기는 어렵고, 보유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최소한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구분	내용
	쩔 수 없이 추가대출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음. 최선의 지원은 공공부조 프로그램 신청이라고 볼 수 있음. 주거비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출이 필요하다면 서민친화적인 대출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G- 3. 가계수지비율≥ 1.0(or ≥ .9), 고정지출비율＞60%, 총부채상환비율＞15%, 유동성비율＞200%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고정지출비율이 높고, 총부채상환비율도 높으며, 유동성 최소기준은 충족됨. 2. **지원전략:** 고정지출비율이 높아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기는 어렵고, 경제적 위기 시에 단기적으로는 은행 예금을 이용해 생활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음. 이미 수입의 많은 부분을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추가대출은 어려움. 당연히 신용카드대출을 더 이상 늘려서도 안 되며, 부채상환이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함.
	G- 4. 가계수지비율≥ 1.0(or ≥ .9), 고정지출비율＞60%, 총부채상환비율＜15%, 유동성비율＞200%
	1. **가구특성:** 적자가구이며, 고정지출비율이 높고, 총부채상환비율이 낮으며, 유동성 최소기준은 충족됨. 총부채상환비율이 낮은 이유는 가구소득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수 있음. 2. **지원전략:** 고정지출이 많아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기는 어렵고, 경제적 위기 시에 단기적으로는 은행 예금을 이용해 생활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음. 공공부조 프로그램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비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만일 고정지출비율이 매우 높지 않다면, 가계소비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여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음.

3. 자활 재무역량강화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재무교육이나 상담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재무교육과 상담의 차이도 무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형식은 개입의 전제 조건, 기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 담당자는 재무역량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념, 중요성, 실행방식, 효과성, 수행 인력의 역량 차이 등을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미국의 Center for Financial Education(CFED. 2015)이 재무역량강화를 위한 활용을 권장하는 것들이다. 무료세금신고서비스와 신용만들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수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2-2〉 자활 재무역량강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종류

내용
① 재무교육(Financial Eduction)
② 재무코칭(Financial Coaching)
③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
④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
⑤ 신용개선 프로그램(Credit Building)
⑥ 합리적인 금융상품 안내(Access to Safe and Affordable Financial Products)
⑦ 무료세금신고서비스(Free Tax Preparation Assistance)
⑧ 공공부조급여(Access to Federal and State Benefits)
⑨ 저축장려 프로그램(Incentivized Savings Programs)
⑩ 자산관리 프로그램(Asset Ownership Programs)

1) 재무교육

(1) 개요

재무교육이란 예산수립, 금융상품 이용, 저축, 신용관리, 채무조정, 세금공제 등과 같은 특정 재무영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 대상 교육을 하며, 워크숍이나 강의와 같은 형태로 제공된다.

(2) 중요성

재무개념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또한 재무지식과 기술이 많은 개인들일수록 은퇴 준비와 비상금 보유 확률이 높고, 현명한 재무 의사결정을 하며, 고리대금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

(3) 실행방식

지역사회에서 재무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예산수립, 부채, 신용, 저축, 자산형성 등을 주제로 재무교육 워크숍을 제공
- 다른 교육과정(예: 취업 교육, 은퇴교육)에 연관된 주제의 재무교육 포함
- 온라인 재무교육과정 운영

재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적합한 교육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직장을 다니는 개인들에게 평일 근무시간 오프라인 워크숍 참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온라인 워크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상자가 관심 높은 주제의 교육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생활이나 대학입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라면 신용관리나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교육시 학습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FDIC의 Money Smart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재무교육 도구와

자료 그리고 커리큘럼들을 제공되고 있다. NEFE의 워크숍 키트도 활용도가 높다.

재무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강의실 강의, 즉 재무교육 하나만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재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교육에서 얻은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습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재무코칭

(1) 개요

재무코칭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무코치와 클라언트(코치이)의 1:1 상호작용이다. 코치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설정한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지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합리적으로 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재무코칭을 위해 재무코치가 반드시 재무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수준 높은 상담이나 전문가 수준의 코칭기술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코치는 클라이언트의 재무문제 해결이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재무목표든 클라이언트 스스로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코칭의 기법을 활용하여 지지하면 된다.

(2) 중요성

최근 현장과 연구들에 따르면 재무코칭의 효과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미국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인 NeighborWorks America에 따르면, 재무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의 54%가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는 저축을 하지 않았지만 종료 후에 저축을 하고 있었다.

(3) 실행방식

재무코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수 있다.

-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재무코칭 기술을 습득하여 1:1 그리고 특정 소집단에 대해 재무코칭을 직접 제공
- 온라인 기반 재무코칭 제공
- 산업체와 협력하여 직장 내 근로자를 위한 재무코칭 제공

재무코칭 역시 반드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신용점수 확인 등은 1번의 코칭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재무습관 변화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3) 재무상담

(1) 개요

재무상담은 부채·신용, 주거구입 등과 같은 특정 재무이슈를 클라이언트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가가 돕는 1:1 세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무상담은 대부분 현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해결을 위해 재무상담가들은 클라이언트에게 재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예: 채무조정 지원 전문 기관, 사회복지기관)에 클라이언트를 의뢰할 수도 있다.

(2) 중요성

재무상담은 문제해결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재무상담사는 압류나 채무문제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재무적 문제를 클라이언트가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재무역량성과평가(Assessing Financial Capability Outcomes (AFCO)에 따르면, 재무상담을 받은 참여자들일수록 현재의 채무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또한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유 부채가 1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사한 참고로 상담 미참여자의 부채감소 수준은 5%였다(Corporat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 2014).

(3) 실행방식

클라이언트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직원들을 재무상담사로서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재무 관련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 재무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외부 기관에 클라이언트 의뢰

재무상담의 성과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역량에서 결정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자격이나 압류 해제 등의 주제에 대해 원활히 상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 받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무상담사는 재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재무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들의 동기와 심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용상담

(1) 개요

신용상담은 사람들의 부채관리와 조정, 그리고 신용개선을 돕는 활동이다. 신용상담사는 주로 클라이언트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연체된 채무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며, 채무감소를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신용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2) 중요성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임금 불안정 문제와 함께 저축이라는 안전망 없이 살아간다. 특히 신용의 제한은 이들이 고리대금을 요구하는 악성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더욱 더 재무건전성과는 거리가 먼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용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3) 실행방식

신용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클라이언트를 전문 신용상담사나 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훈련시켜 클라어언트가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채권추심 현황 등을 파악하며, 필요하다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 기관 등에 클라이언트 의뢰

5) 신용개선 프로그램(Credit Building)

(1) 개요

신용개선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은 클라이언트들이 제도권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신용점수를 얻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신용개선 프로그램은 소액의 대출 거래를 꾸준히 하거나 선불신용카드(secured credit card)를 이용하는 것이 있으며, 신용개선 프로그램은 신용점수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제때 완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나 금융당국과 MOU를 맺고 대안적인 신용거래 프로그램(대안 신용상품)을 만든 후 신용거래를 잘 한 클라이언트의 신용점수를 높여주기도 한다.

(2) 중요성

우수한 신용기록과 높은 신용점수는 개인들이 더 나은 취업이나 주거확보, 창업, 은행 대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신용점수는 저금리 대출 이용을 가능케 해주며, 절약한 대출이자만큼 저축의 여력을 증가시킨다.

(3) 실행방식

신용개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구현될 수 있다.

- 신용 지역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신용이 낮은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고리 대금을 이용하지 않고, 다시 신용을 회복해 안전한 제도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에 특별한 조치를 요구
- 금융회사나 신용회복 전문기관과 논의하여 어떻게든 클라이언트가 다시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용의 재구조화, 신용목표 달성의 선순환 고리를 만듦
-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금융상 안내.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LISC)이 소액대출과 재무상담 그리고 자산형성의 기능이 있는 쌍둥이계좌(Twin Account)를 제공하고 있음

6) 합리적인 금융상품 안내

(1) 개요

합리적인 금융상품 안내는 고금리의 위험한 악성대출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주류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저금리의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금융서비스에는 입출금 계좌와 저축계좌의 개설, 계좌이체의 이용, 신용카드 관리, 연금저축과 고금리입출금통장인 머니마켓 어카운트가 포함된다.

(2) 중요성

저소득층은 대부분 약탈적 금융상품에 취약하다. 일부 가구들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빚더미에 주저 앉는다. 안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재무상품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예비비를 저축하고 안전하게 대출을 받으며 좋은 신용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실행방식

합리적 금융상품 안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지역사회에서 신협이나 상호은행,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저비용의 안전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정보 안내
- 지역금융기관들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금융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재무교육을 통해 관련 합리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이해력 제공

7) 무료세금신고지원

(1) 개요

무료세금신고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근로자가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출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더불어 클라이언트가 근로장려세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주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클라이언트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려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전국차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빈곤층보다는 주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2) 중요성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세금신고를 위해 비싼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로 인해 세금공제의 효과는 줄어든다. 더불어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세금환급 혜택이 다른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비해 탈빈곤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어, 2013년 2천7백만 가구가 6백3십억 달러의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았으며, 여전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실행방식

클라이언트가 세금을 무료로 신고하도록 돕고 더불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로 지역의 무료세금신고 지원단(VITA)를 초대하여 저소득층이 무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근로장려세제과 같은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클라이언트를 무료세금신고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에 의뢰

8) 공공복지혜택에 대한 안내

(1) 개요

공공복지혜택에 대한 안내는 클라이언트가 신청자격 조건을 갖춘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급여가 무엇인지를 확인·안내하는 것이다.

(2) 중요성

재무역량강화의 장기적 목표는 공공부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지만, 많은 저소득가구들이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공공부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저임금근로자들은 임금소득과 더불어 수천달러의 공공부조나 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종종 이를 몰라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실행방식

여러 복지급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이 신청자격을 갖춘 급여를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클라이언트 접수 및 모니터링 시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부조 또는 소득지원이 무엇인지 확인
- 공공부조를 포함해 각종 공공복지급여 혜택과 신청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클라이언트 급여신청 지원

9) 저축장려 프로그램

(1) 개요

저축장려 프로그램(예: 우리나라의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은 참여자가 저축동기를 유지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저축 인센티브와 저축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다. 주로 활용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저축매칭금(savings matches): 참여자가 1달러를 저축하면, 1달러의 매칭금을 지원
- 최초적립금(inintial deposits): 참여자가 저축계좌를 열면 50달러의 최초 적립금을 지원
- 성과장려금(benchmark incentives): 저축기간 동안에 재무역량 관련 특정 성과(예: 재무교육 이수 등)를 달성하면 소정의 보상 제공
- 경품/현금수상 응모권 제공 저축(prized-linked incentives): 저축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저축한 개인에게 경품이나 현금 수상 응모권 부여

(2) 중요성

예금은 실업, 질병, 기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나 가구를 보호하고, 재무안정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현재 미국 가구의 43% 이상이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소득이 3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는 가구가 43%인 것이다. 저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저소득가구로 하여금 재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경제적 자산을 축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 자본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저축인센티브는 분명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 자연 상태보다 주거마련, 창업, 교통수단 확보, 고등교육 등의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저축시간을 단축시켜준다.

(3) 실행방식

사회복지 기관에서 저축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성인 클라이언트가 개인발달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클라이언트 가족 내 아동이 아동발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타 저축장려 프로그램 자체 운영 및 외부 프로그램 안내

10) 자산관리 프로그램

(1) 개요

자산관리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저축, 주거, 자동차, 소규모 창업, 고등교육 등을 위한 자산을 구입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자산관리 프로그램은 주거 보증금 지원, 집 압류 상담, 주거구입 상담, 창업교육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발달계좌와 같이 자산 구매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자산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2) 중요성

저축, 주거, 소규모 창업과 같은 자산의 소유는 재무안정을 증가시키고 부를 축적하고 계층상승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위기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저축은 실업, 상해 등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을 보호한다. 주거보유나 창업 또한 재무안정을 뛰어넘어 계층상승을 위한 부의 축적을 돕는다. 또한 주거소유는 가구의 저축을 늘리고 투자 자본을 늘리며 가구의 재무안정과 자녀들의 성취를 향상시킨다(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2).

(3) 실행방식

자산소유와 관리를 돕기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자영업 준비자들이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복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참가자가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확인

4. 자활 재무역량강화 사업 인력 양성

우리나라에서 이미 민간자격증과정으로 금융복지상담사가 있다. 금융복지센터 등에서 전담인력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한국자활연수원에서도 이 자격증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상품이나 신용 그리고 채무와 관련해 1:1 상담과 조언을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며, 개입의 효과는 상당부분 상담가의 전문성에서 나온다.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발전시켜나가며 자활사업 종사자와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등이 재무상담의 역량을 갖추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활 재무역량강화 사업이 시행된다면,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은 재무코치(financial coach)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미국의 지역사회 비영리조직에서 재무역량강화사업은 대부분 사례관리사의 담당이다. 그리고 많은 사례관리사들이 재무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을 재무코치(financial coach)라고 부른다. 여러 역할 중 재무코칭이 사회복지기관 내 사회복지종사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가장 요구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무코칭도 재무 상담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점기반 접근에 대한 강조이다. 재무코칭의 원동력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강점이다. 재무코칭은 저소득층 개인, 즉 클라이언트가 재무관리 및 재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이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Collins, Olive , & O'Rourke, 2013; 장동호, 2013: 217 재인용).

재무코칭은 일반적으로 1대 1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코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가 금전 및 금융에 관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스스로 설정하게 하고, 금전 및 재무관리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의 실행계획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클라이언트의 경제상황을 실제로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Grant, 2003: 254). 일반적으로 재무상담이 해결해야할 문제(problem)을 필요로 하지만, 재무코칭은 문제가 없더라도 욕구(needs)를 중심으로 지원

이 가능하다. 어떤 수준의 재무상태에서든 유효할 수 있는 접근이다.

따라서 한국자활연수원은 재무코칭 전문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면, 교육의 수요는 자활사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기관 종사자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성과정은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실습을 통해 개입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수교육도 사회복지사 자격유지 수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Ⅳ-2-3〉 재무코칭의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접수 및 안내	재무코치(금융전문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또는 사무실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 재무코치는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 내용, 특히 재무코칭 프로그램과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정확히 안내한다.
2단계: 조직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금융활동과 관련한 문서(예: 영수증, 소득명세서)나 기타 자료 등을 제공하며, 재무코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심 등에 관한 첫 번째 사정을 완료한다.
3단계: 기획	클라이언트와 재무코치는 금융안정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목표와 하위 목표를 함께 수립한다.
4단계: 수행	클라이언트는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무코치는 클라이언트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한다. 이 과정에서 양자는 함께 성취한 목표들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목표 조정을 한다.
5단계: 평가	재무코치는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설정한 후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클라이언트의 금융 상태를 조사하고 목표달성의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이후 재무코칭 과정에 반영된다.

출처: United Way Worldwide(2011: 53)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 답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무역량 취약에서 찾았다. 특히 이들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이 '준비된 자립', '지속가능한 자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자활중심의 재무역량강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성공가능성을 SWOT 분석을 통해 탐색해 본 결과, 재무역량강화사업의 주체로서 자활의 강점은 약점보다 많았다. 자활은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해 가장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자활은 재무역량강화의 핵심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자활연수원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금융복지상담사 양성 기능도 하고 있는 등 타 공공기관이 갖지 못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자활센터 자체의 인력난, 재무역량강화에 대한 오해나 편견, 재무역량강화사업을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부재 등의 문제는 정부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렇게 될 경우 자활은 재무역량강화라는 복지서비스를 전국단위에서 제공하는 지역복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활사업과 자활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 재무역량강화사업 중 채무조정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제공하지 않는 재무역량강화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들과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에서 등장하고 있는 재무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이론서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매뉴얼 등은 다소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성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성공의 가능성도 크다.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지원체계의 비전은 '준비된 자립, 지속 가능한 자활'이다([그림 Ⅳ-2-1] 참조). 목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역량강화(financial capability: FC)와 자산형성(asset building: AB)이다. 적절한 재무역량과 자산(assets)이 있다면 자립 또는 탈수급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감당하고 자립 이후에 자활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구체적인 과업으로는 재무건강 IAP 수립, 재무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참여 인센티브 제공,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중앙과 광역단위의 지역자활기관은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며, 성공사례 만들기를 위한 평가와 포상, 지역자원 자원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시도했던 가구별 재무건전성 유형에 주목하여 각각 상이한 재무문제에 1:1 대응하는 지원전략을 제시하였다(〈표 Ⅳ-2-1〉 참조). 크게 7개의 재무건전성 유형, 더 세분화하면 16개의 유형별 지원 전략이다. 물론, 개별 가구의 재무상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다. 당연히 가구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략 제시에서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틀을 향후 더 구체화할 수 도 있고, 지금수준에서도 의미 있는 재무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어떤 유형의 어떤 지원내용이든 모두 다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향후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이 수행될 경우, 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고, 더 나아가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결과, 즉 클라이언트의 변화이며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무역량강화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핵심 내용 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의 방법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상담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지식 등은 재무역량강화서비스 담당자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재무교육, 재무상담 등)를 제공하더라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민간사회복지가관에서 재무역량강화 사업이 활성화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재무코치(금융코치) 양성과정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무코칭은 전문성보다는 코칭 프로세스가 성과를 내는 실천기법이며, 인력의 전문성 대비 성과가 큰 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에서 과제중심모델(task-oriented model) 그리고 사례관리과정과 유사한 부분도 많아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있어 친숙한 역할이다. 인력 양성 후 현장적용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기대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안

섬기는 리더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빈 페이지-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활중심의 지원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은 우리나라 자활정책과 자활현장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동안 자활은 직무역량강화와 취창업지원 등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접근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취창업은 자활현장을 떠났을 때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수단이며, 직무역량은 이 수단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국 239개의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직무교육과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한국자활연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은 여전히 탈수급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또한 탈수급 이후에도 다시 재수급하는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명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자활에 관한 현재의 접근과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직무역량과 별개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장애요인을 탐색했으며, 그 결과 취창업에 불리한 인구사회학적 조건, 부정적 자기인식과 정서, 취약한 재무건전성과 재무관리역량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자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아직 제대로 전국단위에서 조사된 바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재무건전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자활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재무건전성 진단을 위한 본 연구는 크게 재무건전성 및 유관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순하게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규모를 살펴보는 것부터 좀 더 고차원적으로는 이들의 관계, 즉 재무비율(financial ratios)의 적정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복수의 재무비율을 이용해 가구별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가계 재무건전성에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무관리역량,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의 자

기인식과 정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실태와 그것의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계통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이용해 표본을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전국 40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1,06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6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였으며,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와 응답자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재무상태 관한 내용이다. 우선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연령도 52.72세로 높은 편이었다. 학력수준은 낮았고, 특히 혼인상태가 이혼인 경우가 38.7%로 매우 높았다. 월세거주 비율도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상태 지표를 보면, 가구 월소득(세후)이 평균 130.24만원, 월지출이 평균 118.01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흑자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문제는 총예금 잔액이 평균 115.23만원으로 응답자 전체의 한 달치 월소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월저축액도 매우 작은 가운데 여전히 많은 참여자들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대신 부채보유 가구의 총부채 잔액은 평균 2,677.77만원으로 월소득 평균의 20배가 넘는 부채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월부채상환부담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가구의 고정 지출이 부채 상환을 할 여유가 없거나 이미 신용위기의 상태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재무비율 지표로 살펴본 재무건전성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가계수지비율이 1.0미만인 흑자가구의 비율이 68.0%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집단을 대표하지만, 흑자가구의 비율이 적자가구보다 높았다. 하지만, 흑자가구의 상당수는 겨우 적자만 피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계지출 이후 소득의 10%이상을 남기는 가구(가계수지비율 〈.9)는 4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동성비율은 더 심각했다. 두 달 치 월지출 이상의 현금성 자산(예: 예금)을 보유하지 못한 유동성비율은 무려 87.6%였다. 절대 다수가 재무적 안정장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낮은 월저축 수준, 높은 고정지출비율도 가계의 재무적 성장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부채상환비율이 대부분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비빈곤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은 부채규모와 대출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연체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무건전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가계수지비율 충족률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비율은 20대 참여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총부채 상환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무스트레스는 40대와 50대가 최고였다. 종졸 이하의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좋았다. 가계수지비율과 유동성비율, 고정지출비율 충족률이 높았고, 재무관리역량도 가장 좋았다. 고졸과 대졸 이상 참여자의 재무스트레스가 중졸 이하 참여자보다 더 높았다. 또한 미혼 참여자의 재무건전성도 좋은 편이었다. 가계수지비율, 유동성비율, 고정지출비율의 가이드라인 충족률이 다 높았다. 가구원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소비지출 부담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실제 기혼과 이혼 참여자의 재무스트레스가 미혼보다 높은 편이었다. 1인 가구의 재무건전성은 가계수지비율, 유동성비율, 고정지출비율, 재무관리역량과 관련하여 다인 가구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었다. 자녀수가 많아도 재무스트레스가 높아졌으며,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재무스트레스가 차상위가구보다 높았다. 차상위가구의 경우 재무관리역량도 좋은 편이었다. 또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이 사회서비스형보다 좋았다. 주관적 건강이 나쁠 경우 재무스트레스가 높고, 재무관리역량이 낮았다.

재무상태와 자기인식 및 정서의 관계에 관한 분석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가구총예금잔액과 월저축액은 직무만족도와 미래지향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우울감과는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부채잔액, 가구 월부채상환액, 본인 채무불이행, 생활비 압박기간은 직무만족도와 미래지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우울감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재무상태와 재무건전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월소득이 많을수록, 지출은 적을수록, 부채가 없을수록, 본인 채무불이행경험이 없을수록 가계수지비율이 좋았다. 유동성비율도 가구 지출규모가 작고, 부채상환액이 없는 경우, 본인 채무불이행경험이 없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압박 기간도 가계수지비율과 유동성비율과 부적관계에 있었다. 재무스트레스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와 더불어 지출이 많은 경우, 월저축액이 없고, 부채잔액과 부채상환액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본인 채무불이행경험과 생활비 압박 기간도 재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재무건전성에 관한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은 가구별 재무건전성 분석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을 가구유형별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가 같다(유형화1 기준).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59.2%)가 '자산위험 흑자가구'에 속했다. 가계는 흑자이지만, 자산이 빈약해 외부 경제적 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가구가 약 60%라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변동지출빈곤 적자가구'(14.7%)였다. 가계수지가 적자인데, 변동지출, 즉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라는 뜻이다. 세 번째로 많은 가구유형은 "고정지출빈곤 적자가구"였다(10.0%). 가계수지가 적자인데, 지출의 대부분이 대출금·월세 등 고정지출로서 소비지출 삭감이나 통제로는 재무건전성 회복이 어려운 가구이다.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속할 수 있는 가구이기도 하다. 한편 모든 측면에서 가계재무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자산·부채안정 흑자가구'의 비율은 8.4%정도였다. 좀 더 보수적인 유형화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유형별 비중의 순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가계재무건전성의 가구유형별 분석의 장점은 크다. 우리나라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가 재무건전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각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며, 유형별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취해야할 전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재무역량강화사업을 도입·운영함에 있어 자활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 보았다. 저소득층 재무 및 채무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의 사업을 고려하여 분석 결과, 자활기관이 직접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자활 재무역량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가능한지를 논의해 보았다. 그 결과, 자활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지역사회 근로빈곤층의 재무건전성 개선 과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자활기관은 우리사회 어느 공적기관과 비교하더라도 뒤지지 않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미 재무역량강화사업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자활연수원을 통해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사업수행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강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자칫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 따라서 자활의 재무건전성 개선 사업은 현재 이 기관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채무조정이나 대출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관리역량을 돕고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준비된 자립, 지속가능한 자활'이라는 비전을 가진 자활 재무역량강화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취약한 재무건전성과 재무역량이 자립에 대한 두려움과 지속가능한 자립의 실패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은 재무관리역량 그리고 자산형성을 통해 자활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재무역량 IAP 작성 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수행 인력과 관련해서는 재무·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상담가의 역량을 강조하는 금융복지상담사도 좋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재무코치(financial coach) 또는 금융코치의 양성 및 활용을 적용하였다. 재무코칭의 경우, 재무상담에 비해 재무에 대한 낮은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강점기반관점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재무행위를 유도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성이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재무정보와 실제 재무상태의 차이로 인한 한계이다. 일반적으로 재무상태, 특히 소득이나 부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특히 부채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의식하여 실제보다 작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중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에서 소득과 지출도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은행거래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Gateway 과정에서 재무역량강화 IAP를 작성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재무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한된 연구기간으로 인해 본 연구가 제안한 가계균형모형에 입각한 재무건전성 가구유형 분류 모형과 유형별 재무건전성 개선 지원전략의 유용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재무건전성 유형 분류를 위해 활용한 재무비율 중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유형간 변이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유용한 재무비율로의 대체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유형별 지원전략도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수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종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재무건전성 유형분석과 유형별 지원 계획에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자활 재무건전성 유형분석 도구 및 지원 매뉴얼은 재무문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자활사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개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최소한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해 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재무코치 또는 금융코치 전문양성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 활용하는 재무코칭 매뉴얼을 한국화 하고, 시범사업 수행과 효과성 측정과 환류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기관들이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사회복지기관 재무코칭 매뉴얼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기반 시범적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다.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도입 논의가 더욱 힘을 받고 또한 자활 재무역량강화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요구되며 연구를 통해 시법사업의 효과성과 개선점이 정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성호·최장훈·최현자·김민정·한지형. 2018.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한국FP학회 하계학술대회.

고경환·선우덕·강지원·김완섭. 2009.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31-5.

고제헌. 2017, “북유럽 국가들은 왜 가계부채가 많을까?” 『주택금융월보』 151: 24-43.

국민일보. 2019. “일가족 극단적 선택…아이들은 무슨 죄?” 2019년 5월 5일.

권진숙·박지영. 2008. 사례관리 이론과 실제. 학지사.

김미현·박성진. 2018.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성과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김세림·김미현. 2016. 서울시 저소득층의 가계건전성을 위한 소비실태 분석: 청년을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2016-27.

김순영. 2011. 『대출 권하는 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김윤태·서재욱. 2013. 『빈곤-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울: 파주.

김자영·한창근. 2015.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42(1): 55-79.

김정원·전세나·김정자·조성은·백학영·김경휘. 2013. 2012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 학술연구총서 2013-01. 중앙자활센터.

김준희. 2018.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 수급가구 가계부조사를 통해 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pp. 11-33.

김진구(2007). 경기지역 고령층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자립전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6: 113-138.

김창표·김정원. 2018. 전남 농어촌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모형개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8. 전남복지재단.

김태완·오미애·박형존·이주미·신재동·정희선·이병재·박나영·이봉주·김태성·강상경·박정민·정원오·백승호·함선유·김화선·신유미. 2017.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보고서 2017-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학주. 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남미애. 2018.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례관리론. 파주: 양서원.

노대명. 2010. 자활사업 10년의 성과와 전망. 자활사업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노대명·소정·김수현·유태균·선우덕·조기철. 2010.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5.

노대명·박창균·박상금·한솔희·김솔휘. 2017.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부채 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40.

동아일보. 2019. “어린이날, 어린이 2명 포함 일가족 4명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 2019년 5월 5일.

매일경제. 2003. “인천 투신자살 주부 카드빚 쪼들려”. 2003년 7월 18일.

매일경제. 2018. “"먹고 사는 데만도 빠듯"…기초생활수급자 '절망의 가계부'.” 2018년 5월 16일.

맹성준·한창근. 2019.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산과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1): 57-81.

민경옥. 20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특성이 자활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충남지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소영□백학영□양소남. 2016. 자활사례관리 표준운영방안 개발연구: 자활사례관리 평가지표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박경아. 2013. “자활사례관리 운영과정 연구 - 경기도 자활사례관리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장호. 2013.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의 정서적지지 조절효과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영·한창근. 2014. “노숙인 매칭저축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종사자의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2): 83-108.

백은영. 2017. “은퇴가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50대 이상 가계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0(3): 31-63.

백학영□김경휘. 2013.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특성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29-60.

백학영·구인회·김경회·조성은·안서연. 2011.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3-35.

보건복지부. 2018. 「2018 자활사업안내(1)」.

보건복지부. 2019. 「2019 자활사업안내(Ⅰ)」.

성영애. 2008.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적자탈출과 진입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9(2): 115-134.

세계일보. 2005. “생활고 주부 강도짓”. 2005년 2월 25일.

송인한□김태형□세원희□한나□박장호. 2013. 경제적 자활척도(ESS)와 근로희망 척도(쫀)의 국내적용: 자활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척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31-64.

송인한□김태형□윤경□박상민. 2015.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사회복지교육. 29: 85-113.

송인한·박장호·김리자. 2012.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57-474.

신동면□도한. 2012.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서 포괄적 성과지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 201-229.

신은주. 2004. 여성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만족실태. 사회과학연구 5: 65-86.

양세정·주소현·차경욱·김민정. 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43-181.

양정선. 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엄태영.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장벽 요인에 대한 정서적 자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2): 229-248.

엄태영. 201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신정.

오민수 외. 2013.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모형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유우정·배미경·권상장. 2005. “노인가계의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http://www.kmfa.or.kr/paper/econo/2006/5.pdf

유태균. 2013. 근로빈곤층 지원체계의 변화와 자활사업의 개편. 2013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 17.

윤윤규□용진□유선희□선우□향아□은정. 2014. 자활사업 활성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2014-23.

이문국□승오□대명□정원. 2009. 자활사업 15주년 기념백서: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0: 39-70.

이선정. 2017. “빈곤화 기제로서의 강요된 소비사회 : 중산층의 과부담 소비와 다차원적 박탈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승렬. 2011. 근로자 가구의 소득·소비·저축 변화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이윤정·송인한. 2015.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채와 자살생각.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1): 58-82.

이종아·한창근. 2015.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4): 75-100.

이종희·양세정. 2014. “소득계층별 적자가계의 소비 지출 분석: 2000, 2005, 2010년의 가계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25-143.

이태준·김부열·손혜림. 2017. “금융소비자금융이해력 연구 – 펀드투자자의 지식보정을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48(2): 303-338.

임동진. 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75-97.

장동호. 2014. “가계부채 문제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4): 201-226.

장동호. 2018. “청년 연체의 규모와 결정요인 탐색”. 『복지상담교육연구』 7(2): 49-75.

장동호. 2013.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코칭 프로그램의 개념 및 가능성 탐색. 사회복지정책 40(3): 207-231.

장창수. 2014. 대전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방안.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4-16.

제윤경·정현두·박종호·김미선. 2010. 『착한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 서울: 바다출판사.

조맹제·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381-399.

조선일보. 2019. “어린이날 비극 일가족 "수천만원 채무에 부부 직장까지 그만둬"”. 2019년 5월 5일자.

주소현·차경욱·김민정·김소연. 2016. “소득계층별 재무상태 비교 및 Financial Fitness 분석: 가계수지, 부채부담, 투자성향 지표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9(2): 1-38.

중앙일보. 2019. “일가족 4명 '어린이날 비극'…폰엔 썼다 지운 수상한 메시지”. 2019년 5월 5일.

중앙자활센터. 2016. 2016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안내서.

중앙자활센터. 2018. 자활사업 성과. http:www.cssf.or.kr

천규승·정혜선·이의선·허경회. 2016. 서울형 금융복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p.12.

최상미. 2018.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활동 매뉴얼: 이용자중심(client-centered) 관점의 적용.

최상미. 김예진. 2018 지역자활센터에의 정서적자활 프로그램 도입 방안 모색.

최윤지·최현자. 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1): 83-96.

탁장한·박정민. 2017.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8(2): 173-201.

통계청.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소득5분위별 가계 재무건전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B03

통계청. 2016. 『보도자료 201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16년 8월 19일.

프레시안. 2018. “자활사업 노동자가 미래다.” 5월 18일자.

한국은행. 2018.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허미경. 2007. 대전지역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사, 간병활동 참여자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경준. 2004.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사회보장연구. 18(1): 105-127.

황미영. 2013. 노동연계복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자활사례관리의 특성과 전망. 비판사회정책. 41(1): 219-248.

황미영·한상진. 2004. "부산지역 자활사업 참가자의 노동조건과 자립가능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1): 129-154.

Aldana, S. G., & Liljenquist, W. 1998.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Financial Strain Surve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11-19.

Bartholomae, S., & Fox, J. J. 2016. Advancing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using a framework for evaluation. In J. J. Xiao (Ed.),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pp.45-59).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Bernheim, B. D., Garrett, D. M., & Maki, D. M. 2001. Education and saving: The long-term effects of high school financial curriculum mand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0(3): 435-465.

Beverly, S., Sherraden, M., Cramer, R., Williams Shanks, T., Nam, Y., & Cramer, M. 2008. "Determinants of Asset Building." A Report in the Series Poor Finance: Asset and Low-Income Household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and New America Foundation.

Beverly, S. G., Sherraden, M., Zhan, M., Williams Shanks, T. R., Nam, Y., & Cramer, R. 2008. Determinants of asset building (Report in the series Poor Finances: Assets and Low-Income Household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and New America Foundation.

Bird, E. J., Hagstrom, P. A., & Wild, R. 1997. "Credit cards and the poor."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148-97.

Birkenmaier, J., Sherraden, M. S., & Curley, J. (eds.), 2013.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Development: Research,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Boshara, R. & Emmons, W. R., 2015. "A balance sheet perspective on financial success: why starting early matter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9(1): 267-298.

Cauffman, E. & Woolard, J. 1999. The future outlook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MacArthur Network on Adolescent Development and Juvenile Justice.

CFED. 2015. Building Financial Capability: A Planning Guide for Integrated Services.

CFPB. 2015. Measuring financial well-being: A guide to using the CFPB financial well-being scale.

Collins, J. M. 2014. Financial Coaching: An Asset Building Strategy. Madison, WI: The Center for Financial Security.

Collins, J. M. & Murrell, K. 2010. Using a Financial Coaching Approach to Help Low-Income Families Achieve Economic Succ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eld. Higher Heights Consulting for the Center for Working Families Convening: July 22-23.

Collins, J. M. & Olive, P. 2016. Financial Coaching: Defining an Emerging Field. In J. J. X (ed).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2nd Edition). Switzerland: Springer.

Comelli, M. 2014. Private debt, public virt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nd household debt.

Delgadillo, L. M. & Britt, S. L. 2015. Financial Coaching and Financial Therapy: Differences and Boundaries. Family and Consumer Sceinces Research Journal. 44(1): 63-72.

DeVaney, S. A., 1993.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39: 223-227.

Epstein, G. A. (Ed.). 2006.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Cheltenham, United Kingdom: Edward Elgar.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009. Alternative financial services: A primer, FDIC Quarterly 3(1): 39-47.

Furnham, A. & Argyle, M. 1998. The Psychology of Money. Florence, KY, US: Taylor & Frances/Routledge.

German, E. T. & For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Hougthon Mifflin Company.

Greninger, S. A., Hampton, V. L., Kitt, K. A., & Achacoso, J. A., 1996. "Ratios and benchmarks for measuring the financial well-being of families and individuals", Financial Services Reviews, 5(1): 57-70.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 (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Gronda, H. 2009. What Makes Case Management Work for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AHURI Melbourne.

Ivan, B. & Dickson, L. 2008. Consumer economic socialization.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Springer New York 2008. pp. 83-102.

Khashadourian, E., 2017. Financial Case Management and the Household Cash Flow Model, Opportunity to Asset, April 2017, http://opportunitytoassets.com/resource/2017.pdf

Kim, J. & Chatterjee, S. 2013. "Childhood Financial Socialization and Young Adults' Financial Management."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4(1): 61-79.

Klontz, B., Kahler, R., & Klontz, T. 2008. Facilitating Financial Health: Tools for Financial Planners, Coaches, and Therapist. Cincinaati, Ohio: Klontz, Kaher Institute, LLC.

Lusardi, A. 2013. Financial Literacy and High Cost Borrowing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No. 18969.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Lusardi, A. & Mitchell, O. S. 2014. The economic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2(1): 5-44.

Lyons, A., Scherpf. C, & Roberts, H. 2006. Financial educ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Journal of Consumer Education 23: 64-76.

Lytton, R. H., Garmean, E. T., & Porter, N. M.,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1): 393-406.

Macdonald, S. & Maclntyre, P. 1997. The generic job satisfaction scale. Employee Assistance Quarterly, 13(2): 1-16.

Mangan, B. 2010. Advancing Financial Coaching for Low-Income Populations: Midstream Lessons from EARN. EARN White Paper.

Money Advice Service(MAS). 2013. UK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call for evidence.

Moore, E. S. & Bowman, G. D. 2006. Of friends and family: how do peers affect the development of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3: 536-542.

Morrow-Howell, N., and Sherraden, M. S. (Eds.). 2014.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holding in Later Life: A Life Course Perspectiv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Nussbaum, M.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85.

OECD/INFE. 2016.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Paris: OECD.

OECD/INFE. 2011.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Core Questionnaire. In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 and Guidance Notes for conducting an Internationally Comparable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Paris: OECD.

Prather,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 53-69.

Pressman, S. & Scott, R. H. 2009. Who are the debt poor. Journal of Economic Issues, 43(2): 423-432.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1: 385-401

Richardson, T., Elliott, P., Roberts, R., & Jansen, M., 2017. "A longitudinal study of financial difficulties and mental health in a national sample of British undergraduate student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3(3): 344-352.

Robb, C. & Deanna, S. 2009. Effect of Personal Financial Knowledge on College Students' Credit Card Behavior.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seling and Planning Eduction.

Roberts, J. A., & Jones, E. 2001. Money attitudes, credit card use, and compulsive buying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2): 213-240.

Rohe, W. M., Key, C., Grinstein-Weiss, M., Schreiner, M., & Sherraden, M., 2017. "The impacts of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assets, and debt on futur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depression", Journal of Policy Practice, 16:1, 24-45.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thman, J. 1992. Practice with Highly Vulnerable Clients: Case Management and Community-based Servi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allieMae and Ipsos. 2014. How America Saves for College 2014: Sallie Mae's National Study of Parents with Children under Age 18 (Report). Newark, DE: Sallie Mae.

Sanders, C. K. 2013. Financial capability among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In J. Birkenmaier, M. S. Sherraden, and J. Curley (Eds.),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Development: Research,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pp. 85-107).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Schreiner, M., Sherraden, M., Clancy, M., Johnson, L., Curley, J., & Zhan, M.,. 2005. Assets and the poor: Evidence from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n M. Sherraden, (Ed.), Inclusion in the American dream: Assets, poverty, and public policy(pp. 185-21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cribner, A. T. 1887. The savings socie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Charities and Correction 37: 212-218.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1st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6.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Sherraden, M. 2013. Building blocks of financial capability. In J. Birkenmaier, M. S. Sherraden, & J. Curley (Eds.),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development: Research,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pp. 8-9).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Sherraden, M. S., Birkenmaier, J., & Collins, J. M., 2018.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 in Vulnerable Households: theory and pract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Sherraden, M. S., Huang, J., Frey, J. J., Birkenmaier, J., Callahan, C., Clancy, M. M., & Sherraden, M. 2015.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 for All. Grand Challenges for Social Work Initiative. Working Paper No. 13. October 2015.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Shim, S., Xiao, J. J., Barber, B. L., & Lyons, A. C. 2009. Pathways to life success: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or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30(6): 708-723.

Spencer, L. M. & S. M. Spencer.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New York.

Stuart, P. H. 2013. Social workers and financial capability in the profession's first half-century. In J. Birkenmaier, M. S. Sherraden, and J. Curley (Eds.),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Development: Research,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pp. 44-6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Sullivan, T. A., Warren, E., & Westbrook, J. L., 2001. The Fragile Middle Class: Americans in Deb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undarasen, S. D. D., Rahman, M. S., Othman, N. S., & Danaraj, J. 2016. "Impact of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Socialization Agents, and Parental Norms on Money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Studies Quarterly 8(1): 137-153.

Swanstrom, T., Winter, W., Sherraden, M. S., & Lake, J. 2013. Civic capacity and school/community partnerships in a fragmented suburban settings: The case of 24:1. Journal of Urban Affairs, 35(1): 25-42.

Sweet, E., Nandi, A., Adam, E. K., & McDade, T., 2013. "The high price of debt: household financial debt and its impact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91: 94-100.

Taylor, M. P., Jenkins, S. P., & Sacker, A., 2011."Financial capability, incom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SER Working Paper Series 2011-18,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2. "Paths to Homeownership for Low-Income and Minority Households." Evidence Matter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nited Way Worldwide. 2011. Financial Stability Through Integrated Service Delivery: Highlights from the United Way System.

Varcoe, K. P., Martin, A., Devitto, Z., & Go, C. 2005. Using a financial education curriculum for teen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6(1): 63-71.

Vitt, L. A. & Anderson, C. 2001. Personal finance and the rush to competence: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in the US: A national field study commissioned and supported by the Fannie Mae Foundation. ISFS, Institute for Socio-Financial Studies.

Wiedrich, j., Colins, J. M., Rosen, K., & Rademacher, I. 2014. Financial education and account access among elementary students: Findings from the Assessing Financial Capability Outcomes Youth Pilot. Washington, DC: Corporat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

Williams Shanks, T. R. 2014. The evolution of antipoverty programs. In R. Cramer & T. R. Williams Shanks (Eds.), The Assets Perspective: The Rise of Asset Building and Its Impact on Social Policy (pp. 13-310).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Williams Shanks, T. R., Kim, Y., Loke, V., & Destin, M. 2010. Assets and child well-being in developd countr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s, 32(11): 1488-1496.

Woodside, M. R. & T. McClam. 2006. Generalist Case Management (SAB 125 Substance Abuse Case Management): A Method of Human Service Delivery 4th Edition. Brooks /Cole.

Xiao, J. J. 2016. Consumer financial capability and wellbeing. In J. J. Xiao (Ed.),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pp.3-17).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Xiao, J. J., Shim, S., Berber, B. L., & Lyons, A. C. 2007. Academic success and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behaviors matter: Technical Report.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Take Charge America Institute for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and Research.

<부록 1>: 설문지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재무건전성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앙자활센터(한국자활연수원)의 의뢰를 받아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재무건전성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역량과 재무환경 그리고 심리사회 특성 및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실시·관리되고, 설문지에 기재하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귀하의 응답이 매우 소중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장동호
연락처: 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연수원 지용진 대리
043-841-3715

조사기관	(시/도) 센터			
조사일련번호	센터 번호		응답자 번호	
조사원 이름				
조사원 휴대폰 번호				

Ⅰ. 개인일반사항

문항		내용
1)	성 별	①남자( ) ②여자( )
2)	나 이	만 ( )
3)	학 력	①중졸이하( ) ②고졸( ) ③대졸( ) ④대학원졸( )
4)	결혼상태	①미혼( ) ②기혼( ) ③이혼( ) ④사별( )
5)	주거점유 형태	①자가( ) ②전세( ) ③월세( ) ④공공임대( ) ⑤기타( )
6)	동거인 수	( )명 (응답자 본인 포함)
7)	자녀 현황	7.1) 총 자녀 수 ( )명
		7.2) 미취학 자녀 ( )명 7.3)초등학생 자녀 ( )명 7.4) 중학생 자녀 ( )명 7.5)고등학생 자녀 ( )명 7.6) 성인 자녀 ( )명
8)	가구주와 관계	①가구주 본인 ( ) ②가구주의 자녀 ( ) ③가구주의 배우자 ( ) ④가구주의 기타 친인척 ( )
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①일반 수급자 ( ) ②조건부 수급자 ( ) ③차상위가구 ( ) ④해당 없음 ( )
10)	자활사업 참여 유형	①사회서비스형 ( ) ②시장진입형 ( )
11)	자활사업 참여 기간	11.1)_____(년) 11.2) _____(월)부터 현재까지
12)	자활사업 참여 중단 경험	①중단 없었음 ( ) ②중단 있었음 ( )
13)	주관적 건강상태	①매우 나쁘다 ( ) ②나쁜 편이다 ( ) ③좋은 편이다 ( ) ④아주 좋다 ( )

II. 재무스트레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구성원 간에 돈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돈 문제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5)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잘못 잔다.	①	②	③	④	⑤
6)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출금 상환이나 공과금 걱정 때문에 목이나 등 또는 어깨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8) 돈 문제 때문에 혈압이 오르거나 속이 아플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 재무관리역량(*역방향 문항)

내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현재 가계소비를 위한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인 금액과 날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	□	①	
2)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다.	□	①	
3) 지난 달 가계적자가 발생했다.*	□	①	
4) 지난 12개월간, 돈이 없어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적이 1번 이상 있다.*	□	①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재무관련 목표(예: 저축, 재무관리 등) 달성에 자신이 있다.	□	①	②

6) 갑자기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비상금(여윳돈)이 있어 최소 1달은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다.	□	①	②

Ⅳ. 재무상태 및 재무건전성

문항		내용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입	
1) 소득	1.1) 본인 월 소득(지난달)	1.1.1) 세전 _____만원	1.1.2) 세후 _____만원
	1.2) 가구 월 소득(지난달)	1.2.1) 세전 _____만원	1.2.2) 세후 _____만원
	1.3) 가구 월 공적 소득(지난달)	_____만원	
2) 지출	2.1) 가구 총 지출(지난달)	_____만원	
	2.2) 생활비 잔액이 10만원 이하였던 날짜 수(지난달)	_____일	
	2.3) 가구 고정 지출 (지난달) (예: 저축, 주택대출금, 관리비, 가스비, 보험료, 등록금, 회비, 통신비, 핸드폰비 등)	_____만원	
	2.4) 가구 주거비(지난달) (예: 월세, 주택담보대출상환, 관리비 등)	_____만원	
	2.5) 자녀 교육비(지난달) (예: 학원비, 교재비 등)	_____만원	
	2.6) 가구 민간보험료(지난달)	_____만원	
	2.7) 가구 신용카드지출(지난달)	_____만원	
3) 자산	3.1) 가구 총 예금액 (보험해지 환급금 포함)	_____만원	
	3.2) 가구 민간은행(조합 포함) 저축액(지난달)	_____만원	
	3.3) 가구 정부지원(예: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저축액(지난달)	_____만원	
	3.4) 주택(토지 포함) 시세 및 보증금	_____만원	
	3.5) 자동차 시세	_____만원	
4)	4.1) 가구 부채 총액		

문항		내용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입
부채 및 신용	(신용카드 미상환금액 포함)	_____만원
	4.2) 가구 월 부채 상환액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포함)	_____만원
	4.3) 가구 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지난달)	_____만원
	4.4)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①과거 채무불이행 ( ) ②현재 채무불이행 ( ) ③해당 없음 ( )
	4.5) 본인 외 가구원 채무불이행 경험	①과거 채무불이행( ) ②현재 채무불이행( ) ③해당 없음( )

Ⅴ. 자기 인식 및 정서(*역방향 문항)

1. 다음은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을 읽으시고, 귀하의 상황과 각 문항의 내용이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떤 일을 첫 번에 잘 못 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 전에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어떤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 볼 시도조차 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유쾌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반드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	①	②	③	④	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다.					
1.10)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잘 대처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2)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3) 실패는 나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14)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5)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6) 나는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7)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직무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을 읽으시고, 귀하의 상황과 각 문항의 내용이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2.1) 나는 직장(사업단)에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나는 직장 동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나는 내 직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는 내 일이 안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직장 관리자(직원)들이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이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급여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지금 하는 일에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사	①	②	③	④	⑤	⑥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용하고 있다.						
2.9) 나는 사업단 팀장과 잘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0) 나는 센터 사례관리자(게이트웨이·통장·자활사례자 포함)와 잘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1) 나는 나의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다음은 미래지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을 읽으시고, 귀하의 상황과 각 문항의 내용이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때론 힘들고 재미없어도 더 잘살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미래의 내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3.3)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잘 정리(계획, 기록)해 둔다.	①	②	③	④	⑤
3.4) 의사결정을 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 돈을 저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10년 뒤 내 모습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정서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을 읽으시고, 지난 일주일간 귀하의 상황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주세요.

① 극히 드물었다. (일주일 동안 1일 미만)　②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일~2일)
③ 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일~4일간)　④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지난 일주일 간 나는 ~ (*역방향 문항)	극히 드물었다	가끔 있었다	종종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4.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4.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지난 일주일 간 나는 ~ (*역방향 문항)	극히 드물었다	가끔 있었다	종종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4.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4.4)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4.5)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4.6)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4.8)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4.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4.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 했다).	①	②	③	④
4.12)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4.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①	②	③	④
4.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4.15) 큰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4.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4.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①	②	③	④
4.18)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4.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4.20)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